



2025. 5.

국회에산정책처 | 대한민국 공공기관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Public Instit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2025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Public Instit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2025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총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최철민 예산분석총괄과장
황영준 산업예산분석과장
박애린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권순영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작성 | 김정선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이상아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박소희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박지민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김원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이석원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장희란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지원 | 강숙자 공공기관평가과 행정실무원
이예경 공공기관평가과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02) 6788-3782 | peb5@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사

정부는 국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보조·출연·출자·융자 등 정부지원수입과 자체수입을 활용하여 전기, 가스, 도로, 철도와 같은 공공서비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산업·기술 및 문화 진흥, 안전관리, 연구개발(R&D) 사업 및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지정된 331개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수입·지출액은 2024년 결산 기준 947.4조원 규모로, 정부의 총지출 656.6조원의 1.4배 수준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주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1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의의와 공공기관 관리 정책, 공공기관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을 통하여 공공기관 제도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2부는 수입·지출, 인력,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ESG 지표 등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과 공공기관의 재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부채 등의 재무 현황, 경영평가 현황 및 지방이전 현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3부에서는 정부출자 공공기관, 수지차 보전기관, 손실보전 공공기관, 금융공공기관 등 공공기관들을 주요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 지정된 총 331개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를 정리하여 부록에 수록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제도 및 운영 현황 등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차례

제1부 공공기관의 이해

제1장 공공기관의 의의 2

제1절 공공기관의 개념 및 역할 2

제2절 공공기관의 유형 4

1. 공공기관 지정 요건 4
2.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 5

제2장 공공기관 관리정책 9

제1절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변천사 ... 9

1. 정부투자기관 도입과 초기 형성기 9
2. 정부투자기관 관리체계의 제도화 10
3. 공공기관 관리제도의 재편과 법적 관리대상 확대 1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14

제2절 현행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주요 내용 ... 16

1. 공공기관의 외부지배구조 17
2. 내부지배구조 18

제3절 공공기관에 관한 법령 및 지침 20

제2부 공공기관 현황

제1장 공공기관 주요 현황 24

제1절 공공기관 지정 현황 24

1.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 24
2. 공공기관 지정 및 변동 현황 27
3.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29

제2절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 34

1. 공공기관 수입·지출 분류 기준 34
2.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 36
3. 공공기관 정부순지원수입 현황 45

제3절 공공기관 인력 현황 51

1. 공공기관 총 인력규모(현원) 51
2.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현원 현황 52
3. 공공기관 비정규직 및 소속외인력 현황 59
4.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현황 63

제4절 공공기관 인건비·복리후생비 현황 67

1. 공공기관 인건비·복리후생비 개념과 범위 67
2. 공공기관 인건비·복리후생비 관련 규정 68
3.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 72
4.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현황 79

제5절 공공기관의 ESG 현황 83

1. 공공기관 ESG 운영 현황 개관 83
2. 장애인 고용 현황 86
3. 산업재해 현황 89
4.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현황 91
5.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현황 93
6. ESG 관련 주요 구매 실적 현황 97

제2장 공공기관 재무 현황 106

제1절 공공기관 재무 106

1. 공공기관 결산 개요 106
2. 공공기관 자산·부채·당기순이익 현황 107

제2절 국가부채에 포함된 공공기관 부채 현황 112

제3절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19

1. 현 황 119
2.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공공기관 재무전망 .. 121
3. 14개 재무위험기관의 2024~2028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23

제3장 공공기관 경영평가 현황 125

제1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125

1.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개요 및 대상 125
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체계 126
3.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130

제2절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136

1. 공공기관 감사(위원) 제도 및 현황 136
2.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체계 138
3. 2023년 공공기관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140

제4장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141

제1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현황 141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141
2.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142

제2절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 현황 146

차례

제3부 주요 특성별 공공기관 분류

제1장 정부출자 공공기관 152

- 제1절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152
- 제2절 정부 현물출자 현황 156
- 제3절 출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분율 160
- 제4절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161

제2장 수지차 보전기관 168

- 제1절 수지차 보전기관의 정의 및 지정
요건 168
- 제2절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및 변동 현황 170
- 제3절 2024년 수지차 보전기관 출연·보조사업
예산 현황 174

제3장 손실보전 공공기관 175

- 제1절 공공기관 손실보전 관련 법률 175
- 제2절 손실보전 공공기관 재무 현황 177
- 제3절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연도별
정부지원액 179
- 제4절 손실보전 공공기관 중 완전자본잠식
상황인 기관 180

제4장 금융공공기관 181

- 제1절 금융공공기관 개요 181
- 제2절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186
- 제3절 금융공공기관의 경영 현황 189
- 제4절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 193

제5장 그 밖의 유형별 공공기관 현황 200

- 제1절 공공기관 출자 공공기관 200
- 제2절 진흥 목적 공공기관 204
- 제3절 SOC 관련 공공기관 210
- 제4절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218
- 제5절 정보 및 데이터 관리 관련 공공기관 222
- 제6절 안전 관련 공공기관 227
- 제7절 연구개발목적기관 234
- 제8절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238
- 제9절 과학관, 박물관 및 생물자원관 243

부 록

1. 공공기관 부처별(유형별) 세부 지정현황
(2025년 1월 기준) 254
2. 위원회별 공공기관 현황 263
3. 공공기관 연도별 정기·수시 지정 현황
(2025년 1월 기준) 335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Public Instit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2025

제1부 공공기관의 이해



제1장

공공기관의 의의

제1절 공공기관의 개념 및 역할

공공기관은 공공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이윤극대화를 단일의 목표로 하는 경영조직과는 구별되지만, 공공기관 중 공기업의 경우 생산 혹은 제공한 재화,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경영조직과 공공행정조직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제공하던 사회간접자본, 생활필수품 외에 경제가 발전하고 다변화됨에 따라 파생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확대되고 있다. 즉, 정부가 단일의 공공서비스 주체가 되어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기반 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전부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신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공공기관이 설립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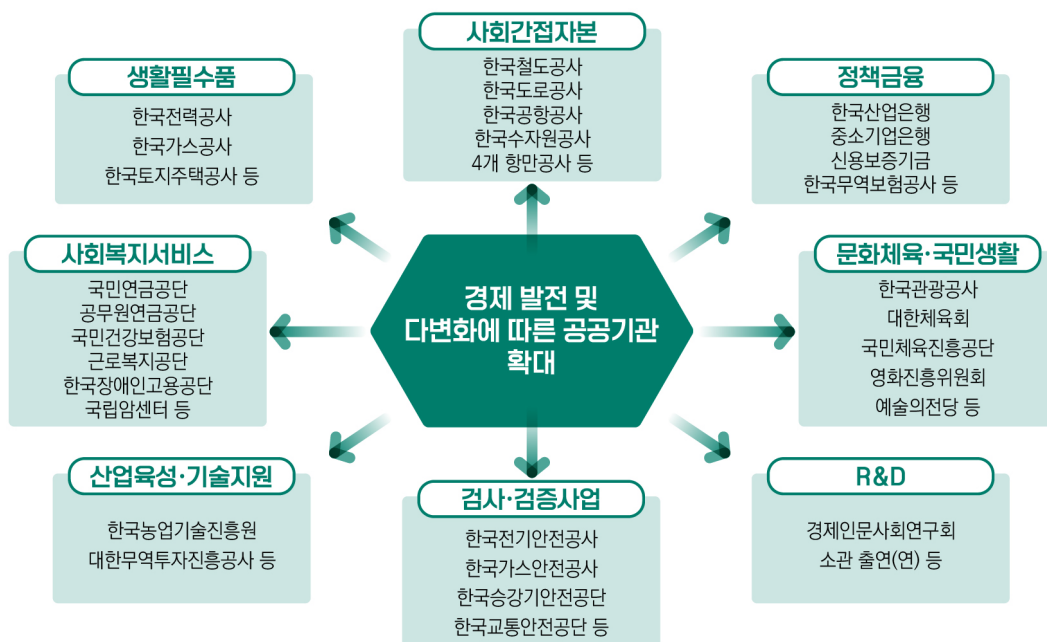
구체적인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수행 사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의 공공기관은 도로·철도·공항·댐·항만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전기·가스·수도·주택과 같은 생활필수품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금융형 공공기관은 특정 산업 분야에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 등은 금융위기 시에 민간 금융기관(은행, 증권, 투신사, 종금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암센터 등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건강, 의료, 4대 연금, 산재, 고용 등)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 밖에도 공공기관은 산업, 농림, 해양, 체육, 연구·개발(R&D) 등의 분야에서 검사·검증사업, 문화·국민생활, 산업진흥, 교육·연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



이와 같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이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만큼, 공공기관의 개념에 대해서 단일하게 사용되는 보편적인 정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법원,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공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등 넓은 개념으로 새기기도 한다.²⁾

그러나 본 책에서는 공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을 공공기관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보고 논의하기로 한다.

1) 예를 들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은 정부의 산업정책을 위탁받거나 재정지원을 받아 산업육성,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 등은 국민들에게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 등은 기초과학, 항공, 조세,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R&D)을 수행하고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국회·법원, 중앙행정기관 등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2절 공공기관의 유형

1. 공공기관 지정 요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의 전제가 되는 법정요건은 정부가 출연하였는지 여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정부가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은 공공기관 지정행위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법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동조 제2항에서는 법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 지정 제외 기관은 ①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③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이다.

2.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은 유형 분류 기준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화된다. 또한,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세분화된 유형으로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있다.

공공기관의 유형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의 공공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³⁾하고, 이 중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한다.⁴⁾

공기업 중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85%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기타공공기관은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외의 기관을 의미한다.

■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 ■

유형		분류기준		
공기업 (31개)	시장형 (14개)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 (기금 관리 또는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85% 이상)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85% 이상
	준시장형 (17개)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 기관 (57개)	기금 관리형 (12개)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미만 (기금 관리 또는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85% 미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 관리 또는 위탁관리
	위탁 집행형 (45개)	30억원 이상		정부업무의 위탁집행
기타공공기관 (24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49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총 331개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1.)를 바탕으로 재작성

3) 2022년 12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 유형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이 기존의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에서,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4)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유형별 공공기관 현황표 ■

유형		공공기관명
공기업 (31개)	시장형 (14개)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17개)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정부 기관 (57개)	기금 관리형 (12개)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 집행형 (45개)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유형	공공기관명
기타공공기관 (243개)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훈부)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 (문화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업부) 대한석탄공사,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복지부)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약진흥원

유형	공공기관명
기타공공기관 (243개)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주)공영협소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통계청) (재)한국통계정보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 공공기관 현황은 2025년 1월 지정 기준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1.)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2장

공공기관 관리정책

제1절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변천사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체계는 산업화 시기 정부 주도의 분산형 관리 방식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제도적 정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변화하였다. 1983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통합 관리 기준이 마련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민영화 및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경영관리 제도 관련 법령이 정비되었다.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04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며 관리대상이 확대되었고,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와 통합적 관리체계가 법률로 확립되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관리체계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관련 법령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정부투자기관 도입과 초기 형성기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의 기원은 1948년 해방 이후 미군정으로부터 이관된 귀속재산 처리과정에서 국영화된 2,500여개 기업의 출범에서 시작된다.⁵⁾ 이후 민간불하과정을 거쳐 상당수의 기업이 민간에 매각되었으나, 국가적 중요성이 높은 일부 기업은 정부투자기관의 형태로 존속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정부투자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공공 부문을 재편하였다. 이 시기에 설립된 대표적인 정부투자기관으로는 한국전력주식회사, 한국도로공사,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現 포스코) 등이 있으며, 이들은 전력, 교통,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의 정부투자기관은 단순한 생산기능을 넘어, 정부의 산업정책을

5) 김준기(2024), 「공기업정책론」

실현하는 정책 집행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한편, 이 시기 정부투자기관의 관리는 1962년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제정 이전까지는 주로 개별 법령과 주무부처 중심의 분산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기관별로 설립 근거와 관리체계가 상이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일관된 관리체계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다.

2. 정부투자기관 관리체계의 제도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적 성격의 기관들에 대한 예산 및 회계, 조직관리 등을 규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1961년 「기업예산회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철도사업, 통신사업, 전매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 등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해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회계처리를 규율한 법률로, 당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성격의 사업에 대한 재정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업예산회계법」은 2008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현행법으로 유지되고 있다.⁶⁾ 동 법률은 현행 공공기관 운영법과는 적용 대상 및 관리체계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회계기준 마련을 통해 이후 공공부문 재정관리 제도의 제도화 과정에 일정한 참고 기준으로 기능하였다.

이어 1962년 제정된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정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정부투자기관 및 귀속재산의 50% 이상이 정부에 귀속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예산 및 회계의 운영기준을 규정하였다. 한국은행에 대한 회계기준까지 포함하여 공공자본의 재정 운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1973년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예산과 회계뿐만 아니라 경영, 인사, 조직 등 정부투자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규율하도록 하였으며, 정부 출자 비율이 50% 이상인 기관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 예산·회계 중심 규율과 별도로 운영 관리에 관한 기준이 병행되면서 이원적인 관리체계가 형성되었다.

6) 「기업예산회계법」은 2008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되어 「정부기업예산법」으로 제명되었으며, 「정부기업예산법」에서 “정부기업”이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시행령」상 정부투자기관(23개, 1975년 기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대한재보험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증권거래소,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주식회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 개발공사, 농업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국제 관광공사, 한국방송공사, 토지금융

이후 1983년에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통합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198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예산, 회계, 조직, 인사, 경영목표 설정 등 정부투자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관리체계의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83) 제7조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다. 이는 공기업의 공익성과 경영목표의 달성도,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로, 이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에 이르는 경영실적평가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설치, 경영공시제도, 기관장 추천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당시 정부의 감독 기능과 기관의 자율 운영을 함께 고려한 관리 구조가 설계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정비는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1999),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2004) 등으로 확장되었으며,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다양한 유형의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 분류와 관리 기준이 마련되는 배경이 되었다.

3. 공공기관 관리제도의 재편과 법적 관리대상 확대

1990년대 후반은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체계가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로, 일부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 추진과 함께 법제 정비가 진행되었다.

1997년 제정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은 당시 일부 정부투자기관을 민영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법률에 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일정 기관들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었다.

1999년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은 주무부처의 개입 축소, 사장추천제 도입,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경영공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기업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및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 설치 등 관리 및 평가체계의 기능을 이원화하였다.

같은 해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대한 법적 정의와 운영 원칙이 규정되었다. 이 법률은 정부투자기관과는 별도의 제도적 틀을 통해 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어 2004년 제정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정부로부터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거나, 법령에 따라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또는 단체)까지 관리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 동 법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기관장 임명 절차, 경영실적평가 등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 이후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제도적 관리 기준이 마련되었다. 법 시행에 따라 2005년에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첫 번째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가 실시되었으며, 평가 대상 기관은 총 87개였다. 해당 기관들은 기능별 평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2004년 정부산하기관 유형별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명
검사/검증 (11)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요업기술원, 산업기술시험원,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소방검정공사
금융/수익 (11)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대한지적공사,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88관광개발, 별정우체국연합회
문화/ 국민생활 (1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과학문화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체육회, 독립기념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업진흥 (16)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전산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계임산업개발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영상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수/교육훈련 (5)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노동교육원
연구개발지원 (6)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학술진흥재단
건설/시설관리 (10)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환경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항만공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부산교통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연/기금운용 (15)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05, “최초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실시”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직전인 2007년 초 기준으로 정부가 관리하던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 14개, 정부산하기관 10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46개 등 총 160개에 달했다.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현황(2007년 초 기준)

(단위: 개)

구분	기관수	기관명
정부투자기관	14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정부산하기관	100	증권예탁결제원, 영화진흥위원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기술신용보증, 부산항만공사, 한국과학문화재단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4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등
합계	160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법령 정비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이 각기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관리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후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통합 및 유형화가 추진되었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관리되던 공공기관에 대해 통합적인 법적관리 체계를 정립한 법률로, 현재까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 법체계로 적용되고 있다.

동 법은 제정 이전 공공기관 관리체계에서 나타났던 지배구조의 비일관성, 기관별 관리 기준의 상이함, 지정기준의 명확성 부족 등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2005년 7월 감사원은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기획예산처에 관련 법령 정비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2004년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해당 TF는 공공기관 지정 및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형 분류 기준과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후 2005년 11월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이 발표되었고, 이를 근거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리 대상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기준은 정부의 출자 또는 출연 여부, 지분 보유, 인사·재정상 사실상의 지배력 등을 포함한다. 둘째, 공공기관을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따라 지배구조와 운영 기준을 구분하였다. 셋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였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지정 및 해제, 경영지침 수립, 임원 임면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공공기관의 이사회 설치, 임원 임명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경영정보 공시 의무화 등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법제화하였다.

법률 제정 이후, 2007년 4월 2일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초의 공공기관 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의 유형별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2007년)

(단위: 개)

구분	기관수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6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1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재의료관리원,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증권예탁결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지적공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기타공공기관	260	(주)기은캐피탈, 기보캐피탈, 기은신용정보(주),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산은캐피탈주식회사, (주)아이비케이텍, (주)정리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동북아역사재단, 민족문화추진회,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자료: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를 참조하여 재작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공공기관의 유형별 지정, 지배구조 기준, 운영 지침 등에 대한 일관된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동 법률은 이후 공공기관 관리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 법에 따라 설정된 공공기관의 내·외부 지배구조에 대한 주요 내용과 운영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제2절 현행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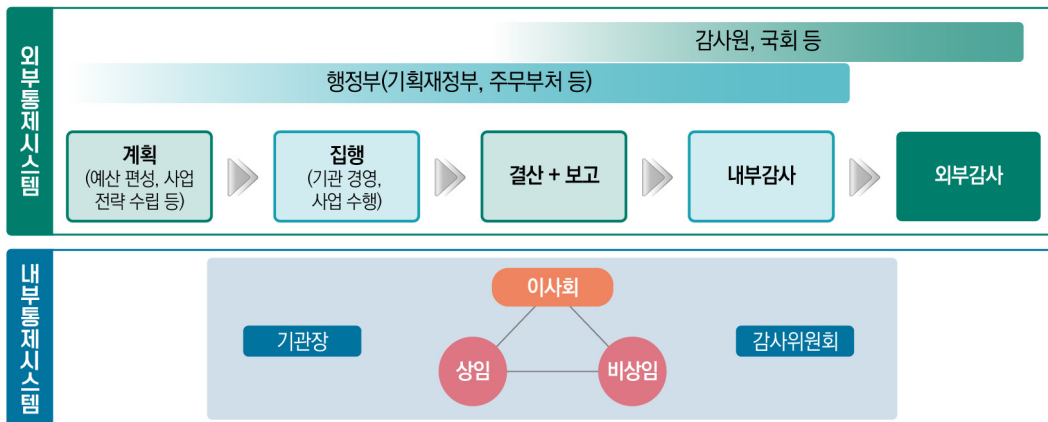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공공기관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분, 견제 및 감시하는 제도적 시스템이다.⁷⁾ 이는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현행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크게 외부지배구조와 내부지배구조로 구분된다. 외부지배구조는 국민, 정부, 국회 등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에 의해 형성되며,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과 관련 법령,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운영되도록 감독 및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의 감독,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국회의 예산심의 및 국정감사, 감사원의 회계감사, 시민사회의 감시 등 다양한 외부 견제 장치가 포함된다.

한편 내부지배구조는 기관장, 이사회,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등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로 구성되며, 공공기관의 전략적 방향 설정, 경영에 대한 감독 및 평가, 내부 통제 기능 수행을 담당한다. 내부지배구조는 객관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며, 조직 내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내·외부 지배구조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공공기관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롭게 갖추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Ⅰ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체계도 Ⅰ



7) 문성주 외,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34(2), 2020, p.119~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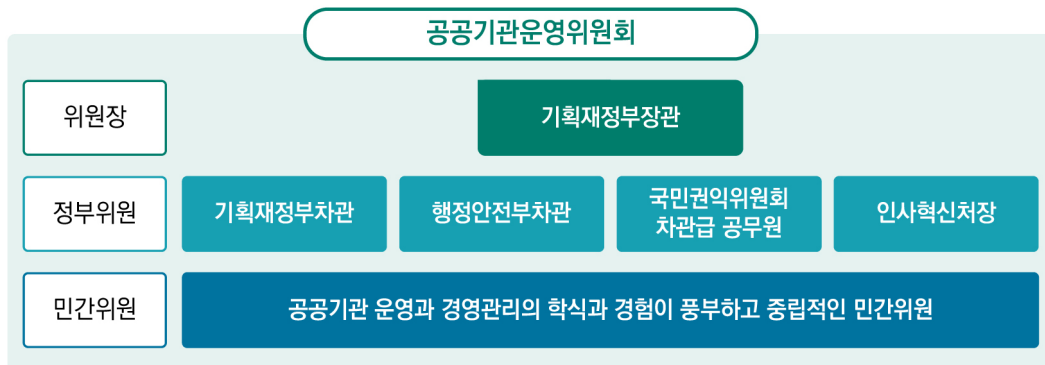
1. 공공기관의 외부지배구조

공공기관의 외부지배구조는 정부, 국회, 감사기관, 평가제도, 시민사회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통제와 감시를 제도적으로 결합한 구조로서, 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내부통제만으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외부지배구조는 균형적 통제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한다.

정부차원의 감독체계는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로 이원화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중앙관리기관으로서, 기관 지정 및 경영실적평가, 경영지침 수립 등을 주관한다. 주무부처는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및 감독, 내부규정 승인, 성과관리 등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심의·의결기구로, 공공기관 운영의 핵심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전체 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 주요 기능에는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기관의 신설 및 기능조정, 민영화 계획 심의, 경영지침 의결, 임원 임면 관련 심의 등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이 포함된다.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



국회는 예산안 및 결산 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검토,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기적인 국정감사는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 및 경영성과를 점검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입법부

의 견제 기능을 대표하는 제도이다.

감사원은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감독하며, 특정 사업이나 업무 수행에 대해 사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 권한을 가진다.

아울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체계를 대표하는 외부통제 수단이다. 매년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는 기관장의 연임 여부, 성과급 지급, 예산 배분 등에 직접 반영되어 실질적인 유인 및 제재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및 국민감시제도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유도하는 간접통제 장치로 기능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통한 경영정보 공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조사, 언론보도 등은 시민사회의 감시력을 뒷받침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내부지배구조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내부지배구조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직접 개입을 완화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경영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화되어 왔다. 특히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경영의 독립성, 임명 절차의 투명성, 전문성 강화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공공기관 내부지배구조의 핵심인 기관장·임원의 임면 및 이사회·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은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체계화되었다.

공공기관 내부지배구조의 핵심은 기관장과 임원의 임면 절차,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있다.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최대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경영계획, 예산·결산, 정관 변경 등 기관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시장형 공기업 또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과 의사결정 권한의 분리를 위해 선임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반면 자산 2조원 미만의 공공기관은 기관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은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내부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이사회·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 관리형	위탁 집행형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이사회 설치 (제17조)	이사회 설치 및 기관장의 이사회 보고 의무				
이사회 구성 (제18조)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				
	이사회 의장 → 선임비상임이사		이사회 의장 → 기관장		
감사위원회 설치 (제20조)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감사위원회 임의 설치		

임원의 임면 절차는 법률에 따른 절차적 기준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 및 이사는 유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한다. 특히 2022년부터는 근로자 대표 1인을 비상임이사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가 전면 도입되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조직 내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면 절차 ■

유형	구분	임면 절차
공기업	기관장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주무기관 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상임이사	공기업의 기관장이 임명 ⁸⁾
	비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임명(근로자 1명 포함, 2022. 8. 4. 시행)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⁹⁾
준정부기관	기관장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주무기관 장 임명
	상임이사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임명 ¹⁰⁾
	비상임이사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근로자 1명 포함)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¹¹⁾

8)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는 동법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9)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10)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11)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외에도 양성평등 임원 목표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임원 해임 및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은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제3절 공공기관에 관한 법령 및 지침

공공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법적 체계는 기본법인 공공기관운영법을 중심으로, 그 하위 법령과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지정 기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고객현장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공공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법령 ■

법령		주요 내용
관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지정 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경영공시, 정관의 내용 등
· 운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체수입액 기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세부사항, 고객현장,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운영은 기획재정부가 수립한 다양한 지침에 따라 구체화된다. 2018년 3월 이전까지는 조직, 정원, 인사, 임금피크제 등 총 32개의 개별 지침이 존재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2018년 3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를 15개 분야로 통폐합하였다. 현재 지침은 크게 ▲관리·운영, ▲예결산·회계·계약, ▲사업관리, ▲공시, ▲보수체계, ▲경영평가, ▲안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관한 지침·규정

구분		주요 내용
관리 · 운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조직과 정원의 관리 원칙, 출자기관 등의 운영, 기능·업무의 외부위탁, 증원의 절차, 인사 운영의 기본원칙 등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예산 운용의 원칙, 보수 기준, 조직 및 경영진단, 기관별 경영혁신전략·계획의 수립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운영 규정	감사의 방법과 종류, 감사 독립의 원칙, 감사자료의 제출요구, 감사부서 직원의 인사 및 보직관리, 감사 업무의 절차 및 결과의 보고,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예결산 · 회계 · 계약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2022년부터 기존의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집행지침」 통합 인건비·경비·사업비 편성 및 집행, 자금 및 기타 예산, 예비비 관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기타공공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경상운영비·연구사업비 출연금 편성·집행, 연구개발직접금 등의 편성 및 집행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공기관 회계처리원칙, 지급금 지출, 일상경비 지급, 채권 대손처리, 대손충당금 적립, 구분회계,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심의 등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감사인 감사, 독립성 준수, 회계감사 절차, 감사원 결산감사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조달계약 범위, 계약 원칙 및 방법, 처분 부동산 예정가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위탁 의무 예외, 수의계약 사유 등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기타공공기관의 계약 원칙 및 방법, 계약 사무 위임과 위탁, 수의계약 사유 등
사업 관리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총사업비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 관리지침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총사업비 관리절차, 타당성 재검토 절차, 타당성 재조사 의무화
공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통합공시 매뉴얼, 공시 시점, 공시 책임자 지정, 공시정보 이력관리 등
보수 체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기관장 기본연봉 조정,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 기관장의 경영 실적 평가 성과급 등
경영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평가기준, 평가지표 및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평가방법 등
안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 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인력확충, 안전조치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안전관리등급 심사 기준 및 절차, 심사단 구성, 결과 활용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Public Instit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2025

제2부 공공기관 현황



제1장

공공기관 주요 현황

제1절 공공기관 지정 현황

1.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¹⁾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매년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 등 공공기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총인건비, 경영실적 평가(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공시, 경영혁신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해당 기관의 규모(자산, 수입, 인력 등)와 정부지원정도, 사업성격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신규 지정, 해제, 유형변경 등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중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²⁾하되,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50%(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85%)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미만인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이 된다.

한편, 공기업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율이 85% 이상인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그렇지 아니한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3. 1. 1.)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

* (정원) 50명 이상→300명 이상, (수입액) 30억원 이상→200억원 이상, (자산) 10억원 이상→30억원 이상

시장형 공기업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17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2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공공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 국가철도공단 등 45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운영법 제4장(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의 규정 등 공공기관의 관리 규정 일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운영상 자율성이 높은 기관으로 한국산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각종 출연연구기관 등 243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한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은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2025년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

유형		분류기준			기관 예시
공기업 (31개)	시장형 (14개)	- 직원 정원 300명 이상 -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85% 이상	- 한국가스공사 - 한국전력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준시장형 (17개)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마사회 - 한국수자원공사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정부 기관 (57개)	기금관리형 (12개)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미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 관리 또는 위탁 관리	- 신용보증기금 - 국민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45개)			정부업무의 위탁집행	- 한국농어촌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장학재단 - 국가철도공단

유형	분류기준	기관 예시
기타공공기관 (243개)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 한국산업은행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총 331개

자료: 공공기관운영법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1.)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구개발목적기관의 분류 현황

기획재정부장은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상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된다.

-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③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 25개(경제·인문 분야),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 24개 등 총 49개 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은 2024년 1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현재 연구개발목적기관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연구개발목적기관 분류 현황 ■

(단위: 개)

구분	주요 기관	기관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25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 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24
합계		49

주: 기존 연구개발목적기관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 22개는 연구개발 관리체계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취지에서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됨(2024.1.31.)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공공기관 지정 및 변동 현황

2025년 5월 기준 대한민국 공공기관 수는 331개로, 2024년 말 327개 대비 4개 증가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분류기준에 따른 유형 변경으로 공기업이 1개 감소, 준정부기관이 2개 증가하였고,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3개 증가하였다(240개 → 243개).

Ⅰ 공공기관 지정 현황 Ⅰ

(단위: 개)

구분	2024	2025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2	31	△1	-	-	△1
▪ 시장형	14	14	-	-	-	-
▪ 준시장형	18	17	△1	-	-	△1
② 준정부기관	55	57	+2	-	-	+2
▪ 기금관리형	12	12	-	-	-	-
▪ 위탁집행형	43	45	+2	-	-	+2
③ 기타공공기관	240	243	+3	+4	-	△1
합계	327	331	+4	+4	-	-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1.)

2024년 대비 2025년 공공기관 수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4개 기관(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에 의한 유형재분류가 이루어져 정원이 300명 이하로 감소한 대한석탄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변경되었고,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은 정원이 300명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변경되었다.

Ⅱ 2025년 신규 지정 공공기관

기관명	주요 업무	유형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아시아 문화콘텐츠 활용·유통, 전당 관리위탁 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제작·보급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R&D) 등	기타 공공기관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조사,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연구 및 예방교육 등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추진 지원 및 연구, 정부위탁사업 수행, 자동차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자살고위험군 발굴지원, 민간협력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지원 등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Ⅲ 공공기관 변동 현황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신규 (+4)	문체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기타공공기관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유형 변경 (±3)	산업부	대한석탄공사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1.)

연도별 공공기관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공기업은 2007년 24개에서 2025년 31개로 7개 증가하였고, 준정부기관은 78개에서 57개로 21개 감소, 기타공공기관은 196개에서 243개로 47개 증가하였다. 이는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상향³⁾에 따라 준정부기관 상당수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변경된 것에 따른 영향이다.

3) (정원) 50 → 300명, (수입액) 30 → 200억원, (자산) 10 → 30억원

연도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단위: 개)

항목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증감
공기업	24	24	24	22	27	28	30	30	30	30	35	35	36	36	36	36	32	32	31	7
준정부 기관	78	77	80	79	83	82	87	87	86	90	89	93	93	95	96	94	55	55	57	△21
기타 공공 기관	196	204	193	185	176	176	178	187	200	203	208	210	210	209	218	220	260	240	243	47
합계	298	305	297	286	286	286	295	304	316	323	332	338	339	340	350	350	347	327	331	33

주: 1. 지정 현황은 매년 1월에 지정·발표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의 수시지정 또는 법인 해산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의 경우에는 표에 제시되지 아니함. 따라서 연도말 기준인 경우 세부 현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음

2. 증감은 2007년 대비 2025년의 증가분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부처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025년 5월 기준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산업 분야 등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41개로 가장 많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이 33개로 두 번째로 많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체육, 관광 및 문화 분야의 공공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교통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부처명	공공기관수	부처명	공공기관수
기획재정부	4	인사혁신처	1
교육부	22	식품의약품안전처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	관세청	1
외교부	2	통계청	1
통일부	2	재외동포청	1
법무부	3	방위사업청	2
국방부	3	경찰청	1
행정안전부	3	소방청	1
국가보훈부	3	국가유산청	1
문화체육관광부	33	농촌진흥청	1
농림축산식품부	12	특허청	6
산업통상자원부	41	산림청	5
보건복지부	29	기상청	3
환경부	11	방송통신위원회	2
고용노동부	12	공정거래위원회	2
여성가족부	5	금융위원회	7
국토교통부	29	원자력안전위원회	3
해양수산부	17	국무조정실	25
중소벤처기업부	11	총 331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1.)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 공공기관 부처별(유형별) 세부 지정현황」은 [부록1] 참조

부처별 공공기관 변동 현황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후 2025년 3월 현재까지 주요 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동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이 22개가 신규 지정되고 5개가 해제되어 총 17개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부처 중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그 뒤를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이 신규로 12개가 지정되고, 3개가 해제되어 총 9개가 증가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동 기간 동안 6개가 증가하였으며, 국토교통부 5개, 중소벤처기업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각각 4개의 기관이 증가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은 신규로 13개가 지정된 반면, 33개가 해제되어

전체적으로는 20개가 감소하였고, 금융위원회에서는 동 기간 동안 7개의 기관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18개의 기관이 해제되어 총 11개 기관이 감소하였다.

■ 2008~2025년 부처별, 연도별 공공기관 신규 지정, 해제 현황 ■

(단위: 개)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합 계	증 감
보건 복지부	신규		3	3		2	2		2	2	1	1	2	2		1			1	22	17
	해제			2	2						1									5	
산업통상 자원부	신규	2	1	2	1				1	1	2	1			1	2	1			15	△3
	해제		3	5	2		1		2		1	1		1	2					18	
국토 교통부	신규		2			1		2	1			2	2		4				1	15	5
	해제		1	7						1				1						10	
문화체육 관광부	신규			4	3		2	1	2	1	1								2	16	△1
	해제		4	5		1		1		4			1			1				17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신규	2				1			3	2	3				2					13	△20
	해제		3	2				1					1				4	22		33	
농림축산 식품부	신규			3	1	1	2		1		1	1	1	1						12	9
	해제		1	1							1									3	
해양 수산업부	신규	3							1	2			1		1					8	6
	해제												2							2	
금융 위원회	신규		1	1	1			3				1								7	△11
	해제		2	4	3	3	1		4							1				18	
중소벤처 기업부	신규			1	1				1			3								6	4
	해제							1						1						2	
환경부	신규							1	1	1	1		1		1					6	3
	해제			2														1		3	
식품의약품 안전처	신규			1			1		1	1	1							1		6	4
	해제									1	1									2	
기타	신규		2	3	2	3	3	3	6	2	3			1	3			2		33	20
	해제		3	4		1	1			1			2	1						13	
합계	신규	7	9	18	9	8	10	10	20	12	13	9	7	4	12	3	1	3	4	159	33
	해제	0	17	32	7	5	3	3	6	7	4	1	6	3	3	2	4	23	0	126	

주: 각 연도별 부처 변경은 2025년 5월 현재 부처를 기준으로 과거 분류를 수정하였음. 예를 들어, 과거 미래창조과학부 공공기관은 현재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분류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07년부터 2025년 5월까지의 주요 부처별 공공기관 신규 지정 및 해제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총 22개의 기관이 신규로 지정되고, 5개의 기관이 해제되었는데,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5),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2022), 아동권리보장원(2020),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2020) 등이다. 또한, 동 기간 동안 한국인체조직기증원(2017)⁴, 대한결핵협회(2011),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2011) 등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총 13개의 기관이 신규로 지정되고, 33개의 기관이 해제되었는데,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한국재료연구원(2021),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2021) 등이며, 동 기간 동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총 22개(2024),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2023) 등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다.

4)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2017년 4월, 한국장기기증원, (사)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와 통합되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며, (재)한국장기기증원이 신설되었다.

주요 부처별 신규 지정 및 해제 주요 공공기관

(단위: 개)

구분	신규	해제
보건 복지부	22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재)한국보건교류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재)자활복지개발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약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5 대한결핵협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산업 통상 자원부	15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전MCS(주),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8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천중합에너지(주),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등
국토 교통부	1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등	10 (주)한국건설관리공사,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주)한국토지신탁, 코레일트랙(주), 코레일전기(주), 코레일개발(주) 등
문화 체육 관광부	16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한국저작권보호원,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세종학당재단, (재)한국문화정보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재)한국공연예술센터 등	17 아시아문화원, (재)정동극장, 한국문화회술회관연합회,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아시아문화개발원, (재)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신문유통원 등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13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국립부산과학관,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울산과학기술원 등	3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총 22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구관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농림 축산 식품부	12 (재)축산환경관리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목원관리원, (재)한식재단,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등	3 녹색사업단, (주)농지개량, 농림기술관리센터
해양 수산부	8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해양진흥공사,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2 (주)인천항보안공사, (주)부산항보안공사
금융 위원회	7 서민금융진흥원, 산은금융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18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산은금융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터(주), IBK캐피탈, IBK신용정보, IBK시스템,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산은캐피탈주식회사, 기보캐피탈(주), 금융감독원 등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2절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

1. 공공기관 수입·지출 분류 기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내 경영공시 항목⁵⁾ 중 ‘수입 지출 현황(33번)’에 공공기관의 수입·지출 및 정부순지원수입을 공시하고 있다.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른 기관별 경영공시 항목 ┃

1. 일반현황	2. ESG운영	3. 경영성과
1. 일반현황	17. ESG 경영 및 운영위원회 현황	31. 요약 재무상태표
2. 내부규정	18. 대기환경	32. 요약 손익계산서
3. 임직원 수	19. 자원환경	33. 수입 지출현황
4. 임원현황	20. 환경보호	34. 자본금 및 주주현황
5. 신규채용 현황	21.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35. 장단기 차입금현황
6. 임·직원 채용정보	22. 사회공헌활동	36. 감사보고서
7. 임·직원 퇴직정보	23. 인권경영	37. 납세정보현황
8. 징계현황	24.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38. 주요사업
9. 임원 국외출장 내역	25. 동반성장 평가결과	39. 투자집행내역
10. 임원 연봉	26. 장애인 고용현황	40. 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
11. 직원 평균보수	27. 구매실적	41. 경영부담비용추계
12. 기관장 업무추진비	28. 이사회	42.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13. 복리후생비	29. 자체 감사부서 현황	43.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14. 그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 현황	30. 청렴도 평가결과	4. 대내외 평가 등
15. 노동조합 관련현황		44. 경영 평가결과
16. 소송 및 법률자문현황		45. 국회 등 외부평가
		4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47. 계약정보
		48. 연구보고서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2025.5. 기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3. ~ 16. (생략)

공공기관의 수입은 정부지원수입, 기타사업수입, 부대수입, 출자금,⁶⁾ 차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정부지원수입은 다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직접지원은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으로서 출연금,⁷⁾ 보조금,⁸⁾ 부담금,⁹⁾ 이전수입,¹⁰⁾ 부대수입으로 구분되고, 간접지원은 법령 등에 따라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사업수입, 위탁수입,¹¹⁾ 독점수입,¹²⁾ 부대수입¹³⁾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의 지출은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차입상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 공공기관 수입·지출의 유형별 구분 Ⅰ

구분			내용	
수입	정부 지원 수입	직접 지원	출연금	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액
			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
			부담금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수입
			이전수입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기타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
			부대수입	정부의 (직접)지원액의 이자 등 운용수익
	간접 지원	사업수입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해당 기관의 업무로 인한 수입	
		위탁수입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위탁 근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	
		독점수입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	
		부대수입	정부의 (간접)지원액의 이자 등 운용수익	
	기타사업수입		해당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	
부대수입		기타사업수입액의 이자 등 운용수익		
출자금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등으로부터 공공기관이 출자 받은 수입		

6) 출자금은 정부가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 출자하는 금액으로,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출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출자 등이 있다.

7) 출연금은 기관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직접 출연 받는 금액으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하여 한국장학재단, 국가철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국가재정법」 제12조는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공공목적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8)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대한체육회, 한국콘텐츠통신원 등이 보조금을 통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9) 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등이 있다.

10) 이전수입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기타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전입금,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보전금, 한국문화예술회원의 복권기금전입금 등이 있다.

11) 위탁수입은 법령에 해당 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 근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액으로서,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우편운송사업 수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사업 수입 등이 있다.

12) 독점수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또는 정관에 근거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①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사업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 ③ 한국마사회의 경마 사업에 의한 수입액이 대표적이다.

13) 부대수입은 정부로부터의 직접 지원 받은 금액의 이자 등 운용수익을 뜻한다.

구분		내용
	차입금	기관운영 또는 투자를 위해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금
	기타	정부지원수입, 기타사업수입, 부대수입, 출자금, 차입금 외의 수입
지출	인건비	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연봉) 및 각종 수당
	경상운영비	기관 운영 또는 기본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고정적 비용
	사업비	기관 사업 수행에 소요된 비용
	차입상환금	외부 조달 자금에 대한 상환 비용
	기타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차입상환금 외의 지출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2.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

공공기관 수입·지출 총괄

전체 공공기관¹⁴⁾의 지출(수입)¹⁵⁾은 2024년 결산 기준 947조 3,919억원으로, 2023년 결산 대비 32조 7,293억원이 증가하였다. 2024년 전체 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공공기관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27.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2.8%), 기타공공기관(20.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2%), 준시장형 공기업(8.7%)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지출 총계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유형은 기타공공기관(25조 1,534억원, 14.6%p)이고,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유형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6조 2,521억원, △2.8%p)으로 나타났다.

기타공공기관의 수입·지출이 증가한 주된 요인은 한국산업은행(지출: 2023년 36조 1,713억원 → 2024년 44조 5,212억원, 8조 3,499억원 증가) 정책금융에 활용하기 위한 차입금이 증가하여 수입·지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중소기업은행(지출: 2023년 60조 9,239억원 → 2024년 67조 2,094억원, 6조 2,855억원 증가) 또한 수입·지출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기타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지출이 증가하였다.

반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수입·지출 감소의 주된 원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는 보증자리론 대출 규모 감소 등에 따른 사업 수입이 감소(지출: 2023년 62조 9,616억원 → 2024년 46조 5,157억원, 16조 4,459억원 감소)하여 수입·지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14) 공공기관 331개 및 공공기관 부설기관 13개 포함(2025년 1월 기준)

15) 「국가재정법」 제17조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수입·지출인 경우 남는 수입은 지출(잉여금)로 인식되므로 수입=지출이 되며, 수입(지출인 경우는 국가철도공단은 수지차보전기관이므로 부족한 수입을 출연금으로 보전하므로 수입=지출이 된다.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 총괄(2020~2024)

(단위: 억원, %, %p)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비중)	증감 (B-A)
공기업	시장형	1,627,409	1,822,550	2,727,812	2,603,316	2,610,592 (27.6)	7,275 (0.3)
	준시장형	657,602	738,374	741,277	770,124	819,564 (8.7)	49,440 (6.4)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1,864,150	1,914,414	2,130,681	2,223,163	2,160,642 (22.8)	△62,521 (△2.8)
	위탁집행형	1,448,645	1,579,138	1,728,549	1,828,719	1,910,285 (20.2)	81,566 (4.5)
기타공공기관		1,605,138	1,425,240	2,100,146	1,721,303	1,972,836 (20.8)	251,534 (14.6)
합계		7,202,944	7,479,717	9,428,465	9,146,626	9,473,919 (100.0)	327,293 (3.6)

주: 1.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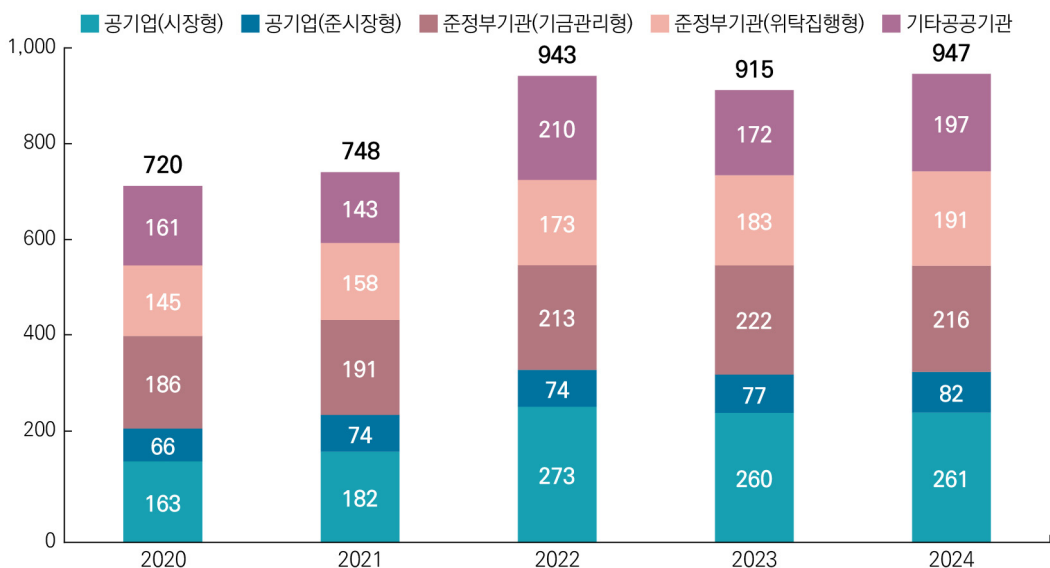
2. 기타공공기관인 3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입·지출을 포함한 수치임

3. 공공기관이 관리주체인 기금 및 부설기관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연도별)

(단위: 조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에 속하는 14개 공공기관의 2024년 총지출은 261조 592억원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의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시장형 공기업 전체 수입·지출의 78.8%(202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5개 기관이 시장형 공기업의 수입·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5.9%에서 2024년 7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시장형 공기업의 수입·지출 현황 ■

(단위: 억원, %)

기관명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전력공사	652,380	765,284	1,141,126	1,096,191	1,185,288
한국가스공사	245,447	302,545	561,193	488,685	432,678
한국수력원자력(주)	125,449	121,320	140,627	151,901	168,107
한국도로공사	128,334	133,166	148,900	163,806	155,833
한국석유공사	84,135	64,182	86,260	100,799	113,965
5개 기관 계(A)	1,235,745	1,386,497	2,078,105	2,001,382	2,055,871
전체 시장형 공기업 합계(B)	1,627,409	1,822,550	2,727,812	2,603,316	2,610,592
비중(A/B)	75.9	76.1	76.2	76.9	78.8

주: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기준 시장형 공기업 중 수입·지출규모가 가장 큰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수입은 전기 판매 등의 사업수입 97조 2,354억원과 차입금 18조 8,768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은 전력 구입 등의 사업비 지출이 83조 5,930억원이다. 전체 시장형 공기업 지출 기준 한국전력공사의 수입·지출 규모는 45.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전체 수입·지출 43조 2,678억원 중 가스판매 등의 사업수입이 36조 8,240억원이고, 천연가스 구입 및 공급시설 건설 등의 사업비 지출이 34조 8,312억원이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우 전체 수입·지출 16조 8,107억원 중 전력판매수익 등의 사업수입이 13조 4,479억원이고, 발전소 유지·관리 등의 사업비 지출(11조 6,912억원)과 차입금 상환(1조 8,492억원)이 주된 지출 항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전체 수입·지출 15조 5,833억원 중 통행료수입 등의 사업수입이 5조 1,101억원, 차입금이 6조 5,896억원이고, 도로건설 등의 사업비 지출이 9조 1,619억원, 차입상환금이 4조 1,878억원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전체 수입·지출 11조 3,965억원 중 국내·외 자원개발 및 석유비축사업 등의 사업수입이 3조 5,231억원, 차입금이 7조 2,825억원이며, 석유자원탐사 및 비축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비 지출이 1조 4,586억원, 차입금상환이 7조 2,978억원이다.

준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에 속하는 17개 공공기관의 2024년 총지출은 81조 9,564억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PS(주)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준시장형 공기업 전체 수입·지출의 86.6%(202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 준시장형 공기업의 수입·지출 현황 ■

(단위: 억원, %)

기관명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토지주택공사	447,907	499,534	449,236	429,392	458,576
한국철도공사	66,554	79,944	100,358	97,364	101,981
주택도시보증공사	15,046	16,510	17,757	56,109	69,519
한국수자원공사	49,308	56,689	64,395	63,497	60,299
한전KPS(주)	14,381	14,644	14,959	14,829	19,260
5개 기관 계(A)	593,196	667,321	646,705	661,191	709,635
전체 준시장형 공기업 합계(B)	657,602	738,374	741,277	770,124	819,564
비중(A/B)	90.2	90.4	87.2	85.9	86.6

주: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기준 준시장형 공기업의 전체 수입(81조 9,564억원)은 사업수입(32조 6,847억원)과 차입금(23조 5,338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은 사업비 지출(39조 4,108억원)과 기타 지출(22조 8,609억원), 차입상환금(13조 851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시장형 공기업 전체 수입·지출의 56.0%를 차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입은 45조 8,576억원 중 토지·주택 대금회수 등의 사업수입 15조 6,319억원과 16조 818억원의 차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은 용지구입 등의 사업비 지출 18조 4,177억원, 해약환불 등의 기타 지출이 19조 2,015억원, 차입상환금이 7조 2,149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전체 수입·지출 10조 1,981억원 중 운송사업수익 등의 사업수입이 5조 2,321억원, 차입금이 2조 6,181억원이고, 차량 구입 및 유지 등의 사업비 지출이 4조

9,023억원, 인건비가 2조 3,404억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체 수입·지출 6조 9,519억원 중 보증료 수익 등 사업수입이 2조 7,142억원이고, 기타 수입¹⁶⁾이 2조 5,708억원이며, 대위변제, 용자/용자상환, 기타지출(법인세 등), 배당 지출 등 지출이 6조 8,598억원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체 수입·지출 6조 299억원 중 용수요금 징수 등의 사업수입(3조 428억원), 지방 상·하수도 관리·운영 등의 위탁수입(9,630억원), 차입금(1조 2,946억원)이 주된 수입 항목이고, 댐 및 수도시설 관리 등의 사업비 지출(3조 5,410억원)과 차입상환금(1조 1,913억원)이 주된 지출 항목이며, 한전KPS(주)의 경우 전체 수입·지출 1조 9,260억원 중 발전소 정비 수입 등의 1조 8,714억원 사업수입이 주된 수입이고, 발전소 정비 비용 등의 사업비 지출 6,306억원 및 인건비 6,033억원이 주된 지출 항목이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12개 공공기관의 2024년 총지출은 216조 642억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등의 순으로 지출규모가 큰 상황이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전체 수입·지출의 79.1%(202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수입·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주택금융공사	657,174	511,687	371,874	677,868	510,953
국민연금공단	264,614	299,694	349,071	399,503	446,133
공무원연금공단	227,480	232,064	249,031	273,966	301,557
예금보험공사	250,038	252,517	253,156	293,759	299,16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0	169,455	164,078	157,159	151,207
5개 기관 계(A)	1,558,166	1,465,418	1,387,211	1,802,256	1,709,011
전체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합계(B)	1,864,150	1,914,414	2,130,681	2,223,163	2,160,642
비중(A/B)	83.6	76.6	65.1	81.1	79.1

주: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6) 수입·지출값을 맞추기 위해 당해연도 적자분을 기타 수입에 반영

2024년 결산 기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전체 수입(216조 642억원)은 이전수입(78조 3,342억원)과 사업수입(46조 1,365억원), 차입금(31조 4,965억원)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출 구성은 사업비 지출(135조 429억원)과 기타 지출(55조 3,341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지출규모가 가장 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고유계정 외에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4년 결산 기준으로 고유계정의 지출규모는 46조 5,157억원이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3조 9,934억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은 5,862억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전체 수입·지출 44조 6,133억원 중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인 이전수입이 44조 5,06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 역시 국민연금급여비 등의 사업비 지출이 43조 9,779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전체 수입·지출 30조 1,557억원 중 개인 기여금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인 이전수입(25조 8,308억원)이 주된 수입이고, 퇴직급여 지급 등의 사업비 지출(26조 4,464억원)이 주된 지출 항목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전체 수입·지출 29조 9,160억원 중 고유사업 24조 4,728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5조 4,43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유사업의 수입 항목은 기타수입(16조 8,400억원)과 차입금(4조 3,48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수입의 대부분은 전년도 예금보험기금 이월액(16조 7,1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유사업의 지출 항목은 기타지출(18조 4,220억원)과 차입상환금(5조 9,19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지출의 대부분(18조 2,869억원)이 기말잔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법정부담금(2조 5,745억원), 여유자금회수(기초보유자금: 2조 3,008억원)가 주된 수입 항목이고,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5조 1,900억원), 여유자금운용(2,500억원)이 주된 지출항목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전체 수입·지출 15조 1,207억원 중 수입은 고유계정의 사업수입 3조 1,597억원, 보조금 수입 5,465억원과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출연금 1조 4,444억원 및 기금 사업수입 4조 3,717억원 등이 주된 수입이고, 고유계정 사업비 1조 9,539억원과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사업비 5조 6,372억원 및 차입상환금 4조 8,700억원이 주된 지출 항목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48개 공공기관(3개 부설기관 포함)의 2024년 총지출은 191조 285억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체 수입·지출의 87.0%(202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수입·지출 현황 ■

(단위: 억원, %)

기관명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민건강보험공단	946,570	1,043,015	1,164,493	1,235,231	1,296,255
국가철도공단	92,127	103,473	102,652	110,617	120,913
한국연구재단	71,614	77,850	85,378	98,030	100,088
한국장학재단	85,793	83,195	91,823	95,854	97,292
한국농어촌공사	41,601	44,518	45,654	46,748	47,103
5개 기관 계(A)	1,237,706	1,352,052	1,490,001	1,586,480	1,661,652
전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계(B)	1,448,645	1,579,138	1,728,549	1,828,719	1,910,285
비중(A/B)	85.4	85.6	86.2	86.8	87.0

주: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기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전체 수입(191조 285억원)은 정부업무의 위탁 집행이라는 기관 특성상 사업수입(100조 505억원)과 출연금(17조 8,386억원), 보조금(18조 1,512억원)의 비중이 큰 상황이고, 지출은 사업비 지출(159조 5,72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수입·지출의 67.9%를 차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전체 수입·지출(129조 6,255억원) 중 사업수입(보험료수입)이 94조 9,019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 또한 보험급여 지급 등의 사업비 지출이 112조 9,721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철도공단의 수입·지출(12조 913억원) 중 수입은 철도건설을 위한 정부출연금(4조 9,625억원), 고속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충당 등을 위한 차입금(2조 1,700억원), 선로시설사용료 수익 등으로 구성된 위탁수입(2조 6,973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은 철도건설, 시설 개량, 선로유지보수 등의 사업비 지출(6조 7,169억원) 및 차입상환금

(2조 7,77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수입·지출(10조 88억원)은 정부 연구·개발 수탁사업에 대한 기타수입(9조 9,484억원)과 이에 대한 사업비 지출(9조 8,05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수입·지출(9조 7,292억원) 중 수입은 장학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부출연금(5조 608억원), 대출학자금 원리금 회수 등의 사업수입(2조 115억원), 차입금(1조 4,70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은 장학금지원 및 학자금 대출 등의 사업비 지출(7조 3,464억원)과 차입상환금(1조 4,654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입·지출(4조 7,103억원) 중 수입은 다목적농촌용수 개발 등을 위한 이전수입(2조 3,237억원)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에 대한 위탁수입(1조 8,297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은 농지지원 및 농어촌개발 등의 사업비 지출(4조 78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253개 공공기관(10개 부설기관 포함)의 2024년 총지출은 197조 2,836억원으로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의 순으로 지출규모가 큰 상황이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기타공공기관 전체 수입·지출의 79.2%(202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 기타공공기관의 수입·지출 현황 ■

(단위: 억원, %)

기관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소기업은행	563,547	496,935	697,830	609,239	672,094
한국산업은행	454,827	343,707	594,541	361,713	445,212
한국수출입은행	161,272	95,121	298,069	221,426	296,99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90,529	130,755	125,161	112,713	115,650
한국해양진흥공사	11,925	8,390	15,020	18,724	33,205
5개 기관 계(A)	1,282,101	1,074,909	1,730,621	1,323,815	1,563,157
전체 기타공공기관 합계(B)	1,605,138	1,425,240	2,100,146	1,721,303	1,972,836
비중(A/B)	79.9	75.4	82.4	76.9	79.2

주: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24년 결산 기준 기타공공기관의 수입(197조 2,836억원)은 사업수입(100조 8,509억원)과 차입금(30조 7,884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은 사업비 지출(136조 8,171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지출규모가 가장 큰 중소기업은행의 수입(67조 2,094억원)은 사업수입(27조 6,208억원)과 차입금(14조 5,852억원) 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은 중소기업 대출 등의 사업비 지출이 48조 7,567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수입(44조 5,212억원)은 사업수입(31조 4,080억원)과 차입금(12조 2,089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 또한 사업비 지출이 41조 1,239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수입(29조 6,995억원)은 이자수입 등의 사업수입(21조 3,253억원)과 전기현금 이월액 등의 기타수입(8조 2,653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은 정책금융지원 등의 사업비 지출(15조 1,419억원)과 차기현금 이월액인 기타지출(8조 51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수입·지출(11조 5,650억원) 중 수입은 연금 부담금 수입 등의 사업수입(6조 9,072억원)과 이전수입(4조 6,51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 등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기타지출(5조 1,404억원)과 연금 급여 지급 등의 사업비 지출(6조 3,534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우 수입은 선박 관련 금융사업 및 항만 물류 사업 투자 등 사업 수익(1조 1,628억원)과 선박 금융 관련 차입금(2조 2,202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3조 3,205억원)은 사업비 지출 2조 859억원 등 사업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공공기관 정부순지원수입 현황

정부순지원수입 총계

정부순지원수입이란 국회에서 의결되는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으로서 출연금, 출자금,¹⁷⁾ 보조금, 부담금, 이전수입, 위탁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순지원수입은 해당 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공공기관의 수입이므로, 보조 또는 기금 전입 자금의 단순 전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하지 않는 자금과 민간으로부터의 전입액 등 정부 외 주체로부터의 수입은 해당되지 않는다.

■ 정부순지원수입의 유형별 구분 ■

구분	내용
출연금	해당 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출연금 수입액
출자금	해당 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출자금 수입액
보조금	해당 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보조금 수입액
부담금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수입액
이전수입	정부 관리 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액
위탁수입	정부와 직접 체결한 위탁사업에 따른 수입액
기타수입	출연금출자금보조금부담금이전수입위탁수입의 이자, 부대수입 등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전체 공공기관¹⁸⁾에 대한 정부순지원수입은 2024년 기준 128조 557억원으로, 2023년 수입(117조 9,943억원) 대비 10조 614억원(8.5%)이 증가하였다.

2024년 결산 기준 정부순지원수입의 규모가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44조 6,132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조 2,590억원), 근로복지공단(8조 3,432억원), 공무원연금공단(6조 5,725억원), 한국장학재단(5조 5,410억원), 국가철도공단(4조 9,625억원) 등으로 주로 사회보험이나 국가 기반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정부순지원수입 상위 20개 공공기관의 2024년 수입 규모는 105조 338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정부순지원수입 규모(128조 557억원)의 82.0%를 차지하고 있다.

17) 출자금의 경우 해당 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현금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부보유 주식의 현물출자 등은 제외하여 집계하고 있다.

18) 공공기관 331개 및 공공기관 부설기관 13개 포함(2025년 1월 기준)

■ 공공기관 정부순지원수입 현황(상위 20개 기관) ■

(단위: 억원, %)

기관명	소관 부처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264,613	299,693	349,069	399,502	446,13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111,036	117,422	130,313	137,614	152,590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6,415	6,848	8,579	79,766	83,432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37,045	42,405	46,967	56,383	65,725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44,039	44,712	52,715	53,544	54,410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46,842	57,143	53,353	42,276	49,625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30,521	38,101	38,266	30,109	31,667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24,373	25,207	23,913	24,168	24,967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8,973	10,146	11,517	13,354	19,870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16,554	20,481	23,255	14,262	17,58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15,433	18,724	13,260	13,127	15,87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6,429	11,045	12,264	12,989	14,32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284	13,955	15,803	16,696	13,94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교육부	8,959	9,407	9,877	10,900	10,112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부	0	3,516	7,138	10,503	9,300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7,385	7,973	8,041	9,048	9,053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	1,233	2,670	3,321	9,683	8,91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8,321	10,022	8,956	8,825	8,43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227	7,190	8,511	8,070	7,233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9,827	9,698	7,466	7,272	7,142
20개 기관 계(A)		666,507	756,359	832,582	958,091	1,050,338
전체 공공기관 합계(B)		926,047	978,572	1,069,829	1,179,943	1,280,557
비중(A/B)		72.0	77.3	77.8	81.2	82.0

주: 상위 20개 기관은 2024년도 기준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순지원수입

정부순지원수입 현황을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4년 결산 기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48.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3.1%), 기타공공기관(12.2%), 준시장형 공기업(4.5%), 시장형 공기업(1.8%)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금의 위탁관리나 정부업무의 위탁집행을 주로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 정부순지원수입의 81.6%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사업을 통하여 수익활동을 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비중이 6.3%로 매우 낮은 편이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이전수입 등으로 구성된 정부지원액이 2020년 26조 4,613억원에서 2024년 44조 6,132억원으로, 5년 동안 18조 1,519억원(68.6%) 증가하였다.¹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주로 일반회계 정부지원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기금) 등의 정부지원금이 2020년 11조 1,036억원에서 2024년 15조 2,590억원으로, 5년 동안 4조 1,554억원(37.4%) 증가하였다.

기타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국가부담금 지출에 소요되는 정부지원액이 2020년 8,959억원에서 2024년 1조 112억원으로, 5년 동안 1,153억원(12.9%) 증가하였다.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임대주택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출자금 등의 정부지원액이 2020년 3조 521억원에서 2024년 3조 1,667억원으로, 5년 동안 1,146억원(3.8%) 증가하였다.

Ⅱ 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순지원수입 현황 Ⅱ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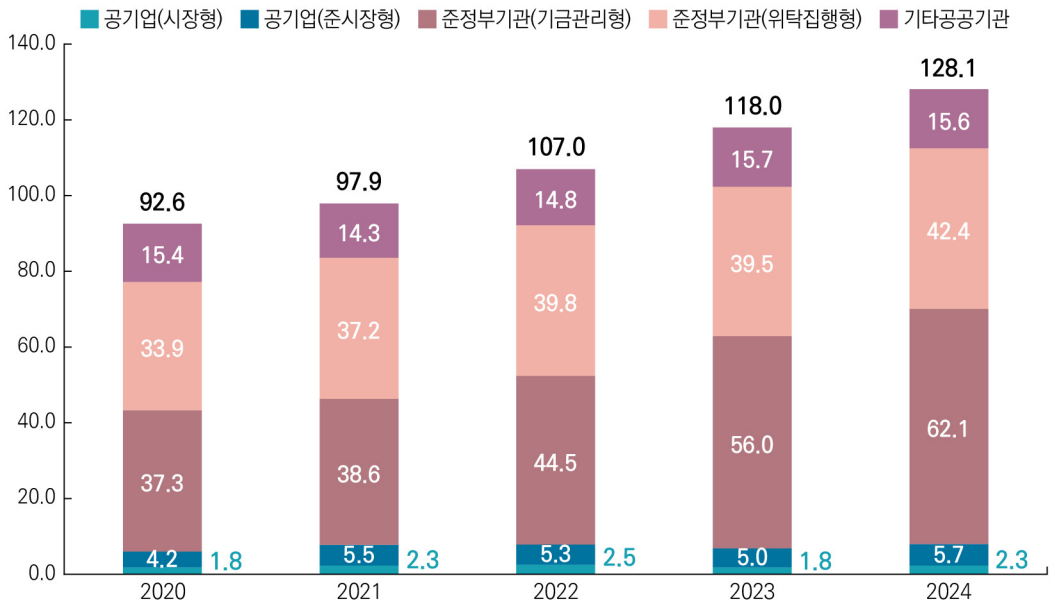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공기업	시장형	18,270 (2.0)	23,092 (2.4)	25,280 (2.4)	18,194 (1.5)	22,786 (1.8)
	준시장형	42,060 (4.5)	54,666 (5.6)	53,465 (5.0)	50,402 (4.3)	57,235 (4.5)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372,653 (40.2)	385,774 (39.4)	445,054 (41.6)	560,003 (47.5)	620,919 (48.5)
	위탁집행형	339,159 (36.6)	372,112 (38.0)	397,826 (37.2)	394,543 (33.4)	424,025 (33.1)
기타공공기관		153,905 (16.6)	142,929 (14.6)	148,204 (13.9)	156,801 (13.3)	155,592 (12.2)
합계		926,047 (100.0)	978,572 (100.0)	1,069,829 (100.0)	1,179,943 (100.0)	1,280,557 (100.0)

주: () 안은 해당 연도의 총계 중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9)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지원액을 수령하여 공단에 지원

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순지원수입 현황

(단위: 조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총수입 대비 정부순지원수입 비중

공공기관의 총수입은 정부순지원수입(직접지원) 외에도 정부간접지원수입과 정부지원 외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순지원수입(직접지원)은 공공기관 총수입의 일부분을 차지한다.

공공기관 총수입구조

구분	수입명
정부순지원수입(직접지원)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이전수입, 위탁수입, 기타수입
정부지원수입(간접지원)	사업수입, 독점수입, 부대수입
정부지원 외 수입	기타사업수입, 기타부대수입, 차입금, 기타

주: 정부지원 외 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은 해당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을 말하며, 기타부대수입은 기타사업수입액의 이자 등 운용수익을 의미함

344개(2025년 1월 기준, 공공기관 331개 및 부설기관 13개 포함) 공공기관 전체의 총수입에서 정부순지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결산 기준 13.5%로 전년 대비

0.6%p 증가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이 평균적으로 총수입의 13.5%가 정부 재원으로서,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해 정부 재원 비중이 0.6%p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5년 동안의 공공기관 총수입 대비 정부순지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20년 12.9%에서 2024년 13.5%로 정부정책 수행을 위한 공공기관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2024년 총수입 중 정부순지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8.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2.2%), 기타공공기관(7.9%), 준시장형 공기업(7.0%), 시장형 공기업(0.9%) 순으로 높은 상황이다.

공기업은 자체사업수입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정부의 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낮고, 그에 따라 총수입 중 정부순지원수입 규모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금의 위탁관리나 정부업무의 위탁집행이 주요 사업임에 따라 총수입 중 정부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정부지원 비중이 0.4%대로 낮지만, 은행형 기관을 제외한 기타 유형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지원 비중이 27.0%대로 준정부기관과 유사하다.

Ⅱ 공공기관의 총수입 대비 정부순지원수입 현황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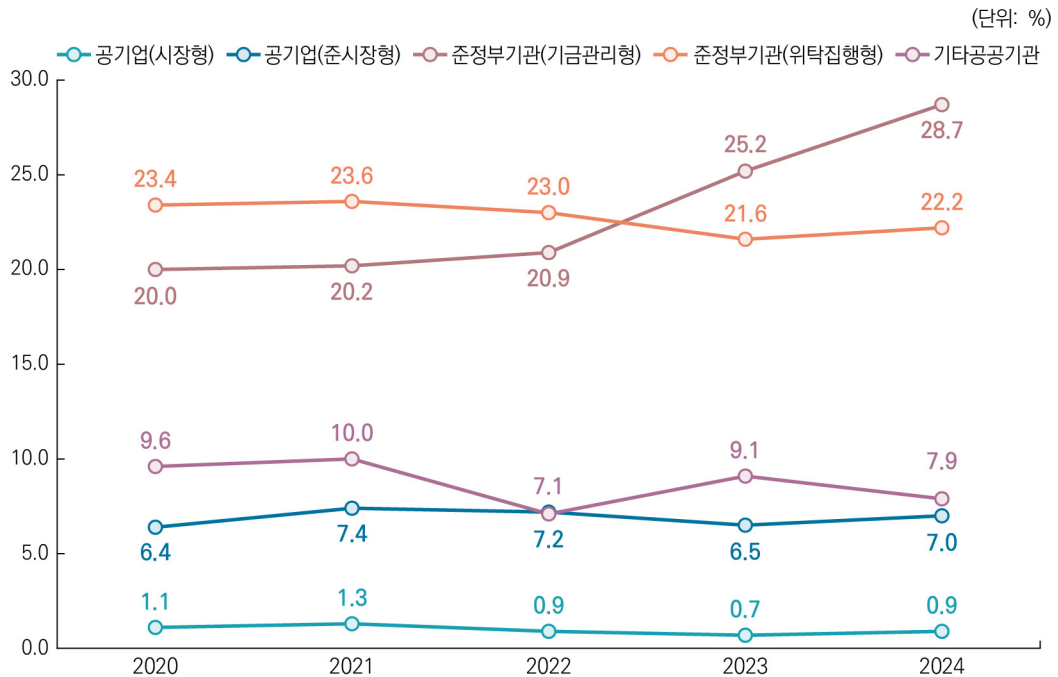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공기업	시장형	정부순지원수입(A)	18,270	23,092	25,280	18,194	22,786
		총수입(B)	1,627,409	1,822,550	2,727,812	2,603,316	2,610,592
		비중(A/B)	1.1	1.3	0.9	0.7	0.9
	준시장형	정부순지원수입(A)	42,060	54,666	53,465	50,402	57,235
		총수입(B)	657,602	738,374	741,277	770,124	819,564
		비중(A/B)	6.4	7.4	7.2	6.5	7.0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정부순지원수입(A)	372,653	385,774	445,054	560,003	620,919
		총수입(B)	1,864,150	1,914,414	2,130,681	2,223,163	2,160,642
		비중(A/B)	20.0	20.2	20.9	25.2	28.7
	위탁집행형	정부순지원수입(A)	339,159	372,112	397,826	394,543	424,025
		총수입(B)	1,448,645	1,579,138	1,728,549	1,828,719	1,910,285
		비중(A/B)	23.4	23.6	23.0	21.6	22.2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기타 공공 기관	은행형	정부순지원수입(A)	39,498	14,687	7,250	3,429	4,900
		총수입(B)	1,179,647	935,763	1,590,440	1,192,377	1,414,301
		비중(A/B)	3.3	1.6	0.5	0.3	0.3
	비은행형	정부순지원수입(A)	114,407	128,242	140,954	153,372	150,692
		총수입(B)	425,491	489,477	509,706	528,926	558,535
		비중(A/B)	26.9	26.2	27.7	29.0	27.0
	소계	정부순지원수입(A)	153,905	142,929	148,204	156,801	155,592
		총수입(B)	1,605,138	1,425,240	2,100,146	1,721,303	1,972,836
		비중(A/B)	9.6	10.0	7.1	9.1	7.9
합계	정부순지원수입(A)		926,047	978,572	1,069,829	1,179,943	1,280,557
	총수입(B)		7,202,944	7,479,717	9,428,465	9,146,626	9,473,919
	비중(A/B)		12.9	13.1	11.3	12.9	13.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의 총수입 대비 정부순지원수입 현황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3절 공공기관 인력²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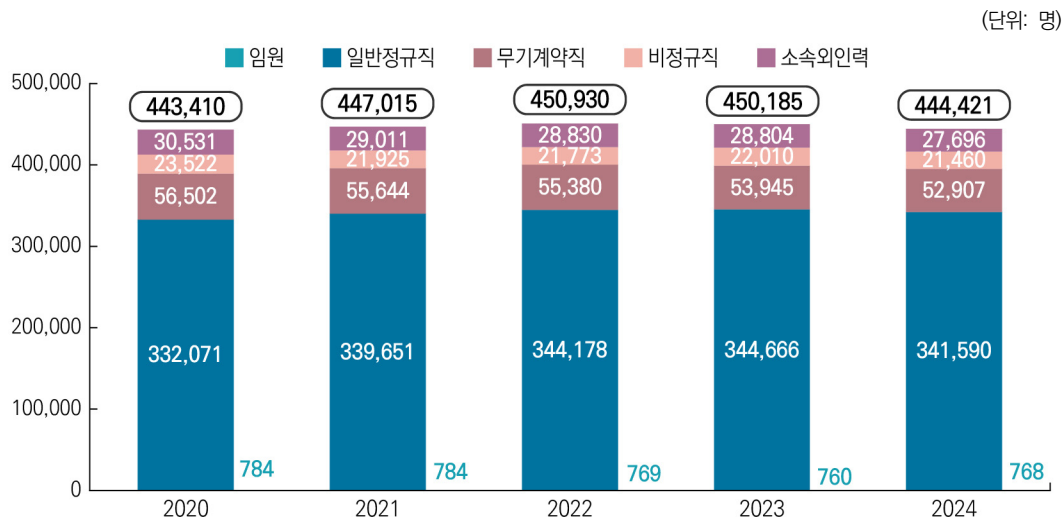
1. 공공기관 총 인력규모(현원)

2024년 정규직(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²¹⁾과 소속외인력²²⁾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 직원(현원 기준)은 44만 4,421명으로, 일반정규직 34만 1,590명(76.9%), 무기계약직 5만 2,907명(11.9%), 비정규직 2만 1,460명(4.8%), 소속외인력 2만 7,696명(6.2%)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전체 인력은 2023년 45만 185명에서 2024년 44만 4,421명으로 전년 대비 5,764명 감소하였다. 정규직이 2024년 39만 5,265명으로 전년 대비 4,106명 감소하였고, 비정규직은 2024년 2만 1,460명으로 전년 대비 550명 감소하였다. 소속외인력은 2024년 2만 7,696명으로 전년 대비 1,108명 감소하였다.

공공기관 전체 직원 중 정규직의 비중은 2023년을 제외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전체 직원 대비 정규직의 비중은 87.8%였으며, 2024년 전체 직원 대비 정규직의 비중은 88.9%로 연평균 0.4% 증가하였다.

Ⅱ 공공기관 총 인력규모(현원) Ⅱ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2025.5.1. 자료를 기준(신규지정기관 포함, 지정해제기관 제외)으로 하며, 부설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인력규모 현황임

21)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소속외인력(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을 제외한 기간제근로자, 한시적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을 의미함

22) 소속외인력은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인력이 아니라 외주업체를 통한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채용한 인력을 의미함

공공기관 총 인력규모(현원)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정규직	임원	784 (0.2)	784 (0.2)	769 (0.2)	760 (0.2)	768 (0.2)	8	△0.5
	일반 정규직	332,071 (74.9)	339,651 (76.0)	344,178 (76.3)	344,666 (76.6)	341,590 (76.9)	△3,076	0.7
	무기 계약직	56,502 (12.7)	55,644 (12.5)	55,380 (12.3)	53,945 (12.0)	52,907 (11.9)	△1,038	△1.6
	소계	389,357 (87.8)	396,079 (88.6)	400,327 (88.8)	399,371 (88.7)	395,265 (88.9)	△4,106	0.4
	비정규직	23,522 (5.3)	21,925 (4.9)	21,773 (4.8)	22,010 (4.9)	21,460 (4.8)	△550	△2.3
소속외인력		30,531 (6.9)	29,011 (6.5)	28,830 (6.4)	28,804 (6.4)	27,696 (6.2)	△1,108	△2.4
합계		443,410 (100.0)	447,015 (100.0)	450,930 (100.0)	450,185 (100.0)	444,421 (100.0)	△5,764	0.1

주: ()는 비중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2.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현원 현황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현원

2024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²³⁾ 정원은 42만 3,069명으로, 공기업이 14만 8,756명, 준정부기관이 11만 7,429명, 기타공공기관이 15만 6,883명이다. 2024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전년 대비 1,965명(0.5%)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0.5% 증가하였다. 2024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기타공공기관이 가장 많으며,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 시장형 공기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24년 정규직 임직원 정원이 전체의 약 37.1%로 가장 많다.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는 중소기업은행(1만 3,599명), 서울대학교병원(8,495명), 부산대학교병원(6,981명), 분당 서울대학교병원(5,747명), 경북대학교병원(5,539명) 순으로 정규직 임직원 정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 정규직은 상임임원, 일반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을 의미한다.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148,708	149,183	150,301	147,909	148,756	847	0.01
시장형	74,701	75,530	76,169	75,027	75,438	411	0.3
준시장형	74,007	73,653	74,132	72,882	73,318	436	△0.2
준정부기관	114,063	117,209	119,088	116,478	117,429	951	0.7
기금관리형	30,107	31,063	31,660	30,890	31,124	234	0.8
위탁집행형	83,956	86,146	87,428	85,588	86,305	717	0.7
기타공공기관	152,583	156,728	160,489	156,716	156,883	167	0.7
은행형 공공기관	18,191	18,504	18,610	18,274	18,345	71	0.2
기타	134,392	138,224	141,879	138,443	138,539	96	0.8
전체	415,353	423,120	429,878	421,104	423,069	1,965	0.5

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은행형 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기타 기관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전년 대비 정원이 증가한 기관은 부산대학교병원(6,981명, 278명 증가), 분당서울대학교병원(5,747명, 233명 증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724명, 131명 증가), 한국수출입은행(1,323명, 110명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년 대비 정원이 감소한 기관은 대한석탄공사(187명, 446명 감소), 경북대학교병원(5,539명, 176명 감소), 전남대학교병원(5,523명, 131명 감소), 경상국립대학교병원(4,116명, 114명 감소)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²⁴⁾의 2024년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1만 8,345명으로 전년 대비 71명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0.2%로 기타공공기관 전체에 비해 정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낮은 편이다.

시장형 공기업의 2024년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7만 5,438명으로, 전년 대비 411명 증가하였다. 시장형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2만 3,423명), 한국수력원자력(1만 2,794명), 한국도로공사(9,075명), 한국가스공사(4,251명), 강원랜드(3,689명) 순으로 정규직 임직원 정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5개 기관들의 임직원 정원은 시장형 공기업 전체 임직원 정원의 70.6%를 차지한다.

준시장형 공기업의 2024년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7만 3,318명으로, 전년 대비 436명 증가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3만 2,380명), 한국토지주택공사(8,872명), 한전KPS(주)

24)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의미한다.

(6,669명), 한국수자원공사(6,377명), 한전KDN(주)(3,021명) 순으로 정규직 임직원 정원이 많았다. 이들 5개 기관의 임직원 정원은 준시장형 공기업 전체 임직원 정원의 78.2%를 차지한다. 준시장형 공기업의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0.2%로 공공기관 유형 중 유일하게 감소 추세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2020년 9,683명 → 2024년 8,872명, 811명 감소)와 한국마사회(2020년 3,145명 → 2024년 2,866명, 279명 감소) 등은 최근 5년간 정원이 감소되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2024년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3만 1,124명으로 전년 대비 234명 증가하였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2024년 정원은 8만 6,305명으로 전년 대비 717명 증가하였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에는 근로복지공단(1만 159명), 국민연금공단(7,430명), 신용보증기금(2,928명) 순으로 정원이 많았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1만 6,156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7,547명), 한국농어촌공사(6,580명), 한국국토정보공사(4,566명) 순으로 정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현원은 39만 5,265명으로 공기업이 14만 2,739명, 준정부기관이 11만 2,405명, 기타공공기관이 14만 122명이다. 2024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의 현원은 전년 대비 4,106명(1.0%)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0.4% 증가하였다.

Ⅱ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현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142,912	143,214	144,135	143,162	142,739	△423	△0.0
시장형	72,596	73,054	73,677	73,017	72,925	△92	0.1
준시장형	70,316	70,160	70,457	70,145	69,814	△331	△0.2
준정부기관	108,323	111,786	112,827	112,624	112,405	△219	0.9
기금관리형	28,326	29,206	29,438	29,546	29,605	59	1.1
위탁집행형	79,997	82,580	83,389	83,077	82,800	△277	0.9
기타공공기관	138,122	141,080	143,365	143,585	140,122	△3,463	0.4
은행형 공공기관	16,868	16,963	16,914	16,794	16,866	72	0.0
기타	121,254	124,116	126,451	126,792	123,256	△3,536	0.4
전체	389,357	396,079	400,327	399,371	395,265	△4,106	0.4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정규직 임직원 정원과 같이 현원 역시 기타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시장형 공기업 순으로 많았다. 또한, 기타공공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순으로 전년 대비 2024년 정규직 임직원 현원의 감소 폭이 컸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기준으로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

시장형 공기업의 2024년 정규직 임직원 현원은 7만 2,925명으로 전년 대비 92명 감소하였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0.1% 증가하였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현원은 6만 9,814명으로 전년 대비 331명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Delta 0.2\%$ 이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2024년 현원은 2만 9,605명으로 전년 대비 59명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1%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2024년 현원은 8만 2,800명으로 전년 대비 277명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0.9%로 나타났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24년 현원은 14만 122명으로 전년 대비 3,463명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0.4%였다. 전년 대비 현원이 큰 폭으로 감소한 기타 유형의 공공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7,421명, 636명 감소), 충남대학교병원(4,047명, 442명 감소), 경북대학교병원(4,703명, 319명 감소), 전남대학교병원(4,562명, 298명 감소), 대한석탄공사(169명, 260명 감소)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전문의·간호인력 퇴사 후 신규 인력 미채용으로 현원이 감소하였으며,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2025년 석탄 생산사업 종료로 인한 사업 규모 축소로 현원이 감소하였다.

공공기관 임직원 정규직의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보면, 2024년에 정규직 임직원의 정원이 전년 대비 1,965명 증가하였고 현원은 4,106명 감소하였다. 2024년의 경우 정원 42만 3,069명에 비해 현원은 2만 7,804명 미충원된 39만 5,265명이었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정원에 비해 2만명 이상이 미충원되었으며, 2023년을 제외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원의 6% 이상이 미충원되었고, 2024년은 6.6% 미충원되어 미충원률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 대비 현원 비교 ■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정원(C)	415,353	423,120	429,878	421,104	423,069	1,965
현원(D)	389,357	396,079	400,327	399,371	395,265	△4,106
차이(C-D)	25,996	27,041	29,551	21,733	27,804	6,071
비율[(C-D)/C]	6.3	6.4	6.9	5.2	6.6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현원

2024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원은 5만 8,925명으로, 전체 정규직 임직원 대비 13.9%를 차지한다. 또한, 2024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원은 전년 대비 183명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0년 6만 4,056명에서 2024년에는 5만 8,925명으로 5,131명(△0.1%) 감소하였다.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원 현황 ■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		증감 (B-A)
					정원 (B)	정규직 대비 비율	
공기업	11,912	11,774	11,751	11,117	11,183	7.5	66
시장형	4,314	4,335	4,328	4,255	4,305	5.7	50
준시장형	7,598	7,439	7,423	6,862	6,878	9.4	16
준정부기관	19,331	19,705	19,742	18,576	18,555	15.8	△21
기금관리형	5,417	5,451	5,416	4,993	4,994	16.1	1
위탁집행형	13,914	14,254	14,326	13,583	13,561	15.7	△22
기타공공기관	32,813	32,311	32,187	29,414	29,186	18.6	△228
은행형 공공기관	4,418	4,416	4,420	3,584	3,353	18.3	△231
기타	28,395	27,895	27,767	25,831	25,834	18.7	3
전체	64,056	63,790	63,680	59,108	58,925	13.9	△183
정규직 대비 비율	15.4	15.1	14.8	14.0	13.9	-	-

주: 정규직 대비 비율은 정규직(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임원) 정원 대비 무기계약직 정원 비중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유형 중 기타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정원은 2024년 기준 2만 9,186명으로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많지만, 2024년 전년 대비 228명 감소하였다. 기타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대비 비중은 18.6%로 타 유형에 비해 높으며, 특히 기타 유형의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대비 비중은 18.7%로 타 유형에 비해 높다.

공기업의 2024년 무기계약직 정원은 1만 1,183명으로 정규직 대비 7.5%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66명 증가하였다. 이 중 준시장형 공기업 정원은 6,878명으로 정규직 대비 9.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6명 증가하였다.

준정부기관의 2024년 무기계약직 정원은 1만 8,555명으로 정규직 대비 15.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1명 감소하였다. 이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무기계약직 정원이 1만 3,561명으로 정규직 대비 15.7%를 차지하였고, 전년 대비 22명 감소하였다.

2024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원은 5만 2,907명으로 정규직의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038명 감소하였고, 모든 공공기관 유형에서 현원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기타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순으로 무기계약직 현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Ⅱ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		증감 (B-A)
					현원 (B)	정규직 대비 비율	
공기업	10,947	10,463	10,559	10,456	10,229	7.2	△227
시장형	4,097	4,045	4,127	4,071	3,997	5.5	△74
준시장형	6,850	6,418	6,432	6,385	6,233	8.9	△152
준정부기관	16,908	17,488	17,370	17,113	16,734	14.9	△379
기금관리형	4,675	4,687	4,546	4,505	4,430	15.0	△75
위탁집행형	12,233	12,801	12,824	12,608	12,304	14.9	△304
기타공공기관	28,647	27,693	27,451	26,376	25,944	18.5	△432
은행형 공공기관	3,499	3,375	3,346	2,831	2,650	15.7	△181
기타	25,149	24,318	24,105	23,545	23,294	18.9	△251
전체	56,502	55,644	55,380	53,945	52,907	13.4	△1,038
정규직 대비 비율	14.5	14.1	13.8	13.5	13.4	-	-

주: 정규직 대비 비율은 정규직(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임원) 현원 대비 무기계약직 현원 비중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타공공기관의 2024년 무기계약직 현원은 2만 5,944명으로 정규직 대비 18.5%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432명 감소하여 공공기관 유형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2024년 무기계약직 현원은 2,650명으로, 전년 대비 18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2024년 무기계약직 현원이 1만 2,304명으로 정규직 대비 1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04명 감소하였다.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24년 무기계약직 현원은 6,233명으로 정규직 대비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52명이 감소하였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인원 현황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5년 이전에는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었고, 2015년 12월부터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인원이 편성되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인원²⁵⁾은 2024년 10,415명으로, 2020년 대비 2,173명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0% 증가하였다.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인원 현황 ■

(단위: 명, %)

구분	2020(A)	2021	2022	2023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4,404	4,197	4,526	5,365	5,783	1,379	7.1
시장형	1,442	1,556	1,905	2,261	2,655	1,213	16.5
준시장형	2,962	2,641	2,621	3,104	3,128	166	1.4
준정부기관	2,780	2,785	2,682	2,786	2,932	152	1.3
기금관리형	631	629	637	685	693	62	2.4
위탁집행형	2,149	2,156	2,045	2,101	2,239	90	1.0
기타공공기관	1,058	1,475	1,623	1,728	1,700	642	12.6
은행형 공공기관	85	399	427	516	488	403	54.8
기타	973	1,076	1,196	1,212	1,212	239	5.6
전체	8,242	8,457	8,831	9,879	10,415	2,173	6.0

주: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합산하였음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5)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합산 수치이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시장형 공기업의 2024년 임금피크제 인원이 2,655명으로 2020 대비 1,213명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6.5% 증가하여 타 유형에 비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2024년 임금피크제 인원은 2,239명으로 2020년 대비 90명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0% 증가하여 타 유형에 비해 증가율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기타공공기관의 2024년 임금피크제 인원이 1,700명으로 2020년 대비 642명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2.6% 증가하였다.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는 은행형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은행형 공공기관의 2024년 임금피크제 인원은 488명으로, 2020년 대비 403명 증가하여 5.7배 이상 증가하였다.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관 중에서는 주택관리공단(주)의 임금피크제 인원이 2020년 대비 50명 증가하여 가장 증가폭이 컸다. 반면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도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16명) 등은 임금피크제 인원이 2020년에 비해 2024년에 감소하였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금피크제 인원이 2020년 대비 2024년에 88명 감소하여 그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28명), 한국산업인력공단(△17명), 한국농어촌공사(△8명)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에서도 한국가스안전공사(40명), 국토안전관리원(30명), 축산물품질평가원(24명) 등은 2020년에 비해 2024년에 임금피크제 인원이 증가하였다.

3. 공공기관 비정규직 및 소속외인력 현황

공공기관 비정규직²⁶⁾ 현황

2024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원은 전년 대비 550명 감소한 2만 1,460명으로, 정규직 대비 5.4% 해당한다. 이 중 2024년 공기업의 비정규직 현원이 2,709명, 준정부기관이 3,718명, 기타공공기관이 1만 5,034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24년 비정규직 현원은 501명으로, 전년 대비 83명 감소하였으며, 2024년 기준 정규직 대비 비율이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낮은 0.7%에 해당한다. 시장형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비정규직 현원이 전년 대비 17명 감소하여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전년 대비 9명 감소하였다.

26)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 및 재택/가내 근로자, 일시/간헐 업무 근로자,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등을 포함하며, 소속외인력은 제외한다.

준시장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2024년 비정규직 현원이 2,209명으로, 전년 대비 415명 늘어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준시장형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전년 대비 비정규직 현원이 62명 늘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전년 대비 2024년 비정규직 수가 644명 줄어 가장 큰 폭으로 줄었으나, 2024년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비율은 10.7%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대한석탄공사의 비정규직 수가 전년 대비 각각 175명, 136명 감소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다른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비정규직 현원이 최근 5년 동안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수준임에 비해, 기타공공기관에서는 비정규직 현원이 최근 5년 동안 2,657명 증가하였다. 특히 은행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타 유형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수는 2,652명 증가하여 타 유형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기타 유형의 공공기관 중 한전MCS(주)는 2020년 60명에서 2024년 378명으로 318명 증가하였고, 코레일로지스(주)는 비정규직 현원이 2020년 400명에서 2024년 689명으로 289명 증가하였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원 현황 ■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		증감 (B-A)
					현원 (B)	정규직 대비 비율	
공기업	2,678	2,882	2,562	2,378	2,709	1.9	331
시장형	663	606	574	584	501	0.7	△83
준시장형	2,015	2,276	1,988	1,794	2,209	3.2	415
준정부기관	8,467	4,673	3,600	3,955	3,718	3.3	△237
기금관리형	1,869	1,639	701	662	904	3.1	242
위탁집행형	6,598	3,033	2,899	3,293	2,814	3.4	△479
기타공공기관	12,377	14,371	15,611	15,678	15,034	10.7	△644
은행형 공공기관	315	323	314	320	320	1.9	0
기타	12,062	14,048	15,297	15,358	14,713	11.9	△644
전체	23,522	21,925	21,773	22,010	21,460	5.4	△550
정규직 대비 비율	6.0	5.5	5.4	5.5	5.4	-	-

주: 정규직은 임원,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 현원의 합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실적은 1,311건으로, 2024년의 경우 319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시장형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205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모두 (주)강원랜드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정규직 전환 실적이 53명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재)우체국물류지원단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다.

또한, 기타공공기관의 2024년 비정규직 전환 실적은 61명이며 5년간 총 46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경우 2021년 및 2023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이 없으며, 2020년부터 2024년 동안 정규직 전환 실적이 총 21명이다.

반면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24년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0명이었다. 특히 준시장형 공기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없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정규직 전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공기업	37	4	164	67	205	477
시장형	37	4	164	67	205	477
준시장형	0	0	0	0	0	0
준정부기관	62	115	43	97	53	370
기금관리형	1	0	0	0	0	1
위탁집행형	61	115	43	97	53	369
기타공공기관	275	73	41	14	61	464
은행형 공공기관	12	0	7	0	2	21
기타	263	73	34	14	59	443
전체	374	192	248	178	319	1,311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소속외인력²⁷⁾ 현황

2024년 공공기관 소속외인력 현원은 2만 7,696명으로, 공기업이 1만 5,136명, 준정부기관이 4,765명, 기타공공기관이 7,795명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소속외인력은 현원과 정규직 대비 비율 모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4

27) 소속외인력은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을 포함하였다.

년 공공기관 소속외인력은 전년 대비 1,108명 감소하였으며, 정규직 대비 소속외인력 비율은 7.0%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소속외인력은 전년 대비 2024년 감소하였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24년 소속외인력 현원은 1만 2,171명으로 2023년 대비 916명 줄어들어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정규직 대비 소속외인력 비율은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큰 16.7%로 나타났다. 시장형 공기업 중 한국가스공사의 소속외인력이 전년 대비 1,282명 감소하여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24년 소속외인력 현원은 2,965명으로 정규직 대비 4.3%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49명 줄어들었다.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속외인력이 전년 대비 166명 감소하여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기타공공기관 중 부산대학교병원 176명, (주)공영홈쇼핑 73명 감소하였다.

■ 공공기관 소속외인력 현원 현황 ■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		증감 (B-A)
					현원 (B)	정규직 대비 비율	
공기업	15,780	15,621	16,105	16,101	15,136	10.6	△965
시장형	12,699	12,686	13,211	13,087	12,171	16.7	△916
준시장형	3,081	2,935	2,894	3,014	2,965	4.3	△49
준정부기관	5,343	5,054	4,770	4,779	4,765	4.2	△14
기금관리형	1,092	915	765	671	794	2.7	123
위탁집행형	4,251	4,139	4,005	4,108	3,971	4.8	△137
기타공공기관	9,409	8,337	7,956	7,925	7,795	5.6	△130
은행형 공공기관	1,107	1,094	1,224	1,267	1,355	8.0	88
기타	8,302	7,243	6,732	6,658	6,440	5.2	△218
전체	30,531	29,011	28,830	28,804	27,696	7.0	△1,108
정규직 대비 비율	7.8	7.3	7.2	7.2	7.0	-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소속외인력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만 8,061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2020년에 전환된 인원이 1만 5,115명(83.7%)이며, 2021~2024년에 전환된 인원은 2,946명(16.3%)이다. 2024년의 경우

1,479명의 소속외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최근 4년 중 정규직 전환 실적이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시장형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 내 2024년 소속외인력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각각 1,321명, 158명으로 있었으며, 나머지 유형에서는 소속외인력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 소속외인력의 정규직 전환실적 ■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공기업	12,145	161	99	1	1,321	13,727
시장형	8,797	2	0	0	1,321	10,120
준시장형	3,348	159	99	1	0	3,607
준정부기관	380	145	0	0	0	525
기금관리형	35	36	0	0	0	71
위탁집행형	345	109	0	0	0	454
기타공공기관	2,591	983	6	72	158	3,810
은행형 공공기관	17	0	0	0	0	17
기타	2,574	983	6	72	158	3,793
전체	15,115	1,289	105	73	1,479	18,061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현황

공공기관 상임 임원 및 일반정규직 신규채용 수는 2024년 2만 194명으로, 공기업이 5,904명, 준정부기관이 5,909명, 기타공공기관이 8,381명의 상임 임원 및 일반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임 임원 및 일반정규직 신규채용 수는 2020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전년 대비 276명 감소하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4년 상임 임원 및 일반정규직 신규채용은 기타공공기관이 전년 대비 1,910명 감소하여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4.3% 감소하였다. 은행형 공공기관의 2024년 정규직 신규채용 수는 648명으로 전년 대비 180명 증가하였다. 한국산업은행의 2024년 신규채용 수²⁸⁾는 225명으로 전년 대비 151명 증가하였다. 반면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2023년 신규채용 수는 330명으로 전년 대비

28) 임원 포함

20명 감소하였다. 기타공공기관 중 대한적십자사는 2024년 신규채용 수는 364명으로 전년 대비 142명 감소하였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2024년 상임 임원 및 일반정규직 신규채용은 4,450명으로 전년 대비 204명 증가하였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119명), 한국농어촌공사(△72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71명) 순으로 신규채용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신규채용 수가 463명으로 전년 대비 35명 감소하였다.

■ 공공기관 상임 임원 및 일반정규직 신규채용 현황 ■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7,628	5,946	5,313	4,661	5,904	1,243	△6.2
시장형	3,477	2,894	1,914	1,685	2,429	744	△8.6
준시장형	4,151	3,052	3,399	2,976	3,475	499	△4.3
준정부기관	6,849	7,719	6,972	5,518	5,909	391	△3.6
기금관리형	1,505	1,917	1,629	1,272	1,460	188	△0.8
위탁집행형	5,345	5,802	5,343	4,246	4,450	204	△4.5
기타공공기관	15,525	12,661	12,348	10,291	8,381	△1,910	△14.3
은행형 공공기관	407	459	605	468	648	180	12.3
기타	15,118	12,202	11,743	9,823	7,733	△2,090	△15.4
전체	30,002	26,326	24,632	20,470	20,194	△276	△9.4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공공기관 전체의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수는 5,366명으로, 공기업이 601명, 준정부기관이 1,616명, 기타공공기관이 3,149명이며, 전년 대비 72명 감소하였다.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7.2% 하락하였으며, 2022년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2023년 다시 감소하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시장형 공기업 및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 유형에서 2024년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2024년의 신규채용 수는 347명으로 전년 대비 85명 감소하여 신규채용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2024년의 신규채용 수는 1,269명으로 전년 대비 62명 감소하였다.

공공기관 정규직 지역인재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총 신규채용	37,247	32,658	31,625	25,908	25,560	△348
지역인재 신규채용	18,541 (49.8)	18,543 (56.8)	18,186 (57.5)	15,178 (58.6)	14,835 (58.0)	△343
비수도권 지역인재	16,487 (44.3)	16,240 (49.7)	15,979 (50.5)	13,375 (51.6)	12,671 (49.6)	△704
이전지역 지역인재	2,055 (5.5)	2,303 (7.1)	2,207 (7.0)	1,803 (7.0)	2,165 (8.5)	362

주: 1. 총 신규채용은 상임임원, 일반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의 합임
 2. () 안은 총 신규채용 대비 비중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전년 대비 2024년의 지역인재 신규채용 수가 증가하였다. 공기업은 2024년 지역인재 신규채용 인원이 4,954명으로 전년 대비 1,192명 증가하였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24년 지역인재 신규채용 수는 2,024명으로 전년 대비 685명 증가하였다.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24년 지역인재 신규채용 수는 2,930명으로 전년 대비 507명 증가하였다.

준정부기관은 2024년 지역인재 신규채용 인원이 4,582명으로 전년 대비 280명 증가하였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2024년 지역인재 신규채용 수가 1,023명으로 전년 대비 141명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증가하였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2024년 지역인재 신규채용 수가 3,559명으로 전년 대비 139명 증가하였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24년 지역인재 신규채용은 5,299명으로, 전년 대비 1,815명 감소하여 모든 유형 중 유일하게 감소하였다.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경우 2024년 지역인재 신규채용 수는 186명으로 전년 대비 29명 증가하였으며 기타 유형 공공기관은 5,113명으로 전년 대비 1,844명 감소하였다.

공공기관 유형별 지역인재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5,676	4,588	4,317	3,762	4,954	1,192	△3.3
시장형	2,653	2,166	1,503	1,339	2,024	685	△6.5
준시장형	3,023	2,422	2,814	2,423	2,930	507	△0.8
준정부기관	4,824	5,571	5,369	4,302	4,582	280	△1.3
기금관리형	975	1,148	1,152	882	1,023	141	1.2
위탁집행형	3,850	4,423	4,217	3,420	3,559	139	△1.9
기타공공기관	8,041	8,384	8,500	7,114	5,299	△1,815	△9.9
은행형 공공기관	97	140	181	157	186	29	17.7
기타	7,944	8,244	8,319	6,957	5,113	△1,844	△10.4
전체	18,541	18,543	18,186	15,178	14,835	△343	△5.4

주: 비수도권 지역인재와 이천지역 지역인재 신규채용의 합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4절 공공기관 인건비·복리후생비 현황

1. 공공기관 인건비·복리후생비 개념과 범위

공공기관 총인건비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총인건비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³⁰⁾에 따르면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 항목과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정과목 및 명목, 지급방법 등에 관계없이 임직원(정원외직원 제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며, 그 밖에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도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관 총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2024년 말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30)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관련 지침은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으나 2022년부터 '예산운용지침'으로 통합되었다.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법인과의 근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예산상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된다. 급여성 복리후생비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하며 총인건비에 포함된다.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란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부분을 의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³¹⁾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있었던 공공기관은 총 73개로, 시장형 공기업 13개, 준시장형 공기업 14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6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1개, 기타공공기관 29개 기관이다.

2. 공공기관 인건비·복리후생비 관련 규정

공공기관 인건비 관련 규정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2025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4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0%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규직 1인당 평균 임금이 해당 산업 및 공공기관 평균 임금의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인상률 내에서 증액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1)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당산업 평균임금의 90%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60%이하: 4.0%이내
- 해당산업 평균임금의 90%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70%이하: 3.5%이내
- 해당산업 평균임금의 110%이상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120%이상: 2.5%이내

자료: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또한,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중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임금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평균임금의 85% 이하인 기관은 무기계약직 총인건비를 3.5% 이내에서 증액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의 기준과 관계없이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임금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평균임금의 75% 이하인 기관은 무기계약직 총인건비를 4.0%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2024년도에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의 경우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인건비를 감액하여 편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급의 경우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개인별·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급 총액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차등 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급 차등에 관한 내부기준은 차등 등급 수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등급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은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과급 차등 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소속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관련 규정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7조³²⁾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에서 복리

32)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7조(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 ①공공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퇴직금, 임직원 자녀의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의 지급, 휴가·휴직제도 등) 운영을 지양하고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②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를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예산과

후생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하거나 감액한 경우, 폐지항목을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거나,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를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비·학자금, 주택자금·용자금, 선택적 복지비 등 복리후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이를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일시 자금 등을 재원으로 복리후생을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기존 직원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Ⅱ 복리후생비 주요항목별 준수사항 Ⅱ

항목	주요내용
교육비 · 학자금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은 폐지하고, 용자방식으로 전환 · 초·중·고 자녀에 대한 학자금, 방과후 교육비, 자녀 영어캠프비·학원비 등 사교육비, 입학축하금 등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 등은 지원할 수 없으며, 해외파견자의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에 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예산에서 장학금을 편성할 수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기관 내부지침 등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함 · 정부로부터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 기관에서 별도로 지급하던 종전 보육료, 특별활동비 등은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함 · 절감된 종전 보육료 등은 개인에 대한 수당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 영유아 보육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주택자금 · 용자금	· 주택자금 등의 대출이자율, 대출한도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결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개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할 주택구입·임차관련 이자비용을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직원생활 안정 등을 위한 용자사업을 예산으로 운영할 수 없으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한시적 지원은 예외로 함 · 각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직원이 부담.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음
선택적 복지비	·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의료비 지원을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되, 의료비 통합 명목으로 선택적 복지비를 과도하게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함 ·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관에서 의료비지원 예산 편성 시, 성형비용·보약제 비용 등 과도한 의료비지원이 되지 않도록 함 · 기간제·시간제근로자의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예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라 편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하여 지출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이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13.12.11)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하거나 그 예산을 감액한 경우, 이를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하거나,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를 증액 편성할 수 없다.

④공공기관은 복리후생비 예산 편성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기계약직과 기존 직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항목	주요내용
퇴직급여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순직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위로보상금 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함 • 업무상 순직의 경우 동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 보상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유족보상금과 장제비(葬祭費)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 • 동법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급여·장해급여 외에 추가로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경조사비·상품권등	•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조해서는 안됨 •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포상금품은 원칙적으로 미지원하고, 퇴직예정자 등에게 과도한 기념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창립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지원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물품을 지급하여 사실상 급여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자료: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연구개발목적기관에 대한 인건비·복리후생비 특례

정부는 연구개발목적기관에 대하여 기관의 성격 및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의 인건비에 대하여 차등인상률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 부처 직할 연구기관의 경우 차등 인상률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목적기관은 복리후생제도에서 해외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무기관의 장과 대상 및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여 별도의 주거지원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분	규정	세부내용
총인건비 차등인상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포함)과 부처 직할 연구기관은 차등 인상률 적용 제외 가능
해외 우수 연구인력 주거지원제도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해외 우수 연구인력 유치·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무기관의 장과 대상,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여 별도의 주거지원 제도 운영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공공기관³³⁾ 인건비 현황

공공기관 일반정규직 평균보수 현황

2025년 기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일반정규직³⁴⁾ 평균보수³⁵⁾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의 공공기관 일반정규직의 평균보수는 약 7,170만원으로, 2023년 6,990만원에 비해 약 18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2020~2024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6%인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2020년부터 2024년 동안 매년 시장형 공기업의 보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2020년부터 2024년 동안 매년 직원 평균 보수가 가장 낮은 공공기관 유형은 기타공공기관이다.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도 은행형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 평균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형 공공기관의 2024년 직원 평균보수는 1억 1,289만원으로 기타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에 전년 대비 약 307만원 증가하였고, 2020년부터 2024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1.1%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4년 동안 일반정규직 평균보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 유형은 기타공공기관 중 기타 유형 공공기관으로, 2020~2024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2.3% 상승하였다. 반면, 일반정규직 평균보수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공공기관 유형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20~2024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0.9%로 나타났다.

33) 2025년에 지정된 공공기관 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부설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평균 현황이다.

34) 정규직은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나, 여기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일반정규직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35) 일반정규직 직원은 호봉제와 연봉제 방식으로 보수 계약을 체결하며, 일반정규직 평균보수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경영평가성과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직원 평균보수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82,597	81,911	83,491	84,613	86,024	1,411	1.0
시장형	87,362	86,853	88,887	89,386	91,860	2,474	1.3
준시장형	78,427	77,841	79,047	80,682	81,218	536	0.9
준정부기관	69,921	70,353	71,179	72,581	74,131	1,550	1.5
기금관리형	79,213	79,507	80,435	81,645	83,180	1,535	1.2
위탁집행형	67,598	68,065	68,865	70,315	71,868	1,553	1.5
기타공공기관	64,626	65,292	66,098	67,458	69,362	1,904	1.8
은행형 공공기관	107,879	108,885	109,299	109,822	112,890	3,068	1.1
기타	62,815	64,246	65,315	66,950	68,839	1,889	2.3
전체	67,161	67,686	68,559	69,898	71,695	1,797	1.6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직원 평균보수 현황

(단위: 천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연봉

부설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기관장³⁶⁾의 평균연봉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2024년 1억 9,117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7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20~2024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5%이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2020년부터 2024년 동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이 매년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2024년 2억 6,542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액이 약 655만원이며 2020~2024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2.1%이다.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평균연봉이 2024년 1억 8,702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84만원 감소하여 연봉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평균연봉이 2024년 2억 343만원이며, 전년 대비 2,325만원 상승하여 공공기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24년 기관장 평균연봉은 1억 8,517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521만원 상승하였으며 그 중 은행형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연봉은 2024년 기준 4억 534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2.12배 이상의 높다. 한편, 2024년 은행형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2024년 전년 대비 2,218만원 증가하였다. 반면, 기타 유형의 공공기관의 경우 2024년 기관장 평균연봉은 1억 8,228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낮다.

36) 공공기관 임원(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은 연봉제 방식으로 보수 계약을 체결하며, 임원 평균연봉은 기본급, 성과상여금, 경영평가 성과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연봉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218,004	206,499	202,370	189,876	194,429	4,553	△2.8
시장형	231,722	221,655	216,233	180,183	203,428	23,245	△3.2
준시장형	206,000	194,017	190,953	197,859	187,019	△10,840	△2.4
준정부기관	193,519	194,449	196,741	210,486	213,697	3,211	2.5
기금관리형	243,993	253,087	255,554	258,876	265,423	6,547	2.1
위탁집행형	180,060	178,813	181,058	197,582	199,903	2,321	2.6
기타공공기관	171,922	176,194	179,921	179,967	185,173	5,206	1.9
은행형 공공기관	397,105	419,330	390,865	383,153	405,335	22,182	0.5
기타	168,837	172,923	177,096	177,293	182,276	4,983	1.9
전체	180,380	182,500	185,174	186,383	191,169	4,786	1.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연봉 현황

(단위: 천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이사(상임) 평균연봉

공공기관 이사(상임) 평균연봉은 2024년 1억 5,969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21만원 증가하였으며, 2020~2024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나타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이사(상임) 평균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 유형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2020년 약 1억 9,179만원, 2024년 2억 605만원의 평균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상임이사 평균연봉의 연평균 증가율이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2020~2024년 연평균 평균연봉 증가율이 3.2%로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24년의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1억 4,308만원으로 전년 대비 619만원 감소하여 전년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타 유형의 공공기관에 비해 평균연봉이 가장 낮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24년 상임이사 평균연봉이 1억 5,464만원으로 준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하면 상임이사 평균연봉이 가장 낮다.

한편,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23년의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1억 5,648만원으로, 공기업군을 제외하면 평균연봉이 타 공공기관 유형에 비해 낮지만, 은행형 공공기관의 경우 2024년 상임이사 평균연봉이 2억 9,549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유형에 비해 약 1.85배 높다. 기타 유형의 공공기관 2024년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1억 5,309만원이며, 전년 대비 357만원 증가하였다.

공공기관 이사(상임) 평균연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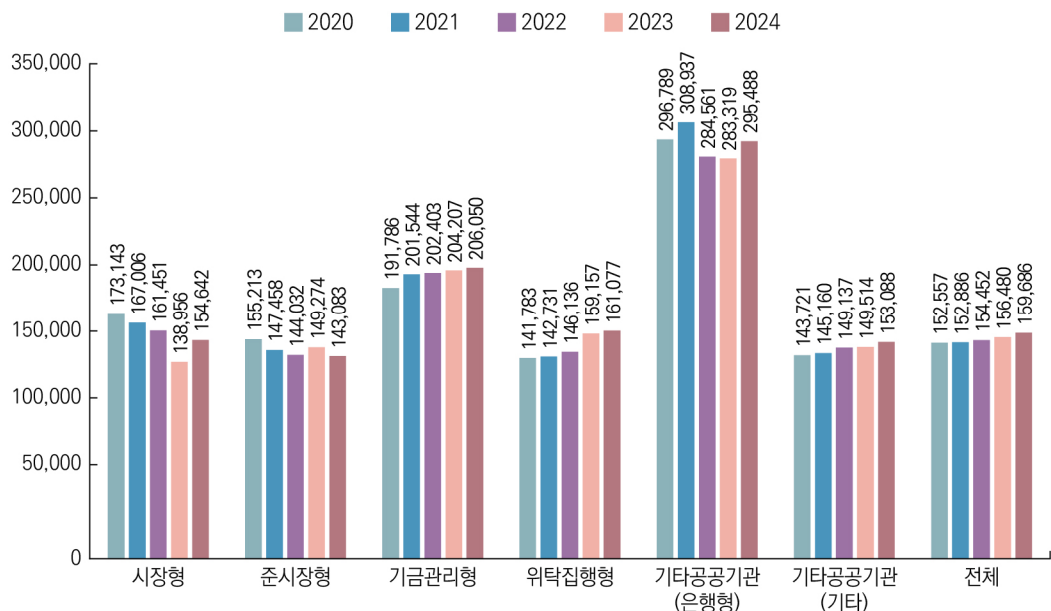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163,580	156,286	151,899	144,614	148,303	3,689	△2.4
시장형	173,143	167,006	161,451	138,956	154,642	15,686	△2.8
준시장형	155,213	147,458	144,032	149,274	143,083	△6,191	△2.0
준정부기관	153,784	156,846	159,640	169,969	171,871	1,902	2.8
기금관리형	191,786	201,544	202,403	204,207	206,050	1,843	1.8
위탁집행형	141,783	142,731	146,136	159,157	161,077	1,920	3.2
기타공공기관	147,465	149,093	152,199	152,647	156,482	3,835	1.5
은행형 공공기관	296,789	308,937	284,561	283,319	295,488	12,169	△0.1
기타	143,721	145,160	149,137	149,514	153,088	3,574	1.6
전체	152,557	152,886	154,452	156,480	159,686	3,206	1.1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이사(상임) 평균연봉 현황

(단위: 천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감사(상임) 평균연봉

공공기관 감사(상임) 평균연봉은 2024년 1억 6,72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526만원 증가하였으며, 2020~2024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0.7%이다. 2020~2024년 동안 상임 감사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 유형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2020년 기준 1억 9,921만원, 2024년 기준 2억 1,517만원의 평균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24년 평균연봉이 1억 4,509만원으로 전년 대비 242만원 감소하여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상임감사 평균연봉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상임감사 평균연봉이 가장 낮으며, 2020~2024년 연평균 1.8% 감소하였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24년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1억 6,821만원 수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균연봉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2024년 기준 3억 77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약 1.8배에 해당한다. 은행형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전체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1.7~1.9배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공공기관 감사(상임) 평균연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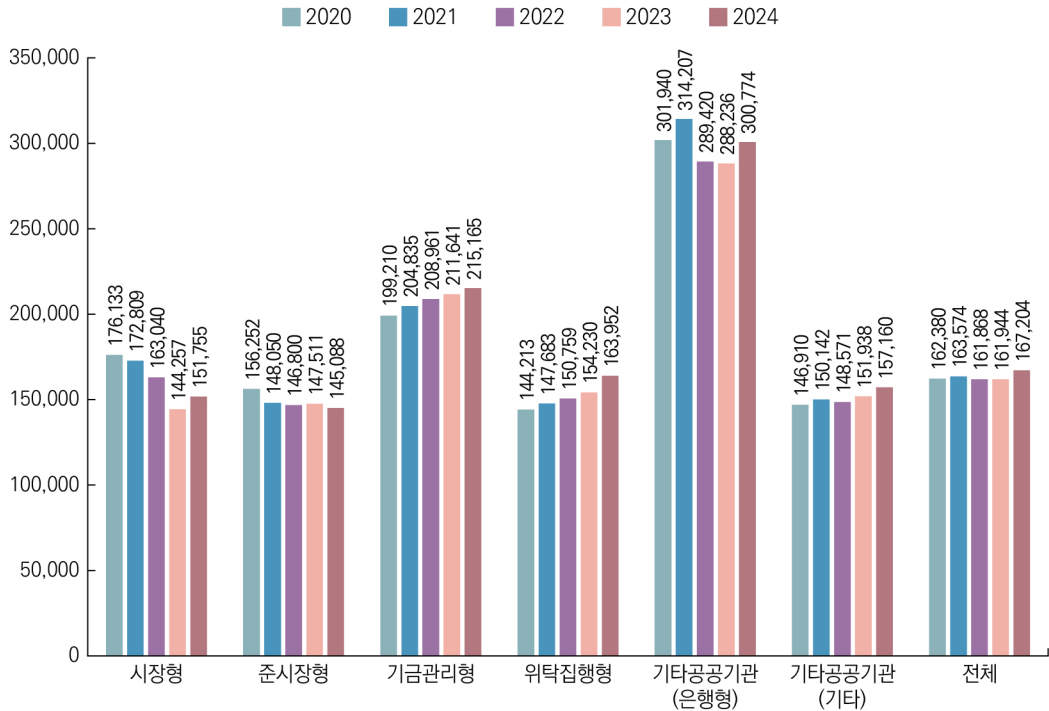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165,000	158,525	153,671	146,134	147,909	1,775	△2.7
시장형	176,133	172,809	163,040	144,257	151,755	7,498	△3.7
준시장형	156,252	148,050	146,800	147,511	145,088	△2,423	△1.8
준정부기관	163,728	167,963	171,411	174,602	182,124	7,522	2.7
기금관리형	199,210	204,835	208,961	211,641	215,165	3,524	1.9
위탁집행형	144,213	147,683	150,759	154,230	163,952	9,722	3.3
기타공공기관	159,480	163,444	159,691	162,422	168,208	5,786	1.3
은행형 공공기관	301,940	314,207	289,420	288,236	300,774	12,538	△0.1
기타	146,910	150,142	148,571	151,938	157,160	5,223	1.7
전체	162,380	163,574	161,868	161,944	167,204	5,260	0.7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감사(상임) 평균연봉 현황

(단위: 천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공공기관³⁷⁾ 복리후생비 현황

공공기관 1인당 복리후생비³⁸⁾ 현황

2024년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약 143만원으로, 전년 대비 3만원 감소하였으며, 2020~2024년 동안 연평균 0.5% 증가하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의 경우 2024년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144만원으로, 전년 대비 9만원 감소하였다.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24년 125만원으로, 전년 대비 18만원 감소한 반면, 준시장형 공기업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23년 163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증가하였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2024년 1인당 복리후생비는 152만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며, 기타공공기관의 2024년 1인당 복리후생비는 135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감소하였다. 한편,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경우 2024년 1인당 복리후생비는 187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공공기관 유형별 1인당 복리후생비 현황

(단위: 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151	158	161	153	144	△9	△1.3
시장형	159	166	170	143	125	△18	△5.8
준시장형	143	151	152	162	163	1	3.2
준정부기관	146	147	149	152	152	0	1.0
기금관리형	160	155	158	163	166	3	1.0
위탁집행형	141	144	145	148	147	△1	1.0
기타공공기관	124	129	131	136	135	△1	2.1
은행형 공공기관	167	170	171	177	187	10	2.9
기타	119	124	126	130	128	△2	2.0
전체	140	144	146	146	143	△3	0.5

주: 부설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1인당 복리후생비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7) 2025년에 지정된 공공기관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8) 공공기관의 예산상 복리후생비를 정규직 임직원 정원 수로 나눈 값이다.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도별 출연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705 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억원 증가하였으며, 2020~2024년 동안 연평균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기업의 경우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77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53억 원 증가하였다.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24년 492억원으로, 전년 대비 413억원 증가하였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 2024년 28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억원 증가하였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237억원으로, 전년 대비 358억 원 감소하였다. 이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2024년 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334억원 감소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4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냈다.

기타공공기관은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 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69억원 감소하였다.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출연액은 2024년 622억원으로, 2024년 기준 기타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의 89%를 차지하였다.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922	995	454	320	773	453	△4.3
시장형	321	777	235	79	492	413	11.3
준시장형	601	218	220	241	280	39	△17.4
준정부기관	165	131	318	595	237	△358	9.4
기금관리형	125	91	269	550	216	△334	14.7
위탁집행형	40	39	49	45	21	△24	△15.2
기타공공기관	670	486	872	765	696	△69	1.0
은행형 공공기관	535	396	743	683	622	△61	3.9
기타	135	90	129	82	74	△8	△14.0
전체	1,757	1,611	1,645	1,680	1,705	26	△0.7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규모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누적 출연액은 한국전력공사는 527억 9,900만원이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은 462억원이다. 준시장형 공기업 중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누적 출연액은 467억 773만원이었으며, 한전KPS(주)의 경우 310억 5,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최근 5년간 누적 출연액은 신용보증기금이 527억 2,500만원, 기술보증기금이 206억 3,692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72억 6,365만원을 출연하였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79억 1,223만원, 한국산업단지공단 47억 7,295만원을 출연하였다.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경우 최근 5년간 누적 출연액은 중소기업은행이 2,435억 7,596만원이며, 한국산업은행은 444억 7,399만원, 한국수출입은행은 98억 8,057만원이다.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의 경우 최근 5년간 누적 출연액은 80억 532만원이다.

■ 주요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규모 ■

(단위: 백만원)

기관 유형	기관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최근5년간 누적출연액
시장형 공기업 (10개)	한국전력공사	0	52,799		0	0	52,799
	한국수력원자력(주)	5,480	24,000	10,290	0	6,430	46,200
	한국도로공사	10,490	0	945	3,297	4,817	19,549
	인천국제공항공사	5,500	0	0	0	8,880	14,380
	한국가스공사	3,038	0	10,518	0	0	13,556
	한국지역난방공사	0	865	0	0	9,294	10,159
	한국남부발전(주)	0	0	0	0	7,464	7,464
	한국남동발전(주)	767	0	0	1,316	5,040	7,123
	한국서부발전(주)	0	0	0	3,293	3,788	7,081
	한국동서발전(주)	826	0	26	0	3,536	4,388
준시장형 공기업 (14개)	한국수자원공사	9,416	11,556	9,436	10,000	6,300	46,708
	한전KPS(주)	8,150	4,410	5,124	5,285	8,083	31,052
	한국토지주택공사	27,161	0	0	0	0	27,161
	한전KDN(주)	2,555	2,617	2,820	2,217	2,904	13,113
	한국마사회	3,000	0	0	2,000	2,600	7,600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1,714	1,281	768	1,159	2,061	6,981
	주택도시보증공사	2,400	1,710	2,333	0	0	6,44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23	0	1,211	2,173	1,817	5,724

(단위: 백만원)

기관 유형	기관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최근5년간 누적출연액
	그랜드코리아레저(주)	2,859	0	0	0	2,174	5,033
	주식회사 에스알	1,316	0	0	429	430	2,175
	한국부동산원	157	211	191	442	460	1,461
	한국조폐공사	560	0	0	336	404	1,301
	(주)한국가스기술공사	266	16	75	0	592	948
	해양환경공단	0	0	0	37	207	24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6개)	신용보증기금	1,871	0	7,395	31,240	12,219	52,725
	기술보증기금	0	0	9,030	11,607	0	20,637
	한국주택금융공사	3,500	4,350	3,963	3,479	1,972	17,264
	한국자산관리공사	2,151	1,979	2,023	3,561	3,788	13,502
	한국무역보험공사	3,360	0	3,500	3,500	2,000	12,360
	예금보험공사	1,600	2,800	986	1,600	1,600	8,58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개)	한국농어촌공사	1,307	290	2,811	1,962	1,542	7,912
	한국산업단지공단	1,324	1,024	205	2,006	214	4,77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5	40	137	180	270	772
	한국전력거래소	159	0	110	23	9	300
	(재)우체국금융개발원	23	27	1	57	17	12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2	12	25	25	25	109
기타 공공기관 (21개)	중소기업은행	38,461	30,794	64,568	66,320	43,434	243,576
	한국산업은행	12,000	6,800	8,425	0	17,249	44,474
	한국수출입은행	3,000	2,000	1,356	2,000	1,525	9,881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1,639	844	1,674	1,739	2,110	8,00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	1,328	1,346	903	1,173	4,749
	부산항만공사	600	600	653	650	650	3,153
	여수광양항만공사	509	516	367	730	105	2,226
	대한체육회	1,346	0	68	136	150	1,70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40	187	214	323	500	1,664
	한국벤처투자	0	266	137	758	448	1,608
	(주)공영홈쇼핑	0	0	700	500	160	1,360
	코레일테크(주)	349	191	294	148	259	1,24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23	0	432	424	254	1,232
	한국언론진흥재단	0	300	240	300	300	1,140
	코레일유통(주)	404	0	0	78	328	810
	코레일네트웍스(주)	0	12	115	223	458	808
	울산항만공사	0	200	200	200	200	800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106	103	125	140	175	649

(단위: 백만원)

기관 유형	기관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최근5년간 누적출연액
	국제식물검역인증원	43	33	74	41	8	198
	코레일관광개발(주)	18	13	5	14	104	15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0	1	17	42	8	98

주: 5년간 사내복지기금 출연액이 50억원 미만인 기관 중 2024년 출연액이 없는 기관은 제외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5절 공공기관³⁹⁾의 ESG 현황

1. 공공기관 ESG 운영 현황 개관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라는 비재무적 요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경영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최근 정부는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ESG 경영의 도입 및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에 ESG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경영 실적 평가 지표에도 ESG 항목을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ESG 경영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ESG 경영공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 제11조(경영공시)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특정 사유(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 국가안보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에 관한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공시항목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공시 체계 내에서 ESG 관련 공시 항목은 크게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는,

- 환경 영역(E): 대기환경, 자연환경, 환경보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경영 활동의 실적을 포함한다.

39) 2025년 1월에 지정된 공공기관 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경영실적평가 대상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사회 영역(S):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사회공헌 활동,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현황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반영한다.
- 지배구조 영역(G): 이사회 운영, 자체 감사기구 부서현황, 청렴도 평가결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능한다.

2025년 2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에 따라 ESG 공시 항목이 확대되었다. 사회(S) 영역에는 기존 항목 외에 ‘장애인 고용 현황’ 및 ‘구매실적’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2024년 개정 시 기준이 마련되고 2025년부터 의무화되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공시항목은 기존 7개에서 9개로 확대(가족친화 인증 여부와 육아휴직자의 직장 유지율 신설)되었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이사회’ 항목이 신설되고, 기존의 ‘청렴도 평가결과’는 분리 공시 항목으로 재구성되었다.

ESG 운영 공시 항목

구분	중분류	공시항목	세항목	공시시기
ESG 운영	ESG현황	ESG 경영 및 운영위원회 현황	ESG 추진체계 및 운영위원회 현황	1분기
	E (환경)	대기환경	온실가스 감축실적	3분기
			저공해 자동차 현황	2분기
		자연환경	에너지 사용량	1분기
			폐기물 발생량	1분기
			용수 사용량	1분기
		환경보호	환경법규 위반 현황	수시
			녹색제품 구매실적	3분기
	S (사회)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 및 안전사고 사망자 수, 안전경영책임보고서	1분기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2분기
			개인정보보호	2분기
		사회공헌 활동	기부실적	2분기
		인권경영	인권경영선언, 지침, 인권경영계획서 등	2분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현황	육아휴직 사용자 수 및 사용률	1분기
			출산·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 수 및 사용률	1분기
			임신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 사용자 수	1분기
			유연근무 현황 및 성별 실시 인원 수	1분기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자 수	1분기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	1분기
			가족친화 인증 여부	1분기
			육아휴직자의 직장유지율	1분기
		동반성장 평가결과	동반성장 평가결과	2분기
		장애인 고용 현황	장애인 의무 고용률 현황	2분기
		구매실적	혁신조달 구매실적	2분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2분기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2분기
	G (지배구조)	이사회	이사회 회의록	수시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수시
		자체 감사부서 현황	자체 감사부서 현황	1분기
		청렴도 평가결과	청렴도 평가결과	1분기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바탕으로 재작성

2. 장애인 고용 현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40)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024년 기준 3.8%)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현황은 공공기관운영법 제11조(경영공시)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정기적으로 공시되고 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변화(2020~2024) ■

(단위: %)

대상	2020~2021	2022~2023	202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4	3.6	3.8
공공기관	3.4	3.6	3.8
민간기업	3.1	3.1	3.1

자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인원과 고용률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2020년 9,567명에서 2024년 10,231명으로 664명(6.9%)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실제 고용인원은 11,132명에서 11,330명으로 198명(1.8%) 증가하였다. 고용률은 3.93%에서 4.19%로 상승하였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3.53%에서 2024년 4.18%로 0.65%p 증가하였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같은 기간 4.03%에서 3.90%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상회하였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4.10%에서 4.31%로 증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4.05%에서 4.42%로 상승하였다. 준정부기관 전체로는 4.06%에서 4.39%로 증가하였다.

4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의무고용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준시장형 공기업은 2023년 이후 고용률이 소폭 감소하였다.

2024년 기준으로 모든 유형의 공공기관은 법정 의무고용률(3.8%)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률 향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애인 근로자 고용 현황 ■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공기업	의무고용인원	5,080	5,117	5,445	5,390	5,762
	고용인원	5,716	5,643	5,834	6,070	6,137
	고용률	3.81	3.74	3.84	4.04	4.04
	시장형	의무고용인원	2,219	2,287	2,387	2,363
		고용인원	2,308	2,364	2,477	2,585
		고용률	3.53	3.5	3.72	3.93
	준시장형	의무고용인원	2,861	2,830	3,058	3,027
		고용인원	3,408	3,279	3,357	3,485
		고용률	4.03	3.93	3.94	4.13
준정부기관	의무고용인원	4,487	4,356	4,654	4,241	4,469
	고용인원	5,416	5,657	5,785	5,100	5,193
	고용률	4.06	4.36	4.43	4.3	4.39
	기금관리형	의무고용인원	1,007	1,039	1,084	1,071
		고용인원	1,221	1,179	1,294	1,202
		고용률	4.1	3.83	4.27	4.02
	위탁집행형	의무고용인원	3,480	3,317	3,570	3,170
		고용인원	4,195	4,478	4,491	3,898
		고용률	4.05	4.53	4.47	4.4
전체	의무고용인원	9,567	9,473	10,099	9,631	10,231
	고용인원	11,132	11,300	11,619	11,170	11,330
	고용률	3.93	4.03	4.11	4.16	4.19

주: 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은 각 연도말 기준

2. 장애인 고용인원 및 고용률은 중증2배수제 적용

3. 상기 장애인고용률은 구분별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을 구분별 전체 상시근로자 수로 나누어 계산

자료: 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024년 기준 3.8%)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

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총 38개로, 부과된 고용부담금 총액은 53억 6,100만원이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시장형 공기업 4개 기관(12억 2,700만원), 준시장형 공기업 14개 기관(12억 7,100만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개 기관(1억 7,900만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6개 기관(26억 8,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장형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11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한국공항공사, (주)강원랜드, 한국서부발전(주) 등이 포함되었다. 준시장형 공기업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3억 2,500만원), (주)한국가스기술공사(2억 2,200만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1억 9,700만원) 등이 주요 납부기관으로 확인되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신용보증기금(9,5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5,800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1,700만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700만원) 등이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8억 2,7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납부하였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6억 7,700만원), 한국전기안전공사(5억 1,200만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2억 1,3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기관수	총액	기관명(금액)
공기업	18	2,498	
시장형	4	1,227	한국전력공사(1,165), 한국공항공사(37), (주)강원랜드(23), 한국서부발전(주)(2)
준시장형	14	1,271	한국수자원공사(325), (주)한국가스기술공사(222),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197), 한국철도공사(132), 그랜드코리아레저(주)(103), 한국광해광업공단(78), 한국토지주택공사(77) 등
준정부기관	20	2,863	
기금관리형	4	179	신용보증기금(95), 중소기업진흥공단(58), 한국무역보험공사(1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7)
위탁집행형	16	2,684	한국국토정보공사(82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677), 한국전기안전공사(512), (재)우체국물류지원단(213), 한국승강기안전공단(142), 한국산업인력공단(78) 등
전체	38	5,361	

주: 연도말 기준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

3. 산업재해 현황

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2021년부터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등을 포함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사고사망자 수는 2020년 42명에서 2022년 21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7명, 3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4년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4년에는 크게 증가하여 전체 사고사망자의 50%(15명)를 차지하였다. 시장형 공기업은 2023년 사고사망자가 증가하였다가 2024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전체 사고사망자 중 시장형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8.4%(75명)이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현황(2020~2024) ■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최근 5년간 누적
공기업	35	27	17	21	24	124
시장형	24	17	8	17	9	75
준시장형	11	10	9	4	15	49
준정부기관	7	8	4	6	6	31
기금관리형	0	0	0	0	1	1
위탁집행형	7	8	4	6	5	30
전체	42	35	21	27	30	155

주: 1. 2025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을 기준으로 함

2.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은 사고사망 승인일 기준으로 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2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사망사고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두 기관의 누적 사망사고자는 각각 33명, 30명으로, 시장형 공기업 사고사망자의 84%를 차지하였다.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자 비

중이 컸으며, 두 기관의 최근 5년간 누적 사망사고자는 39명(한국철도공사 10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9명)으로 준시장형 공기업 최근 5년간 누적 사망사고자의 7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6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여 준시장형 공기업의 사고사망자(15명)의 40%를 차지하였다.

■ 공기업 산업재해 사망사고자 현황(2020~2024) ■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최근 5년간 누적
시장형 공기업	24	17	8	17	9	75
한국전력공사	11	5	5	9	3	33
한국도로공사	8	9	3	6	4	30
준시장형 공기업	11	10	9	4	15	49
한국철도공사	1	2	2	2	3	10
한국토지주택공사	10	6	7	2	4	29
한국수자원공사	0	1	0	0	6	7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2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금관리형에서는 최근 5년간 신용보증기금에서 2024년 단일 사망사고(1건)가 발생하였으며, 그 외 기관에서는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사고사망자 비중이 높았다. 최근 5년간 국가철도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누적 사망사고자는 각각 11명(36.7%)과 12명(40.0%)으로, 두 기관의 사고사망자 수(23명)가 위탁집행형 사고사망자의 76.7%를 차지하였다.

■ 준정부기관 산업재해 사망사고자 현황(2020~2024) ■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최근 5년간 누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0	0	0	0	1	1
신용보증기금	0	0	0	0	1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	8	4	6	5	30
국가철도공단	4	2	1	1	3	11
한국농어촌공사	3	2	3	3	1	12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2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현황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및 안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전사적 안전경영 체계 구축 및 현장 안전활동 강화를 유도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재해 사고율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2024년에는 심사단을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안전취약 분야(건물해체공사, 고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사고예방 노력 심사지표를 강화하였다. 심사 대상은 공기업(27개), 준정부기관(24개), 기타공공기관(21개) 등 총 72개 기관이었다.

2024년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2등급(양호) 기관은 20개(27.8%), 3등급(보통) 기관은 51개(70.8%), 4등급(미흡) 기관은 1개(1.4%)였으며, 1등급(우수) 및 5등급(매우미흡) 기관은 없었다. 보통 이상(2~3등급) 기관 비율은 전년도 대비 4개 기관 증가하며 안전관리 수준이 소폭 개선되었다.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종합등급) ■

(단위: 개, %, %p)

구분	기관수	1등급 (우수)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미흡)	5등급 (매우미흡)
2021년도	99	-	11(11.1)	59(59.6)	26(26.3)	3(3.0)
2022년도	90	-	28(31.1)	55(61.1)	6(6.7)	1(1.1)
2023년도(A)	72 ¹⁾	-	19(26.4)	48(66.7)	5(6.9)	-
2024년도(B)	72	-	20(27.8)	51(70.8)	1(1.4)	-
증감(B-A)	-	-	1(1.4)	3(4.1)	△4(△5.5)	-

주: 1) 공공기관 지정해제 등의 사유로 2024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18개 미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확정' 보도자료(25.4.25.)

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27개)은 모두 3등급(보통)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정부기관(24개)과 기타공공기관(21개)에서도 대부분이 2~3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새만금개발공사는 2023년도 심사 결과와 동일하게 4등급(미흡)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등급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계	27개	24개	21개
1등급	-	-	-
2등급 (2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11)	(5)	(4)
3등급 (51개)	(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¹⁾ 주식회사 에스알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부산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코레일유통(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6)	(19)	(16)
4등급 (1개)	-	-	새만금개발공사
			(1)
5등급	-	-	-

주: 1) 대한석탄공사는 2025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25년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되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확정' 보도자료(25.4.25.)

2023년도 심사 결과와 비교하면,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증가하고, 미흡(4·5등급) 기관은 감소하였다. 등급 변동이 있었던 기관은 총 14개이며, 이 중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12개,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한국공항공사와 (주)강원랜드 등 2개로 나타났다.

■ 2023년도 대비 2024년 등급 변화(종합등급) ■

(단위: 개)

등급 상승 기관	등급 하락 기관
한국가스공사(3→2) 한국마사회(3→2) 한국석유공사(3→2) 한국수력원자력(주)(3→2) 한전KDN(주)(3→2) 국민연금공단(3→2) 한국원자력환경공단(3→2) 한국환경공단(3→2)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3→2) 한국에너지공단(4→3) 재단법인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4→3) 시청자미디어재단(4→3)	한국공항공사(2→3) (주)강원랜드(2→3)
12	2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확정' 보도자료(25.4.25.)를 바탕으로 재작성

5.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현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의 운영 현황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2017년부터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공시되고 있으며, 2025년 개정을 통해 관련 공시항목이 7개에서 9개로 확대되었다.

공시항목에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의 사용자 수 및 사용률,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자 수,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 가족친화 인증 여부(신규지표), 육아휴직자의 직장 유지율(신규지표) 등이 포함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인 육아휴직, 출산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운영 현황을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예시) Ⅱ

제도		2024	2025 개정
육아휴직		부모 각각 1년,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변동 없음
출산휴가	출산휴가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 확보	변동 없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유급), 분할 1회, 청구 기한 90일, 휴일 포함	20일(유급), 분할 최대 3회, 청구기한 120일, 휴일 제외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년 이내	대상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두배까지 단축가능, 통합 신청 허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유산·사산 위험시 임신 전기간 사용 가능 1일 2시간 단축

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 사용 현황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남녀 모두 증가하였다. 여성 사용자는 2020년 8,226명에서 2024년 9,357명으로 1,131명(13.8%) 증가하였으며, 남성 사용자는 같은 기간 2,311명에서 4,866명으로 2,555명(110.6%) 증가하였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공기업군에서 2020년 대비 2024년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준정부기관에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Ⅲ 공기업·준정부기관 육아휴직 사용 현황(2020~2024년) Ⅲ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공기업	2,963	1,375	2,926	1,487	3,138	2,153	3,091	2,408	3,100	2,939
시장형	1,664	722	1,655	810	1,760	1,164	1,672	1,358	1,679	1,687
준시장형	1,299	653	1,271	677	1,378	989	1,419	1,050	1,421	1,252
준정부기관	5,263	936	5,594	1,141	6,100	1,656	6,354	1,736	6,257	1,927
기금관리형	1,672	206	1,696	226	1,759	341	1,741	340	1,665	346
위탁집행형	3,591	730	3,898	915	4,341	1,315	4,613	1,396	4,592	1,581
전체	8,226	2,311	8,520	2,628	9,238	3,809	9,445	4,144	9,357	4,866

주: 2025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을 기준으로 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1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출산휴가 사용 현황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출산휴가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출산휴가 사용자는 2020년 2,879명에서 2024년 3,604명으로 725명(25.2%) 증가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같은 기간 4,121명에서 4,818명으로 697명(16.9%) 증가하였다.

기관유형별로 출산휴가는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의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574명에서 634명으로 10.5% 증가하였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1,306명에서 1,774명으로 35.9% 증가하였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436명에서 517명으로 18.6% 증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563명에서 679명으로 20.6% 증가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도 유형별로 증가하였다. 시장형 공기업은 2020년 1,593명에서 2024년 1,917명으로 324명(20.3%) 증가, 준시장형 공기업은 같은 기간 999명에서 1,260명으로 261명(26.1%) 증가하였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2020년 345명에서 2024년 354명으로 9명(2.6%) 증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같은 기간 1,184명에서 1,287명으로 103명(8.7%) 증가하였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출산휴가 사용 현황 ■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공기업	1,010	2,592	1,069	2,927	1,048	3,012	1,054	2,842	1,151	3,177
시장형	574	1,593	611	1,805	598	1,855	561	1,778	634	1,917
준시장형	436	999	458	1,122	450	1,157	493	1,064	517	1,260
준정부기관	1,869	1,529	2,027	1,692	2,116	1,667	2,196	1,506	2,453	1,641
기금관리형	563	345	594	399	607	337	605	301	679	354
위탁집행형	1,306	1,184	1,433	1,293	1,509	1,330	1,591	1,205	1,774	1,287
전체	2,879	4,121	3,096	4,619	3,164	4,679	3,250	4,348	3,604	4,818

주: 2025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을 기준으로 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1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단축근무 사용 현황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임신기 및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 수는 모든 기관유형에서 증가하였다. 임신기 단축근무 사용자 수는 2020년 2,475명에서 2024년 3,848명으로 1,373명(55.5%) 증가하였다.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 수는 같은 기간 3,189명에서

5,597명으로 2,408명(75.5%) 증가하였다.

시장형 공기업의 임신기 단축근무 사용자 수는 2020년 407명에서 2024년 691명으로 284명(69.8%) 증가하였으며,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 수는 같은 기간 1,174명에서 2,285명으로 1,111명(94.6%) 증가하였다. 준시장형 공기업의 임신기 단축근무 사용자 수는 2020년 364명에서 2024년 526명으로 162명(44.5%) 증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 수는 같은 기간 127명에서 287명으로 160명(126.0%) 증가하였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임신기 단축근무 사용자 수는 2020년 502명에서 2024년 710명으로 208명(41.6%) 증가하였고,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 수는 같은 기간 282명에서 679명으로 397명(140.7%) 증가하였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임신기 단축근무 사용자 수는 2020년 1,202명에서 2024년 1,921명으로 719명(59.8%) 증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 수는 같은 기간 1,606명에서 2,346명으로 740명(46.0%) 증가하였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단축근무제 사용 현황 ■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임신기	육아기	임신기	육아기	임신기	육아기	임신기	육아기	임신기	육아기
공기업	771	1,301	791	1,359	932	1,591	933	1,861	1,217	2,572
시장형	407	1,174	453	1,177	501	1,371	532	1,616	691	2,285
준시장형	364	127	338	182	431	220	401	245	526	287
준정부기관	1,704	1,888	1,913	1,736	2,037	2,071	2,222	2,510	2,631	3,025
기금관리형	502	282	553	320	554	388	623	517	710	679
위탁집행형	1,202	1,606	1,360	1,416	1,483	1,683	1,599	1,993	1,921	2,346
전체	2,475	3,189	2,704	3,095	2,969	3,662	3,155	4,371	3,848	5,597

주: 2025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을 기준으로 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1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ESG 관련 주요 구매 실적 현황

정부는 민간과의 상생·협력 기능 강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대응, 장애인고용 촉진 등 공공부문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관련 사항을 개별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⁴¹⁾은 녹색제품, 중증장애인생산물, 중소기업제품, 혁신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계획과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제품 구매 실적 관련 법령과 담당 부처는 다음과 같다. 녹색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의해 환경부에서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관리하고 있다.⁴²⁾ 중증장애인생산물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관리하고 있다.⁴³⁾ 중소기업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관리하고 있다.⁴⁴⁾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에서 혁신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구매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⁴⁵⁾

41) 이하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에 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2025년 신규 공공기관으로 편입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제외함)

4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과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사항
3.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43)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45) 기획재정부 훈령 제727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구매 증대)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혁신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실적 점검) 기획재정부장관은 혁신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구매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Ⅱ 공공기관 구매 관련 주요 현황 Ⅱ

구분	법령	구매 실적 관리 부처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환경부
중증장애인생산물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기획재정부 훈령 제727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획재정부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⁴⁶⁾ 2023년 전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8,691억원으로, 2020년 급감하였지만 이후 그 규모가 최근 5년 중 가장 크다. 공기업의 경우 2023년 구매액은 4,934억원이며 전체 녹색제품 구매액 중 차지하는 구매비중이 높은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누적 구매액이 2조 3,134억원으로 녹색제품 구매액 중 60.7%를 공기업이 구매하고 있다. 준정부기관은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이 2,759억원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누적 구매액이 1조 961억원으로 녹색제품 구매액 중 28.7%를 준정부기관이 구매하고 있다.

Ⅲ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실적 현황(2019~2023) Ⅲ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최근 5년간 누적	
						금액	비중
공기업	495,040	428,199	429,287	467,496	493,356	2,313,378	60.7
시장형	106,945	102,799	114,866	130,165	145,978	600,753	15.8
준시장형	388,095	325,400	314,421	337,331	347,378	1,712,625	44.9
준정부기관	191,121	195,732	193,653	239,672	275,898	1,096,076	28.7
기금관리형	23,055	23,232	29,169	34,379	44,602	154,437	4.0
위탁집행형	168,066	172,500	164,484	205,293	231,296	941,639	24.7
기타공공기관	67,425	61,120	76,777	98,831	99,830	403,983	10.6
전체	753,586	685,051	699,717	805,999	869,084	3,813,437	100.0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1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④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⁴⁷⁾ 구매이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한다.⁴⁸⁾ 2023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 3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개, 기타공공기관 106개 등 총 119개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 녹색제품 2023년 구매이행계획 미달 기관 현황 ■

구분	공공기관	계획 대비 구매비율 (%)
준시장형 공기업 (3)	주택도시보증공사	85.9
	한국전력기술(주)	68.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8.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	국민연금공단	92.5
	한국주택금융공사	90.2
	기술보증기금	74.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87.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7.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7.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66.8
	(재)우체국물류지원단	52.3
	한국국토정보공사	44.0
	한국재정정보원	24.6
기타공공기관 (106)	코레일로지스(주) 외 105개 기타공공기관	27.86

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구매 목표를 미달한 106개 공공기관의 평균 구매비율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1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

4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4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⁴⁹⁾

2023년 전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은 3,156억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점차 증가하여 그 규모가 최근 5년 중 가장 크다. 공기업의 경우 2023년 구매액은 1,852억원이며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 중 차지하는 구매비중이 높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누적 구매액이 8,527억원으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 중 58.7%를 공기업이 구매하고 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은 최근 5년 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 중 32.7%를 구매하고 있다. 준정부기관은 2023년 구매액이 807억원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누적 구매액이 3,823억원으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 중 26.3%를 준정부기관이 구매하고 있다.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실적 현황(2019~2023)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최근 5년간 누적	
						금액	비중
공기업	172,650	178,853	155,997	160,019	185,207	852,726	58.7
시장형	94,908	109,999	83,427	85,893	101,092	475,319	32.7
준시장형	77,742	68,854	72,570	74,126	84,115	377,407	26.0
준정부기관	70,842	72,679	79,186	78,920	80,667	382,295	26.3
기금관리형	9,925	8,216	7,354	9,216	8,902	43,614	3.0
위탁집행형	60,917	64,463	71,832	69,704	71,765	338,681	23.3
기타공공기관	38,561	37,954	41,040	50,120	49,770	217,445	15.0
전체	282,053	289,486	276,223	289,060	315,644	1,452,466	100.0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1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로 구매할 의무가 있다.⁵⁰⁾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

49)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② “중증장애인생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50)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 3개, 준시장형 공기업 4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개, 기타공공기관 92개 등 총 104개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물 2023년 총 구매액의 1% 미달 기관 현황 ■

구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
시장형 공기업 (3)	한국가스공사	0.79
	한국지역난방공사	0.57
	한국석유공사	0.56
준시장형 공기업 (4)	한국조폐공사	0.82
	주택도시보증공사	0.78
	해양환경공단	0.67
	한국광해광업공단	0.48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	기술보증기금	0.79
	한국자산관리공사	0.6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1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	국가철도공단	0.7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0.20
기타공공기관 (92)	기초과학연구원 외 91개 기타공공기관	0.24

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구매 목표를 미달한 92개 공공기관의 평균 구매비율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1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소기업제품은 중소기업자⁵¹⁾가 생산한 제품으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물품·용역 및 공사 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⁵²⁾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5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5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 증대) 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부 장관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 전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43조 1,21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 규모가 최근 5년 중 가장 크다. 공기업의 경우 2023년 구매액은 27조 4,885억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중 차지하는 구매비중이 높은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누적 구매액이 124조 4,391억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중 64.1%를 공기업이 구매하고 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은 최근 5년 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중 37.1%를 구매하고 있다.

준정부기관은 2023년 구매액이 9조 755억원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누적 구매액이 39조 9,863억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중 20.6%를 준정부기관이 구매하고 있다. 특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최근 5년 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중 19.4%를 구매하고 있다.

■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현황(2019~2023)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최근 5년간 누적	
						금액	비중
공기업	20,572,540	23,408,868	26,166,380	26,802,805	27,488,527	124,439,120	64.1
시장형	12,495,055	1,401,0749	15,494,103	14,853,611	15,034,756	71,888,274	37.1
준시장형	8,077,485	9,398,119	10,672,277	11,949,194	12,453,771	52,550,846	27.1
준정부기관	6,638,901	7,707,004	8,529,159	8,035,788	9,075,484	39,986,336	20.6
기금관리형	362,636	442,572	480,700	557,024	529,436	2,372,368	1.20
위탁집행형	6,276,265	7,264,432	8,048,459	7,478,764	8,546,048	37,613,968	19.4
기타공공기관	5,004,107	5,513,135	6,241,395	6,279,968	6,557,406	29,596,011	15.3
전체	32,215,548	36,629,007	40,936,934	41,118,561	43,121,417	194,021,467	100.0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1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⁵³⁾ 대다수 공공기관이 2023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달성하였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 4개로 건설기술교육원(46.7%), 한국수출입은행(43.1%), 새만금개발공사(42.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42.4%)이다.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Ⅱ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2023년 총 구매액의 50% 미달 기관 현황 Ⅱ

구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
기타공공기관 (4)	건설기술교육원	46.7
	한국수출입은행	43.1
	새만금개발공사	42.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42.4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1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혁신제품은 ①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②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③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⁵⁴⁾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⁵⁵⁾ 또한 혁신제품 지정 및 목표 설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및 공공조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심의를 통해 혁신제품 절차를 운영·관리하고 있다.⁵⁶⁾

5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2.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5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① 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2.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27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달정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56) 기획재정부 훈령 제726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위원회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⁵⁷⁾의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2,60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23년 감소하였다. 공기업의 경우 2023년 구매액은 1,798억원이며 전체 혁신제품 구매액 중 차지하는 구매비중이 높은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누적 구매액이 8,178억원으로 혁신제품 구매액 중 80.9%를 공기업이 구매하고 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은 최근 5년 간 혁신제품 구매액 중 61.2%를 구매하고 있다.

준정부기관은 2023년 구매액이 808억원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누적 구매액이 1,933억원으로 혁신제품 구매액 중 19.1%를 준정부기관이 구매하고 있다.

Ⅰ 공기업·준정부기관 혁신제품 구매 실적 현황(2020~2023) 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최근 4년간 누적	
					금액	비중
공기업	184,393	215,874	237,718	179,799	817,784	80.9
시장형	135,725	152,932	190,511	139,635	618,803	61.2
준시장형	48,668	62,942	47,207	40,164	198,981	19.7
준정부기관	21,117	37,875	53,447	80,827	193,267	19.1
기금관리형	844	2,280	5,406	16,349	24,879	2.50
위탁집행형	20,273	35,595	48,041	64,478	168,387	16.7
전체	205,510	253,749	291,165	260,626	1,011,051	100.0

주: 2025년 공공기관 지정을 기준으로 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1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획재정부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연간 총 물품구매액의 2% 이상⁵⁸⁾을 혁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목표를 설정해 경영평가⁵⁹⁾에 반영하고

제6조(분과위원회 심의대상) ①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7) 기획재정부 훈령 제727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포함)이 혁신제품 구매 평가대상이지만,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외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혁신제품 구매실적에 관한 경영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 관련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2025년 현재,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 실적을 소관 부처가 평가하고 있는지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음). 이러한 이유로 혁신제품 관련 구매 실적은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제품 구매 내역을 기술하였다.

기획재정부 훈령 제727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58) 혁신구매목표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해 매년 변경되어 혁신구매목표 달성을 지표로 경영평가편람에 반영되며 2023년의 경우 기관별 2021년 연간 총 물품구매액의 2%임

59)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있다.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87개 중 29개 기관은 혁신제품 구매 실적을 미달성하였다. 혁신제품 구매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5개, 준시장형 공기업 7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4개 등 총 29개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 혁신제품 2023년 총 구매액의 2% 미달 기관 현황

구분	공공기관	혁신기업제품 구매비율 (%)
시장형 공기업 (5)	한국가스공사	1.90
	한국공항공사	1.50
	한국전력공사	1.43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0
준시장형 공기업 (7)	한전KPS(주)	1.37
	한국부동산원	0.55
	한국토지주택공사	0.34
	한국광해광업공단	0.22
	한국조폐공사	0.0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01
	주식회사 에스알	0.0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	기술보증기금	1.72
	국민체육진흥공단	0.88
	예금보험공사	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72
	(재)우체국물류지원단	1.3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0.97
	한국농어촌공사	0.88
	한국전력거래소	0.71
	한국고용정보원	0.67
	국립생태원	0.5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0.44
	한국도로교통공단	0.35
	한국관광공사	0.3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0
	(재)우체국금융개발원	0
	한국소비자원	0
	한국장학재단	0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1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술·제도적 지원노력 및 성과' 항목 예시 중 혁신지향 공공조달(혁신제품 구매 등)은 '혁신구매목표 달성률'로 평가하고 있음

제2장

공공기관 재무 현황

제1절 공공기관 재무

1. 공공기관 결산 개요

각 공공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 결산서를 제출하여 정부로부터 결산 감사를 받고, 이를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각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규칙에 따라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등을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제출하고, 4월 10일까지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각각 승인을 받은 후 결산을 확정한다.

각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5일까지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감사원법」과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검사한 후, 그 결과를 7월 10일까지 다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7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 정부 결산 절차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절차 비교 ■

절차		정부 결산	공공기관 결산
자체 결산서 작성 및 제출·승인	중앙관서의 장(기관장) → 기획재정부장관(주무기관장)	2월 말	3월 15일까지 제출, 4월 10일까지 승인
결산서 감사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주무기관장) → 감사원	4월 10일	5월 15일
회계검사 결과 기획재정부 송부	감사원 → 기획재정부장관	5월 20일	7월 10일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정부 → 국회	5월 31일	7월 31일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2. 공공기관 자산·부채·당기순이익 현황

2025년 기준 331개 공공기관⁶⁰⁾의 2024년도 말 자산은 1,151조 9,426억원, 부채는 741조 4,764억원, 자본 410조 4,662억원, 당기순이익은 8조 1,219억원으로, 2023년도 말 대비 자산 54조 4,855억원, 부채 31조 8,327억원, 자본 22조 6,528억원 및 당기순이익 11조 3,662억원이 각각 증가하였다.

자본의 증가는 당기순이익, 정부출자 및 자산재평가 등에 따라 발생하는데, 2023년 대비 2024년 공공기관 전체 자본 증가(22조 6,528억원) 중 당기순이익 증가에 의한 것은 11조 3,662억원 수준으로, 당기순이익 이외의 항목에서 자본의 증가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Ⅱ 공공기관 재무현황(2020~2024) Ⅱ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자산	8,902,212	9,619,179	10,480,442	10,974,571	11,519,426	544,855	5.0
부채	5,418,325	5,843,683	6,709,573	7,096,438	7,414,764	318,327	4.5
자본	3,483,887	3,775,496	3,770,868	3,878,133	4,104,662	226,528	5.8
당기순이익	51,671	107,769	△140,305	△32,443	81,219	113,662	-

주: 각 공공기관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임(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자산

2024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자산은 2023년 대비 54조 4,855억원(5.0%) 증가한 1,151조 9,426억원이다. 2023년 대비 2024년 자산 증감을 공공기관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시장형 공기업 15조 8,673억원, 준시장형 공기업 13조 3,241억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5조 949억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조 1,169억원, 기타공공기관에서 3조 8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시장형 공기업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형 공기업 중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설비 건설 및 보강에 따른 유형자산 증가 등으로 7.1조원의 자산 증가가 있었고,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60) 2025년 기준 331개 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제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임대자산 증가 등으로 10.8조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 공급에 따른 대출채권 증가 등으로 10.3조원이 증가하였다.

■ 공공기관 자산 현황(2020~2024) ■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공기업	6,039,744	6,439,656	7,088,525	7,217,742	7,509,656	291,914	4.0
시장형	3,527,285	3,750,509	4,247,377	4,301,981	4,460,655	158,673	3.7
준시장형	2,512,459	2,689,147	2,841,148	2,915,761	3,049,001	133,241	4.6
준정부기관	2,086,150	2,274,105	2,510,927	2,818,848	3,040,966	222,118	7.9
기금관리형	1,190,994	1,338,497	1,506,189	1,714,630	1,865,579	150,949	8.8
위탁집행형	895,156	935,609	1,004,738	1,104,218	1,175,387	71,169	6.4
기타공공기관	776,317	905,418	880,989	937,981	968,804	30,823	3.3
합계	8,902,212	9,619,179	10,480,442	10,974,571	11,519,426	544,855	5.0

주: 각 공공기관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임(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부채

공공기관 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채무와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입금 및 사채, 그리고 향후 특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상 지출액을 미리 적립하는 개념인 충당부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4년 말 공공기관 부채는 2023년 대비 31조 8,327억원(4.5%) 증가한 741조 4,764억원이며 이 중 공기업 부채 증가액은 16조 3,757억으로 공공기관 부채 증가액 중 51.4%, 준정부기관 부채 증가액은 14조 1,302억원으로 44.4%를 차지한다.

2023년 대비 2024년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한국전력공사(2.9조원)와 한국도로공사(3.2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7.3조원)의 부채 증가에 기인한다.⁶¹⁾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채 증가(8.7조원)는 보금자리론 지원을 위한 공사채 발행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61)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증가는 전력공급비용 조달, 전력설비 건설 및 보강 등에 따라 증가한 것이며,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건설을 위한 차입금 증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도시 개발을 위한 회사채 발행 증가 등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였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채가 전년 대비 3.0조원 증가했으며, 이는 보험급여비 충당부채 증가로 인한 것이다.

■ 공공기관 부채 현황(2020~2024) ■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공기업	3,920,093	4,271,292	5,054,264	5,210,782	5,374,539	163,757	3.1
시장형	2,199,067	2,453,901	3,153,176	3,234,765	3,320,243	85,478	2.6
준시장형	1,721,026	1,817,391	1,901,088	1,976,017	2,054,296	78,279	4.0
준정부기관	1,241,192	1,278,385	1,356,338	1,558,576	1,699,878	141,302	9.1
기금관리형	622,345	658,791	741,677	876,599	972,890	96,291	11.0
위탁집행형	618,848	619,594	614,661	681,977	726,988	45,011	6.6
기타공공기관	257,040	294,007	298,971	327,079	340,347	13,267	4.1
합계	5,418,325	5,843,683	6,709,573	7,096,438	7,414,764	318,327	4.5

주: 각 공공기관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임(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당기순이익

2024년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8조 1,219억원으로 2023년 △3조 2,443억원 대비 11조 3,66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요금인상과 국제 에너지가격 하락 등으로 2023년 대비 손익이 8.3조원 증가한 3.6조원을 시현하였고, 한국가스공사 또한 이자비용 절감, 해외사업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2023년 대비 손익이 1.8조원 증가한 1.1조원을 시현함 등에 따른 것이다.

2023년도에 당기순이익을 인식한 기관은 예금보험공사(3.0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2.4조원) 등이 있다. 이에 반해 주택도시보증공사(△2.5조원), 한국광해광업공단(△1.2조원) 등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임대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 등으로 2023년(△3.9조원)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Ⅱ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현황(2020~2024) Ⅱ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공기업	△7,456	△17,637	△219,678	△77,892	32,142	110,034	-
시장형	△12,994	△52,342	△233,380	△42,534	60,798	103,331	-
준시장형	5,538	34,705	13,702	△35,359	△28,656	6,703	-
준정부기관	31,375	66,829	95,105	54,008	61,988	7,979	14.8
기금관리형	16,294	28,103	26,470	18,782	33,584	14,803	78.8
위탁집행형	15,081	38,726	68,635	35,227	28,403	△6,823	△19.4
기타공공기관	27,751	58,577	△15,733	△8,559	△12,910	△4,351	-
합계	51,671	107,769	△140,305	△32,443	81,219	113,662	-

주: 각 공공기관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임(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은행형 공공기관

기획재정부는 상기 공공기관 재무현황 발표 시 재무건전성을 부채비율이 아닌 BIS비율⁶²⁾(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본비율)로 관리하는 3개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재무현황을 제외하고 있다.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2024년 말 부채총계는 878조 2,290억원으로 2023년 대비 45조 660억원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손익은 2023년 대비 1조 6,174억원 감소하여 당기순이익 규모는 5조 8,416억원이다.

Ⅲ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부채, 당기순이익 현황(2022~2024) Ⅲ

(단위: 억원)

구분	부채				당기순이익			
	2022	2023 (a)	2024 (b)	증감 (b-a)	2022	2023 (c)	2024 (d)	증감 (d-c)
한국산업은행	3,157,800	3,081,069	3,285,714	204,645	△78,953	39,967	21,467	△18,500
한국수출입은행	1,076,388	1,084,456	1,116,689	32,233	4,155	7,871	10,406	2,535
중소기업은행	4,019,304	4,166,105	4,379,887	213,782	26,747	26,752	26,543	△209
합계	8,253,492	8,331,630	8,782,290	450,660	△48,051	74,590	58,416	△16,174

자료: 각 공공기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62) BIS비율은 은행의 주요 재무건전성 지표로, BIS비율 수치가 높을수록 은행 경영이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ext{BIS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text{ 으로 산정된다.}$$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평균 BIS비율은 2014년 12.08% 이후 2020년 15.29%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13.82%로 감소하였고, 2024년 14.65%로 소폭 증가하였다.

2020년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주요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 등을 하향하는 ‘바젤 III 최종안’을 2020년 2분기부터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⁶³⁾⁶⁴⁾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2020년 12월 말에, 한국수출입은행은 2021년 6월 말부터 도입하였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시중 은행의 평균 BIS비율(총자본)은 15.58%⁶⁵⁾로, 3개 기관의 평균 BIS비율인 14.65%는 시중 은행 대비 0.93%p 낮으며, 향후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가능성 등으로 향후 부실이 일부 확대될 가능성 또한 있어, 이와 관련한 재무건전성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Ⅲ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연도별 BIS비율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수출입은행	11.61	11.60	10.50	10.04	10.77	12.90	14.42	14.56	15.09	14.84	13.38	14.47	15.35
한국산업은행	15.01	14.47	13.36	14.18	14.86	15.26	14.80	14.05	15.96	14.88	13.40	14.07	13.90
중소기업은행	12.37	12.30	12.39	12.51	13.13	14.20	14.50	14.47	14.82	14.85	14.68	14.87	14.69
3개 은행 평균	13.00	12.79	12.08	12.24	12.92	14.12	14.57	14.36	15.29	14.86	13.82	14.47	14.65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3)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III 최종안」을 '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하였다.

64) 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III 최종안」을 '20.2분기부터 조기 시행합니다.”, 보도자료, 2020.3.27.

65) 금융감독원, “24년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보도자료, 2025.03.31.

제2절 국가부채에 포함된 공공기관 부채 현황

부채 유형별 개념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국가부채 통계는 포괄 범위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국가채무(D1)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현금주의 기준에 따른 채무를 의미하며, 일반정부 부채(D2)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공부문 부채(D3)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일반정부(중앙, 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D1)는 1,126.8조원(GDP대비 46.9%)이며, 일반정부 부채(D2)는 1,217.3조원(GDP대비 50.7%), 공공부문 부채(D3)는 1,673.3조원(GDP대비 69.7%) 수준이다.

■ 국가부채 통계 유형별 개념 및 활용 ■

유형	2023년 규모 (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1,126.8조원 (46.9%)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 (D2)	1,217.3조원 (50.7%)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673.3조원 (69.7%)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자료: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4.12.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황

국가부채는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부문을 포괄하여 중앙·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및 507개 공공기관⁶⁶⁾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507개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금융공기업 10개 제외),⁶⁷⁾ 지방공기업법 상 공사·공단, 공영방송사, 국립대학 법인, 고등교육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2024년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에서 중앙 공공부문이 포괄하는 범위를 살펴보면, 일반정부 부채(D2)에는 국가채무(D1) 이외

66)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231개,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118개, 비금융공기업(중앙 116개, 지방 42개) 158개로 구성됨

67) 2024년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은 2024년도 지정 기준이다.

비영리공공기관(210개), 국립대학법인·고등교육기관(21개) 등의 부채가 포함되며, 공공 부문 부채(D3)에는 일반정부 부채(D2) 이외 비금융공기업(107개), 공영방송사 및 국립 대학법인·고등교육기관(9개) 등의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

■ 국가부채에 포함된 중앙 공공부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비교 ■

구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에 포함된 중앙부문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D2에 포함되는 비영리공공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축공간연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무원연금공단,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 210개	좌동
국립대학법인, 고등교육기관	서울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21개	-
D3에 포함되는 비금융공기업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설기술교육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107개	좌동
공영방송사 및 국립대학법인, 고등교육기관	KBS, EBS, 인천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9개	-
금융공기업	제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투자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벤처투자, 한국해양진흥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10개
합계	347개	327개

주: 1.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은 2024년 지정을 기준으로 함

2. 대학법인·고등교육기관 중 서울대학교 등 3개 기관은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이하로 비영리공공기관, 인천대학교 등 3개 기관은 원가보상률이 50% 초과로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

자료: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4.12.

일반정부 부채(D2)에 포함된 공공기관 부채 현황

일반정부 부채(D2)는 2023년 1,217.3조원(GDP 대비 50.7%)이며, 2022년 1,157.2조원(GDP 대비 49.8%) 대비 60.1조원 증가하였다. 이 중 중앙정부에 속한 비영리공공기관(국립대학법인, 고등교육기관 포함)의 부채는 2022년 55조원(GDP 대비 2.4%)에서 2023년 59.0조원(GDP 대비 2.5%)으로 4조원 증가하였다.

Ⅰ 일반정부 부채(D2) 총괄표 Ⅰ

(단위: 조원, %, %p)

구분	2022(A)		2023(B)		증감(B-A)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①+②+③)	1,157.2	49.8	1,217.3	50.7	60.1	0.9
중앙정부(①)	1,104.2	47.5	1,167.6	48.6	63.4	1.1
- 회계·기금	1,064.6	45.8	1,128.3	47.0	63.7	1.2
- 비영리공공기관	55.0	2.4	59.0	2.5	4.0	0.1
- 내부거래	△15.4	△0.7	△19.7	△0.8	△4.3	△0.2
지방정부(②)	72.8	3.1	70.7	2.9	△2.0	△0.2
- 회계·기금	70.6	3.0	67.5	2.8	△3.1	△0.2
- 비영리공공기관	3.5	0.2	4.3	0.2	0.8	0.0
- 내부거래	△1.3	△0.1	△1.0	△0.0	0.3	0.0
내부거래(③)	△19.8	△0.9	△21.0	△0.9	△1.2	△0.0

자료: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4.12.

2023년 일반정부 부채(D2) 산출 시 포함된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중 국립대학법인,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한 210개 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이며, 2024년 지정 기준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0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0개, 기타공공기관 170개로 이루어져 있다.

Ⅰ 일반정부 부채(D2)에 포함된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Ⅰ

(단위: 개)

구분	개수	공공기관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0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

구분	개수	공공기관명
준정부기관		교통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복합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 공공기관	170	기축위생방역지원본부, 건축공간연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산업화진흥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안전교육원,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노사발전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민주운동기념사업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산업연구원, 새만금개발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세종학당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식품안전정보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아동권리보장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자외도포합력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법무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창업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태권도진흥재단, 통일연구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공조직원은행,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도박문제예방추진위원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미약퇴직운동본부,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진흥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산업자원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인문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앙원, 한국의료품안전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지하철복합개발원, 한국장기조직가중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차산기술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통계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화학중연구원, 한국한의학진흥원, 한국한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보건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연구원, 한식진흥원, 항공안전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합계	210	

주: 1. 2024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기준임

2. 밑줄 표시된 공공기관은 2024년에 공공기관 지정됨

자료: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4.12.

일반정부 부채(D2)에 포함된 비영리공공기관 중 2023년 말 기준 부채총계가 가장 큰 10개의 공공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13조 3,228억원), 한국장학재단(10조 1,299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6조 9,622억원), 예금보험공사(5조 1,407억원) 등이다.

이 중 2019년 대비 2023년 부채 증가 폭이 큰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4조 1,925억원 증가), 한국자산관리공사(4조 1,709억원 증가), 서민금융진흥원(3조 358억원 증가)이며,⁶⁸⁾ 동 기간 동안 부채 감소 폭이 큰 기관은 예금보험공사(5조 3,864억원 감소), 한국장학재단(1조 618억원 감소)으로 나타났다.

■ 2023년 부채총계가 큰 비영리공공기관(상위 10개) 현황(2019~2023) ■

(단위: 억원)

기관명	2019(A)	2020	2021	2022	2023(B)	증감 (B-A)
한국농어촌공사	91,304	101,204	107,135	118,772	133,228	41,925
한국장학재단	111,917	107,603	103,414	99,309	101,299	△10,618
한국자산관리공사	27,913	36,261	41,945	50,793	69,622	41,709
예금보험공사	105,272	91,776	78,635	65,405	51,407	△53,864
서민금융진흥원	1,851	19,280	20,661	24,264	32,209	30,358
국민건강보험공단	21,279	22,767	20,111	22,870	27,853	6,57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413	29,493	38,681	33,321	27,267	6,85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898	13,080	15,364	16,867	17,493	6,59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5,851	15,800	15,528	15,437	15,644	△20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1,258	11,122	11,530	12,904	13,712	2,454

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정부 부채(D2)에 포함된 공공기관별 부채에는 총당부채(종업원 급여, 퇴직급여 제외), 파생상품부채, 운용리스부채 및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는 제외되어 있음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68) 한국농어촌공사는 차입금이 재원인 농지은행 사업의 확대에 의해 부채가 증가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등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해 금융부채가 증가하였다.

공공부문 부채(D3)에 포함된 공공기관 부채 현황

공공부문 부채(D3)는 2023년 1,673.3조원(GDP 대비 69.7%)이며 2022년 1,588.7조원(GDP 대비 68.4%) 대비 84.6조원 증가하였다. 이 중 중앙 비금융공기업(KBS, EBS, 인천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 포함)의 부채는 2023년 504조원(GDP 대비 21.0%)이며, 2022년 481.4조원(GDP 대비 20.7%) 대비 22.6조원 증가하였다.

■ 공공부문 부채(D3) 총괄표 ■

(단위: 조원, %, %p)

구분	2022(A)		2023(B)		증감(B-A)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①+②+③)	1,588.7	68.4	1,673.3	69.7	84.6	1.3
일반정부(①)	1,157.2	49.8	1,217.3	50.7	60.1	0.9
비금융공기업(②)	517.4	22.3	545.4	22.7	28.0	0.4
- 중앙 비금융공기업	481.4	20.7	504.0	21.0	22.6	0.3
- 지방 비금융공기업	50.9	2.2	54.6	2.3	3.8	0.1
- 내부거래	△14.9	△0.6	△13.2	△0.6	1.7	0.1
내부거래(③)	△85.9	△3.7	△89.5	△3.7	△3.5	△0.0

자료: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4.12.

2023년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시 포함된 중앙 비금융공기업 중 공영방송사 및 국립 대학법인,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한 107개 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이며, 2024년 지정 기준으로 시장형 공기업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17개,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2개, 기타공공기관 63개로 이루어져 있다.

공공부문 부채(D3)에 포함된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단위: 개)

구분	개수	세부 기관
시장형 공기업	14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주)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7	한국조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마사회,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 한전KDN(주), 한국수자원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양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국토안전관리원
기타 공공기관	63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설기술교육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원산지정보원,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부산항만공사,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술의전당, 우체국시설관리단,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제주대학교병원, (주)공영홈쇼핑,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국가유산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학원, 한국잡월드,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88관광개발(주)
합계	107	

주: 2024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4.12.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부문 부채(D3)에 포함된 비금융공기업 중 2023년 말 기준 부채총계가 가장 큰 10개의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136조 9,975억원), 한국전력공사(118조 6,569억원), 한국가스공사(46조 2,942억원) 등이다. 이 중 2019년 대비 2023년 부채 증가 폭이 큰 기관은 한국전력공사(62조 4,926억원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25조 8,407억원 증가), 한국가스공사(16조 502억원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⁶⁹⁾

69) 2023년 각 기관의 부채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는 연료가 급등 여파로 인한 연료비 및 구입전력비 상승으로 차입금 및 사채가 증가하여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는 유가상승에 따라 매입채무, 사채 및 차입금이 증가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3기 신도시 등 정부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차입 및 사채 발행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부채총계가 큰 비금융공기업(상위 10개)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기관명	2019(A)	2020	2021	2022	2023(B)	증감 (B-A)
한국토지주택공사	1,111,569	1,147,219	1,237,157	1,301,833	1,369,975	258,407
한국전력공사	561,642	575,070	665,983	1,071,309	1,186,569	624,926
한국가스공사	302,441	273,333	332,482	503,184	462,942	160,502
한국도로공사	290,187	304,289	326,104	349,541	373,819	83,633
국가철도공단	202,635	203,043	205,614	204,180	209,860	7,224
한국철도공사	151,086	166,959	174,326	193,722	202,700	51,614
한국수력원자력(주)	144,908	150,783	154,151	159,990	187,521	42,613
한국석유공사	118,369	123,913	131,814	140,365	150,887	32,518
한국수자원공사	134,708	134,067	131,262	119,813	111,741	△22,967
한국중부발전(주)	79,628	82,985	89,067	98,218	95,439	15,811

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부채(D3)에 포함된 공공기관별 부채에는 총당부채(종업원 급여, 퇴직급여 제외), 파생상품부채, 운용리스부채 및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는 제외되어 있음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3절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 현 황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은 「국가재정법」 제9조의2제2호⁷⁰⁾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의2제1항⁷¹⁾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⁷²⁾에 따른 것으로, 정부손실보

70)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7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7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조항 유무 및 자산규모 2조원 기준, 자본잠식기관 지정 등의 분류에 따라 2024년에는 총 35개 기관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1개, 준정부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4개 기관이며 이는 전년도 대상 기관과 동일하다. 참고로 2025년에는 대한석탄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어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구 분		공공기관
공기업 (21)	손실보전규정 (4)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손실보전규정 미해당 (17)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주)강원랜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준정부기관 (14)	손실보전규정 (7)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
	손실보전규정 미해당 (7)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주: 1. 굵은 글씨는 자본잠식기관임

2. 대한석탄공사는 2025년 1월에 기관 유형이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

자료: 기획재정부, 「「24~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2024.8.28.

제25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말한다.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부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
2.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자본잠식의 규모·사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공공기관 재무전망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공공기관(35개) 재무전망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공공기관의 2024~2028년 중장기 자산전망을 살펴보면, 2024년 1,040.6조원에서 2028년 1,212.4조원으로 동 기간 동안 171.9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전망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투자로 인한 기반시설 등 자산의 증가 111.6조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정책금융 확대에 의한 대출채권 증가 28.0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5개 공공기관의 2028년 부채규모는 2024년 대비 93.1조원 증가한 795.1조원, 2028년 부채 비율은 2024년 대비 16.8%p 감소한 190.5%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공공기관의 2024년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4.8조원으로, 2024~2028년 재무전망에서는 5년간 연평균 12.5조원 수준의 흑자를 전망하고 있다.⁷³⁾

■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의 중장기 재무전망(2024~2028) ■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실적) (A)	2024 (B)	증감 (B-A)	2025	2026	2027	2028 (C)	증감 (C-B)
자산	980.6	1,040.6	60.0	1,095.6	1,139.0	1,185.4	1,212.4	171.9
부채	664.1	701.9	37.8	735.8	752.4	773.2	795.1	93.1
(부채비율)	(209.8)	(207.3)	(△2.5)	(204.5)	(194.6)	(187.6)	(190.5)	(△16.8)
당기순이익	△2.9	4.8	7.7	11.3	16.7	15.8	13.7	8.9

주: () 안은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24~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2024.8.28. 바탕으로 재작성

금융부채 및 이자보상배율 전망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의 ‘금융부채 전망’을 살펴보면, 2024년 금융부채는 558.7조원으로 2023년 527.9조원 대비 30.8조원 증가할 전망이고, 2024년 이후 2028년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총 72.1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24~2028년 5개년간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은 평균 52.6%, 총부채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은 평균 79.4% 수준으로 전망된다.

73) 2024~2028년 당기순이익 증가는 주로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화, 3기 신도시 분양 등에 기인한다.

■ 금융부채 전망(2024~2028) ■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 (실적)(A)	2024 (B)	2025	2026	2027	2028 (C)	증감 (B-A)	증감 (C-B)	평균 (‘24~’28)
금융부채	527.9	558.7	586.5	594.3	612.0	630.8	30.8	72.1	596.5
(총자산 대비)	(53.8)	(53.7)	(53.5)	(52.2)	(51.6)	(52.0)	(△0.1)	(△1.7)	(52.6)
(총부채 대비)	(79.5)	(79.6)	(79.7)	(79.0)	(79.2)	(79.3)	(0.1)	(△0.3)	(79.4)

주: () 안은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24~’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2024.8.28.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의 ‘이자보상배율⁷⁴⁾ 전망’을 살펴 보면, 영업이익은 2023년 0.5조원에서 2028년 25.4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고, 이자비용은 금융부채의 추이와 유사하게 변동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2023년 10.4조원에서 2028년 12.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보상배율은 2023년 실적치가 0.05배였으나 2024년부터 ‘1’배를 초과하여 2028년에는 2.1배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이자비용의 증가폭에 비해 영업이익의 증가폭 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에 기인한다.

■ 이자보상배율 전망(2024~2028) ■

(단위: 조원, 배)

구 분	2023(실적)	2024	2025	2026	2027	2028
영업이익(a)	0.5	14.3	22.9	29.3	27.1	25.4
이자비용(b)	10.4	11.4	12.3	12.3	12.2	12.0
이자보상배율(a/b)	(0.05)	(1.2)	(1.9)	(2.4)	(2.2)	(2.1)

주: () 안은 배율을 나타내는 수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24~’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2024.8.28. 바탕으로 재작성

74) 이자보상배율은 기관의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영업이익/이자비용)을 비교한 지표로써,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이 이자부부채 관련 이자비용의 현금유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비교하는 개념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경우, 그 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관의 이자비용 상환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3. 14개 재무위험기관의 2024~2028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22년 6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 중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재무위험기관 현황 ■

요건	기관명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 (9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5개 발전자회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5개)	자원공기업(한국석유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주: 굵은 글씨는 자본잠식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 14개 선정”, 2022.6.30.

기획재정부는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등 총 14개 기관의 부채 및 자산규모가 전체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동 기관들의 재무 악화가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여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정비, 경영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재무위험기관은 ① 비핵심자산 매각, ② 투자·사업 정비, ③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등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해 재무위험기관 탈피,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를 목표로 한다.

14개 재무위험기관 전체의 2024~2028년 중장기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2024년 자산규모는 609.0조원으로 예상되고, 2028년에는 2024년 대비 108.7조원이 증가한 717.7조원으로 전망된다. 부채규모는 2024년 474.3조원으로 예상되고 2028년에는 2024년 대비 59.1조원 증가한 533.4조원으로 전망되며, 부채비율은 2024년 352.0%에서 2028년에는 289.4%까지 62.6%p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말 기준 전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의 총자산 중 14개 재무위험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58.5%, 총부채는 67.6%로 예상되고, 2028년에는 각각 59.2%, 67.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14개 재무위험기관 재무전망(2024~2028) ■

(단위: 조원, %)

구 분	항목	2024	2025	2026	2027	2028
35개 기관 전체	자산	1,040.6	1,095.6	1,139.0	1,185.4	1,212.4
	부채	701.9	735.8	752.4	773.2	795.1
	부채비율	(207.3)	(204.5)	(194.6)	(187.6)	(190.5)
14개 재무위험기관 전체	자산	609.0	636.6	660.7	689.3	717.7
	부채	474.3	492.5	500.6	516.4	533.4
	부채비율	(352.0)	(342.0)	(312.7)	(298.6)	(289.4)

주 1. () 안은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임

2. 위 표의 수치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한국전력공사 연결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24~'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2024.8.28. 바탕으로 재작성

제3장

공공기관 경영평가 현황

제1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1.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개요 및 대상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에 따라 경영목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및 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한다⁷⁵⁾.

경영실적평가의 목적은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자 함이다.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①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와 기관장 계약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경영평가단은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③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마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확정한다.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전문적, 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해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5) 과거에는 기관장도 직무수행실적평가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제도 정비를 통해 상임감사·감사위원만 별도로 평가를 받도록 운영되고 있다. 기관장은 경영실적평가 및 공공기관운영법 제31조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리한다.

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체계

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유형 구분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2023년도 경영실적평가와 동일하게 평가대상 공공기관을 산업별·기능별·규모별 기준에 따라 평가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공기업의 경우 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로 구분하고,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하며, 위탁집행형은 다시 SOC·안전, 산업진흥, 국민복리증진으로 구분하고 있다.

Ⅰ 평가유형 구분 Ⅰ

유형		유형구분 기준	
공기업	SOC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에너지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에너지의 생산·공급 및 자원개발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산업진흥·서비스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특정 분야 산업 진흥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준정부기관 중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위탁 집행형	SOC·안전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준정부기관 중 SOC 및 안전 관련 업무를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산업진흥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준정부기관 중 특정 산업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국민복리증진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준정부기관 중 국민복리 증진을 위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p.9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87개로 2023년(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⁷⁶⁾)과 동일하다. 평가유형구분 기준에 따른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관(2024) ■

유형		유형구분 기준	
공기업 (32개 ¹⁾)	SOC (8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에너지 (12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²⁾ ,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산업진흥·서비스 (12개)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55개)	기금관리형 (10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 집행형 (45개)	SOC·안전 (14개)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 진흥 (16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민 복지 증진 (15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주 1) 2024년도 지정기준

2) 대한석탄공사는 202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p.10

76) 2023년 준정부기관 55개는 기금관리형 11개, 위탁집행형 44개이다.

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지표 체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는 기관의 경영실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의 2개 범주로 나누어 구성되며, 가중치 및 세부지표는 정책 목표 달성 및 사회·경제적인 이슈에 따라 조정된다. 각 평가 범주는 단위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단위 평가지표는 복수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경영실적 평가는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범주 내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설정할 수 있다.

■ 평가 범주별 주요 평가내용 ■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경영관리	지배구조 및 리더십, 안전 및 책임경영, 재무성과관리, 조직 운영 및 관리
주요사업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p.11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부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시도하였다. 동 개편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간 평가체계 및 지표를 차별화하였으며,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재무예산관리를 통합하고, 혁신과 소통 지표를 신설하였다. 이후 매년 지표 개선 및 신설 등의 제도 개선이 있었다.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지표는 경영관리 부분에서의 사회적 가치 구현 부분의 배점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주요사업 부분의 세부지표를 통합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을 전년도 대비 2점 상향 조정하였다(공기업: 22 → 24점, 준정부기관: 20 → 22점).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경우, 단위 지표 구성에는 변화가 없으나 세부평가내용 및 단위지표의 배점이 조정되었다.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경우, 사회적 가치 구현의 세부 지표인 윤리경영 지표 세부평가 내용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추가하였고, 배점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2022년에는 전반적인 지표체계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졌다.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공기업 기준: 10점 → 20점),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점을 축소하였다. 또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노력·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가점(3점) 대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7.29.)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의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자 가점(5점)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지표체계의 변화는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었다. 2024년에는 평가지표의 명칭과 구성에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경영전략’ 항목은 ‘지배구조 및 리더십’으로, ‘사회적 책임’ 항목은 ‘안전 및 책임경영’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부지표와 배점도 조정되었다. 또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와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항목은 ‘조직 운영 및 관리’로 통합되었고, 세부지표별 배점도 조정되었다. 아울러 공기업의 경우, 유형에 따라 ‘안전 및 책임경영’ 항목의 세부지표별 배점이 차별화되었다.

다.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 및 후속조치

경영실적 평가는 종합평가결과와 범주별 평가결과로 각각 산출되며, 평가결과는 기관 유형별로 6등급(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으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비계량 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성과급 지급, 인사조치, 차년도 평가 면제 조치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과급은 종합등급이 보통(C)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공기업의 경우 직원 기준으로 S등급은 기본급의 250%, 준정부기관은 100%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관장, 상임이사·감사에 대해서도 성과급이 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⁷⁸⁾.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제8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실적 평가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경영개선계획을 당해 연도 9월까지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77) 공기업 기준 25점(기준)에서 15점으로 축소되었으며, 각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배점 조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및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관련 QA」에서 확인할 수 있다.

78)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단위: %)

구분	기관장(기본연봉 대비)					상임이사·감사(기본연봉 대비)					직원 ¹⁾ (월 기본급, 기준월봉 대비)				
	S	A	B	C	D, E	S	A	B	C	D, E	S	A	B	C	D, E
공기업	100~0					80~0					250~0				
준정부기관	60~0										100~0				

주: 1) 구 정부투자기관('83~'06), 직원은 300~0%

3.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가.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2~6월에 수행되고, 2024년 6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되었다. 2023년도의 평가대상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32개의 공기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연구재단 등의 55개 준정부기관이다.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기관별 주요사업 성과의 변별력 있는 평가에 중점을 두고, 목표부여(편차) 방식의 비중을 확대하였다. 또한, 직무·성과 중심 보수 개편 및 혁신계획 이행과 재무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재무 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의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삭감하여 경영책임성을 강화하였다.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결과

2023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공기업은 전년도에 비해 4개⁷⁹⁾가 감소한 32개 기관으로, 종합 등급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우수(A) 6개(18.8%), 양호(B) 10개(31.3%), 보통(C) 11개(34.4%), 미흡(D) 4개(12.5%), 아주미흡(E) 1개(3.1%)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2024.6.19. 보도자료), 주요 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국수력원자력,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주)·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은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결과(2019~2023) ■

(단위: 개)

연도	기관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미흡)
2019	36	-	6	14	13	3	-
2020	36	-	6	16	10	3	1
2021	36	1	8	9	13	4	1
2022	36	-	5	13	12	5	1
2023	32	-	6	10	11	4	1

자료: 각 연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79)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2023.1.)

공기업 군에서 2022년도 평가에서와 동일한 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11개 기관이며, 상승한 기관수는 11개, 하락한 기관수는 10개로 나타났다. 평가유형별로 살펴보면, 12개의 에너지 유형 기관에서 전년에 비해 등급이 상승한 기관이 6개(50.0% 상승), 하락한 기관이 3개(25.0% 하락)로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등급이 상승한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기업 평가유형별 종합등급 분포(2022~2023) ■

(단위: 개)

기관 유형	연도	기관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미흡)
SOC	2022	12	-	3	2	4	2	1
	2023	8	-	1	2	3	2	-
에너지	2022	12	-	1	4	6	1	-
	2023	12	-	4	3	4	1	-
산업진흥·서비스	2022	12	-	1	7	2	2	-
	2023	12	-	1	5	4	1	1
합계	2022	36	-	5	13	12	5	1
	2023	32	-	6	10	11	4	1

자료: 「2023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보고서」, p.13

평가대상 32개 공기업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수(A)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등 6개 기관, 양호(B)는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등 10개 기관, 보통(C)은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등 11개 기관, 미흡(D)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로 총 4개 기관, 아주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다.

2023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급 (개수)	공기업명
탁월(S)	-
우수(A) (6)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주)
양호(B) (10)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해양환경공단
보통(C) (11)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주)
미흡(D) (4)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아주미흡(E)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료: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2024.6.19.)를 바탕으로 재작성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2023년에는 2022년까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었던 공공기관 중 일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대상 준정부기관이 94개에서 55개로 감소⁸⁰⁾하였다. 또한 중소형 기관으로 분류되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2023년 경영실적 평가부터 SOC·안전, 산업진흥, 국민복리증진으로 평가유형이 변경되었다.

준정부기관(55개)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의 경우 양호 이상 기관의 비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55개 준정부기관 중 종합등급 우수(A)는 9개(16.4%), 양호(B) 20개(36.3%), 보통(C) 18개(32.7%), 미흡(D) 7개(12.7%), 아주미흡(E) 1개(1.8%)이다.

80) 39개 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재정정보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독립기념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준정부기관·중소형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9~2023) ■

(단위: 개)

기관유형	연도별	기관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미흡)
기금관리 · 위탁집행	2019	50	-	10	21	12	6	1
	2020	54	-	11	18	18	6	1
	2021	57	-	10	22	17	6	2
	2022	57	-	7	23	21	4	2
	2023	소계	55	-	9	20	18	7
		기금 관리	10	-	2	4	4	-
		위탁 집행	SOC·안전 14	-	1	5	4	4
			산업진흥 16	-	3	5	5	3
			국민복리증진 15	-	3	6	5	-
중소형 기관 ^{주)}	2019	43	-	5	16	15	7	0
	2020	41	-	6	15	12	8	0
	2021	37	-	5	17	10	5	0
	2022	37	-	7	12	12	5	1
전 체	2019	93	-	15	37	27	13	1
	2020	95	-	17	33	30	14	1
	2021	94	-	15	39	27	11	2
	2022	94	-	14	35	33	9	3
	2023	55	-	9	20	18	7	1

주: 2023년 경영실적 평가부터 중소기업 유형 구분 삭제 및 SOC·안전, 산업진흥, 국민복리증진으로 평가유형 변경
 자료: 각 연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평가대상 55개 준정부기관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3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급 (개수)	준정부기관명
탁월(S)	-
우수(A) (9)	국립공원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 복지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환경공단
양호(B) (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생태원,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 안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인 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통(C) (18)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 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 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미흡(D) (7)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주미흡(E) (1)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2024.6.19.)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실
적부진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등을 의결하였다. 1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이 건의되었으며, 추가로 실적부진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에 대한 경고 조치가 이루어졌다.

기관장 해임건의

기관장 해임건의는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 중 2023년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명⁸¹⁾에 대해 이루어졌다.

81) 2024.8. 기관장 해임

■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 기관 ■

(단위: 개)

유형	기관명
E등급(1)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024.6.19.을 바탕으로 재작성

실적부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미흡(D)에 해당하는 실적 부진 기관 총 11개 기관 중 기관장 재임 기간 6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장 6명에 대해 경고조치가 이루어졌다.

■ 실적부진에 따른 기관장 경고조치 기관 ■

(단위: 개)

구분	기관명
공기업(2)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준정부기관(4)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024.6.19.을 바탕으로 재작성

중대재해 발생 기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8명의 기관장에 대하여 경고조치가 이루어졌으며, 2개 기관은 2024년 임명, 공식으로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22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5개의 기관장이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해 경고조치를 받은 것과 비교하여 2023년도에는 8개의 기관으로 증가하였다.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기관장 경고조치 기관 ■

(단위: 개)

구분	기관명
공기업(6)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2)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024.6.19.을 바탕으로 재작성

제2절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1. 공공기관 감사(위원) 제도 및 현황

공공기관 자체감사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임·비상임 감사의 선임에 따른 감사제도와 기관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제도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4조제1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감사를 두며, 동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20조제2항은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감사를 갈음하여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²⁾

감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감사를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내의 별도 위원회로서 이사로 구성된 감사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로서의 직책 외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의 직책을 겸한다.

감사위원회제도는 공공기관운영법 제20조제4항에 근거하여야 하고, 「상법」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 구성 및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32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사기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2025년 지정 공공기관 중 88개⁸³⁾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제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 제20조제2항⁸⁴⁾에 따라

8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원회) ②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서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기업에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개정 2009. 12. 29.>

③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83) 2024년 준시장형 공기업이었던 대한석탄공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이었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재정정보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유형 변경

8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원회) ②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서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기업에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14개 기관 모두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여 운영 중에 있다.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기관의 특성에 따라 17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준시장형 공기업 중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11개 기관은 감사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0개 기관은 상임감사를, 1개 기관은 비상임 감사를 두고 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모두 감사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12개 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상임감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에 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도 모두 감사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45개 기관 중 20개 기관에서 상임감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에 있다.

■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감사위원회제도 운영 현황 ■

(단위: 개)

유형	감사위원회	감사제도		전체
		상임	비상임	
시장형 공기업	14	0	0	14
준시장형 공기업	6	10	1	1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0	11	1	1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0	20	25	45
합계	20	41	27	88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혹은 감사위원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상임감사·감사위원회제도 채택(비상임 감사기관 제외), 6개월 미만 감사, 감사인 부재 등의 기관을 제외하면 2025년 4월 기준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58개이다.

시장형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서부발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상임감사위원의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며, 한국에너지공단은 공식으로 2024년도 직무수행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2024년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평가 대상 현황 ■

(단위: 개)

구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체
감사위원회	12	5	0	1	18
상임감사	0	12	10	18	40
합계	12	17	10	19	58

주: 공공기관 유형은 2025년 공공기관 지정을 기준으로 함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체계

가.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개요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제도는 감사 직무수행의 적정성 및 책임성 확보, 그리고 내부통제시스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6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평가 대상은 평가 대상연도에 재직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또는 상임감사위원이며, 단, 평가 대상연도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상임감사·감사위원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된다. 평가주기는 연 1회 평가가 원칙이다.

상임감사·감사위원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직무수행실적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감사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직무수행실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상임감사·감사위원에 관련 자료(감사조서, 감사일지, 이사회회의록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평가위원장은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기타 관계서류(감사조서, 이사회 회의록 등)를 기초로 하여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제시받을 수 있으며,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지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대상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마치고, 최종 산정된 평가점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가 확정된다.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지표는 ‘감사역량’과 ‘직무수행성과’의 2개 범주로 구성된다. ‘감사역량’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여부를 평가하며, ‘직무수행성과’는 내부통제 기능 강화,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체감도 및 부패실태 평가결과 반영 여부를 평가한다. 각 범주별 구체적인 평가 지표 및 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

(단위: 점)

평가범주	평가지표	가중치		
		비계량	계량	합계
감사역량	감사의 전문성 확보	25	-	25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25	-	25
	소계	50	-	50
직무수행성과	내부통제기능 강화	20	-	20
	내부감사 운영성과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반영)	-	25	25
	기관의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체감도 및 부패실태 평가결과 반영)	-	5	5
	소계	20	30	50
	전체 합계	70	30	100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p.73

나.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

각 지표별 평가 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출되며, 계량과 비계량 평가지표를 합산하여 6등급(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으로 구분하여 종합 평가를 산출한다. 특히,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평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평가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한편,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는 기관 내 감사 성과급 지급에 있어 기관평가(경영평가)와 감사평가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다.

임원의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 지급률

(단위: %)

구분	상임이사, 감사				
	S	A	B	C	D, E
공기업	80~0				
준정부기관	60~0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3.6.19.

3. 2023년 공공기관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2023년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59개 기관에 대한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A) 6개(10.2%), 양호(B) 31개(52.5%), 보통(C) 20개(33.9%), 미흡(D) 2개(3.4%)이며, 탁월(S) 및 아주 미흡(E)으로 평가 받은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양호(B) 등급 기관이 24개에서 31개로 증가하였고, 미흡(D) 등급 기관이 7개에서 2개로 줄었다.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2023년도 감사평가결과 미흡 등급인 2개 기관 감사는 모두 현재 공석으로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공기관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급별 분포(2022~2023)

(단위: 개, %)

유형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2022	공기업	31(100)	-	3(9.7)	13(41.9)	11(35.5)	4(12.9)	-
	준정부기관	32(100)	-	3(9.4)	11(34.4)	15(46.9)	3(9.4)	-
	합계	63(100)	-	6(9.5)	24(38.1)	26(41.3)	7(11.1)	-
2023	공기업	29(100)	-	3(10.3)	16(55.2)	9(31.0)	1(3.4)	-
	준정부기관	30(100)	-	3(10.0)	15(50.0)	11(36.7)	1(3.3)	-
	합계	59(100)	-	6(10.2)	31(52.5)	20(33.9)	2(3.4)	-

주: ()는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2022,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및 「2023년도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 실적평가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제4장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제1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현황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정부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립형 혁신도시⁸⁵⁾ 건설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를 시작으로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⁸⁶⁾ 제18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시도별 배치기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추진주체는 크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전공공기관으로, 총괄관리조직인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과 심의의결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이전계획의 총괄 및 공공기관의 이전지원,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이전공공기관이 작성한 지방이전계획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였으며, 소관 행정기관은 이전공공기관이 작성한 지방이전계획의 검토·조정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원계획 수립 및 혁신클러스터를 조성·관리하며, 이전공공기관은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신청사 건축 등 지방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409개 중 수도권에 소재하였던 345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⁸⁷⁾에 근거한 기

85) '혁신도시'란,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의미한다.

86) 이후 2023.6.9.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87)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외 기관 : ① 중앙행정기관, ②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③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④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⑤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⑥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지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⑦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관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5개 기관이 이전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인한 통폐합 및 부설기관 독립에 따른 신규 지정으로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는 최종 153개로 조정되었다.

이하에서는 전체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정부 소속기관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운영법 상의 1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현황을 분석하였다.⁸⁸⁾

2.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 12월에 106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모두 완료되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77개,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19개, 그 외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이 10개이다.

연도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일부 공공기관들의 개별 이전이 시작되었고, 혁신도시로의 이전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4~2015년에는 총 76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가장 많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루어졌다.

Ⅰ 연도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Ⅰ

(단위: 개)

연도	이전 기관명			개수
	혁신도시(77)	세종시(19)	개별 이전(10)	
2010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오송), 한국보건복지인재원(오송)	2
2011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주)	1
2013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개발연구원	-	8
2014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전KDN(주), 한국문화예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	-	52

기관

88) 이 중 한국예탁결제원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4년에 각각 부산 및 세종으로 이전하여 분석 대상(106개)에는 포함하였으나, 이후 2022년, 2024년에 각각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연도	이전 기관명			개수
	혁신도시(77)	세종시(19)	개별 이전(10)	
	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관광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주),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20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전력기술(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공무원연금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중부발전(주)(보령), 한국서부발전(주)(태안), 한국장학재단(대구)	24
20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수력원자력(주)(경주)	5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공원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식품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익산)	9
20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재외동포협력센터(제주), 한국국제교류재단(제주)	3
201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	-	2
합계				106

주: 1. 한국예탁결제원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경우 각각 2022년, 2024년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23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이 변경됨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innocity.molit.go.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역별 공공기관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 11개, 대구 8개, 광주·전남 13개, 울산 7개, 강원 9개, 충북 8개, 전북 5개, 경북 5개, 경남 10개, 제주 1개, 세종 19개, 개별 이전 10개이다.

이전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수도권과 대전청사 및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차등적으로 이루어졌다.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하고, 해당 기능군별로 함께 이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각 혁신도시들은 지역별 중점 기능군의 분류에 따라 해당 기능군에 속하는 공공기관들이 이전 배치되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능군의 구분과 무관하게 배치된 경우도

존재한다.⁸⁹⁾

분야별로 살펴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예탁결제원 등 해양수산 및 금융산업 분야 공공기관은 부산으로 이전하였고,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산업 공공기관은 광주·전남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에너지 및 산업안전 분야 공공기관은 울산으로 이전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광 및 건강 관련 공공기관은 강원으로, 다수 국책연구기관 등은 세종시로 이전하였다.

Ⅱ 지역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Ⅱ

(단위: 개)

구분	지역	기관명
혁신도시 (77)	강원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공단
	충북 (8)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북 (5)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경남 (10)	국방기술품질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주), 국토안전관리원
	울산 (7)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부산 (11)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남부발전(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북 (5)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광주· 전남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주 (1)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시 (1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토연구원,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89) 고영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조직에 미친 영향 분석」, 2021, p.107

구분	지역	기관명
개별 이전 (10)	오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기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주), 한국중부발전(주)(보령), 한국수력원자력(주)(경주), 한국서부발전(주)(태안),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익산), 재외동포협력센터(제주), 한국국제교류재단(제주), 한국장학재단(대구)

주: 1. 한국예탁결제원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경우 각각 2022년, 2024년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23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이 변경됨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innocity.molit.go.kr) 및 보도자료(2019.12.25.)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1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2010~2019) 이후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정책이 포함됨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노조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평가 및 갈등 최소화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3년 11월부터 시작하여 2025년 5월 현재 진행 중에 있다.⁹⁰⁾

■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 추진 현황 ■

- ('22.7) 120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추가이전 포함
- ('23.1~7) 지자체·노조 등 의견 수렴 및 갈등상황 모니터링
- ('23.8~9)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
- ('23.11~현재) 용역 계약 및 진행 중

자료: 국토교통부

90) 공공기관 이전 관련 연구용역은 당초 2024년 11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는 성과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 삶의 질 평가 등 추가 연구를 위해 과업기간을 2025년 10월까지로 연장하였다.

제2절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 현황

2025년 5월 기준 공공기관운영법 상 331개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본점 소재지 기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123개로 가장 많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공기관 25개,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이 24개 순 등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 현황 ■

(단위: 개)

지역	기관유형	기관명	개수
서울 (123)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	5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10
	기타 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주)공영홈쇼핑,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중앙의료원, 국립항공박물관, 국제방송교류재단, 노사발전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동북아역사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세종학당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식품안전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예술의전당,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재외동포협력센터, 무역안보관리원, 전쟁기념사업회, 정부법무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연구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통일연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화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가유산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 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자식재산보호원, 한국자식재산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보전원, 한식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스포츠윤리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08

지역	기관유형	기관명	개수
인천 (7)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1
	준정부기관	한국환경공단	1
	기타 공공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항만공사,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항공안전기술원	5
대전 (22)	공기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4
	준정부기관	국가철도공단, 소방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연구재단	4
	기타 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충남대학교병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 기술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 회사, 한국통계정보원	14
세종 (25)	준정부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3
	기타 공공기관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 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 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항공표지기술원, 한국환경연구원	22
광주 (3)	기타 공공기관	국립광주과학관, 전남대학교병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3
울산 (9)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2
	준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4
	기타 공공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항만공사,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3
대구 (14)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2
	준정부기관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원	5
	기타 공공기관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7
부산 (20)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주)	2
	준정부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3
	기타 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부산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항만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수산자원 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 수산연수원, 한국해양진흥공사	15
경기 (24)	공기업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2
	준정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기타 공공기관	88관광개발(주), 국립암센터, 국방전직교육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재단법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 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9

지역	기관유형	기관명	개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잡월드,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원 (12)	공기업	(주)강원랜드, 한국광해광업공단	2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
	기타 공공기관	대한석탄공사,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대한적십자사	4
충북 (14)	준정부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	3
	기타 공공기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치산기술협회	11
충남 (6)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2
	준정부기관	국립생태원	1
	기타 공공기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독립기념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
전북 (10)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3
	기타 공공기관	세안금개발공사, 전북대학교병원,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7
전남 (16)	공기업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전MCS(주)	3
	준정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5
	기타 공공기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여수광양 항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8
경북 (10)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3
	준정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기타 공공기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해양과학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한약진흥원	5
경남 (12)	공기업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2
	준정부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
	기타 공공기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방기술품질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7
제주 (4)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1
	기타 공공기관	제주대학교병원, 한국국제교류재단	2
합계			331

주: 본점 소재지는 2025년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Public Instit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2025

제3부 주요 특성별 공공기관 분류



제1장

정부출자 공공기관

제1절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일반 현황

공공기관은 각각의 설립법에 근거하여 정부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으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개 부처 35개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공기업은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7개, 준정부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6개, 기타공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12개이다.

■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

(단위: 개)

공공기관 유형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개수
공기업 (17)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1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 ¹⁾ ,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6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1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8
준정부기관 (6)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1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공공기관 유형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개수
기타 공공기관 (12)	국가보훈부	88관광개발주식회사	1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2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5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
합계			35

주: 1) 대한석탄공사는 2025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25년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되었음

1. 정부가 출자 중인 비공공기관은 한국방송공사(정부지분율 100%), 한국교육방송공사(100%), 공영철도주식회사(47.4%), 서울신문사(30.5%), 대한송유관공사(9.8%) 등 5개가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말 기준으로 정부출자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41조 8,256억원)이며, 한국도로공사(35조 776억원), 한국산업은행(26조 3,166억원), 한국수출입은행(12조 8,878억원), 한국철도공사(10조 9,976억원)의 순이다.

■ 정부출자액 상위 10개 공공기관 ■

(단위: 억원)

순위	공공기관명	정부출자액	순위	공공기관명	정부출자액
1	한국토지주택공사	418,256	6	한국석유공사	109,089
2	한국도로공사	350,776	7	한국수자원공사	104,202
3	한국산업은행	263,166	8	주택도시보증공사	69,621
4	한국수출입은행	128,878	9	인천국제공항공사	37,294
5	한국철도공사	109,976	10	한국자산관리공사	30,007

주: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부처별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2024년 말 기준 공공기관 정부 출자금은 총 183조 5,731억원이다. 이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10개 기관에 103조 169억원, 금융위원회 소관 4개 기관에 33조 4,318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7개 기관에 14조 1,750억원, 기획재정부 소관 3개 기관에 12조 9,944억원, 해양수산부 소관 5개 기관에 7조 6,291억원 등의 정부 출자금이 납입되었다.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41조 8,256억원), 한국도로공사(35조 776억원) 등에 대한 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산업은행(26조 3,166억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석유공사(10조 9,089억원)가 정부 출자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수출입은행(12조 8,878억원)이,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중에는 부산항만공사(2조 8,790억원)가 정부출자를 가장 많이 받았다.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국농어촌공사가 1조 5,175억원, 환경부 소관 한국수자원공사가 10조 4,202억원의 정부출자를 받고 있다.

■ 부처별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

(단위: 개, 억원, %)

주무부처 (기관 수)	기관명		납입자본금 (A)	정부출자	
				금액(B)	지분율(B/A)
국가보훈부(1)	1	88관광개발주식회사	20	20	100.0
금융위원회 (4)	2	한국산업은행	263,166	263,166	100.0
	3	중소기업은행	42,114	23,722	59.5
	4	한국주택금융공사	27,374	17,424	63.7
	5	한국자산관리공사	33,719	30,007	89.0
		소계	366,372	334,318	91.3
기획재정부 (3)	6	한국조폐공사	66	66	100.0
	7	한국수출입은행	168,733	128,878	76.4
	8	한국투자공사	1,000	1,000	100.0
		소계	169,799	129,944	76.5
방송통신위원회(1)	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000	3,000	100.0
문화체육관광부(1)	10	한국관광공사	324	179	55.2
농림축산식품부 (2)	11	한국농어촌공사	15,175	15,175	100.0
	1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83	683	100.0
		소계	15,858	15,858	100.0
해양수산부 (5)	13	부산항만공사	32,975	28,790	87.3
	14	인천항만공사	20,677	16,680	80.7
	15	여수광양항만공사	15,523	11,053	71.2
	16	울산항만공사	4,405	3,846	87.3
	17	한국해양진흥공사	31,339	15,923	50.8
		소계	104,919	76,291	72.7

주무부처 (기관 수)	기관명		납입자본금 (A)	정부출자	
				금액(B)	지분율(B/A)
산업통상자원부 (7)	18	한국석유공사	109,089	109,089	100.0
	19	한국광해광업공단	23,378	23,351	99.9
	20	한국전력공사	32,098	5,842	18.2
	21	한국가스공사	4,616	1,207	26.2
	22	대한석탄공사	1,511	1,511	100.0
	23	한국지역난방공사	579	200	34.5
	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50	550	100.0
	소계		171,820	141,750	82.5
환경부(1)	25	한국수자원공사	110,286	104,202	94.5
국토교통부 (10)	26	한국토지주택공사	494,122	418,256	84.6
	27	한국도로공사	441,740	350,776	79.4
	28	한국철도공사	109,976	109,976	100.0
	29	인천국제공항공사	37,294	37,294	100.0
	30	한국공항공사	23,578	22,541	95.6
	31	주택도시보증공사	84,151	69,621	89.2
	32	한국부동산원	90	44	49.4
	33	새만금개발공사	14,970	14,970	100.0
	34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4,986	3,100	62.2
	35	주식회사 에스알	6,090	3,590	58.9
	소계		1,216,997	1,030,169	84.6
	전체 합계(35)		2,159,395	1,835,731	85.0

주: 1. 2024년 12월 31일 기준

2. 중소기업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자기주식 보유 및 소각, 액면미달 발행 등으로 납입자본금 대비 정부출자액 비율과 정부지분율 간 차이가 있음. 위 표의 정부출자 지분율은 주식 수 기준으로 계산함

3.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은 지분율 계산 시 역원 단위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 발생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출자 규모

2024년 말 기준으로 3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액 183조 5,731억원 중 공기업에 대한 정부출자액은 126조 567억원으로 68.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은행형 공공기관, 항만공사 등으로 구성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액은 51조 1,146억원(27.8%)이고,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으로 구성된 준정부기관에 대한 출자액은 6조 4,018억원(3.5%)이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부출자액은 전년 대비 9조 7,141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출자액이 전년 대비 4.7조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출자액이 전년 대비 2.39조원,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출

자액이 전년 대비 2.1조원 등이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출자액은 1조 8,298억원 감소했는데, 2024년 중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한 금액은 1조 7,667억원 이나 국토교통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3조 5,965억원(시가 4조원) 현물출자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1조 8,298억원 감소한 것이다.

Ⅱ 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출자 규모

(단위: 억원, %, %p)

유형별	납입자본금(a)			정부출자금액(b)			비중(b/a)		
	2023	2024	전년대비 증감	2023	2024	전년대비 증감	2023	2024	전년대비 증감
공기업	1,378,513	1,481,663 (68.6)	103,150	1,212,703	1,260,567 (68.7)	47,864	88.0	85.1	△2.9
준정부 기관	73,949	77,825 (3.6)	3,876	60,142	64,018 (3.5)	3,876	81.3	82.3	1.0
기타 공공기관	554,507	599,907 (27.8)	45,400	465,746	511,146 (27.8)	45,400	84.0	85.2	1.2
합계	2,006,968	2,159,395 (100.0)	152,427	1,738,590	1,835,731 (100.0)	97,141	86.6	85.0	△1.6

주: 1. 2024년 12월 31일 기준

2. () 안은 전체 금액 대비 공공기관 유형별 비중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2절 정부 현물출자 현황

현물출자 일반 현황

2024년 말 기준으로 정부출자 공공기관 35개 중 현물출자가 포함된 기관은 21개이다. 이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금융위원회 소관 기관이 3개, 해양수산부 소관 기관이 5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관이 2개, 국토교통부 소관 기관이 7개, 기획재정부·방송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소관 기관이 각각 1개이다.¹⁾

총 정부출자금액 183조 5,731억원 중 현물출자금액은 51조 9,164억원(28.3%)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7개 기관에 17조 5,915억원, 금융위원회 산하 3개 기관에 16조 9,152억원 등의 현물이 출자되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속적인 보증공급에 소요되는 자본확충을 위하여 2024년 신규로 현물출자 대상 기관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2024년 2월에 현금 0.7조원, 3월에는 현물(한국도로공사 주식) 4.0조원이 출자되었다.

현물출자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산업은행(15조 5,652억원)으로, 이어 한국철도공사(9조 8,724억원), 한국수출입은행(8조 6,093억원) 순이고, 총 정부출자금액 중 현물출자금 비중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이 1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처별 현물출자 공공기관 현황 ■

(단위: 개, 억원, %)

주무부처 (기관 수)	기관명		정부출자		
			현물출자 (A)	총 출자금액 (B)	현물출자 비율(A/B)
금융위원회 (3)	1	한국자산관리공사	12,000	30,007	40.0
	2	한국주택금융공사	1,500	17,424	8.6
	3	한국산업은행	155,652	263,166	59.1
	소계		169,152	310,597	54.5
기획재정부(1)	4	한국수출입은행	86,093	128,878	66.8
방송통신위원회(1)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000	3,000	100.0
농림축산식품부(1)	6	한국농어촌공사	300	15,175	2.0
해양수산부 (5)	7	부산항만공사	28,790	28,790	100.0
	8	인천항만공사	16,680	16,680	100.0
	9	여수광양항만공사	2,978	11,053	26.9
	10	울산항만공사	3,846	3,846	100.0
	11	한국해양진흥공사	13,500	15,923	84.8
	소계		65,794	76,292	86.2
산업통상자원부 (2)	12	한국전력공사	93	5,842	1.6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550	0.5
	소계		96	6,392	1.5
환경부(1)	14	한국수자원공사	18,814	104,202	18.1
국토교통부 (7)	15	한국부동산원	10	44	22.7
	16	인천국제공항공사	1,116	37,294	3.0
	17	한국공항공사	21,505	22,541	95.4
	18	한국철도공사	98,724	109,976	89.8
	19	주식회사 에스알	3,590	3,590	100.0
	20	새만금개발공사	10,970	14,970	73.3
	21	주택도시보증공사	40,000	69,621	57.5
	소계		175,915	258,036	68.2
전체 합계(21)		519,164	902,572	57.5	

주: 1. 2024년 12월 31일 기준

2.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4년 신규로 현물출자 대상 기관에 포함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현물출자 세부내역

2024년 말 기준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현물출자액은 19조 2,449억원이고, 동 기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액이 각각 5조 2,500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에는 수출 및 해외수주 활력제고를 위한 여신 확대, 대외 정책금융 수요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등이 출자되었고, 한국산업은행에는 정책자금의 안정적 공급 지원 및 금융시장 불안요인 대응 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한국전력공사 주식 등이 출자되었다. 2024년 3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 공급을 위해 신규로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이 출자되었다.

■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현물출자 세부내역 ■

(단위: 억원)

공공기관명	출자일	출자 목적	출자재산	출자액
한국수출입은행	'15.12.31.	재무건전성 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10,000
	'17.5.16.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선사 재무구조 개선 지원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출자증권	2,500
	'23.3.30.	수출 및 해외수주 활력제고를 위한 여신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0,000
	'24.5.31.	대외 정책금융 수요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0,000
	소계			52,500
한국산업은행	'15.3.31.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12,000
	'15.3.31.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지원	한국전력공사 주식	8,000
	'17.5.16.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선사 재무구조 개선 지원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출자증권	2,500
	'22.12.28.	회사채, CP매입 프로그램의 안정적 수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5,650
	'23.3.30.	정책자금의 안정적 공급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4,350
	'24.3.28.	정책금융 공급 및 금융시장 불안요인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0,000
	소계			52,500
한국해양진흥공사	'18.8.25.	해운정책 및 선박투자 보증 수행	부산, 울산, 인천, 여수광양항만공사 출자증권	13,500
한국자산관리공사	'21.1.18.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업무 안정적 수행	한국도로공사 주식	3,971
	'21.1.18.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업무 안정적 수행	한국공항공사 주식	2,529
	'22.11.3.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안정적 수행	한국도로공사 주식	5,000
	소계			11,500
새만금개발공사	'18.11.22.	새만금 사업 지역 공공 주도 매립 역할 등 수행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10,970

공공기관명	출자일	출자 목적	출자재산	출자액
한국철도공사	'15.12.24.	철도차량 유지보수 효율화 및 안정성 확보	고속철도차량	3,469
	'21.4.6.	출자재산의 활용도 제고 및 철도안전 문제 해소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 철도운영자산	1,804
	소계			5,273
주식회사 에스알	'23.7.20.	신규차량 구매 및 운행노선 확대 지원	한국도로공사 주식	3,590
한국주택금융공사	'15.12.24.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및 지급보증배수 관리	한국도로공사 주식	1,500
주택도시보증공사	'24.3.20.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안정적 보증공급	한국도로공사 주식	40,000
인천국제공항공사	'21.12.27.	인천국제공항 시설의 효율적 운영	인천국제공항 민자시설 (건물 4개동)	403
	'22.8.1.	인천국제공항 시설의 효율적 운영	인천국제공항 민자시설 (건물 3개동)	425
	'23.5.1.	재무건전성 개선 및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 운영 지원	건물(공항시설)	288
	소계			1,116
합계				192,449

주: 1. 2024년 12월 31일 기준

2.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4년 신규로 현물출자 대상 기관에 포함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3절 출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분율

출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분율은 18.2~100%로 다양하며, 2024년 말 기준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고 있는 곳은 13개, 50~99%를 출자하고 있는 곳은 18개, 50% 미만으로 출자하고 있는 곳은 4개 기관이다.

■ 출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분율 ■

(단위: 개)

정부지분율	공공기관명	개수
100%	한국산업은행,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88관광개발주식회사	13
50~99%	한국광해광업공단(99.9%), 한국공항공사(95.6%), 한국수자원공사(94.5%), 주택도시보증공사(89.2%), 한국자산관리공사(89.0%), 부산항만공사(87.3%), 울산항만공사(87.3%), 한국토지주택공사(84.6%), 인천항만공사(80.7%), 한국도로공사(79.4%), 한국수출입은행(76.4%), 여수광양항만공사(71.2%), 한국주택금융공사(63.7%),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62.2%), 중소기업은행(59.5%), 주식회사 에스알(58.9%), 한국관광공사(55.2%), 한국해양진흥공사(50.8%)	18
50% 미만	한국부동산원(49.4%), 한국지역난방공사(34.5%), 한국가스공사(26.2%), 한국전력공사(18.2%)	4
합계		35

주: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한국거래소 상장 현황

정부출자 공공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1989년 8월 10일, 한국가스공사는 1999년 12월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0년 1월 29일, 중소기업은행은 2003년 12월 24일에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다. 2024년 12월 30일 종가는 한국전력공사가 20,050원, 한국가스공사가 34,700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41,400원, 중소기업은행이 14,330원이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4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분율은 한국전력공사 18.2%, 한국가스공사 26.2%, 한국지역난방공사 34.5%, 중소기업은행 59.5%로 타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 한국거래소 상장 정부출자 공공기관 ■

공공기관 유형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한국거래소 상장일자	종가 (원)	시가총액 (백만원)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1989.8.10.	20,050	12,871,380
		한국가스공사	1999.12.15.	34,700	3,203,261
		한국지역난방공사	2010.1.29.	41,400	479,360
기타공공기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	2003.12.24.	14,330	11,427,113

주: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4개 공공기관의 주식 액면가는 5,000원으로 동일함

2. 위 표의 종가 및 시가총액은 2024.12.30. 기준임

자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4절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기관별 정부배당액 현황

최근 5년간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정부배당액은 총 8조 6,537억원이다. 정부배당액의 추세를 살펴보면, 2019년 이후 2020년까지 약 1조 4,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다가 2021년 배당액이 2조 4,487억원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 1조 2,352억원으로 감소했다. 2022년의 배당액 감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당기순이익 감소, 한국산업은행의 에이치엠엠(주) 지분 손상차손 등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3년에는 2조 1,322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은행형 공공기관들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배당액은 기관별로 상이하며, 최근 5년간 배당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은행의 순으로 많다. 최근 5년간 한국산업은행의 총 정부배당액은 2조 1,975억원으로 35개 정부출자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배당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기간 동안 총 2조 774억원의 배당을 실시하였다.

35개 정부출자 공공기관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9개 기관은 경영악화에 따른 당기순손실 발생 등에 따라 2023년에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다.²⁾ 이 중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0개 기관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배당실적이 없는 상황이다.³⁾

■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정부배당 현황(기관별) ■

(단위: 억원)

공공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한국토지주택공사	3,920	5,845	7,441	2,625	943	20,774
한국산업은행	1,120	2,096	8,331	1,647	8,781	21,975
중소기업은행	1,662	2,208	3,701	4,555	4,668	16,794
인천국제공항공사	3,994	0	0	0	2,248	6,242
한국수출입은행	724	277	1,315	932	1,847	5,095

2) 주식회사 에스알의 경우 출자가 2023년에 이루어져 2022년까지의 배당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18년에 설립되었다.

공공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주택도시보증공사	707	616	621	0	0	1,944
한국투자공사	367	580	1,176	641	944	3,708
한국주택금융공사	0	425	451	292	0	1,168
한국전력공사	0	1,421	0	0	0	1,421
한국도로공사	334	120	134	248	519	1,355
한국가스공사	92	0	659	0	0	751
부산항만공사	201	238	183	162	176	960
한국자산관리공사	139	142	159	272	362	1,074
한국공항공사	404	0	0	0	0	404
한국수자원공사	0	0	0	619	451	1,070
울산항만공사	107	77	119	127	185	615
한국농어촌공사	165	9	130	112	35	451
인천항만공사	21	213	0	27	0	26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25	15	28	30	109
한국조폐공사	39	0	0	21	33	93
한국부동산원	13	10	16	22	37	98
한국지역난방공사	0	39	32	0	0	7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	2	4	22	26	67
88관광개발주식회사	0	0.2	0	0	0	0
대한석탄공사	0	0	0	0	0	0
한국광해광업공단	0	0	0	0	0	0
한국석유공사	0	0	0	0	0	0
한국철도공사	0	0	0	0	0	0
주식회사 에스알	-	-	-	-	0	0
여수광양항만공사	0	0	0	0	0	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0	0	0	0	0	0
한국관광공사	0	0	0	0	0	0
새만금개발공사	0	0	0	0	0	0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0	0	0	0	0	0
한국해양진흥공사	0	0	0	0	0	0
합계	14,033	14,343	24,487	12,352	21,322	86,537

주: 1. 상기 연도는 배당 대상 결산 회계연도이며, 실제 배당금 납입은 익년도에 발생함

2. 배당액 합계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단수 차이 발생함

3. 주식회사 에스알은 2023년에 신규 출자함

4.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되었고, 위 2019, 2020년 정부배당액은 기존의 출자기관이었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정부배당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출자 공공기관 배당성향⁴⁾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2023년 평균 배당성향은 37.1%로 전년(39.3%) 대비 감소하였다. 2023년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한국투자공사가 100%로 전체 정부출자 공공기관 중 배당성향이 가장 높고, 울산항만공사(58.0%), 부산항만공사(57.9%), 한국조폐공사(52.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공사는 자산위탁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특성상 시설투자 규모가 크지 않아 다른 기관에 비해 배당성향이 높은 특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2019~2020년에는 60%를 배당하였고, 2021년에는 70%, 2022년에는 80%로 매년 배당성향이 10%p씩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100%를 배당해 전년 대비 배당성향이 20%p 증가하였다.

▮ 정부출자 공공기관 배당성향 ▮

(단위: %)

공공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투자공사	60.0	60.0	70.0	80.0	100.0
한국농어촌공사	38.9	10.3	37.6	50.4	13.8
한국도로공사	39.0	44.5	50.1	48.7	49.4
울산항만공사	41.0	59.9	48.9	46.0	58.0
부산항만공사	38.5	59.8	48.9	45.9	57.9
한국조폐공사	40.7	-	-	42.0	52.4
한국부동산원	42.2	40.0	37.7	41.4	45.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0.7	40.0	40.0	40.0	46.3
한국자산관리공사	38.9	40.0	41.6	39.8	37.4
한국산업은행	25.1	43.0	33.8	35.4	35.0
한국주택금융공사	-	33.5	32.9	35.0	0.0
한국수출입은행	36.2	39.8	34.9	35.0	35.0
인천항만공사	20.8	30.0	-	34.8	0.0
중소기업은행	22.9	29.5	30.7	31.2	32.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	40.0	39.4	27.0	23.1
한국토지주택공사	20.0	20.0	20.0	20.0	19.9
한국수자원공사	-	-	-	15.8	15.9
한국전력공사	-	40.0	-	-	-
한국가스공사	40.8	-	39.4	-	-

4)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공공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지역난방공사	-	40.0	43.0	-	-
인천국제공항공사	46.1	-	-	-	45.7
주택도시보증공사	21.8	25.0	20.0	-	-
한국공항공사	40.0	-	-	-	-
88관광개발주식회사	-	59.7	-	-	-
대한석탄공사	-	-	-	-	-
한국광해광업공단	-	-	-	-	-
한국석유공사	-	-	-	-	-
한국철도공사	-	-	-	-	-
주식회사 에스알	-	-	-	-	-
여수광양항만공사	-	-	-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	-
한국관광공사	-	-	-	-	-
새만금개발공사	-	-	-	-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	-	-	-
한국해양진흥공사	-	-	-	-	-
평균	35.5	39.7	39.3	39.3	37.1

주: 1. 평균 배당성향은 출자 공공기관 중 배당을 실시한 기관의 산술평균임
 2. 상기 연도는 배당 대상 결산 회계연도이며, 실제 배당금 납입은 익년도에 발생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배당성향이 30% 이상인 공공기관은 2013년 5개 기관에서 정부의 출자기관 배당확대 정책에 따라 2017년 20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으나, 2023년에는 12개 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2017년에는 20개 기관이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2018년에는 11개 기관, 2019년에는 13개 기관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2020년과 2021년에 배당성향이 30% 이상인 공공기관은 각각 15개 기관으로 증가한 뒤 2022년에는 14개 기관, 2023년에는 12개 기관으로 그 수가 소폭 감소하였다.

■ 배당성향 30% 이상인 정부출자 공공기관 ■

(단위: 개)

연도	개수	정부출자 공공기관
2013	5	한국산업은행(산은금융지주), 한국조폐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투자공사
2014	11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투자공사
2015	10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투자공사
2016	15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투자공사, 88관광개발주식회사
2017	20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투자공사, 88관광개발주식회사, 한국수출입은행
2018	11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88관광개발주식회사, 한국투자공사
2019	13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2020	15	한국투자공사,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88관광개발(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부동산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항만공사
2021	15	한국투자공사, 한국도로공사,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2022	14	한국투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인천항만공사, 중소기업은행
2023	12	한국투자공사,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 상기 연도는 배당 대상 결산 회계연도이며, 실제 배당금 납입은 익년도에 발생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 배당 미 실시 기관

2023년에 신규 정부출자기업으로 편입한 주식회사 에스알을 제외하고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최근 5년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한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0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출자액은 총 29조 2,152억원으로, 한국철도공사 10조 9,976억원, 한국석유공사 10조 9,089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 2조 3,351억원 순으로 정부출자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기관 중 한국관광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제외한 7개 기관은 2023년 말 현재 경영 악화에 따른 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한국석유공사의 결손금은 13조 8,853억원으로 2019년 9조 3,933억원 대비 4조 4,920억원 증가하였고, 동 기간 동안 한국철도공사의 결손금은 9조 5,603억원에서 12조 29억원으로 2조 4,426억원 증가하였다. 반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결손금은 2019년 1,364억원에서 2023년 667억원으로 697억원 감소하였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5년 연속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2019년 이후 매년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여 이익잉여금 규모는 2019년 5,046억원에서 2023년 4,053억원으로 993억원 감소하였고 배당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23회계연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미실현이익을 제외할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⁵⁾

5) 참고로 2023회계연도 이익잉여금이 양의 값(+)이나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관광공사	△66	△477	△189	△171	△152	△31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5	△69	41	144	155	529
한국해양진흥공사	△1,599	25,857	41,806	△19,762	△17	△4,402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 배당 미 실시 기관의 이익잉여금 현황

(단위: 억원)

공공기관명	이익잉여금					
	2019 (a)	2020	2021	2022	2023 (b)	증감 (b-a)
대한석탄공사	△15,474	△12,215	△13,523	△15,111	△17,510	△2,036
한국광해광업공단	△34,992	△51,397	△36,643	△37,203	△40,730	△5,738
한국석유공사	△93,933	△131,002	△132,117	△135,996	△138,853	△44,920
한국철도공사	△95,603	△106,011	△115,214	△115,990	△120,029	△24,426
여수광양항만공사	△1,364	△1,254	△1,109	△878	△667	69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40	△85	△178	△283	△451	△211
한국관광공사	5,046	4,537	4,355	4,243	4,053	△993
새만금개발공사	△84	△178	△285	△256	△182	△98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48	△21	20	164	319	271
한국해양진흥공사	△3,983	21,920	63,726	43,964	43,947	47,930
합계	△240,579	△275,706	△230,968	△257,346	△270,103	△29,524

주: 1.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되었고, 위 2019, 2020년 이월결손금은 기존의 출자기관이었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현황임

2. 각 공공기관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2장

수지차 보전기관

제1절 수지차 보전기관의 정의 및 지정 요건

수지차 보전방식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하 “수지차 보전기관”이라 함)은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기관의 지출 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한다. 수지차 보전기관의 경우 예산편성 시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 세부내역을 빠짐없이 추계하여 자체세입에 반영한 후 나머지 지출금액을 정부로부터 출연 혹은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 예산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적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해당하는 출연·보조기관 및 주무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다.

■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및 지정 해제 기준 ■

구분	내용
지정 기준	자체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출연·보조기관 중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인 기관
지정 해제 기준	① 자체수입이 현저히 낮거나 고유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기관 ② 출연·보조금 비중이 자체수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관 중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정부는 수지차 보전기관의 예산 편성 시 자체수입에 반영되어야 하는 세부 요건 및 정부예산 지원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수지차기관 예산요구서 작성방법」을 통해 제시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5월경 대상 공공기관에 「수지차기관 예산요구서 작성방법」을 통해 자체수입 산정, 인건비, 경상비 등의 편성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수지차 보전기관 예산요구서 작성 지침(요약) ■

구분	내용
자체수입	• 기관의 자체수입은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세부내역까지 빠짐없이 추계하여 자체세입에 반영 • 경영혁신을 통한 새로운 수입원 발굴, 효율적인 자산운영 등 특별한 노력으로 전년에 비해 자체수입을 확대하여 출연금 예산절감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
인건비	•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및 인건비 연동 법정경비(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을 포함 • 2025년 인건비는 자연증가 소요 이외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특이사항만 별도 검토 • 경영혁신 기조를 유지, 조직 및 인력증가 최소화 • 기관 고유기능 수행과 관련이 없는 증원소요 및 행정인력 등 지원인력 증원소요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경상비	• 2025년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하고, 2025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정 • 산정기준에 따른 경상비 증가소요는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내에서 반영하여 요구
기타공공기관 및 비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적용하고, 기타공공기관 및 비공공기관은 동 지침을 준용하여 편성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년도 수지차기관 예산요구서 작성방법」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특별한 노력⁶⁾ 등으로 기관의 자체수입(요구액 기준)⁷⁾이 전년도 예산액(국회 확정액 기준) 대비 증가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로 특별한 노력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은 동 금액을 실행예산 편성 시 인건비, 경비, 사업비 이외의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하고, 결산 결과 당초 계획한 수입목표를 달성한 범위 내⁸⁾에서 인센티브를 ‘기관운영적립금’에 적립해야 한다.

■ 기관운영적립금의 용도 ■

- 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연도 중 지출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 기관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 지출 소요
 - 기관 청사 확보를 위한 건설비, 부지매입비,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 자산취득 소요 등 자본적 지출 및 경상비
- * 인건비, 신규 사업에의 사용은 금지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6) 경영혁신을 통한 새로운 수입원 발굴, 효율적인 자산 운영 등 제도개선으로 인한 수입증대

7) 결산잉여금 등 전년도 이월금, 기관임의보유금 중 수입 계상분, 출연·보조금, 민간위탁사업비, 연구용역비 등 정부지원금, 차입금 등을 제외한 순수 자체수입

8) 수입목표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잉여금으로 차년도 수입에 반영

수지차 보전 공공기관별 주요 자체수입원(예시)

수지차 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자체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기관명	주무부처	기관유형	자체수입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ODA교육훈련수입, 외환차익, 수입위약배상금, 수입입대료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해외시장조사 등 사업수입, 임대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등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노동부	기타공공기관	등록금수입, 전형료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주차장·야영장·대피소·생태탐방원 운영수입, 임대료, 역무대행수수료, 이자수입 등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환경시설진단 수수료, 검사·분석·인증 수수료, 폐기물제도 징수교부금, 폐기물자원화 매각수입 등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제2절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및 변동 현황

기획재정부는 2025년 국립공원공단 등 37개 출연기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25개 보조기관을 포함하여 총 62개 기관을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했다. 수지차 보전기관 중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57개이며, 나머지 5개 기관은 비공공기관이다.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57개로, 유형별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이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17개, 기타공공기관이 39개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5개 기관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다.

공공기관 유형별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수	공공기관					비공공기관
		소계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출연	37	36	-	-	15	21	1
보조	25	21	-	1	2	18	4
합계	62	57	-	1	17	39	5

자료: 기획재정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57개 공공기관을 소관 부처별로 분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이 8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환경부 소속기관 7개이며,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 각각 5개 순으로 나타났다.

■ 부처별 수지차 보전기관 현황(공공기관) ■

(단위: 개)

부처명	수지차 보전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8)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환경부(7)	국립공원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노동부(5)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잡월드
교육부(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보건복지부(5)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토교통부(4)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안보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해양수산부(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정거래위원회(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법무부(2)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찰청(1)	한국도로교통공단
국가보훈부(1)	독립기념관
국가유산청(1)	국가유산진흥원
국방부(1)	전쟁기념사업회
농촌진흥청(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1)	한국임업진흥원
여성가족부(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외교부(1)	한국국제협력단
중소벤처기업부(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7~2025년 동안 공공기관 중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 해제된 경우로는 2017년 6개, 2020년 1개, 2023년 4개, 2024년 2개 기관으로 13개 기관이 있으며, 2025년에는 지정 해제된 기관이 없다.

■ 공공기관 중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해제 현황(2017~2025) ■

기관명	기관유형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해제 사유	제외년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자체수입 없음	201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자격증 발급 수수료 3,000만원 외 자체수입 없음	2017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타공공기관	자체수입 없음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기타공공기관	사업외수입만 있음	2017
한국어촌어항협회	기타공공기관	자체수입 없음	2017
해양환경공단	준시장형 공기업	기관 예산 중 특정사업 예산만 수지차 보전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제외됨	2017
국방기술품질원	기타공공기관	법적 수익사업 부재 및 부처 내 공공기관의 형평성을 고려함	202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기타공공기관	자체수입 없음	2023
한국문학번역원	기타공공기관	사업외수입(임대수입) 지속적 감소	202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타공공기관	국고보조금 연장 평가 시 예산비목이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됨	2023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타공공기관	국고보조금 연장 평가 시 예산비목이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됨	2023
한국광해광업공단	준시장형 공기업	사업방식 변경 (출연금 → 민간위탁사업비)	2024
재외동포재단	기타공공기관	재외동포청 설립에 따른 기관 해산	2024

주: 해당 기관명은 지정 해제 당시의 기관명임

자료: 기획재정부 및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7~2025년 동안 공공기관 중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은 2017년 15개, 2018년 1개, 2022년 3개, 2024년 1개 기관으로 총 20개 기관이다. 2025년에 신규 지정된 기관은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 중 수지차 보전기관 신규지정 현황(2017~2025) ■

기관명	주무부처	기관유형	지정 년도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사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기타공공기관	2017	입장료, 수탁사업수입 등 자체수입 존재
한국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7	석연탄 가격 합리화를 위해 지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환경부	기타공공기관	2017	입장료 등 자체수입 존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	기타공공기관	2017	이전부터 수지차 방식으로 예산지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기타공공기관	2017	자체상품·위탁상품 판매 등 자체수입 존재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 관광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017	이전부터 수지차 방식으로 예산지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7	수수료 등 자체수입 존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2017	수수료 등 자체수입 존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7	인증수수료 등 자체수입 존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타공공기관	2017	수수료 등 자체수입 존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2017	인증조사 및 컨설팅 수입 존재
한국장기기증원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2017	뇌사관리수입, 검사수입 존재
한국인체조직기증원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2017	인체조직이식재분배 수입 존재
예술의전당	문화체육 관광부	기타공공기관	2017	예술, 식음료, 주차 등 자체수입 존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2017	결산잉여금 관리 필요성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8	분석/검정 수수료 등 자체수입 존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환경부	기타공공기관	2022	입장료, 교육수수료 등 자체수입 발생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노동부	기타공공기관	2022	교육비 등 자체수입 발생
항공안전기술원	국토교통부	기타공공기관	2022	인증사업수입, 수탁연구사업수입 등 자체수입 발생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부	기타공공기관	2024	자체수입이 있으며 수지차 보전방식 편성이 예산절감에 효과적

주: 1. 한국장기기증원과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2017년 3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통합되었으며,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의 일부조직이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 분리됨

2. 해당 기관명은 신규 지정 당시의 기관명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3절 2024년 수지차 보전기관 출연·보조사업 예산 현황

수지차 보전기관의 출연·보조 세부사업의 2025년도 총 예산은 4조 3,266억 4,600만원으로, 2024년 예산 4조 2,609억 8,500만원 대비 656억 6,100만원 증가했다. 2025년 출연예산은 전년 대비 269억 1,100만원 증가한 3조 4,646억 8,000만원이며, 보조예산은 전년 대비 387억 5,000만원 증가한 8,619억 6,600만원이다.

■ 2025년도 수지차 보전기관 출연·보조 사업별 예산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기관수	2023결산	2024예산(A)	2025예산(B)	증감(B-A)
출연	37	2,946,970	3,437,769	3,464,680	26,911
보조	25	820,487	823,216	861,966	38,750
합계	62	3,767,457	4,260,985	4,326,646	65,661

자료: 기획재정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25년도 출연·보조 예산이 가장 크게 편성된 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으로, 1조 2,955억 4,000만원(출연)이 편성되었다. 수지차 보전기관 중 예산 편성액 상위 10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

■ 2025년도 수지차 보전기관 출연·보조 예산 편성액 상위 10개 기관 ■

(단위: 백만원)

기관명	주무부처	기관유형	유형	2025 예산액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1,295,54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보조	329,290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노동부	기타공공기관	출연	307,605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222,728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190,652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182,333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139,709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87,136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85,950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85,218

주: 2025 예산은 출연·보조 예산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3장

손실보전 공공기관

제1절 공공기관 손실보전 관련 법률

손실보전 공공기관이란 기관 설립근거법 등에 이익적립금으로 공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하거나,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설립근거법 등에 손실보전조항이 규정된 것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공익사업을 공공기관이 대행하면서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을 안정화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2024년 12월 말 설립근거법 등에 정부의 손실보전이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아래와 같이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15개 기관이다.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보전한다”라고 규정한 의무적 손실보전 조항과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임의적 손실보전 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의 15개 기관 중, 법률에서 이익적립금을 초과하는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손실보전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9개 기관이다. 한편, 법률에서 정부가 손실보전을 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을 두고 있는 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6개 기관이다.

【 공공기관별 손실보전 관련 법률내용 】

기관명	법률 및 조항	주요 내용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제45조제2항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2조제2항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법」 제12조제2항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은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41조제2항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33조제6항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제4항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법」 제29조제3항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2조제2항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법」 제36조제2항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1조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50조제1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제5항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2항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손실보전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정한다.

기관명	법률 및 조항	주요 내용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2조제2항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제43조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제1항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제2절 손실보전 공공기관 재무 현황

기관 설립근거법 등에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이 규정된 15개 공공기관의 2024년 말 총 부채 규모는 1,044조 3,373억원으로 2023년 대비 53조 3,695억원이 증가하였다. 2023년 대비 2024년 말 부채가 증가한 손실보전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한국산업은행 18조 6,610억원, 중소기업은행 16조 6,531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8조 7,219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4조 6,757억원, 한국수출입은행 2조 5,715억원 등 13개 기관이 이에 해당된다.⁹⁾

2024년 말 기준 15개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총 이익잉여금(기금의 경우 적립금 및 잉여금) 규모는 42조 6,610억원으로 2023년 말 대비 1조 2,936억원이 증가하였다. 한편, 2024년 말 기준 이익잉여금이 결손을 나타내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광해광업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대한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이다. 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4년 2조 5,19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2024년 이월결손금은 2023년 대비 2조 5,226억원이 확대되었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4년 1조 4,41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24년 이월결손금은 2023년 대비 1조 4,486억원이 증가하였다.

한편, 2023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7개 기관 전부에서 2024년에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3년 당기순손

9) 15개 기관 중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장학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3개 기관에서 2023년 대비 2024년 부채가 증가하였다.

실(3,755억원)이 발생하였으나 2024년에 당기순이익(3,964억원)으로 전환되었다.

손실보전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경영실적 개선 등을 통해 자체 보전하지 않는 한 결국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의 수익성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5개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주요 재무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부채			이익잉여금 (적립금 및 잉여금)			당기순이익 (재정운영결과)		
	2023 (a)	2024 (b)	증감 (b-a)	2023 (c)	2024 (d)	증감 (d-c)	2023 (e)	2024 (f)	증감 (f-e)
[비은행형]									
기술보증기금	14,100	15,614	1,514	△69,243	△70,676	△1,433	△33	△1,633	△1,6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67	1,519	252	451	445	△6	130	82	△48
대한석탄공사	24,970	24,587	△383	△17,510	△21,907	△4,397	△2,392	△4,387	△1,995
신용보증기금	38,991	39,628	637	△41,321	△36,158	5,163	6,858	4,263	△2,59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45,139	247,026	1,887	23,560	23,007	△553	△6,745	△5,153	1,592
주택도시보증공사	24,541	15,466	△9,075	△14,179	△39,405	△25,226	△38,598	△25,198	13,400
한국광해광업공단	69,503	77,205	7,702	△40,730	△55,216	△14,486	△3,701	△14,410	△10,709
한국무역보험공사	28,010	29,711	1,701	19,858	28,653	8,795	2,624	7,464	4,840
한국장학재단	101,623	105,096	3,473	9,458	9,861	403	500	403	△97
한국주택금융공사	295,124	382,343	87,219	92,146	106,742	14,596	△3,755	3,964	7,719
한국토지주택공사	1,341,978	1,388,735	46,757	77,909	69,958	△7,951	△10,594	△9,930	664
한국해양진흥공사	41,536	54,691	13,155	43,947	39,545	△4,402	△17	△4,402	△4,385
소계(A)	2,226,782	2,381,621	154,839	84,346	54,849	△29,497	△55,723	△48,937	6,786
[은행형]									
중소기업은행	3,832,108	3,998,639	166,531	194,172	208,962	14,790	24,115	24,281	166
한국산업은행	2,776,352	2,962,962	186,610	108,769	129,146	20,377	30,271	20,072	△10,199
한국수출입은행	1,074,436	1,100,151	25,715	26,387	33,653	7,266	7,228	9,796	2,568
소계(B)	7,682,896	8,061,752	378,856	329,328	371,761	42,433	61,614	54,149	△7,465
합계(A+B)	9,909,678	10,443,373	533,695	413,674	426,610	12,936	5,891	5,212	△679

- 주: 1. 손실보전 대상인 부문에 한하여 재무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2. 기금은 국가회계기준이 적용되는데 재정운영결과가 (+)인 경우 기금에 발생한 부담금 등의 수익에 비해 원가나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해당 금액만큼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하고, (-)인 경우 원가나 비용에 비해 수익이 크게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상기 표에서는 당기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정운영결과의 부호를 반대로 표기하였음
3.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재무정보와 기준 일치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한 MBS 발행 관련 자산, 부채를 제외한 공시 기준(합의된 절차 수행결과, Agreed Upon Procedure)으로 작성함(AUP 기준에 따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당기순이익은 부담금수익(금융기관 출연금)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재정운영순원가로 계상하므로 상기 표에도 이를 반영함)
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 대상인 5개 사업(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주택관리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치임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 및 감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제3절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연도별 정부지원액

기관 설립근거법 등에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이 규정된 15개 손실보전 공공기관 중 2024년 말 현재 이익잉여금(기금의 경우 적립금 및 잉여금)이 결손인 기관은 아래의 기술보증기금(△7조 676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5조 5,216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3조 9,405억원), 신용보증기금(△3조 6,158억원), 대한석탄공사(△2조 1,907억원) 등 5개 기관이다. 정부는 이들 5개 기관에 대하여 최근 5년(2020~2024년)간 출자, 출연, 보조 등을 통해 총 13조 5,889억원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5조 4,739억원, 신용보증기금에 5조 3,109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1조 6,628억원, 기술보증기금에 9,903억원, 대한석탄공사에 1,510억원을 지원하였다.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정부의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 2024년 말 이익잉여금이 결손인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연도별 정부지원액(2020~2024) ■

(단위: 억원)

기관명	기관 유형	2024년 말 이익잉여금	정부지원 유형	정부지원액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기술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70,676	출연	4,883	3,500	1,320	-	200	9,903
한국광해광업공단	준시장형 공기업	△55,216	출자, 출연, 보조	-	2,653	2,911	4,252	6,812	16,628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39,405	출자	-	3,900	-	3,839	47,000	54,739
신용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6,158	출연	33,626	5,096	11,800	1,687	900	53,109
대한석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1,907	출자	316	285	271	236	402	1,510
합계		△223,362	-	38,825	15,434	16,302	10,014	55,314	135,889

주: 1. 2024년 말 이익잉여금은 각 기관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2.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설립됨. 위 표의 2020년 정부지원액은 종전 기관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재무수치의 단순 합임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 및 감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제4절 손실보전 공공기관 중 완전자본잠식¹⁰⁾ 상황인 기관

15개 손실보전 공공기관 중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4년 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이 두 기관의 자본잠식 금액 합계는 2024년 말 5조 8,025억원으로 2020년 3조 7,487억원 대비 2조 538억원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2024년 말 기준으로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은 각각 2조 395억원과 3조 7,630억원이고, 각 기관의 자본잠식 금액은 2020년 대비 8,501억원과 1조 2,037억원 증가하였다.

■ 손실보전 공공기관 중 완전자본잠식인 기관 연도별 총자본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2020 (A)	2021	2022	2023	2024 (B)	증감 (B-A)
대한석탄공사	△11,894	△12,923	△14,258	△16,427	△20,395	△8,501
한국광해광업공단	△25,593	△22,183	△22,545	△24,778	△37,630	△12,037
합계	△37,487	△35,106	△36,803	△41,205	△58,025	△20,538

주: 1.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설립됨. 위 표의 2020년 총자본액은 종전 기관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재무수치의 단순 합임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 및 감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10) 기업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잉여금이 감소하면서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를 자본잠식이라 하며, 자본잠식이 지속되면서 자본총계가 음(-)(자산<부채)이 되는 경우를 완전자본잠식이라 한다. 상기에서는 완전자본잠식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재하였다.

제4장

금융공공기관

제1절 금융공공기관 개요

정책금융은 민간의 상업금융과 대비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민간의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지원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정부의 재정을 직·간접적으로 투입하여 자금의 가용성·만기·금융비용 측면에서 보완하는 정부의 금융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금융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금융공공기관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다.¹¹⁾

2025년 1월 기준으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331개 공공기관 중 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의 금융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은 아래의 19개 기관이다.¹²⁾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으며, 금융위원회 소관의 신용보증기금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8개, 기획재정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기타공공기관이 10개이다.

11) 성승제, 「금융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공공기관 운영법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별도로 금융공공기관을 분류하고 있지는 않으며, 본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대출·보증·보험·투자 등의 금융 업무를 주요 업무로(전체 사업비의 80% 이상) 하는 공공기관을 금융공공기관으로 분류하였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금융 성격인 기금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금융공공기관에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성 기금의 경우에는 그 주요 목적이 해당 연금을 유지하여 연금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 그 목적이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정책금융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그 밖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대출·보증·보험·투자 등의 관련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80% 미만으로 제외하였다. 감사원은 2014년,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 발표(2014.10.7.)에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거래소 이상 13개의 공공기관을 금융공공기관으로 구분한 바 있다.

Ⅱ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분류와 금융공공기관

(단위: 개)

분류		주무부처	금융공공기관
공기업 (1)	준시장형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정부기관 (8)	기금관리형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타공공기관 (10)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국토교통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주: 2025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9개 금융공공기관은 주요 업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은행형, 보증·보험형, 융자형, 자산관리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며, 보증·보험형 금융공공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분류 가능하다. 또한, 융자형 금융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경우 자산관리형 금융공공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각 유형별 금융공공기관 |

(단위: 개)

유형	기관명	설립 연도	설립 목적 (설립 근거 법률)	주요 업무
은행형 (3)	한국 수출입 은행	1976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 제공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조)	해외건설·플랜트 등 주요 수출산업 부문 금융지원, 해외투자자금·해외 자원개발 금융지원
	한국 산업 은행	1954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	산업·중소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에너지·자원의 개발, 기업·산업의 해외진출, 기업구조조정
	중소 기업 은행	1961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 확립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	중소기업 자금대출·어음할인, 예금·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 등 채무증서 발행
보증· 보험형 (9)	기술 보증 기금	1989	채무 보증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유통 지원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기술보증, 기술평가, 보증연계투자, 구상권관리, 유동화회사보증(P-CBO), 기술혁신지원, 기업 경영지도
	신용 보증 기금	1976	채무 보증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유통 지원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신용보증·신용보험, 보증연계투자, 창업기업 지원, 신용정보 종합관리, 기업 경영지도
	주택도시 보증공사	2015 ¹⁾	주택건설 보증 등 주택관련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보증, 주택관련 정부정책지원을 위한 보증,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
	한국주택 금융공사	2004	주택저당채권의 유통화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주택 담보대출·후연금보증 등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 촉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유동화증권 발행,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주택연금(역모기지론)보증 공급
	한국무역 보험공사	1992	무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 (「무역보험법」 제37조)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무역보험기금 관리 및 운용
	예금보험 공사	1996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 (「예금자보호법」 제3조)	예금보험기금 조성, 부실금융기관 정리, 보험금 지급, 공적 지원자금 회수
	신용보증 재단 중앙회	2000	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개인 부담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 및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신보 채무 보증의 재보증업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35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 신용보증·신용조사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교육연수, 개인 부담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서민금융 진흥원	2016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 청년·대학생에 대한 정책 서민금융지원 및 금융 교육,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한국해양 진흥공사	2018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지원 및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해운 경쟁력 강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조)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및 차입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선박의 취득·관리 및 처분의 수탁,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유형	기관명	설립 연도	설립 목적 (설립 근거 법률)	주요 업무
융자형 (2)	중소벤처 기업 진흥공단	1979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글로벌화 및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CEO 육성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2014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수행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업무의 위탁 운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 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자산 관리형 (5)	한국자산 관리공사	1962	금융회사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 촉진, 부실징후 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신용회복지원, 국·공 유재산 관리
	한국 투자공사	2005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 운용업 무의 효율적 수행 (「한국투자공사법」 제1조)	위탁기관에서 받은 자산의 관리·운용
	한국 벤처투자	2005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지원, 중소 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한국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2018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지원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지원 등
	농업정책 보완금융원	2004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 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운 용·관리,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농 어업재해재보험기금 관리·운용, 농 식품모태펀드 운용

주: 1)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1999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가 2015년 「주택도시보증법」 제정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재설립됨

자료: 각 공공기관 설립 근거법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국내 정책금융의 주요 분야는 중소기업, 수출금융, 개발금융, 주택금융,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해 제공되고 있으며, 금융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19개 금융공공기관은 설립 목적 및 주요 수행 업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가능하다.

중소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의 7개 기관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개 기관은 수출입·무역 등 대외거래 관련 금융을 제공하는 수출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산업의 개발·육성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를 개발금융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두 기관은 주택 관련 각종 보증 업무 및 주택저당증권의 유통화 등 주택금융을 공급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 한국해양진흥공사(해운산업 관련 금융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회사 부실 자산 정리), 예금보험공사(예금자 보호), 한국투자공사(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외화자산 운용),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해외인프라 및 도시개발 사업 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업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의 각각의 기관은 특수 목적의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¹³⁾

▮ 정책금융 지원 분야별 금융공공기관 구분 ▮

정책금융 분야	주요 업무	금융공공기관
중소금융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수출금융	수출입·무역 등 대외거래 관련 금융 제공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개발금융	산업의 개발·육성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	한국산업은행
주택금융	주택 관련 각종 보증업무 및 주택저당채권의 유통화 등 주택금융 공급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	서민금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기타	특수 목적 정책금융 수행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자료: 각 공공기관 설립 근거법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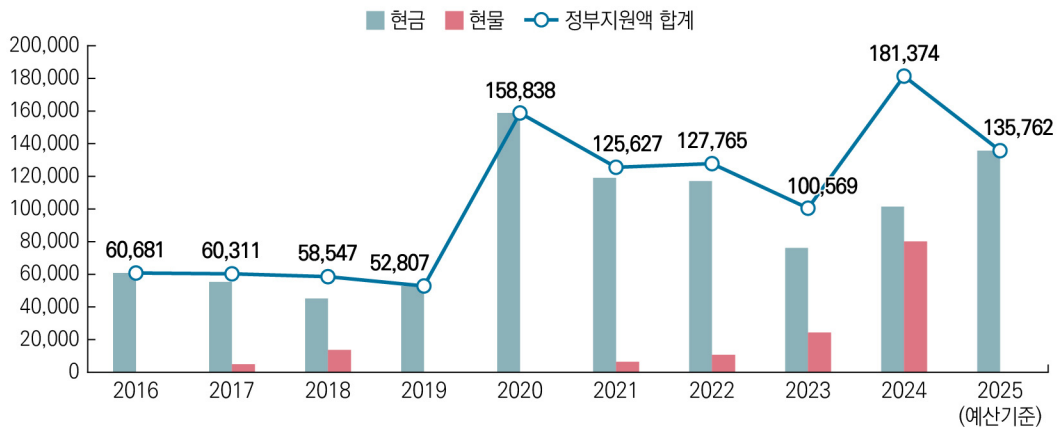
13) 이와 관련한 세부 현황은 국회예산정책처,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2022, 22~35쪽 참조.

제2절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정부는 정책금융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에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2025년(예산기준)까지 최근 10년간 19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연도별 정부지원액(현금, 현물)은 다음과 같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해 15조 8,838억원, 2024년에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인 18조 1,374억원이 지원되었으며, 2025년에는 13조 5,76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연도별 정부지원 현황(2016~2025) ■



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지급인 직접 보조금 성격이 강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정부 예산지원액은 제외하였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아래의 표는 2016~2025년(예산기준)까지 10년간 각 연도별 19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액을 기관별로 나타낸 것이다. 정부는 2016~2025년간 19개 금융공공기관에 총 106조 2,28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예산을 통한 현금 지원액이 92조 2,281억원이고, 공공기관 주식 등 현물 출자 지원액이 14조원이다.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액을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2016~2025년간의 정부지원액이 46조 591억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체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총 정부지원액 106조 2,281억원의 43.4%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정부지원은 기술기반 소공인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자금, 2020~2022년에는 감염병 및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투입되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2016~2025년간의 정부지원액이 14조 5,544억 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체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총 정부지원액 106조 2,281억원의 13.7%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정부지원은 2016년과 2017년에는 주로 조선업 구조조정과 대외 경제 악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원되었으며,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육성사업 확대, 벤처투자 등을 위해 지원되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지원 금액이 9조 7,433억원으로 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에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회사채·CP 매입지원 프로그램, 증권시장 안정펀드,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 조성을 위해 2조 1,026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2021년에는 상·하 금융시장안정화를 위한 예산 2,296억원 및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5,100억원 등 총 1조 1,208억원이 지원되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뉴딜펀드 조성(6,000억원) 및 녹색금융(KDB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 사업(1,000억원¹⁴⁾)을 위해 현금 7,000억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2022년 현물출자 5,650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으로, 이는 2022년 10월 정부의 ‘회사채·CP 등 차환지원 프로그램’ 확대¹⁵⁾ 및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수행에 따른 BIS 비율 하락 예상에 따라 지원된 것이다. 그리고 2024년에는 정책금융 수요 확대에 의한 자금공급 증가 등 대응을 위한 현물 2조원, 뉴딜펀드를 재편한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 2,400억원 및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억원, 탄소 넷제로를 위해 500억원 등이 지원되었다.

14) 2022년 기후대응기금 예산안 상 1,300억원의 출자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일부(300억원) 출자가 미집행되었다.

15) 한국산업은행의 회사채·CP 차환 프로그램이 기존의 4.4조원에서 7.4조원으로 3조원 확대되었다.

■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세부 현황(2016~2025) ■

(단위: 개, 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기준)	합계	
													금액	비중
은행형 (3)	한국 수출입 은행	현금	10,200	0	0	562	5,783	2,988	250	0	1,000	1,000	21,783	2.1
		현물	0	2,500	0	0	0	0	0	20,000	20,000	0	42,500	4.0
		소계	10,200	2,500	0	562	5,783	2,988	250	20,000	21,000	1,000	64,283	6.1
	한국산업 은행	현금	3,077	1,450	1,700	5,550	21,026	11,208	7,000	3,400	3,900	6,622	64,933	6.1
		현물	0	2,500	0	0	0	0	5,650	4,350	20,000	0	32,500	3.1
		소계	3,077	3,950	1,700	5,550	21,026	11,208	12,650	7,750	23,900	6,622	97,433	9.2
	중소기업 은행	현금	400	0	0	2250	12688	491	0	0	0	0	15,829	1.5
보증 · 보험형 (9)	기술보증 기금	현금	800	508	600	1,030	4,883	3,500	1,320	0	200	400	13,241	1.2
	신용보증 기금	현금	3,478	3,221	1,597	1,610	33,626	5,096	11,800	1,687	1,240	900	64,255	6.0
	주택도시 보증공사	현금	0	0	700	0	0	3,900	0	3,839	7,000	0	15,439	1.5
		현물	0	0	0	0	0	0	0	0	40,000	0	40,000	3.8
		소계	0	0	700	0	0	3,900	0	3,839	47,000	0	55,439	5.2
	한국주택 금융공사	현금	0	0	900	900	0	500	1,590	1,668	0	0	5,558	0.5
		현물	0	0	0	0	0	0	0	0	0	0	0	0.0
		소계	0	0	900	900	0	500	1,590	1,668	0	0	5,558	0.5
	한국무역 보험공사	현금	3,900	700	800	1,350	5,731	3,500	912	500	700	800	18,893	1.8
	예금보험 공사	현금	0	0	0	0	0	0	0	0	0	0	0	0.0
	신용보증 재단 중앙회	현금	600	536	356	469	2,123	2,369	1,644	1,409	1,254	2,035	12,795	1.2
	서민금융 진흥원	현금	1,750	1,750	1,750	1,750	1,233	2,670	3,321	9,683	8,914	6,889	39,710	3.7
	한국해양 진흥공사	현금	-	-	1,300	700	0	300	300	0	302	313	3,215	0.3
		현물	-	-	13,500	0	0	0	0	0	0	0	13,500	1.3
		소계	-	-	14,800	700	0	300	300	0	302	313	16,715	1.6
융자형 (2)	중소벤처 기업 진흥공단	현금	15,461	21,436	10,726	8,815	14,734	17,998	12,566	12,431	15,971	15,406	145,544	13.7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현금	20,915	25,591	24,495	27,251	55,140	63,549	69,757	38,599	48,896	86,398	460,591	43.4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기준)	합계	
														금액 비중
자산 관리형 (5)	한국자산 관리공사	현금	0	0	0	0	900	119	6,000	2,800	3,800	5,000	18,619	1.8
		현물	0	0	0	0	0	6,500	5,000	0	0	0	11,500	1.1
		소계	0	0	0	0	900	6,619	11,000	2,800	3,800	5,000	30,119	2.8
	한국투자 공사	현금	0	0	0	0	0	0	0	0	0	0	0	0.0
		현금	0	0	0	0	0	0	0	0	0	0	0	0.0
	한국해외 인프라 도시 개발지원 공사	현금	-	-	11	451	800	800	500	50	500	900	4,012	0.4
		현금	100	119	112	119	171	139	155	153	7,697	9,099	17,864	1.7
	농업정책 보조금지원	현금	60,681	55,311	45,047	52,807	158,838	119,127	117,115	76,219	101,374	135,762	922,281	86.8
		현물	0	5,000	13,500	0	0	6,500	10,650	24,350	80,000	0	140,000	13.2
		계	60,681	60,311	58,547	52,807	158,838	125,627	127,765	100,569	181,374	135,762	1,062,281	100.0

주: 1. 2025년 정부지원 금액은 2025년 예산 기준임

2. 상기 정부 예산을 통한 정부 현금 지원액은 출자금, 출연금 등을 포함한 것임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지급인 직접 보조금 성격이 강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정부 예산지원액은 제외하였음

4.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포함한 금액임

5.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2018년에 설립됨

자료: 공공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3절 금융공공기관의 경영 현황

19개 금융공공기관의 2024년 말 전체 자산총액은 1,215.65조원으로, 2016년 718.23조원에 비해 497.42조원(69.26%)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대규모 용자업무 수행으로 관련 채권을 보유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2024년 말 자산총액이 901.8조원이며, 19개 금융공공기관 자산 총액의 74.2%를 차지한다. 또한, 정책모기지 등을 수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보험형 금융공공기관의 2024년 말 자산이 268.4조원으로 2016년 149.0조원 대비 119.4조원(80.13%)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용자형 금융공공기관의 자산 총액이 13.85조원, 자산관리형 금융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12.77조원 증가하였다.

금융공공기관의 각 연도말 자산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6 (a)	2018	2020	2021	2022	2023	2024 (b)	증감	
									증감액 (b-a)	증감률 (b-a)/a
은행형	한국수출입은행	89.8	89.8	97.6	101.5	122.1	125.4	131.3	41.50	46.21
	한국산업은행	219.1	209.8	251.9	276.4	312.8	317.1	339.2	120.10	54.82
	중소기업은행	241.5	268.9	335.0	368.2	397.9	412.7	431.3	189.80	78.59
	소계	550.4	568.5	684.5	746.1	832.8	855.2	901.8	351.40	63.84
보증·보험형	기술보증기금	3.4	2.9	3.6	4.3	4.7	4.9	4.9	1.50	44.12
	신용보증기금	8.4	7.8	12.0	12.9	14.4	15.3	15.8	7.40	88.10
	주택도시보증공사	6.3	7.2	7.8	8.4	7.6	4.6	6.5	0.20	3.17
	한국주택금융공사	101.8	122.1	152.7	161.2	161.2	188.7	191.2	89.40	87.82
	한국무역보험공사	4.3	4.3	5.0	5.3	5.5	6.7	7.7	3.40	79.07
	예금보험공사	22.2	18.6	18.6	19.6	21.2	23.0	22.0	△0.20	△0.9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2	1.3	1.6	1.8	2.3	1.9	1.5	0.30	25.00
	서민금융진흥원	1.4	2.4	3.2	3.6	4.3	5.2	5.3	3.90	278.57
	한국해양진흥공사	-	2.7	8.5	14.5	11.2	11.8	13.5	13.50	-
	소계	149.0	169.3	213.0	231.6	232.4	262.1	268.4	119.40	80.13
융자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9	18.1	23.0	26.6	29.1	29.2	29.3	13.40	84.2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04	0.03	0.02	0.03	0.12	0.18	0.49	0.45	1,125.00
	소계	15.94	18.13	23.02	26.63	29.22	29.38	29.79	13.85	86.89
자산관리형	한국자산관리공사	2.6	4.0	5.8	7.2	9.2	11.3	13.8	11.20	430.77
	한국투자공사	0.2	0.3	0.4	0.6	0.5	0.5	0.6	0.40	200.00
	한국벤처투자	0.08	0.09	0.10	0.11	0.12	0.12	0.15	0.07	87.50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	0.2	0.5	0.6	0.6	0.8	1.1	1.10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0.01	0.00	0.01	0.01	0.01	0.01	0.01	0.00	0.00
	소계	2.89	4.59	6.81	8.52	10.43	12.73	15.66	12.77	441.87
	합계	718.23	760.52	927.33	1,012.85	1,104.85	1,159.41	1,215.65	497.42	69.26

주: 1. 각 공공기관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

2. 서민금융진흥원은 2016년 9월 설립되었으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18년 7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2018년 6월 설립됨

3.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유계정만 반영함

4. 예금보험공사는 고유계정,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주요 재무건전성 지표인 BIS비율¹⁶⁾은 지속적인 정부지원 및 이익실현 등에 따라 3개 은행의 평균치가 2012년 13.00%에서 2020년 15.29%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하여 2024년 기준으로는 14.65%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주요 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 등을 하향하는 ‘바젤 III 최종안’을 2020년 2분기부터 조기 도입¹⁷⁾¹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2020년 12월 말에, 한국수출입은행은 2021년 6월 말부터 도입하였으며, 이는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BIS비율을 일부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평균 BIS비율은 14.65%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중 은행의 평균 BIS비율(총자본)은 15.58%¹⁹⁾로 시중 은행 대비 0.93%p 낮으며, 향후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가능성 등으로 부실이 일부 확대될 가능성 또한 있어, 이와 관련한 재무건전성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BIS비율 ■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수출입은행	11.61	11.60	10.50	10.04	10.77	12.90	14.42	14.56	15.09	14.84	13.38	14.47	15.35
한국산업은행	15.01	14.47	13.36	14.18	14.86	15.26	14.80	14.05	15.96	14.88	13.40	14.07	13.90
중소기업은행	12.37	12.30	12.39	12.51	13.13	14.20	14.50	14.47	14.82	14.85	14.68	14.87	14.69
3개 은행 평균	13.00	12.79	12.08	12.24	12.92	14.12	14.57	14.36	15.29	14.86	13.82	14.47	14.65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6) BIS비율은 은행의 주요 재무건전성 지표로, BIS비율 수치가 높을수록 은행 경영이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ext{BIS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text{ 으로 산정된다.}$$

17)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III 최종안」을 '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하였다.

18) 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III 최종안」을 '20.2분기부터 조기 시행합니다.”, 보도자료, 2020.3.27.

19) 금융감독원, “'24년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2025.03.31.

보증·보험형 금융공공기관의 2016년 대비 2024년 보증·보험배수는 보증·보험 잔액 증가에 비해 기금순자산 증가가 미달하여 해당 운용배수²⁰⁾가 상승한 기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보완계정)이며, 운용배수가 하락한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유계정, 주택신용보증계정 및 주택연금보증계정, 한국무역보험공사이다.²¹⁾

특히 주택금융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이 증가하면서 보증배수가 2016년 45.8배에서 2024년 54.4배로 상승하였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을 수행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당기순손실이 증가함에 따른 자본 감소로 인해 운용배수가 2016년 36.0배에서 2024년 1,085.2배로 크게 상승하였다.²²⁾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 배수는 2016년 73.4배에서 2024년 21.7배로 하락하였는데, 무역보험기금의 순자산 증가 및 유효계약액 통계 작성 방법 변경²³⁾ 등에 기인한 201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편, 2024년 보증·보험 운용배수를 2023년과 비교시,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증가하였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하락하였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자본 감소로 인해 운용배수가 2023년 51.1배에서 2024년 1,085.2배로 상승하였다.²⁴⁾

20) 보증·보험 운용배수는 각 금융공공기관의 연도 말 보증·보험 잔액을 기본재산 및 이월이익잉여금 등의 순자산으로 나눈 배수를 말한다. 보증 및 보험은 향후 대손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이므로 해당 보증·보험에 대한 변제 능력을 유지하려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에 비해 보증·보험을 과도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하는 등 적정 운용배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21) 아래에 제시하고 있는 보증·보험형 금융공공기관의 운용배수는 각 기관별로 수행 업무 상 차이 등이 존재함에 따라 각 금융공공기관별로 적정 운용배수가 다르므로, 단순히 서로 다른 기관 간 운용배수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각 기관의 기간별 운용배수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적정 운용배수 관리를 위해 의미가 있다.

22)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잔액 및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배)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재보증잔액	211,802	228,560	248,649	238,068	227,885
기본재산	3,831	6,114	7,370	4,658	210
운용배수	55.3	37.4	33.7	51.1	1,085.2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3) 중장기 종목(중장기수출보험, 해외투자보험 등)의 이자금액이 제외되었고, 유효계약 인정기간이 상환통지일에서 각 상환일자로부터 2개월까지로 변경되었다. (2018.10월 개정)

24) 다만,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설립근거법상 운용배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년도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우발채무의 급증 시 기본재산(자본) 소진 가능성이 타 보증·보험형 금융공공기관 대비 높은 특징이 있다.

■ 보증·보험형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보증·보험 운용배수 ■

(단위: 배)

구분		2016 (a)	2018	2020	2021	2022	2023 (b)	2024 (c)	증감	
									(c-a)	(c-b)
기술보증기금		9.6	13.4	12.0	8.9	7.8	8.0	8.7	△0.9	0.7
신용보증기금		9.9	9.9	8.2	8.9	7.9	7.0	6.5	△3.4	△0.5
주택도시보증공사		45.8	45.0	47.4	49.2	54.4	54.3	54.4	8.6	0.1
한국주택 금융공사	고유계정	39.5	37.9	40.3	39.7	35.0	35.8	32.3	△7.2	△3.5
	주택신용 보증계정	11.8	10.9	13.3	13.4	13.7	12.6	11.1	△0.7	△1.5
	주택연금 보증계정	13.1	14.8	11.6	9.7	10.1	9.6	9.4	△3.7	△0.2
한국무역보험공사		73.4	48.7	29.9	26.5	25.4	25.8	21.7	△51.7	△4.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6.0	35.1	55.3	37.4	33.7	51.1	1,085.2	1,047.3	1,032.2
서민금융 진흥원	서민금융 보완계정	12.0	11.9	6.5	13.2	11.5	25.3	13.0	1.0	△12.3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4절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

금융공공기관은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의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2024년 말 기준으로 17개 금융공공기관²⁵⁾에서 790.3조원의 융자(대출) 잔액 및 969.7조원의 보증 잔액, 107.2조원의 보험잔액, 그리고 106.5조원의 투자잔액 등 총 1,973.7조원의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24년 기준으로 총 잔액의 49.1%인 969.7조원은 보증 잔액이며, 40.0%인 790.3조원은 융자(대출) 잔액으로, 정책금융의 대부분은 보증 및 융자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2024년에는 주택 보증 등을 위한 정책금융의 증가로 인해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잔액 합계가 2023년 1,902.4조원 대비 71.3조원 증가한 1,973.7조원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공공기관의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잔액은 2020년 1,484.1조원, 2021년 1,663.0조원, 2022년 1,810.7조원, 2023년 1,902.4조원 및 2024년 1,973.7조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해당 잔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0년 12.6%, 2021년

25) 19개 금융공공기관 중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정부 위탁자산을 해외투자로 운용하므로 정책금융 공급과는 차이가 있어 제외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부보 예금 금액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보금융회사 등의 예금을 제외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전체 예금으로, 상기의 정책금융 공급 기준과는 차이가 있어 제외하였다.

12.1%, 2022년 8.9%, 2023년 5.1%, 2024년 3.7% 등으로,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2020년과 2021년에 크게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²⁶⁾ 2024년의 총 잔액 합계 1,973.7조원은 2019년 1,318.4조원 대비 655.3조원(49.7%) 증가한 것이다.

용자(대출)잔액은 2019년 551.4조원에서 2024년 790.3조원으로 238.9조원(43.3%) 증가하였으며, 2024년 용자(대출) 잔액은 2023년 대비 3.0%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잔액이 증가하고 있다. 보증잔액은 2019년 628.1조원에서 2024년 969.7조원으로 341.6조원(54.4%) 증가하였으며, 2020년 이후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대를 유지하다 2023년에 전년 대비 3.6%, 2024년에 전년 대비 3.9% 증가하여 증가율이 감소하였으나, 주택 보증 등을 중심으로 보증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잔액은 2019년 77.6조원이었으나 2024년 107.2조원으로 증가하였는데, 해당 증감은 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잔액 증감에 기인한다. 또한, 투자 잔액은 2019년 61.3조원에서 2024년 106.5조원으로 45.2조원(73.7%) 증가하였으며, 2024년 말 기준 투자잔액 106.5조원 중 한국산업은행의 투자잔액(77.9조원)이 대부분(73.1%)을 차지한다.

■ 금융공공기관의 각 연도별 용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잔액 ■

(단위: 조원, %)

구분	2019 (a)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	
						금액 (b)	(비중)	(b-a)	(b-a)/a
용자(대출)	551.4	622.0	676.1	731.2	767.6	790.3	(40.0)	238.9	43.3
(전년대비 증감률)	-	(12.8)	(8.7)	(8.1)	(5.0)	(3.0)	-	-	-
보증	628.1	712.1	815.5	900.7	933.3	969.7	(49.1)	341.6	54.4
(전년대비 증감률)	-	(13.4)	(14.5)	(10.4)	(3.6)	(3.9)	-	-	-
보험	77.6	76.4	83.3	89.5	104.2	107.2	(5.4)	29.6	38.1
(전년대비 증감률)	-	(△1.5)	(9.0)	(7.4)	(16.4)	(2.9)	-	-	-
투자	61.3	73.6	88.1	89.3	97.3	106.5	(5.4)	45.2	73.7
(전년대비 증감률)	-	(20.1)	(19.7)	(1.4)	(9.0)	(9.5)	-	-	-
합계	1,318.4	1,484.1	1,663.0	1,810.7	1,902.4	1,973.7	(100.0)	655.3	49.7
(전년대비 증감률)	-	(12.6)	(12.1)	(8.9)	(5.1)	(3.7)	-	-	-

주: 1. 각 연도 말 잔액 기준으로 작성

2. 상기 각 연도별 잔액 합계액 산정 시, 금융공공기관 대출에 대하여 금융공공기관이 보증한 일부 중복 금액이 있을 수 있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6)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단계적으로 임계점 수준까지 정책금융 공급의 최대 확대를 추진하였다.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보도자료, 2020.4.22., “코로나19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보도자료, 2020.3.24.)

2019~2024년 동안 금융공공기관의 용자(대출) 잔액은 238.9조원(43.3%)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중소기업은행의 증가 금액이 94.3조원(45.8%)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용자 잔액 중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2024년 말 기준 중소기업은행의 용자(대출) 잔액 300.3조원은 전체 용자(대출) 잔액 790.3조원의 38.0%의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산업은행의 용자(대출) 잔액 186.9조원은 전체 용자(대출) 잔액 790.3조원의 2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24년 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용자(대출) 잔액이 175.5조원이며, 이는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를 바탕으로 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다.

■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용자(대출) 잔액 ■

(단위: 조원, %)

구분	2019 (a)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	
						금액(b)	비중	(b-a)	(b-a)/a
용자(대출)잔액 합계	551.4	622.0	676.1	731.2	767.6	790.3	100.0	238.9	43.3
중소기업은행	206.0	233.5	254.0	272.9	286.8	300.3	38.0	94.3	45.8
한국주택금융공사	122.2	140.4	151.7	156.0	179.7	175.5	22.2	53.3	43.6
한국산업은행	128.6	145.7	158.6	177.3	178.7	186.9	23.6	58.3	45.3
한국수출입은행	70.7	72.4	77.6	86.6	83.6	89.4	11.3	18.7	26.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6.6	19.4	21.9	24.0	24.5	24.3	3.1	7.7	46.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3	9.6	11.4	13.5	13.4	12.9	1.6	6.6	104.8
서민금융진흥원	0.8	0.8	0.7	0.7	0.8	0.9	0.1	0.1	12.5
주택도시보증공사	0.2	0.2	0.2	0.2	0.1	0.1	0.0	△0.1	△50.0

주: 1. 각 연도 말 잔액 기준으로 작성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용자잔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사업등록업자에게 용자한 용자금으로, 1999년 전환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용자금은 상환받고 있음

3. 한국산업은행의 용자(대출) 잔액은 해외지점 및 사무소 등 해외 실적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2024년간 금융공공기관의 보증 잔액은 341.6조원(54.4%) 증가하였으며, 증가 금액의 대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210.9조원, 54.8% 증가)에서 발생하였다.²⁷⁾ 2024년 말 기준 금융공공기관의 보증 잔액은 969.7조원이며, 이 중 61.4%인 595.5조원은

27)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연도말 보증잔액 산정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함께 공급된 전세대출특약보증은 통계 목적을 위해 중복계상으로 보증잔액에서 제외하였다. 해당 전세대출특약보증의 연도별 잔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조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세대출특약보증 보증잔액	16.1	26.2	33.0	41.7	46.4	51.9	59.0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잔액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²⁸⁾ 등의 이행성 보증과 주택구입자금보증²⁹⁾ 등의 금융성 보증을 수행하고 있다.³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2024년 보증 잔액이 142.9조원으로, 대부분 주택신용보증³¹⁾과 주택연금보증³²⁾의 금융성 보증 금액이다. 그 밖에 신용보증기금(95.2조원), 한국수출입은행(49.0조원), 기술보증기금(29.2조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22.8조원) 등에서 보증을 통해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보증 잔액 ■

(단위: 조원, %)

구 분	2019 (a)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	
						금액(b)	비중	(b-a)	(b-a)/a
보증잔액 합계	628.1	712.1	815.5	900.7	933.3	969.7	100.0	341.6	54.4
주택도시보증공사	384.6	426.8	494.9	549.9	566.4	595.5	61.4	210.9	54.8
한국주택금융공사	94.2	111.0	123.3	131.5	140.7	142.9	14.7	48.7	51.7
신용보증기금	63.4	78.6	91.3	96.2	95.7	95.2	9.8	31.8	50.2
한국수출입은행	32.3	28.0	30.1	39.4	43.1	49.0	5.1	16.7	51.7
기술보증기금	22.1	25.7	26.5	26.7	28.3	29.2	3.0	7.1	32.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1.4	21.2	22.9	24.9	23.8	22.8	2.4	11.4	100.0
한국산업은행	8.8	8.3	11.4	14.2	15.8	16.9	1.7	8.1	92.0
서민금융진흥원	4.3	4.8	5.3	7.0	7.7	7.5	0.8	3.2	74.4
중소기업은행	3.8	3.6	4.3	5.2	6.2	6.1	0.6	2.3	60.5
한국해양진흥공사	1.5	2.0	3.2	3.1	3.0	1.5	0.2	0.0	0.0
한국무역보험공사	1.7	2.1	2.3	2.4	2.4	2.7	0.3	1.0	58.8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	-	0.2	0.2	0.4	0.0	0.4	-

주: 1. 각 연도 말의 잔액 기준으로 작성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연도 말 보증잔액 산정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함께 공급된 전세대출특약보증은 중복계상으로 보증잔액에서 제외하였음

3.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잔액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 잔액임

4.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잔액은 국민행복기금 재원으로 공급했던 상품의 보증잔액은 제외하고 있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8)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29) 주택구입자금보증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30) 보증은 크게 이행성 보증과 금융성 보증으로 구분된다. 이행성 보증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가 피보험자인 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을 말하며, 금융성 보증은 금전소비대차상의 채무 상환을 담보하는 보증이다.

31) 주택신용보증은 주택수요자 또는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구입, 임차, 건설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보증을 말한다.

32) 주택연금보증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보증이다.

보험 업무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금융공공기관의 보험 잔액은 107.2조원으로, 이의 대부분(94.0%)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생하였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 잔액은 2019년 72.6조원에서 2024년 100.8조원으로 28.2조원(38.8%) 증가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의 보험 잔액은 2019년 5.0조원에서 2024년 6.4조원으로 1.4조원(28.0%) 증가하였다.

■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보험 잔액 ■

(단위: 조원, %)

구 분	2019 (a)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	
						금액(b)	비중	(b-a)	(b-a)/a
보험잔액 합계	77.6	76.4	83.3	89.5	104.2	107.2	100.0	29.6	38.1
한국무역보험공사	72.6	71.3	78.1	84.1	98.5	100.8	94.0	28.2	38.8
신용보증기금	5.0	5.1	5.2	5.4	5.7	6.4	6.0	1.4	28.0

주: 1. 각 연도 말 잔액 기준으로 작성

2. 신용보증기금의 보험은 매출채권보험임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말 기준 금융공공기관의 출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 잔액은 106.5조원이며, 이의 대부분은 한국산업은행(73.1%)에서의 투자금액으로, 한국산업은행의 2024년도 말 투자잔액은 77.9조원이다.³³⁾

33) 상기 한국산업은행의 투자잔액에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투자잔액 16.9조원(2024년 말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투자 잔액 ■

(단위: 조원, %)

구 분	2019 (a)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	
						금액(b)	비중	(b-a)	(b-a)/a
투자잔액 합계	61.3	73.6	88.1	89.3	97.3	106.5	100.0	45.2	73.7
한국산업은행	50.4	59.8	69.8	69.9	74.1	77.9	73.1	27.5	54.6
한국벤처투자	4.5	5.8	7.3	8.2	8.9	9.9	9.3	5.4	120.0
중소기업은행	2.7	3.2	3.7	4.9	5.5	6.8	6.4	4.1	151.9
한국해양진흥공사	2.7	3.6	5.7	4.6	7.0	9.3	8.7	6.6	244.4
한국수출입은행	0.3	0.5	0.6	0.6	0.6	0.9	0.8	0.6	200.0
신용보증기금	0.2	0.2	0.3	0.3	0.3	0.4	0.4	0.2	100.0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0.2	0.2	0.3	0.5	0.5	0.7	0.7	0.5	250.0
기술보증기금	0.2	0.2	0.2	0.2	0.3	0.4	0.4	0.2	100.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0.1	0.1	0.2	0.1	0.1	0.2	0.2	0.1	100.0

주: 1. 각 연도 말 잔액 기준으로 작성

2. 한국산업은행의 투자잔액은 정책펀드와 해외지점 및 사무소 등 해외 실적을 포함한 금액임

3. 한국벤처투자의 투자잔액은 각 연도 말 기준 누적 정부 출자금액임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 분야별(중소금융, 수출금융, 개발금융, 주택금융, 서민금융) 2019~2024년간 용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의 지원 방식을 통해 공급한 정책금융 공급 잔액은 아래와 같다.³⁴⁾

해당 기간 동안의 증가를 각 분야별로 볼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속한 주택금융 분야 공급 잔액의 증가가 가장 컸고(2019년 대비 2024년 312.8조원 증가), 그 뒤를 이어 중소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속한 중소기업 분야의 공급이 차지(2019년 대비 2024년 172.5조원 증가)하고 있다.

34) 해당 정책금융 분야별 연도별 잔액 산정 시, 분야별로 구분된 각 금융공공기관이 연도별로 공급한 용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잔액 전체를, 해당 정책금융 분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 분야별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잔액

(단위: 조원, %)

구 분	2019 (a)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	
						금액 (b)	(비중)	(b-a)	(b-a)/a
개발금융 (전년대비 증감률)	187.8 -	213.8 (13.8)	239.8 (12.2)	261.4 (9.0)	268.6 (2.8)	281.7 (4.9)	(14.3) -	93.9 -	50.0 -
중소금융 (전년대비 증감률)	342.2 -	406.1 (18.7)	449.0 (10.6)	482.4 (7.4)	499.4 (3.5)	514.7 (3.1)	(26.1) -	172.5 -	50.4 -
수출금융 (전년대비 증감률)	177.6 -	174.3 (△1.9)	188.7 (8.3)	213.1 (12.9)	228.2 (7.1)	242.8 (6.4)	(12.3) -	65.2 -	36.7 -
주택금융 (전년대비 증감률)	601.2 -	678.4 (12.8)	770.1 (13.5)	837.6 (8.8)	886.9 (5.9)	914.0 (3.1)	(46.3) -	312.8 -	52.0 -
서민금융 (전년대비 증감률)	5.1 -	5.6 (9.8)	6 (7.1)	7.7 (28.3)	8.5 (10.4)	8.4 (△1.2)	(0.4) -	3.3 -	64.7 -
기타 (전년대비 증감률)	4.4 -	5.8 (31.1)	9.2 (59.3)	8.4 (△9.6)	10.7 (27.1)	11.9 (12.0)	(0.6) -	7.6 -	168.9 -
합계 (전년대비 증감률)	1,318.4 -	1,484.1 (12.6)	1,663.0 (12.1)	1,810.7 (8.9)	1,902.4 (5.1)	1,973.7 (3.7)	100.0 -	655.3 -	49.7 -

주: 1. 각 연도 말 잔액 기준으로 작성

2. 상기 각 연도별 잔액 합계액 산정 시, 금융공공기관 대출에 대하여 금융공공기관이 보증한 일부 중복 금액이 있을 수 있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5장

그 밖의 유형별 공공기관 현황

제1절 공공기관 출자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① 설립근거법 등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하거나, ②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50%를 초과하거나, ③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또한, 이들 ① ~ ③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재출자한 기관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I 공공기관 지정 기준 I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모회사인 공공기관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이하 “자회사”)하거나 재출자(이하 “손자회사”)인 공공기관은 총 25개이며, 공기업군이 13개, 기타공공기관군이 12개이다. 이 중 공공기관의 손자회사 중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지정요건을 만족한 곳은 공영홈쇼핑(주)이 유일하다. 공영홈쇼핑의 최대

주주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50% 보유)이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5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인 공공기관의 자본금에 대한 모회사 지분해당액은 총 19조 2,447억이며, 이 중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주)강원랜드, (주)에스알 등 공기업으로 분류된 13개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인 공공기관의 지분해당액은 18조 9,080억원이며, 코레일유통 등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12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인 공공기관의 지분해당액은 3,367억원이다.

한편, 25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인 공공기관 중 모회사가 한국전력공사인 곳은 6개 발전자회사(남동, 남부, 동서, 중부, 서부, 수력원자력) 외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주), 한전KDN(주) 등 총 11개 기관이다. 이들 자회사 중 한국전력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6개 발전자회사와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등 9개는 한국전력공사와 동일한 공기업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한전원자력연료(주)와 한전MCS(주)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한국전력공사 다음으로 많은 공공기관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이며, 공기업으로 분류된 (주)에스알,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등 6개의 자회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Ⅰ 공공기관 출자 공공기관 현황 Ⅰ

(단위: 개, %, 백만원)

공공기관 유형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인 공공기관	최대주주인 공공기관	최대주주	
			지분율	지분 해당액
공기업(13)	(주)강원랜드	한국관광산업공단	36.27	85,145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100.00	10,600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전력공사	100.00	1,154,104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전력공사	100.00	1,854,008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전력공사	100.00	2,218,599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전력공사	100.00	1,272,898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100.00	10,704,515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전력공사	51.00	3,898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전력공사	100.00	1,270,930
	한전KDN(주)	한국전력공사	100.00	64,000
	한전KPS(주)	한국전력공사	51.00	4,590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관광공사	51.00	15,773

공공기관 유형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인 공공기관	최대주주인 공공기관	최대주주	
			지분율	지분 해당액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100.00	248,952
	소계			18,908,012
기타공공기관(12)	(주)공영홈쇼핑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50.00	40,000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0.00	108,643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0.00	50,000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전력공사	96.40	89,798
	한전MCS(주)	한국전력공사	100.00	950
	코레일관광개발(주)	한국철도공사	51.00	4,000
	코레일네트웍스(주)	한국철도공사	89.47	6,400
	코레일로지스(주)	한국철도공사	92.08	7,090
	코레일유통(주)	한국철도공사	100.00	12,000
	코레일테크(주)	한국철도공사	97.31	1,853
	주택관리공단(주)	한국토지주택공사	100.00	15,000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도로공사	100.00	990
	소계			336,724
	합계			19,244,736

주: 2025년 1월 2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5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인 25개 공공기관의 2024년도 주요 재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 25개 기관의 2024년 말 현재 총자산은 151조 8,365억원이며, 이는 전체 공공기관(은행형 공공기관 제외) 총자산 1,151.9조원의 13.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등으로 구성된 공기업인 자회사가 149조 4,153억원,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등으로 구성된 기타공공기관인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의 총자산이 2조 4,212억원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들 중 5개 발전자회사의 자산 규모는 12.3~14.8조원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주)의 72.5조원으로 5개 발전자회사 전체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스키장·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는 ㈜강원랜드의 2024년 말 총자산은 4.7조원 수준으로, 별도의 금융부채 없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영위하고 있다. 2020~2021년의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안정적인 당기순이익을 시현 중이며, 2024년 당기순이익은 4,569억원이다.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와 달리,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2024년 말 총자산은 6,100억원이며, 코로나19 시기의 부진을 다소 극복하여 32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다.

공공기관이 출자 중인 공공기관 2024년도 주요 재무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인 공공기관	자산	부채	자본	당기순이익
공 기 업 (13)	(주)강원랜드	47,006	8,110	38,837	4,569
	(주)한국가스기술공사	2,261	830	1,431	151
	한국남동발전(주)	132,029	64,476	67,552	3,823
	한국남부발전(주)	131,841	71,015	60,826	3,115
	한국동서발전(주)	122,880	55,926	66,954	4,679
	한국서부발전(주)	133,098	77,087	56,011	3,617
	한국수력원자력(주)	725,084	470,829	254,255	5,673
	한국전력기술(주)	9,454	3,679	5,775	585
	한국중부발전(주)	148,496	95,131	53,365	2,252
	한전KDN(주)	8,464	2,221	6,242	2,158
	한전KPS(주)	16,758	3,555	13,203	1,710
	그랜드코리아레저(주)	6,100	1,990	4,111	328
	주식회사 에스알	10,682	6,767	3,915	66
	소계	1,494,153	861,616	632,477	32,726
기타 공공 기관 (12)	(주)공영홈쇼핑	1,508	576	932	13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	2,779	1,325	1,454	13
	한국벤처투자	1,488	265	1,223	161
	한전원자력연료(주)	10,604	5,626	4,978	480
	한전MCS(주)	943	679	264	△90
	코레일관광개발(주)	276	122	154	41
	코레일네트웍스(주)	536	221	315	60
	코레일로지스(주)	270	146	124	16
	코레일유통(주)	2,920	1,219	1,701	96
	코레일테크(주)	914	421	493	132
	주택관리공단(주)	1,330	1,153	177	8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644	341	302	24
	소계	24,212	12,094	12,117	1,134
합계(A)		1,518,365	873,710	644,594	33,680
전체 공공기관(B)		11,519,426	7,414,764	4,105,066	81,219
비중(A/B)		13.2	11.8	15.7	

자료: 공공기관별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2절 진흥 목적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정부가 설립하거나 재정지원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공공재의 제공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현재는 사회의 다변화와 경제 발전에 따라 정책금융, 연구개발 및 특정 산업·기술의 육성 및 지원, 문화·예술 활성화 등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의 정책적 진흥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분야별 진흥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을 받는 전체 공공기관 중 각 분야에서 진흥 목적의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기관 52개를 “진흥 목적 공공기관”으로 분류하였다.

부처별 진흥 목적 공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진흥 목적 공공기관이 13개로 가장 많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7개,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소관이 각각 5개 순으로 많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진흥 목적 공공기관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의 분야로 영화진흥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문화·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진흥 목적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산업진흥 기관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무역 및 산업 분야 진흥 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보건, 의료, 보육 분야의 진흥 기관들이 있다.

부처별 진흥 목적 공공기관

부처명	개수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13	영화진흥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악방송,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예술의전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한의학진흥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중소벤처기업부	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여성가족부	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특허청	2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산림청	2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토교통부	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해양수산부	2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고용노동부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교육부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농촌진흥청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국가유산청	1	국가유산진흥원
합계	52	

진흥 목적 공공기관의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분야 진흥 목적 공공기관이 9개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 분야가 5개, 가정·평등, 보건의료, 중소벤처기업 분야가 각각 4개 순으로 많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가유산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이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있고, 가정·평등 분야의 경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있다.

분야별 진흥 목적 공공기관

분야	개수	기관명
문화예술	9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악방송, 예술의전당, 국가유산진흥원
정보통신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가정·평등	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보건의료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한의학진흥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중소벤처기업	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체육	3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농림	3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식품	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지식재산·특허	2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과학기술	2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토교통	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해양	2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교육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용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복지	1	한국보육진흥원
무역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광	1	한국관광공사
언론	1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타 산업진흥	4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합계	52	

52개의 진흥 목적 공공기관은 유형별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 기타공공기관 43개로 분류된다. 진흥 목적 공공기관의 주요 기능 및 업무와 2025년도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진흥 목적 공공기관 중 2025년 기준 가장 예산 규모가 큰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지원, 인력육성,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관리·운용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5년도 기관 예산은 11조 5,595억 원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상점가 등 활성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5년도 기관 예산은 5조 845억 원이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박금융, 항만·물류금융, 설비확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은 3조 9,405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기반조성,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기금 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5년 예산은 2조 391억원이다.

■ 진흥 목적 공공기관 주요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기관명	주요 기능 및 업무	2025년 예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	5,084,540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 글로벌화 및 마케팅지원, 인력난 해소 및 청년CEO육성, 지역산업·구조개선 지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관리·운용	11,559,45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	666,714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 및 국민관광 진흥,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훈련 등	475,906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무선국 검사, 전파 강도측정, 국가기술자격검정 등 정부위탁 업무,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징수·운용 및 기금사업 관리 등	103,235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산림복지시설 조성·운영, 산림교육·치유 서비스 활성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관리 및 교육,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 및 연수 등	150,003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 등 관련 정책 개발 지원,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관리	2,039,128
	한국인터넷 진흥원	국내외 사이버 침해위험 예방·대응, 개인정보 안전 활용과 정보주체 보호, 정보보호 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및 안정적 지원 등	295,661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지능정보사회 구현 정책 개발 및 법제도 개선 지원, 지능정보기술 활용 확산 사업 추진 및 전문기술 지원,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 등	602,408
기타공공기관	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	공공연구성과 활용확산과 연구산업 진흥,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를 통한 과학기술의 사업화 촉진	133,183
	국가유산진흥원	국가유산의 보존·활용·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	139,729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평생교육 진흥 지원 및 조사, 프로그램 개발지원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등 평생교육 관련 업무 지원	56,131
	국립아시아문화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유통,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문화관	20,113

구분	기관명	주요 기능 및 업무	2025년 예산
	전당재단	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문화상품점 및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의 운영	
	국악방송	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 그 밖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16,80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 및 신기술 심사·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토교통과학기술 발전 및 육성에 기여	541,348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제품 개발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의료산업 경쟁력 확보, 의료산업 연구 성과제고 및 성과확산 지원,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의료산업 커뮤니티 주도, 지역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 및 기업유치	183,195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해 설립되어 장애인 체육 정책의 수립·지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국제대회 참가 및 인재 양성 등 수행	116,910
	대한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전국종합체육대회 개최 선수지도자 육성 및 경기 기술의 연구촉진, 체육인의 권익 증진,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범국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 국제종합대회 파견 등	295,11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연구소기업·창업 성장지원, 특구 기반시설 구축 등 연구개발특구 육성 등	239,544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등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 진흥	93,692
	예술의전당	예술공연 및 작품전시·보급, 문화예술 교육사업,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문화예술 관계자료 수집관리 및 조사, 기타 기관의 목적에 필요한 부대사업 등	59,906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세계적 의료연구개발 중심지 육성 및 국내 의료산업 발전 이바지를 위한 의료연구개발 활성화 및 연구성과 상품화 촉진	121,318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추진 지원 및 연구, 정부위탁사업 수행, 자동차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	14,97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조성	617,98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등	1,813,099
	창업진흥원	창업진흥 전담조직으로서 창업사업화, 재창업, 글로벌 창업, 민관협력 등 창업활성화 지원 및 창업생태계 조성	781,782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홍보·지원 사업	22,94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사업 개발·사업운영 및 보급,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지원 및 총괄 관리 가족서비스 자원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다양한가족 포용 인식 확산 및 정보제공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및 가족친화문화 조성 등	13,02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 디자인, 전통생활문화 정책 연구·개발, 국내외 공예, 디자인, 전통생활문화 진흥사업 등	50,000

구분	기관명	주요 기능 및 업무	2025년 예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한 실용화, 영농현장 보급, 사업화 지원 등	184,06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활용·보호 기반 조성,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조성, 데이터 기업육성 및 인력양성 등 중점 추진	52,533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제품 경쟁력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디자인개발 지원, 디자인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운영 등	65,709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 수립·개발 및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시범사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사업 추진	162,55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국제교류·연구 등 정책기반 조성사업 수행	118,459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기반 기업 육성 및 지식재산 전략적 활용 등 발명진흥사업의 추진	120,42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기술의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보건산업 정보 및 통계의 조사, 분석 및 활용 등 보건산업 육성·발전 및 보건 서비스 향상 지원 사업 수행	1,186,221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 및 품질관리,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및 역량강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 보육·양육 서비스 질 향상 도모	24,68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지정 지원,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사회적 가치 평가,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확산, 사회적기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동조합 교육·홍보 및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지원 등	30,085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국 식품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개발, 기술실증, 마케팅부터 수출까지 다양한 지원 및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연구 추진	38,64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공무원 및 일반인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양성평등 및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13,325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콘텐츠 제작지원, 디지털혁신지원, 언론인연수, 조사연구 등 언론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진흥 및 지원사업, 읽기문화 진흥 등 미디어교육 사업, 정부공공광고 업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탁) 등	209,969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지원시설 중생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및 대국민 인식개선 등 여성 인권 향상 사업 수행	14,357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와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한 산림소득증대 및 산업화 촉진	36,76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평가 및 시범운영,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4,28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전자출판 육성 및 국외진출 지원 등	41,391

구분	기관명	주요 기능 및 업무	2025년 예산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 게임, 음악, 패션, 애니메이션, 캐릭터, 웹툰, AI 융복합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기획·창제작, 유통, 해외진출, 인재양성, 연구개발 등의 지원사업과 정책연구 수행	631,734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관련 시장 창출·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등의 추진 등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	31,459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지식재산 심사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지식재산 분류 부여, 지식재산 정보연구, 지식재산 정보의 활용·확산 등	62,718
	한국한의학진흥원	한의학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한의학 관련 데이터 및 통계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한약의 제조·유통의 지원, 한의학기술의 산업화 지원, 한의학 관련 정책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	44,391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박금융, 항만·물류금융, 설비확보 지원, 해양정보 서비스 제공 등	3,940,458
	한식진흥원	한식진흥 기반 조성 위한 한식 실태조사 및 학술연구, 정보체계 구축, K-미식 붐 활성화 및 향토음식 진흥센터 조성 등 한식산업 진흥사업 추진	14,78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해양수산 산업 발전에 기여	492,571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3절 SOC 관련 공공기관

사회간접자본(SOC)은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으로,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이 이에 속한다. 공공기관은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정부가 설립하거나 재정지원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사회간접자본(SOC)·공공재의 제공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은 정부가 직접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SOC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을 받는 SOC 부문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15개를 “SOC 관련 공공기관”으로 분류하였다.³⁵⁾

35) 부동산 금융 분야(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감정평가 업무 및 통계(한국부동산원), 국토 정보(한국국토정보공사), 관련 연구 기관(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에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타) 등 간접적으로 국토·부동산 SOC 구축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기관은 본 유형에서 제외하였다.

■ SOC 관련 공공기관 현황

구분	주요 기관	기관수
도로	한국도로공사	1
철도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 국가철도공단	3
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
항만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4
공공개발 및 임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새만금개발공사	3
댐	한국수자원공사	1
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1
합계		15

부처별로 SOC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SOC 관련 공공기관이 9개로 가장 많고, 해양수산부 소관 4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개, 환경부 소관 1개 순으로 많다.

국토교통부 소관 SOC 관련 공공기관은 도로, 철도, 공항, 공공개발 및 임대 등의 분야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있다.

해양수산부 소관 SOC 관련 공공기관은 4대 항만으로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있다. 환경부 소관 공공기관은 댐 분야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산업단지 운영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¹⁾이 지정되어 있다.

부처별 SOC 관련 공공기관

부처명	개수	기관명
국토교통부	9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새만금개발공사,
해양수산부	4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환경부	1	한국수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	한국산업단지공단
합계	15	

15개의 SOC 관련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3개, 준시장형 공기업 5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개, 기타공공기관 5개로 분류된다.

Ⅱ 유형별 SOC 관련 공공기관

구분	개수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3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5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	국가철도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기타공공기관	5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합계	15	

SOC 부문별 2025년 주요 사업과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도로 부문 SOC 관련 공공기관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3조 5,540억원), 도로 유지관리(2조 4,353억원), 시설개량(1조 4,325억원), 휴게소 및 주유소 시설 유지관리 등 부대사업(6,916억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철도 부문은 운송사업 부문과 수탁사업, 철도건설사업 및 유지보수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운송 부문의 사업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운송사업 분야에서 한국철도공사는 고속 및 일반철도, 광역 여객 운송, 화물 운송 사업 등을 포함, 2025년 5조 5,096억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주)에스알은 고속철도 운송 사업 예산으로 7,251억원을 수립하였다. 한국철도공사의 수탁사업(2조 7,182억원)은 철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개량사업 등으로 주로 국가철도공단에 해당 사업(유지보수 및 개량사업, 2조 8,432억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철도건설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건설사업(1조 1,145억원), 일반철도 건설사업(1조 3,172억원), 광역철도 건설사업(6,952억원)을 수행하고 있다.

공항 부문 공공기관의 SOC 사업 중 공항운영관리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국제선을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공항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025년 총 3조 5,472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국내선 및 국제선 일부를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총 1조 2,383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항건설사업(인천국제공항공사)을 통해 공항인프라 확충 및 항행안전시설 개량 등에 총 8,6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항만 부문 공공기관 SOC 사업은 항만개발사업, 항만건설사업, 항만유지보수 및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4대 항만의 2025년 사업별 투입금액의 경우, 부산항만공사는 항

만건설사업 4,493억원, 항만운영사업 1,214억원이고, 인천항만공사는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 1,878억원, 항만운영·관리 363억원이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개발사업 530억원, 항만시설 유지보수사업 50억원, 울산항만공사는 항만건설사업 383억원, 항만운영사업 256억원이다. 4대 항만 공통 사업 외에 부산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사업 예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산항만공사는 1,447억원, 울산항만공사는 35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공공개발 및 임대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중 2025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등 주거복지사업(13조 6,300억원)과 도시조성사업(9조 8,855억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개발사업·운영(2,033억원) 및 면세점 사업(3,660억원)을 운영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350억원), 육상태양광(59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댐 부문 SOC 관련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이며 2025년 수도사업(광역·공업용수도 확충 및 시설 안정화, 용수공급 등) 예산 2조 7,682억원 및 수변사업(친수구역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예산 1조 549억원 등을 집행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부문 SOC 공공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며 2025년 주요 사업은 디지털·저탄소 산업환경 조성사업(4,503억원),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2,457억원), 신 산업입지 조성·공급사업(1,856억원) 등이다.

■ SOC 관련 공공기관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기관명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2025년 예산
도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	•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3,553,969
		민자노선 통행요금 인하	• 민자노선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요금 수준으로 인하	530,000
		시설개량	• 재포장, 안전시설 설치 등 노후화된 도로의 개량	1,432,502
		유지관리	• 포장보수, 비탈면 보완 등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수선에 관한 공사	2,435,340
		그 외 부대사업	• 휴게소 및 주유소 시설 유지 및 관리 등 • 국가·지자체 등 위탁에 의한 사업 등	691,591
철도	한국철도공사	운송사업	• 고속 및 일반철도, 광역 여객 운송사업, 화물 운송사업	5,509,574
		수탁사업	• 국가자산인 철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개량사업 • 관제업무수탁 및 국가 R&D 등 수탁사업	2,718,174
		개량사업	• 역사 등 고객편의시설, 차량기지 등 시설물 개량	679,654

구분	기관명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2025년 예산
			• KTX, 전동차 등 철도차량 보수품 구입 및 제조·개량	
		차량구입사업	• 신규노선 개통을 대비한 철도차량 구입 • 노후차량 교체 및 수송수요 증가에 따른 철도차량 구입	273,928
		기타사업	• 다원사업,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유·무형 자산 취득 등	1,152,882
	(주)에스알	철도운송사업	• SRT를 이용한 지역 간 고속철도 운송 서비스	725,062
		부대사업	• 역사를 이용한 주차장 등 임대사업	10,402
	국가철도공단	고속철도사업	•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 • 인천발·수원발 KTX 건설 등	1,114,511
		일반철도사업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 월곶~판교 복선전철 • 춘천~속초 철도건설 등	1,317,215
		광역철도사업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B·C 노선 건설 •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 대구·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695,210
		유지보수 및 개량사업	• 국가소유 철도시설물 점검 및 개량 시행	2,843,214
		기타사업	• 지자체 수탁사업 및 철도건널목 입체화 등	427,720
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건설사업	• 공항 인프라 적기 확충, 항행안전시설 개량 등	864,976
		시설개선사업	• 여객터미널 등 공항시설 단기개선, 물자구매 등	152,824
		공항운영관리사업	• 공항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수도광열비 등	3,547,187
		해외/R&D 사업	• 해외사업 및 연구개발을 위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	79,459
		기관운영 및 공통	• 기관운영 공통부분에 대한 인건비, 경상운영비	324,814
	한국공항공사	공항 및 항로시설 관리·운영사업	• 전국 공항관리 운영 및 항로시설 관리	1,238,299
항만	부산항만공사	항만건설사업	• 동북아 물류허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건설 및 자동화 부두 항만하역장비 설치 등	449,309
		항만운영사업	• 물류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설개선 • 해양관광 활성화 및 항만관련산업 육성	121,376
		항만물류사업	• 항만배후단지 복합물류 비즈니스 공간 조성 • 글로벌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집하능력 제고	144,668
		항만재개발사업	• 노후화된 항만을 재개발하여 원도심 기능회복과 해양관광 활성화	147,525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	• 신규 항만시설의 개발 및 건설 항만시설 유지보수	187,832
		항만운영·관리	• 항만보안 및 안전, 친환경 항만 조성사업, 항만물류정보 시스템 운영 등	36,340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개발사업	• 컨테이너부두, 일반부두, 배후단지, 노후부두 리뉴얼 등	53,047

구분	기관명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2025년 예산
공공 개발 및 임대 등	울산항만공사		항만인프라 구축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 항만시설물 유지보수 등	5,031
		정보화사업	•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시스템(해수부 공동 운영) 운영·고 도화 등	2,335
		항만물류사업	• 항만기본계획 수립, 배후단지 조성 • 항만투자유치 및 수요증대 마케팅	3,464
		항만운영사업	• 항만운영 효율화, 하역장비 개선 •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 항만안전 제고, 친환경 항만 조성, 스마트 항만 구축	25,629
		항만건설사업	• 신항만 건설 및 건설안전관리, 시설유지보수 • 항내 유지준설	38,290
	한국 토지주택공사	도시조성사업	• 공공주택건설, 신도시개발,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거지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9,885,493
		국책개발사업	• 세종도시, 혁신도시, 미군기지이전사업	573,919
		경제기반사업	• 산업단지, 연구특구, 경제자유구역 조성	825,476
		도시재생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 업 등	236,466
		토지비축사업	• 토지은행, 비축토지	732,764
		주거복지사업	•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등	13,629,993
		기타사업	• 위탁개발사업, 신규사업 등	3,835,601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개발사업·운영	• 영어교육도시·첨단과학기술단지·헬스케어타운·신화역사 공원·휴양형 주거단지 등 조성 및 관리 운영	203,282
		면세점운영	• 지정면세점 운영	366,030
	새만금개발공사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	• 도시계획 수립·변경, 도시 내 스마트 기능 기획·도입·관리, 대상부지 매립·조성공사 • 인프라 시설 설치, 토지 분양 및 마케팅 등	34,964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 태양광 발전사업 기획 및 관리 • 발전량 모니터링, 매립면허권 이용료 수납 등	5,912
		케이블카 조성사업	• 케이블카 설치 및 운영	21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재생에너지 공급관리 사업	• RE100 수요기업에 재생에너지 공급(선도사업 육상태양광 30MW, 후속사업 육상태양광 120MW)	248
댐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사업	• 수자원개발, 댐 운영관리, 댐용수 공급,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556,547
		수도사업	• 광역·공업용수도 확충 및 시설 안정화, 용수공급 등	2,768,222
		수변사업	• 친수구역 및 산업단지 조성 등	1,054,890
산업	한국산업단지공단	디지털·저탄소 산업	•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450,294

구분	기관명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2025년 예산
단지		환경 조성사업	• 제조거래플랫폼 운영 등	245,732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 산단환경개선펀드 • 산단환경조성사업 등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 지역투자지원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등	91,457
		신 산업입지 조성·공급사업	• 미래산업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 • 산업단지 내 자산개발 등	185,633
		지역 특화사업	• 지역 특화 산업단지 및 근로자 지원	43,143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SOC 관련 15개 공공기관의 2024년도 주요 재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 15개 기관의 2024년 말 현재 총자산은 436조 644억원이며, 이는 전체 공공기관 총자산 1,151조 9,426억원의 37.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도로 부문 SOC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총자산은 87조 1,261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968억원이다.

철도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 국가철도공단 총자산은 49조 5,753억원이며,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자본이 △9,860억원이며 자본잠식 상태이다. 철도 공공기관 당기순손실은 △3,538억원으로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5,167억원)이 철도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항 관련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총자산은 20조 9,075억원이며, 이 중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6조 583억원(76.8%)의 자산을 보유 중이다. 공항 관련 공공기관의 자본은 11조 3,980억원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영위하고 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당기순손실이 △1,345억원으로 2020년의 코로나19 시기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고 있다³⁶⁾.

항만 관련 4대 공공기관(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의 총자산은 15조 2,928억원이며, 이 중 부산항만공사가 8조 502억원(52.6%) 자산을 보유 중이다. 4대 항만 부채 규모는 6조 3,533억원으로 자본(8조 9,395억원)이 부채보다 더 많으며 부채비율이 71.1%로 건전한 수준이다.³⁷⁾

공공개발 및 임대 공공기관 총 자산 236조 8,665억원 중 98.6%는 한국토지주택공사

36) 한국공항공사 당기순손실: 2020년 △1,487억원, 2021년 △2,311억원, 2022년 △1,876억원 2023년 △1,311억원

37) 부채비율 = 부채/자본×100

(233조 6,525억원) 보유 자산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160조 1,054억원이며, 자본 73조 5,471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17.7% 수준이다. 새만금개발공사의 경우 2024년 보유 자본(1조 4,750억원)에 비해 당기순이익 실현 규모(34억원)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자본 1조 1,360억원, 당기순이익 271억원)에 비해 다소 낮다.

댐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산 24조 654억원, 당기순이익 3,498억원이며, 산업단지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자산 2조 2,308억원, 당기순이익 105억원으로 재무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Ⅱ SOC 관련 공공기관 2024년도 재무 현황 Ⅱ

(단위: 억원, %)

구분	공공기관	자산	부채	자본	당기순이익
도로	한국도로공사	871,261	415,025	456,236	968
철도	한국철도공사	289,987	210,632	79,355	△5,167
	(주)에스알	10,682	6,767	3,915	66
	국가철도공단	195,084	204,944	△9,860	1,563
	소계	495,753	422,343	73,410	△3,538
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160,583	80,071	80,512	4,882
	한국공항공사	48,492	15,024	33,468	△1,345
	소계	209,075	95,095	113,980	3,537
항만	부산항만공사	80,502	40,192	40,310	499
	인천항만공사	36,920	14,190	22,730	971
	여수광양항만공사	26,518	7,740	18,778	△111
	울산항만공사	8,988	1,411	7,577	322
	소계	152,928	63,533	89,395	1,681
공공개발 및 임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2,336,525	1,601,054	735,471	7,60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7,031	5,671	11,360	271
	새만금개발공사	15,109	359	14,750	34
	소계	2,368,665	1,607,084	761,581	7,913
댐	한국수자원공사	240,654	119,365	121,289	3,498
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22,308	8,036	14,272	105
합계(A)		4,360,644	2,730,481	1,630,163	14,164
전체 공공기관(B)		11,519,426	7,414,764	4,105,066	81,219
비중(A/B)		37.9	36.8	39.7	-

주: 1. 한국철도공사와 (주)에스알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그 외 공공기관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전체 공공기관은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328개 공공기관임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4절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공공기관 중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민의 생활과 연계되는 에너지 자원의 개발·생산·판매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가스·전력·석유·석탄 등의 개발·비축·생산·판매 및 난방 공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산업 부문 지원 및 물가 안정 등에 기여하고 있다.

다음은 정부가 직접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에너지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을 받는 에너지 부문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11개를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으로 분류하였다.³⁸⁾

에너지 공공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공사(가스), 한국석유공사(석유), 대한석탄공사(석탄),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 및 전력 부문 7개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있다.

■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현황 ■

구분	주요 기관	기관수
가스	한국가스공사	1
석유	한국석유공사	1
석탄	대한석탄공사	1
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	1
전력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7
합계		11

부처별로 에너지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11개 기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 공공기관이며,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은 10개, 기타공공기관은 1개이다.

38) 한국석유관리원,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본 유형에서 제외하였다.

부처 및 유형별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구분	개수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10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기타공공기관	1 대한석탄공사
합계	11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부문별 2025년 주요 사업과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스 부문의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천연가스 판매사업이 주요 사업이며 도시가스용, 발전용 천연가스 판매 예산으로 36조 6,345억원을 책정하였다. 또한 공급시설 건설사업에 6,866억원, 탐사·개발·생산 등 해외투자사업에 8,258억원을 투자하였다.

석유 부문의 한국석유공사는 국·내외 유전개발사업에 2조 4,946억원, 석유비축사업에 6,755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석탄 부문 대한석탄공사는 국내 무연탄 생산 및 판매 사업에 442억원을 배정하였다. 난방 부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 운영 및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5조 83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전력 부문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송변전설비 건설·운영(5조 1,152억원), 배전설비 건설·보강(3조 8,126억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원전건설(새울 3,4호기 1조 1,399억원, 신한울 3,4호기 9,646억원) 및 원전연료 도입(1조 5,330억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 자회사는 발전 운영 및 공통(한국남동발전(주) 7조 7,558억원, 한국서부발전(주) 7조 4,719억원), 발전건설(한국남부발전(주) 5,041억원, 한국동서발전(주) 5,823억원), 발전설비 신규건설(한국남동발전(주) 5,347억원) 및 신규발전설비 확충(한국서부발전(주) 5,942억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주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기관명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2025년 예산
가스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판매사업	• 도시가스용, 발전용 천연가스 판매	36,634,503
		생산시설 건설사업	• 당진 생산기지 건설사업 등	601,197
		공급시설 건설사업	• 개별요금 수요처 공급사업	686,608

구분	기관명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2025년 예산	
			• 공급배관 환상망 구축사업 등		
		해외투자사업	• 탐사·개발·생산 사업 • LNG, 인프라사업	825,822	
		수소·신성장 사업	• 평택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	17,559	
석유	한국석유공사	유전개발사업	• 국내외 유전개발사업을 통해 석유위기 대응능력 강화 및 에너지 자립 경제기반 구축	2,494,636	
		석유비축사업	•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비축사업의 효과적 수행으로 석유위기 대응능력 제고 및 국내석유수급 안정에 기여	675,468	
석탄	대한석탄공사	국내 무연탄 생산 및 판매 사업	• 무연탄을 직접 생산·공급함으로써 국내무연탄 수급 안정에 기여	44,240	
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	• 집단에너지사업 운영 및 건설	5,082,977	
전력	한국전력공사	송변전설비 건설·운영	• 송전선로, 변전소 등 건설·보강 및 현대화	5,115,181	
		배전설비 건설·보강	• 배전선로, 변압기, 전주 등 건설·보강	3,812,599	
	한국수력 원자력(주)	원전 건설	새울3,4	• 울산 울주군에 건설되는 신규원전으로 시설용량 2,800MW의 가압경수로이며 '26.11월 준공 예정	1,139,867
			신한울3,4	• 경북 울진군에 건설되는 신규원전으로 시설용량 2,800MW의 가압경수로이며 '33.10월 준공 예정	964,612
		원전연료	• 원자력발전을 위한 원전연료 도입	1,533,000	
		발전시설보강	• 발전설비 취약개소 보강 및 설비개선을 통한 설비신뢰도 향상	505,114	
		신재생에너지	• 서울주 분기점 연료전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자체건설 사업과 출자를 통한 사업 추진	70,071	
		한국남동발전(주)	운영 및 공통	• 전력생산을 위한 연료비, 운영비용 등 제반비용 관리	7,755,784
	한국남동발전(주)	신규발전설비 확충	• 복합화력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건설사업	534,672	
		발전설비보강	• 발전설비 취약개소 보강 및 설비개선	592,095	
		한국남부발전(주)	발전건설	• 발전소 건설 사업 및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건설사업	504,079
	설비보강		• 노후설비 보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개선 사업 등	400,167	
	투자자산		• 신재생에너지 및 해외사업 지분 출자 사업	214,472	
	한국동서발전(주)	발전설비건설	• 음성복합, 제주 복합 등 신규 발전소 건설	582,345	
		발전설비보강	• 발전설비 취약개소 보강 및 설비개선	352,933	
	한국서부발전(주)	운영 및 공통	• 전력생산을 위한 연료비용 및 발전설비 운영 등	7,471,894	
		신규발전설비 확충	• 태안 1호기 대체발전용량 확보로 안정적 전력공급 기여	594,208	
		설비보강	• 발전설비 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후부품 교체 및 설비개선	534,987	
	한국중부발전(주)	신규발전건설	• 보령신복합, 함안복합, 제주복합 건설 등	482,291	
		발전설비보강	• 계획예방정비공사 및 발전소 설비보강	259,532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에너지 관련 11개 공공기관의 2024년도 주요 재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 11개 기관의 2024년 말 현재 총자산은 369조 9,321억원이며, 이는 전체 공공기관 총자산 1,151조 9,426억원의 32.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한국가스공사(가스)는 2024년 말 총자산이 57조 6,696억원이지만 부채(46조 8,433억원)가 자본(10조 8,263억원)에 비해 많아 부채비율이 432.7%로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석유공사(석유)의 자산은 20조 4,916억원, 부채는 21조 8,132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이다.

대한석탄공사(석탄)의 자산은 4,220억원, 부채는 2조 4,642억원, 당기순손실은 △4,369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이며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의 자산은 8조 3,622억원, 부채는 6조 940억원이며 부채비율은 268.7%이다. 발전사 및 발전자회사 7개 기관의 자산 합계는 282조 9,867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조 2,428억원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120조 831억원으로 발전사 및 발전자회사 부채 205조 8,994억원의 58.3% 비중을 차지한다. 619.3%로 부채비율이 높은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발전자회사의 부채비율은 200% 미만으로 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 비해 부채비율이 양호한 편이다.

■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2024년도 재무 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공공기관	자산	부채	자본	당기순이익
가스	한국가스공사	576,696	468,433	108,263	11,490
석유	한국석유공사	204,916	218,132	△13,216	1,915
석탄	대한석탄공사	4,220	24,642	△20,422	△4,369
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	83,622	60,940	22,682	2,099
전력	한국전력공사	1,394,721	1,200,831	193,890	8,293
	한국수력원자력(주)	728,846	474,218	254,628	5,727
	한국남동발전(주)	142,374	73,119	69,255	3,619
	한국남부발전(주)	138,765	74,396	64,369	3,724
	한국동서발전(주)	128,942	57,527	71,415	5,224
	한국서부발전(주)	135,621	77,588	58,033	3,620
	한국중부발전(주)	160,597	101,314	59,283	2,220
	소계	2,829,867	2,058,994	770,873	32,428
합계(A)		3,699,321	2,831,139	868,182	43,563
전체 공공기관(B)		11,519,426	7,414,764	4,105,066	81,219
비중(A/B)		32.1	38.2	21.1	53.6

주: 1. 한국전력공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그 외 공공기관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전체 공공기관은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328개 공공기관임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제5절 정보 및 데이터 관리 관련 공공기관

공공기관 유형 중 정보 및 데이터 관리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은 정보 제공, 정보 관리, 국가 통계 시스템 운영 및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25년 기준 정보 및 데이터 관리 유형 공공기관은 총 12개이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9개이다. 2025년 기준 전체 준정부기관 57개 중 정보 및 데이터 관리 유형의 준정부기관은 3개로 5.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243개 기타공공기관 중 정보원 유형의 기타공공기관은 9개로 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우 2025년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되었다.

■ 유형별 정보 및 데이터 관리 유형 공공기관 현황 ■

구분	개수	기관명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3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
기타공공기관	9	식품안전정보원,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재)한국통계정보원, 한국특허정보원
합계	12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공공기관은 각각 2개이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특허청은 부처별 각각 1개 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며, 사회보장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환자 관련 보건의료정보는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관은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며 식품 안전 정보는 식품안전정보원, 의료기기 관련 정보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별개로 관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을 소관에 두고 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 (재)한국통계정보원은 통계청,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청

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획재정부 소관 기관이다.

■ 부처별 정보 및 데이터 관리 유형 공공기관 현황 ■

부처명	개수	기관명
보건복지부	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2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고용노동부	1	한국고용정보원
기획재정부	1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세청	1	한국원산지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1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1	한국문화정보원
통계청	1	(재)한국통계정보원
특허청	1	한국특허정보원
합계	12	

정보 및 데이터 관리 유형 기관의 기관별 고유 사업을 살펴보면 주로 국가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데이터를 수집·가공·제공하고 있다. 우선 한국고용정보원의 경우 고용 정보 수집 및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인력수급동향, 고용통계, 직업지도 등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주요 정보관리시스템은 고용행정통계시스템(EIS)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재정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brain+)과 같은 재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재정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 지역 보건 의료, 바우처 노인 맞춤형 돌봄 데이터 등을 관리하고 있다. 주요 정보관리시스템은 복지로이다.

■ 정보 및 데이터 관리 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관명 (주무부처)	주요 사업(관리 데이터) 근거 법령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 (사업)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정보 수집, 고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고용정책 컨설팅·평가 • (데이터) 고용24, 인력수급전망, 고용동향, 고용통계, 직업지도, 직업심리 등 • (주요 정보관리시스템) 고용행정통계시스템 (EIS), 고용행정데이터분석시스템(ELDS) https://eis.work.go.kr/eisps/main/index.do (고용행정통계시스템) https://eis.work.go.kr/elds (고용행정데이터분석시스템) •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3
한국재정정보원 (기획재정부)	• (사업) dBrain+운영, e나라도움 운영, 재정정보 분석 • (데이터) 국가재정정보 관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 (주요 정보관리시스템) dBrain+ https://www.neodbrain.go.kr • (근거법령) 「한국재정정보원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 (사업) 보건복지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대상자 발굴 및 정책 개발 지원 • (데이터) 사회보장정보, 사회복지시설, 지역보건의료, 사회서비스, 노인맞춤돌봄 데이터 등 • (주요 정보관리시스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근거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와 각 기관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정보와 관련된 전자의무기록, 의료데이터, 개인건강기록 등을 관리하며,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정보화 촉진, 농업 농촌가치의 확산, 농업경영체의 역량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농식품분야 데이터, 귀농귀촌 정보 등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내외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며 식품이력추적관리 데이터 등을 관리하고 있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학술연구 정보자료 제작 및 조사 수집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4세대 나이스(NEIS)를 통해 교육행정 정보를 관리하고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학술연구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보화 정책 개발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문화포털 등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관련 정보를 연계 서비스 하고 있으며,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관련 정보 수집 사업을 영위 하며 FTA-PASS 시스템을 통해 정보관리, 서류관리, 판정관리 등 FTA 원산지 데이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관련 국내외 정보 관리, 및 국제 규격 정보 등을 지원하며 의료기기전자지원원(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의료기기부작용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한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지식재산정보 활용 촉진 및 육성 사업을 수행하며, 특허행정과 관련하여 특허정보검색시스템 및 특허정보활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재)한국통계정보원은 국가통계정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KOSIS와 같은 시스템으로 국가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정보 및 데이터 관리 유형 기타공공기관 ■

기관명 (주무부처)	주요 사업(관리 데이터) 근거 법령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 (보건복지부)	• (사업) 의료정보와 관련한 자료 개발·지원 사업 등 • (데이터) 전자의무기록, 의료데이터, 개인건강기록 등 • (주요 정보관리시스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EMR) https://emrcert.mohw.go.kr/ •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농림수산물 교육문화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농산물 안전정보 제공, 농촌 정보화 • (데이터) 농림수산물 부문 데이터, 귀농귀촌 정보 등 • (주요 정보관리시스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S), 농식품공간정보서비스 등 https://uni.agrix.go.kr •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등 • (데이터) 식품안전정보, 식품이력추적관리 데이터 등 • (주요 정보관리시스템) 식품이력관리시스템 https://www.tfood.go.kr/tfweb/FtmsMain.do •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	• (사업) 교육학술연구 정보자료 제작 조사 수집 등 • (데이터) 교육행정(4세대 나이스[NEIS]), 학술연구자료 등 • (주요 정보관리시스템)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s://www.riss.kr/index.do • (근거법령)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기관명 (주무부처)	주요 사업(관리 데이터) 근거 법령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문화·체육·관광 분야 데이터의 수집·관리·융합 및 활용 등 • (데이터) 문화·체육·관광 관련 수집 및 구축 데이터 등 • (주요 정보관리시스템) 문화포털 https://www.culture.go.kr/index.do • (근거법령) 「문화기본법」 제11조의3
한국원산지정보원 (관세청)	• (사업)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관련 정보 수집 분석 제공 • (데이터) FTA 원산지 데이터 관리(정보, 서류, 판정관리 등) • (주요 정보관리시스템) FTA-PASS https://www.ftapass.or.kr/index.do • (근거법령) 「관세법」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 의료기기관련 국내외, 국제 규격 정보 지원 • (데이터) 의료기기안전 통합정보시스템, 부작용 정보수집 • (주요 정보관리시스템) 의료기기 전자민원 시스템 https://emedi.mfds.go.kr/msismext/emd/min/mainView.do •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청)	• (사업) 지식재산정보 활용 촉진 및 육성, 특허행정 시스템 운영 • (데이터) 국내 IP 정보(공보, 행정, 부가), 해외 특허 정보, AI 학습데이터 등 • (주요 정보관리시스템) 특허정보검색시스템(kipris) https://www.kipris.or.kr • (근거법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재)한국통계정보원 (통계청)	• (사업) 국가통계정보 운영관리 • (데이터) 국가통계 및 통계데이터 DB구축 등 • (주요 정보관리시스템) KOSIS https://www.kosis.kr/index/index.do •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와 각 기관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보 및 데이터 관리 유형 공공기관의 2025년 예산 규모³⁹⁾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2025년 예산규모는 546억 4,200만원이고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은 223억 1,300만원이다.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변경된 한국재정정보원은 359억 8,700만원이 배정되었다.

기타공공기관인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의 2025년 예산규모는 195억 2,500만원이고 식품안전정보원은 1억 1,100만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11억 6,600만원의 예산이 배정

39) 정보 및 데이터 관련 예산 규모이다.

되었다.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107억 4,900만원이며, 한국문화정보원은 42억 7,600만원이 배정되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366억 7,400만원으로 정보 및 데이터 관리 유형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한국원산지정보원은 3억 7,500만원, 한국특허정보원은 328억 9,500만원을 배정받았으며, 한국통계정보원⁴⁰⁾은 46억 5,900만원 예산을 사업 수주를 통해 확보하였다.

Ⅱ 공공기관별 정보 및 데이터 관리 예산 Ⅱ

(단위: 백만원)

기관 유형	기관명(주무부처)	예산(2025)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한국고용정보원(고용노동부)	54,642
	한국재정정보원(기획재정부)	35,987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부)	22,313
기타 공공기관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보건복지부)	19,525
	식품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11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1,166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농림축산식품부)	10,749
	한국문화정보원(문화체육관광부)	4,276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교육부)	136,674
	한국원산지정보원(관세청)	375
	한국특허정보원(특허청)	32,895
	(재)한국통계정보원(통계청)	4,659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제6절 안전 관련 공공기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의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국가가 모든 분야의 안전 관리 기능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전문 분야별 안전 검사, 점검 및 인증 등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중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특정 산업 분야의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안전 관련 공공기관”이라 함) 22개를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40) 2024년부터 주요사업(위탁사업)이 일반경쟁입찰로 전환되어, 예산은 사업 수주를 통한 계약금액에 해당한다.

■ 안전 관련 공공기관 현황 ■

(단위: 백만원)

기관명	유형	주요 업무 및 기능	근거법	2025년 예산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해양교통사고 예방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	「한국해양 교통안전 공단법」	60,536
식품안전 정보원	기타공공기관	식품안전 관련 수집·분석·제공, 정책연구, 정보 시스템 운영, 식품이력추적관리, 소비자 신고상담 업무 등 수행	「식품위생법」 제67조	10,345
국토안전 관리원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 및 건축시설 안전점검 등	「국토안전 관리원법」	160,768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원자력·방사선 이용 심·검사 안전규제, 전국토 환경방사선·능 감시, 원자력·방사선 안전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등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법」	150,094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기타공공기관	원자력안전 R&D 기획·평가·관리, 원전 성능검 증 안전·신뢰성 향상을 위한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관리 등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	21,172
한국가스 안전공사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가스시설 검사·진단·점검, 가스안전 기술개발과 국제기술협력 및 가스안전 교육·홍보·연구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	85,218
한국석유 관리원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 추진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59,086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기타공공기관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등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	13,128
축산물 품질평가원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등급판정, 축산물 유통정보 조사,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이력 제 관련 업무 등	「축산법」 제36조	74,480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기타공공기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 거하여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81,408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기타공공기관	북미식물보호기구(NAPPO) 및 칠레, 뉴질랜드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 검 역과 항만지역의 예찰·방제업무, 기타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식물검역 업무수행	「식물방역법」 제29조의2	14,885
한국항로표지 기술원	기타공공기관	항로표지 기술개발·교육, 부표류 수리,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및 국립등대박물관 운영 등	「항로표지법」 제41조	10,819
항공안전 기술원	기타공공기관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	「항공안전 기술원법」	46,223

기관명	유형	주요 업무 및 기능	근거법	2025년 예산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기타공공기관	건설기계검사(타워크레인제외), 건설기계형식 승인 및 신고, 타워크레인검사대행자 총괄관리, 건설기계기술개발·연구 및 자료수집등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26,450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기타공공기관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건강기능 식품·축산물·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 사업 수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5,269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기타공공기관	국내·외의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의 지원과 의료기기 인증 등에 관한 업무수행	「의료기기법」 제42조	6,998
한국전기 안전공사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 수행과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346,226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승강기 인증·검사 및 기술 개발,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등 교육·홍보, 승강기 사고조사 및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	169,428
한국교통 안전공단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도로·철도·항공부문 환경 조성을 통한 교통안전 수준 향상 및 자동차 안전연구 사업 수행	「한국교통안전 공단법」	912,902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 진단 및 기술·재정지원, 안전보건문화 확산 등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법」	1,480,697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기타공공기관	의약품 안전정보 수집·분석·평가·관리 및 제공,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등	「약사법」 제68조의3	31,040
소방산업 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소방용품 및 위험물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 확보 및 소방산업 진흥·발전 지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69,606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소관별 안전 관련 공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각각 4개로 제일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 관련 공공기관은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이며, 국토교통부에는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 소관별 안전 관련 공공기관 분류 ■

(단위: 개)

소관 부처	기관명	개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4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4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3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2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합계		22

분야별 안전 관련 공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농식품안전 분야의 공공기관이 5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활안전 및 기계안전 분야의 공공기관이 각각 3개, 의료안전, 교통안전, 원자력안전, 산업안전 분야의 공공기관이 각각 2개씩 지정되어 있다.

■ 분야별 안전 관련 공공기관 분류 ■

(단위: 개)

분야	기관명	개수
농식품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5
생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3
기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
의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
교통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
산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국토	국토안전관리원	1
항공	항공안전기술원	1
해상	한국항로표지기술원	1
합계		22

안전 관련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 분야의 안전성 검사 및 점검,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비용 및 수수료 징수 등을 통한 수입이 발생한다. 안전 관련 공공기관 22개 중 안전 관련 검사, 검증, 인증 사업을 통한 수수료 등의 수입이 있는 기관은 18개(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⁴¹⁾ 제외)이고, 이들 기관의 주요 수수료 등의 수입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안전 관련 공공기관의 주요 수수료 등 수입액 ■

(단위: 백만원)

기관명	종류	근거법령	수입액(최근 3년)		
			2022	2023	2024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선박검사 수수료	「선박안전법」 제80조, 「어선법」 제39조	11,712	10,945	11,121
국토안전 관리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6조	4,704	3,512	3,239
	설계안전성 검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조제3항제5호	6,500	6,791	6,759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지진대책법」 제16조의3제6항, 「지진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4제6항,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24,698	35,261	31,625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면허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제87조(면허시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6조(수수료) [별표 8]	75	72	71
	자격 수수료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수수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수수료)	12	11	11
한국가스 안전공사	고압가스시설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	20,164	20,487	20,871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60조제2항	15,878	14,682	14,313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제2항	30,716	31,802	31,193
	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수소 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2항	144	504	372

4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수입식용축산물 수입에 대한 현물검사 수수료 징수 후 국고에 반납한다.

기관명	종류	근거법령	수입액(최근 3년)		
			2022	2023	2024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성능검증 인증심사/ 정기점검경비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4	190	192	198
한국제품안전 관리원	전기·생활용품 면제확인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956	955	1,147
축산물품질 평가원	축산물등급 판정수수료	「축산법」 제49조	11,546	11,715	12,030
국제식물 검역인증원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사 수수료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7,583	6,776	7,062
한국항로표지 기술원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수수료	「항로표지법」 제49조	1,112	1,777	1,385
항공안전 기술원	형식증명 등 수수료	「항공안전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7]	210	98	167
	형식증명승인 수수료		257	330	284
	경량/초경량비행 장치 안전성 인증수수료	「항공안전법」 제124조 및 제1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7]	754	955	1,031
	인증기관의 성능인증 등 수수료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11, [별표 4]	162	201	164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건설기계 정기검사 수수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18,041	18,474	18,913
	건설기계 구조변경 검사수수료		2,122	1,974	1,892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HACCP인증 등 수수료	「식품위생법」 제48조제12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제44조제2항	3,614	4,622	4,844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의료기기 신고·인증 수수료	「의료기기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1,371	1,454	1,553
	의료기기 신고·인증 갱신 수수료		-	-	468
한국전기 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제42조	35,852	38,509	39,263
	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제42조	67,935	70,979	82,336
	전기안전점검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42조	3,326	3,984	4,053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부품안전 인증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	3,085	2,639	3,709
	모델승강기 안전인증 수수료		1,497	1,817	1,876

기관명	종류	근거법령	수입액(최근 3년)		
			2022	2023	2024
	개별승강기 안전인증 수수료		5,243	4,831	4,390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106,904	120,252	125,439
	승강기관리 교육수수료		3,865	3,276	3,292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제76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128,243	126,340	126,952
	CNG내압용기 검사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제76조	5,661	6,095	6,181
	기계식주차장 검사수수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9	6,050	6,554	7,049
	정도검사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제76조	3,464	3,816	4,045
	기술검토 및 안전도검사	「자동차관리법」 제76조	4,627	3,248	3,35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화학 시설검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2,057	1,966	2,205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1,641	1,754	1,551
	KOSHA 인증(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2,454	1,970	2,200
소방산업기술원	소방용품 시험검사등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 등	41,724	48,083	50,669
	위험물검사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1조 등	10,348	11,348	9,672
	소방장비 검사 등	「소방장비관리법」 등	2,287	3,054	3,422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7절 연구개발목적기관

현존하는 공공기관 분류·지정체계는 크게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세 개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고, 대부분의 연구기관은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되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2018년 3월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를 개정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가능해졌다.⁴²⁾⁴³⁾

법 개정 이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 연구기관으로 분류하고 매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과 함께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을 조정해왔다.⁴⁴⁾

2025년 기준, 연구개발목적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25개, 부처 직할 연구기관 24개 등 총 49개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은 2024년 1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현재 연구개발목적기관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연구개발목적기관 분류 현황 ■

(단위: 개)

구분	주요 기관	기관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25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 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24
합계		49

주: 부설기관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2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078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44)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개정 이후 2019년 1월 기타공공기관 중 총 69개 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별도 분류하여 지정하였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유형별 현황

연구개발목적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다.

2024년 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됨에 따라, 2025년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기관, 부처 직할 연구기관 등 기타 기관만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공공기관운영법 및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운영법 상 연구개발목적기관 유형별 분류

-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 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2024년 1월부로 공공기관 지정해제)
- ③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⁴⁵⁾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으로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 연구기관

2025년 1월 기준,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총 49개 기관으로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기관은 모두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이며,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3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2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2개, 환경부 산하 3개, 국방부 산하 1개, 보건복지부 산하 3개, 해양수산부 산하 2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개, 방위사업청 산하 2개, 기상청 산하 2개, 특허청 산하 1개, 교육부 산하 1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2025년도 연구개발목적기관 현황

(단위: 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기관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과학연구원(과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
국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과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안)
산업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안)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산자)
통일연구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환경)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국방)
한국교육개발원	국방과학연구소(방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방기술품질원(방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보건)
한국법제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보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특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교육)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재)APEC기후센터(기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해수)
한국행정연구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환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환경)
한국환경연구원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기상)
건축공간연구원	-

주: ()는 소관 주무부처의 약칭임(방사: 방위사업청, 과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안: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출연금 현황

앞서 살펴보았듯이, 2025년도 1월 기준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49개이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출연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⁴⁶⁾

2025년도 기준 49개 연구개발기관의 정부출연금 전체 규모 예산액은 1조 4,185억 2,2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1조 3,377억 2,600만원 대비 807억 9,600만원 증가한 규모이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은 대부분 기관고유사업의 정부출연금 외에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정부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실제 정부로부터 받는 정부지원 예산은 출연금 규모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규모는 기관별로 전년도 결산이 종료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결산)	2024(예산)	2025(예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541,764	536,192	545,392
부처직할 연구기관 등 기타기관 ¹⁾	804,399	801,534	873,130
합계	1,346,163	1,337,726	1,418,522

주: 1) 국방과학연구소는 출연금 현황을 공시하지 않고 있어 제외하였음

1. 부처직할 연구기관 중 보조금 및 사업수입 예산으로 편성된 기관(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제외함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부설기관 포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6) 다만, 부처직할 연구기관 중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재정 지원이 보조금 또는 사업수입 형태로 편성되어 있어 연구개발목적기관 출연금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8절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일반 현황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제2항⁴⁷⁾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⁴⁸⁾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보건복지부 소관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있으나, 본 절에서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중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병원 10개 및 치과병원 4개 등 총 14개에 한하여 일반현황, 정부순지원수입 및 손익 현황을 분석한다.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은 상급종합병원 8개, 종합병원 2개, 치과병원 4개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병상 수(2,847병상), 전문의 수(1,509명), 연외래환자 수(3,474,438명), 연입원환자 수(696,356명)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부산대학교병원(2,298병상, 613명, 1,503,232명, 462,524명)이 병상 수, 전문의 수, 연외래·입원환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 중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병상 수(40병상), 전문의 수(99명), 연외래환자 수(382,282명), 연입원환자 수(8,754명)가 가장 많았으며, 병상 수, 전문의 수와 연입원환자 수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연외래환자 수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일반 현황

(단위: 개, 병상, 명)

기관명		종별	병상 수	전문의 수	연외래환자 수	연입원환자 수
국립 대학 병원 (10)	강원대학교병원	종합병원	632	179	493,998	109,293
	경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714	369	1,190,825	360,314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357	265	833,506	319,411
	부산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2,298	613	1,503,232	462,524
	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2,847	1,509	3,474,438	696,356
	전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903	495	1,389,687	375,721
	전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100	284	809,532	239,977
	제주대학교병원	종합병원	600	169	530,142	159,243
	충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595	409	1,130,413	344,647
	충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776	201	634,614	143,085
국립 대학 치과 병원 (4)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15	34	121,443	724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12	33	171,025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36	36	135,019	8,19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40	99	382,282	8,754

주: 1. 2024년 12월 31일 기준이며, 본·분원 통합 자료임
2. 병원의 본원과 분원의 종별 구분은 상이할 수 있으며, 본원 기준으로 작성함
3. 병상 수는 허가병상 기준임
4.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이 존재하지 않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정부순지원수입 현황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정부순지원수입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3,766억원으로, 2019년 1,204억원 대비 약 2,562억원 증가하였다. 경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서 2019년 대비 2024년 정부순지원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서울대학교병원(873억원)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24년에 정부순지원수입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990억원)이었으며, 전남대학교병원(619억원), 전북대학교병원(56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병원들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및 중증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따라 보조금 수령이 발생하여 정부순지원수입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정부순지원수입

(단위: 개, 백만원)

기관명		2019(a)	2020	2021	2022	2023	2024(b)	증감 (b-a)
국립 대학 병원 (10)	강원대학교병원	2,985	6,544	5,904	13,697	10,981	14,940	11,955
	경북대학교병원	12,328	10,384	7,137	33,386	9,236	11,128	△1,200
	경상국립대학교병원	11,062	19,920	39,272	61,293	18,752	44,936	33,874
	부산대학교병원	5,586	2,925	1,523	3,025	2,652	7,728	2,142
	서울대학교병원	11,717	23,400	29,239	31,915	23,555	99,036	87,319
	전남대학교병원	12,306	37,367	59,989	83,419	39,788	61,937	49,631
	전북대학교병원	11,110	10,814	19,559	34,618	18,018	56,327	45,217
	제주대학교병원	3,544	6,823	8,912	9,255	4,763	10,256	6,712
	충남대학교병원	33,296	18,987	16,198	18,421	16,736	30,783	△2,513
	충북대학교병원	8,616	18,888	16,374	49,764	19,899	19,174	10,558
소계		112,550	156,052	204,107	338,793	164,385	356,245	243,695
국립 대학 치과 병원 (4)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0	1,875	3,000	2,025	1,500	2,100	2,100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80	1,237	1,276	1,454	2,216	7,794	7,514
	부산대학교치과병원	714	7,824	2,954	2,676	1,432	4,135	3,42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6,831	518	1,236	3,166	8,305	6,298	△533
	소계	7,825	11,454	8,466	9,321	13,453	20,327	13,035
합계		120,375	167,506	212,573	348,114	177,833	376,572	256,197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손익 현황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2024년 의료수익 합계는 6조 6,754억원, 의료이익⁴⁹⁾ 합계는 △9,272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전당기순이익⁵⁰⁾의 합계는 △6,182억원이다. 특히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2024년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의정갈등 이슈로 인해 전공의 파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의료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여 2023년 대비 4,641억원의 의료이익 감소가 이루어졌다.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의료수익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4년의 경우 2023년 대비 8,939억원 감소한 6조 6,754억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4년 의료수익이 가장 크게 증가한 기관은 충남대학교병원(2,066억

49) (의료수익-의료비용)이다.

50) (의료수익-의료비용+의료외수익-의료외비용-법인세비용)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비영리법인 과세소득의 일정 비율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과세소득을 이연하고 사내 유보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비과세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세제혜택) 관련 손익을 반영하지 않은 순이익이다.

원)이다.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2024년 의료이익은 2019년 대비 9,121억원 감소한 △9,272억원으로 나타났고,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의료수익의 증가 규모보다 의료비용의 증가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2024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전당기순이익은 2019년 대비 4,485억원이 감소한 △6,182억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전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기관은 부산대학교치과병원(5억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의료이익의 손실규모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전당기순이익의 손실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의료외활동(의료부대수익, 기부금수익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익은 있지만 이 수익을 통해 의료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손익 현황 ■

(단위: 개, 억원)

기관명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	2024(b)	증감 (b-a)
국립 대학 병원 (10)	강원대학교병원	의료수익	1,534	1,489	1,608	1,666	1,803	1,512	△22
		의료이익	△69	△195	△210	△198	△213	△371	△302
		당기순이익	△48	△151	△104	△39	△196	△315	△267
	경북대학교병원	의료수익	6,059	5,930	7,137	7,346	7,723	6,854	795
		의료이익	△83	△510	△529	△455	△591	△1,250	△1,167
		당기순이익	2	△109	207	700	△408	△1,040	△1,042
	경상국립 대학교병원	의료수익	3,997	4,129	4,441	4,721	4,977	4,739	742
		의료이익	△247	△313	△394	△309	△333	△410	△163
		당기순이익	△265	△298	△139	175	△283	△306	△41
	부산대학교병원	의료수익	8,590	8,599	9,281	9,511	9,757	8,694	104
		의료이익	189	△220	△320	△360	△685	△1,202	△1,391
		당기순이익	250	△14	390	511	△470	△656	△906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수익	19,360	19,382	21,789	23,035	24,352	20,648	1,288
		의료이익	173	△727	△600	△479	△767	△2,735	△2,908
		당기순이익	494	△303	3,910	1,229	108	△1,583	△2,077
	전남대학교병원	의료수익	7,362	7,251	8,224	8,165	8,938	7,786	424
		의료이익	129	△153	△91	△452	△300	△935	△1,064
		당기순이익	2	24	306	127	△236	△685	△687

기관명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	2024(b)	증감 (b-a)
국립 대학 병원 (10)	전북대학교병원	의료수익	3,671	3,672	3,950	4,257	4,530	3,736	65
		의료이익	△73	△316	△319	△307	△227	△792	△719
		당기순이익	11	△195	22	209	△87	△491	△502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수익	1,753	1,845	2,039	2,108	2,097	2,082	329
		의료이익	△95	△222	△199	△242	△365	△357	△262
		당기순이익	△82	△142	△34	△91	△339	△312	△230
	충남대학교병원	의료수익	4,325	4,557	5,730	5,946	6,612	6,391	2,066
		의료이익	△86	△719	△829	△1044	△937	△625	△539
		당기순이익	△4	△541	△392	△501	△840	△335	△331
	충북대학교병원	의료수익	2,676	2,691	2,917	3,219	3,484	2,892	216
		의료이익	90	△214	△240	△157	△151	△533	△623
		당기순이익	61	△77	55	221	△46	△419	△480
	소계	의료수익	59,327	59,545	67,116	69,974	74,273	65,334	6,007
		의료이익	△72	△3,589	△3,731	△4,003	△4,569	△9,210	△9,138
		당기순이익	421	△1,806	4,221	2,541	△2,797	△6,142	△4,486
국립 대학 치과 병원 (4)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의료수익	119	117	129	134	129	128	9
		의료이익	0	△6	△8	△20	△30	△24	△24
		당기순이익	2	△3	△4	△16	△27	△21	△23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의료수익	174	174	210	199	235	240	66
		의료이익	△7	△16	7.9	△3	7	△5	2
		당기순이익	△6	△13	10	△23	7	△6	0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의료수익	213	216	247	254	262	289	76
		의료이익	△16	△19	△1	2	△9	2	18
		당기순이익	△12	△17	13	6	△5	5	17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의료수익	607	627	697	682	698	763	156
		의료이익	△56	△54	△59	△113	△97	△35	21
		당기순이익	△25	△36	△28	△90	△73	△18	7
	소계	의료수익	1,113	1,134	1,283	1,269	1,324	1,420	307
		의료이익	△79	△95	△60	△134	△129	△62	17
		당기순이익	△41	△69	△9	△123	△98	△40	1
합계	의료수익	60,440	60,679	68,399	71,243	75,597	66,754	6,314	
	의료이익	△151	△3,684	△3,791	△4,137	△4,698	△9,272	△9,121	
	당기순이익	380	△1,875	4,212	2,418	△2,895	△6,182	△4,485	

주: 위 표의 당기순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전당기순이익을 의미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

제9절 과학관, 박물관 및 생물자원관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⁵¹⁾ 과학관은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등으로 구분되는데, 국립과학관 중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국립대구과학관·국립광주과학관·국립부산과학관, 해양수산부 소관의 국립해양과학관 등 4개 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에 대해 수집·관리·전시·교육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⁵²⁾ 박물관 또한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으로 구분되며, 국립박물관 중에서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립항공박물관, 해양수산부 소관의 국립해양박물관 등 2개 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수집·보존·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것을 말한다.⁵³⁾ 생물자원관 중에서는 환경부 소관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소관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3개 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상기한 과학관, 박물관 및 생물자원관에 대하여는 현행 법률 중 「과학관의 설립·운영

5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6조(등록) ① 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5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53)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수집·보존·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것을 말한다.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념의 정의와 설립 근거 등에 대해 일정 부분 규정하고 있으나, 주무부처 등의 차이로 인해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법률을 설립 근거로 삼은 기관도 존재한다.

■ 기관 개요 ■

기관명	설립 근거 법률	법인 설립일	공공기관 지정 시기
국립대구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13.6.24.	2015.1.29.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13.7.23.	2015.1.29.
국립부산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15.7.13.	2017.1.25.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과학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2020.5.20.	2021.1.29.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법」 제3조	2019.12.23.	2021.2.4.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2015.4.20.	2016.2.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2015.6.3.	2016.2.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2015.4.20.	2016.2.3.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2020.8.21.	2021.2.4.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각 기관의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생물자원관의 수입 규모(243~390억원)가 과학관 및 박물관의 수입 규모(92~185억원)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제시된 모든 기관의 수입에 정부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규모도 기관별 수입 항목 중 가장 컸다.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정부지원 수입	자체수입						계
		사업수입				재산 수입	기타	
		입장료	교육	문화	기타 사업수입			
국립대구과학관	16,300(출연)	527	840	130	147	159	49	18,152
국립광주과학관	13,143(출연)	568	929	487	119	182	150	15,578
국립부산과학관	14,338(출연)	852	1,019	337	136	326	1,542	18,550
국립해양과학관	7,115(출연) 67(전기이월액) 2,022(전기잉여금) 14(수탁사업)	-	-	-	-	-	38	9,218
국립항공박물관	13,554(출연)	-	-	234	-	226	2,503	16,517
국립해양박물관	8,354(출연) 2,233(전기이월)	-	-	-	-	-	617	11,204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28,954(출연)	193	52	-	60	-	1,521	30,780
국립해양생물자원관	31,546(출연)	484	34	-	4,819	-	2,150	39,033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22,939(출연)	53	55	-	13	-	1,291	24,351

주: 국립항공박물관은 입장료 및 교육비가 무료이며, 체험시설에 대해서만 요금을 징수함(문화수입)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각 기관의 2024년 지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수입과 마찬가지로 생물자원관의 지출 규모(244~382억원)가 과학관 및 박물관의 지출 규모(91~227억원)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국립부산과학관(주차타워 조성),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연구사업비)을 제외한 기관에서 지출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인건비였다.

지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지출예산		2025 본예산 기준 규모 상위 3개 항목	예산액의 구성비
	2024 본예산	2025 본예산		
국립대구과학관	18,538	16,203	인건비(8,076), 전시운영(4,277), 교육문화(1,539)	순수운영비 59.8%, 사업비 40.2%
국립광주과학관	15,062	15,892	인건비(7,435) 전시장 운영(3,015) 교육문화(1,721)	순수운영비 56.0% 사업비 44.0%
국립부산과학관	16,727	22,780	주차타워 조성(8,900), 인건비(7,549), 전시운영사업(4,537)	순수운영비 29.9% 사업비 70.1%
국립해양과학관	9,218	9,173	인건비(3,838), 기관운영경비(2,944), 전시사업비(1,983)	순수운영비 73.9% 사업비 26.1%
국립항공박물관	16,294	16,190	인건비(6,032), 경상비(3,529) 사업비(6,243)	순수운영비 59.0%, 사업비 38.6% 예비비 2.4%
국립해양박물관	11,087	9,719	인건비(4,590), 기관운영비(2,039), 해양자료수집관리(1,364)	순수운영비 69.4% 사업비 30.6%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30,979	30,470	인건비(13,460) 전시관 운영 및 전시(4,275) 시설운영관리(2,765)	순수운영비 50.6% 사업비 49.4%
국립해양 생물자원관	38,396	38,241	연구사업비(17,192), 인건비(14,641), 전시·교육 등 일반사업비(1,907)	사업비 52.9% 순수운영비 47.1%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24,339	24,483	인건비(11,567), 시설운영관리(3,665) 생물자원 조사·확보·발굴(3,182)	순수운영비: 54.4% 사업비: 45.6%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과학관 및 박물관은 상기한 예산액 등을 토대로 전시사업, 교육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을 운영 중이다. 기관별 주요시설의 총사업비를 살펴보면, 국립부산과학관(1,424억원), 국립대구과학관(1,402억원), 국립해양박물관(1,268억원) 등의 주요시설 총사업비 규모가 가장 컸으며, 생물자원관의 주요시설 총사업비 규모는 과학관 및 박물관 대비 전반적으로 작았다. 2024년 시설별 관람객 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과학관(77~95만명) 및 박물관(36~85만명)의 관람객 수가 생물자원관(13~33만명)보다 많았다.

주요시설 및 관람객 현황

(단위: 백만원, 명, m²)

기관명	주요 시설명	총사업비	관람객 수		면적	시설 주소지 (도로명주소)
			2024	누적		
국립대구과학관	본관	114,400	776,302	7,184,505	21,88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대로 6길 20 (상리 917번지)
	꿈나무과학관	25,800			9,413	
국립광주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111,194	952,302	7,110,115	98,24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35
국립부산과학관	본관	121,700	942,365	7,232,016	25,557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6로 59
	어린이과학관	20,700			6,164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과학관	2,616	769,484	10,645,881	3,963	경북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8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96,430	365,001	1,137,358	18,632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177
국립해양박물관	박물관	126,800	855,220	11,501,101	25,894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45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생물누리관	70,050	134,991	1,610,011	7,134	경북 상주시 도남2길 137 (도남동)
	전시온실	3,434			951	
국립해양 생물자원관	전시동(씨큐리움)	1,095	332,737	1,997,790	11,470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01번길 75
	연구행정동	37,301			20,004	
	교육동				1,260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전시교육실	1,800	136,707	400,944	1,859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안길 99
	한국섬온실	2,570			1,197	
	섬·연안 생물교육관	5,400			1,012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해당 시설 등을 통해 운영된 기관별 전시운영 사업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과학관(19.87~48.13억원), 생물자원관(6.59~22.09억원), 박물관(6.92~13.06억원) 순으로 관련 사업의 집행액이 많았다. 전시물 수의 경우 생물자원관(3,612~17,827점)이 과학관(122~614점) 및 박물관(610~693점)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물품을 전시하였다.

2024년도 전시운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결산 집행액	전시물 수	전시 현황
국립대구과학관	4,263	자동차, 재해·재난 관련 전시물 614점	- 상설전시1관 자연과발견: 자연, 재해, 재난 등 - 상설전시2관 과학기술과 산업: 에너지, 산업생활 속 과학기술 - 상설전시3관 생명의 진화관: 고생대의 생물과 진화, 실물표본 생물다양성 등 - 상설전시 4관 과학기술문명사: 자격루, 원자시계 등 - 10년의 기다림, 10년의 만남(1.2.~계속) - 부부! 청룡열차 출발합니다!(2.6.~3.31.) - '모든 사물의 역사: 학교'(2.20.~6.16.) - 노담밴드의 연주회 가는길(2.27.~6.16.) - Are You Ready? : 과학으로 보는 스포츠(7.12.~9.22.) - .gif: 움직이는 그림('24.10.22.~'25.3.3.) - 그 외 상설 전시 등
국립광주과학관	3,118	빛, 예술, 인공지능 관련 전시품 363점	- 자동차 특별전 신나는 자동차 세상('23.11.24.~'24.3.3.) - 공룡 특별전 2024 다이노 월드(6.21.~9.1.) - 노담밴드 특별전('24.9.10.~'25.3.2.) - 기상기후 사진전(10.8.~10.27.) - 제6회 매스아트 작품공모전 수상작 전시(10.8.~10.27.) - 2024년 공동특별전(스포츠)(10.8.~12.15.) - 스포츠 특별전(시즌2)('24.12.15.~'25.3.2.)
국립부산과학관	4,813	동남권 주력산업 주제 전시품 등 274점 (작동체험형 255점)	- 미래 모빌리티전('23.10.20.~'24.3.3.) - Are You Ready? 과학으로 보는 스포츠(4.5.~6.30.) - 디지털 플래닛(7.25.~10.20.) - 아트 오브 쉼도우('24.11.1.~'25.3.3.) - 똑똑똑 툭박스('23.9.26.~'24.2.25.) - 싸이 파이 스마일(3.8.~6.2.) - 곰곰이와 찬찬이('24.12.13.~'25.3.9.) - CES In Sciport 2024(4.12.~5.19.) - 해양관측위성 부산샷 전시(8.11.~11.24.) - 기술보증기금 월 팝업과학관(11.4.~11.8.) - 동래구청 Green 에너지 미래교실(5.11.) -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12.13.~12.15.) - 그 외 상설전시 등
국립해양과학관	1,987	야외조형물, 해양과학 전시 체험물 총 122점	- 탄소C그늘('23.12.20.~'24.2.12.) - 과학원리 체험전 싸이팝(3.8.~6.2.) - 9+a : 아홉 개의 공간, 열 가지 생각(3.26.~6.16.) - 출동! 극지탐험대(7.19.~10.27.) - 러쉬아트페어(11.19.~12.8.) - 별꼴 : 왜 그렇게 생겼어?('23.12.20.~ '24.3.9.) - 그 외 상설전시 등

기관명	결산 집행액	전시물 수	전시 현황
국립항공박물관	1,306	항공기, 항공기부품, 지도, 문서, 복식 등 610점	- 비행기 양성사: 대한이 가진 첫 비행학교(6.5.~9.1.) - 플라잉맨: 오토 릴리엔탈과 글라이더('24.10.14.~'25.3.3.) - 역사 속 비행기 둘러보기II(4.26.~5.15.) - 국립항공박물관 포토존('24.12.9.~상시) - 하늘 위 기내식 이야기(8.1.~10.31. 서울 국토발전전시관) - 실감영상 순회전('24.10.1.~'25.3.31., 대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 2024년 박물관·미술관 박람회(10.23.~10.28. 부산 벡스코) - 소형항공기 시뮬레이터 전시 및 조종 체험(12.20. ~12.22. 광주 국립광주과학관) - 그 외 상설전시 등
국립해양박물관	692	해양역사, 문화 자료 관련 전시물 408건 693점	- 테마전시 <조선 바다를 지켜내다>(4.30.~6.16.) - 기획전시1 <조행일록, 서해바다로 나라 곡식을 옮기다>(7.30.~10.27.) - 기획전시2 <항해와 시계>('24.12.3.~'25.3.23.) - 그 외 상설 전시 등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209	3,463종 17,827점 (포유류 111종 230점, 조류 267종 536점, 식물 257종 434점 등)	- 상주 낙동강, 터전과 삶(5.7.~5.27.) - 동물의 몸속에 기계가 있어요(6.18.~7.21.) - 담수생물 디지털 아카이빙(9.12.~11.17.) - 지구동 기후마켓('24.12.10.~'25.3.31.) - 생명의 소중함과 생물다양성(상설전시) - 살아 숨 쉬는 낙동강(상설전시) - 미생물-보이지 않는 세상 속으로(상설전시) - 우리 강물의 보석을 찾아서, 한국 고유종 담수어류(온라인전시) - 그 외 상설 전시 등
국립해양생물자원관	729	해양생물 전시표본, 모형, 영상, 사진 등 6,938점 등	- 바다뱀연구소 전시('24년~계속) - 해양생물 수중사진 공모전('23.12.19~'24.10.22) - 해양보호생물 주제 러쉬아트페어 협업전시('24.12.17~'25.1.5) - 그 외 상설 전시 등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659	포유류, 조류 등의 표본, 모형 등 3,612점	- 제주생물자원, 생약이 되다('24.8.26.~'25.3.30.) - 어떤생물(10.22.~11.5.) - 온실에 찾아온 북극곰(5.3.~7.31.) - 생명을 틔우는 틱움도서관(8.24.~8.31.) - 그 외 상설 전시 등

주: 전시운영 사업의 예산액을 사용하는 전시, 관람 등 일체의 사업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기관별 교육문화 사업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과학관의 관련 사업 집행액(4.6~23.37억원)이 박물관(2.14~14.09억원) 및 생물자원관(2.85억원~3.58억원)의 집행액보다 많았고, 교육 참가자 수도 과학관(국립해양과학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10만 명을 상회)이 타 기관(모든 기관이 10만명을 하회)보다 많았다. 특히 국립대구과학관의 경우 347,449명의 교육 참가자 수를 기록하여 제시된 9개 기관 중 유일하게 30만명 이상의 교육 참가자 수를 기록하였다.

■ 2024년도 교육문화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기관명	결산 집행액	교육별 참가자 수
국립대구과학관	1,449	- 과학교육프로그램 82,469명 - 과학문화프로그램 264,980명
국립광주과학관	1,761	- 과학교육프로그램 54,830명 - 과학문화프로그램 226,123명
국립부산과학관	2,337	- 과학교육프로그램 105,171명 - 과학문화프로그램 160,582명
국립해양과학관	460	- 해양과학교육프로그램 12,149명
국립항공박물관	1,409	- 교육프로그램 43,361명
국립해양박물관	214	- 해양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운영 11,024명 - 어린이박물관 전시 및 운영 15,636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85	-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 16,220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	333	- 해양교육프로그램 8,928명 - 해양문화프로그램 22,122명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358	-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 15,506명

주: 교육문화 사업의 예산액을 사용하는 교육, 체험, 실습 등 참가자가 존재하는 일체의 사업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추가로, 2023년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2024년 실시)에 따르면 9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국립항공박물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보통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국립대구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관별 점수를 살펴보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95.4점), 국립부산과학관 및 국립해양과학관(94.8점) 등의 순으로 높았다. 국립대구과학관은 만족도 조사 전체 점수에서 유일하게 80점대 점수를 받았으며(87.7점), 달성도 또한 0.75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2023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요약

기관명	전체 점수	달성도 등급	달성도	업무 프로세스별 만족도 90.0점 미만 항목 및 그 내용
국립대구과학관	87.7	미흡	0.75	- 상설전시관 및 특수영상관 - 본원적 욕구충족(86.1), 서비스 효익성(86.0), 서비스 완결성(88.5), 상호작용(88.8), 커뮤니케이션(88.3), 고객케어(88.1), 제도/절차/시스템(89.6) - 꿈나무과학관 - 본원적 욕구충족(86.0), 서비스 효익성(87.9), 서비스 완결성(88.0) - 특별기획전시 - 본원적 욕구충족(82.5), 서비스 효익성(87.1), 서비스 완결성(87.3), 커뮤니케이션(89.1) - 과학교육 - 본원적 욕구충족(83.4), 서비스 효익성(82.5), 서비스 완결성(86.3), 상호작용(87.8), 커뮤니케이션(87.2), 이용자 환경 편리성(89.2), 제도/절차/시스템(86.2), 인적자원역량환경(85.7)
국립광주과학관	92.7	우수	1.0	교육프로그램 - 서비스 완결성(89.3), 커뮤니케이션(87.9)
국립부산과학관	94.8	우수	1.0	해당사항 없음
국립해양과학관	94.8	우수	1.0	해당사항 없음
국립항공박물관	90.9	보통	0.818	- 전시운영 - 예약/입장(88.0), 사후지원 및 관리(89.0) - 교육운영 - 공고확인/문의(86.0), 신청/접수(84.9), 교육내용(콘텐츠 등)(88.1), 강사(전문성, 태도 등)(89.8), 사후지원 및 관리(80.4), - 자료관리 - 항공도서관 방문(87.2), 자료 이용(89.1), 사후지원 및 관리(88.0) - 학술운영 - 연구자료 수령/홈페이지 접속(80.9), 자료 이용(79.4), 사후지원 및 관리(78.5)
국립해양박물관	93.7	우수	1.0	교육프로그램 운영활성화 - 사후지원 및 관리(89.2)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95.4	보통	0.902	생물다양성 특화교육 - 사후지원 및 관리(88.8)
국립해양 생물자원관	92.8	우수	1.0	- 해양생물자원 활용 - 사후지원 및 관리(88.3) - 해양생물자원 교육서비스 - 사후지원 및 관리(89.5)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92.0	미흡	0.684	해당사항 없음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Public Instit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2025

부 록



부록1 공공기관 부처별(유형별) 세부 지정현황 (2025년 1월 기준)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법제사법 위원회 (3)	법무부 (3)	기타공공기관 (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무위원회 (37)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5)	기타공공기관 (25)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2)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타공공기관(1)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국가보훈부 (3)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타공공기관 (2)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
	금융위원회 (7)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4)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3)	
기획재정 위원회 (6)	관세청(1)	기타공공기관(1)	한국원산지정보원
	기획재정부 (4)	공기업(준시장형)(1)	한국조폐공사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1)	한국재정정보원
		기타공공기관 (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통계청(1)	기타공공기관(1)	(재)한국통계정보원
교육위원회 (22)	교육부 (22)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1)	한국장학재단
		기타공공기관 (21)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2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1)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6)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타공공기관 (15)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송통신위원회 (2)	공기업(준시장형)(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타공공기관(1)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3)	기타공공기관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외교통일 위원회 (5)	외교부 (2)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1)	한국국제협력단
		기타공공기관(1)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2)	기타공공기관 (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국방위원회 (5)	재외동포청(1)	기타공공기관(1)	재외동포협력센터
	국방부 (3)	기타공공기관 (3)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 (2)	기타공공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행정안전 위원회 (6)	경찰청(1)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1)	한국도로교통공단
	소방청(1)	기타공공기관(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사혁신처(1)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1)	공무원연금공단
	행정안전부 (3)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기타공공기관 (2)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34)	국가유산청(1)	기타공공기관(1)	국가유산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33)	공기업(준시장형)(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1)	한국관광공사
		기타공공기관 (30)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35)	농림축산식품부 (12)	공기업(준시장형)(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3)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타공공기관 (8)	한국농어촌공사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농촌진흥청(1)	기타공공기관(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5)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기타공공기관 (3)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해양수산부 (17)	공기업(준시장형)(1)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타공공기관 (15)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물과학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시장형)	(주)강원랜드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58)	(41)	(11)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기업(준시장형) (5)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1)	한국무역보험공사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기타공공기관 (14)	대한석탄공사
			무역안보관리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전MCS(주)
	중소벤처기업부 (11)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3)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타공공기관 (8)	(주)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6)	기타공공기관 (6)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보건복지 위원회 (34)	보건복지부 (29)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1)	국민연금공단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타공공기관 (25)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학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5)	기타공공기관 (5)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
환경노동 위원회 (26)	환경부 (11)	공기업(준시장형)(1)	한국수자원공사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4)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타공공기관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1)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12)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기타공공기관 (7)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국토교통 위원회 (29)	기상청 (3)	기타공공기관 (3)	한국잡월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국토교통부 (29)	공기업(시장형) (3)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공기업(준시장형)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4)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타공공기관 (16)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건설기술교육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여성가족 위원회 (5)	여성가족부 (5)	기타공공기관 (5)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록2 위원회별 공공기관 현황

법제사법위원회 (3)

대한법률 구조공단	주무부처	법무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법률구조법」 제8조	설립일	1987.09.01.
	인력현황(정원)	871명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주요기능	• 법률상담, 민사·가사·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대리, 형사변호 •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 •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		
정부법무공단	주무부처	법무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법무공단법」	설립일	2008.02.15.
	인력현황(정원)	124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요기능	•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행정, 민사소송, 헌법재판 사건 수행 • 국가 등에 대한 법률자문, 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 국가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수행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주무부처	법무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설립일	1953.03.05.
	인력현황(정원)	390명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주요기능	• 갇생보호의 실시 • 갇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 갇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의 경영 및 기부금품의 모집		

정무위원회 (37)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설립일	1999.03.15.
	인력현황(정원)	96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연구기획 및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 -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건축공간연구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설립일	2020.11.20.
	인력현황(정원)	111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건축과 도시공간의 조성, 이용 및 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개발 - 건축과 도시공간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설립일	1987.01.05.
	인력현황(정원)	162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과학기술정책과 국가혁신체제의 수립,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연구 - 과학기술혁신활동 및 정책수단에 대한 조사·분석 - 과학기술혁신 법·제도, 기반 및 인력 정책 등 연구		
국토연구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설립일	1978.10.04.
	인력현황(정원)	283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보전·관리, 안전국토 조성 등에 관한 연구 -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정책, 계획, 관리, 재생 등에 관한 연구 - 토지, 주택 및 주거복지, 부동산시장 및 관련 산업 등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제8조	설립일	1989.12.29.
	인력현황(정원)	221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국가의 대외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분석과 정책수단의 개발 - 세계경제 및 세계지역 동향과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분석과 정책수단의 개발 - 국제행사 유치·개최 타당성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산업연구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설립일	1976.01.07.
	인력현황(정원)	206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산업정책, 산업 동향 및 통계, 산업별 통상 전략 조사·분석·정책 연구 -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 주력 산업에 관한 조사·분석·정책 연구 - 주요국과의 산업협력 및 지역산업·입지·투자에 관한 조사·분석 및 정책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제8조	설립일	1986.09.01.
	인력현황(정원)	167명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주요기능	-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산업의 발전 방안 수립 -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및 에너지부문 기후변화 대응 정책 연구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시장·제도 개선 방안 마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설립일	1985.02.04.
	인력현황(정원)	174명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주요기능	- 정보화정책 연구 - 정보통신 산업 발전 및 통신·방송·전파 관련 정책 연구 - 정보화, 공정경쟁, 국제협력 관련 연구		
통일연구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설립일	1991.02.02.
	인력현황(정원)	100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요기능	- 통일에 관련되는 연구 및 정책개발 - 통일관련 정보 자료 종합관리·지원, 통일관련 연구물 및 자료 출판 - 북한경제연구를 포함한 통일문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설립일	1971.03.11.
	인력현황(정원)	474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경제사회 현상, 경제정책 및 정책수단 연구 - 경제정보 분석·제공 및 경제교육을 통한 국민 경제이해 증진 사업 및 연구 - 공공투자관리, 민간투자사업,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 및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제8조	설립일	1972.08.30.
	인력현황(정원)	228명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주요기능	-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 국내 교육 기반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개발 - 특수 목적(영재교육 등) 및 국제적 연계 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제8조제1항	설립일	1998.01.01.
	인력현황(정원)	355명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주요기능	- 각종 국가고사(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출제·관리 - 교육과정 연구·개발, 교실수업 혁신 - 교과용도서 연구 및 검정 수행		
한국교통연구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설립일	1987.08.25.
	인력현황(정원)	245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교통·물류 정책 및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교통 관련 사회간접자본(도로, 철도 등)의 투자정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자율차, 친환경차, 드론, 공유교통 등 미래 교통에 관한 융·복합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설립일	1988.08.25.
	인력현황(정원)	149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분야의 연구 및 사업 - 고용노사관계 및 노동법 분야의 연구 및 사업 - 고용·노동 분야 기초통계 생산 및 활용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설립일	1978.04.01.
	인력현황(정원)	163명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주요기능	- 농림업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국민 먹거리 공급체계 및 농식품 수급 안정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농촌 지역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사		

한국법제연구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설립일	1990.07.30.
	인력현황(정원)	135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국내외 헌정제도·법제와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입법이론·입법기술·법령용어정비 및 법제사에 관한 조사·연구 • 국내외 입법데이터 관련 통계·평가 및 DB 구축, 법령 해설자료 발간·보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제8조	설립일	1970.07.20.
	인력현황(정원)	210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보건의료·소득보장·사회서비스·인구 정책 설계 및 분석 • 사회정책에 대한 미래전망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사회보장 관련 제도 평가 및 재정 추계·재원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설립일	1983.04.21.
	인력현황(정원)	130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요기능	•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설계 및 분석 • 성차별적 인식 해소, 미래사회의 성평등한 책임·권리 실현을 위한 종합 조사·연구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제도·정책·예산 평가 및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설립일	1992.07.15.
	인력현황(정원)	365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조세 및 재정 분야의 제도·행정·정책에 관한 종합연구 • 정부회계 및 재정 통계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 운영 및 재정 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제8조제1항	설립일	1997.09.10.
	인력현황(정원)	209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직업교육훈련 정책 연구, 정보 및 자료 수집·관리·보급 및 프로그램 개발 •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가인정 등에 관한 수탁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제8조	설립일	1989.06.17.
	인력현황(정원)	90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청소년의 문화·활동·참여·권리·복지·환경 관련 정책 연구·개발 • 중앙 및 지방정부 청소년정책의 효과분석과 평가·자문 •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연구용역·사업 수탁, 청소년육성기금 수탁관리·운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설립일	1997.04.18.
	인력현황(정원)	260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요기능	•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및 그와 관련된 물류 분야의 연구·개발 • 해양수산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 해양수산 관련 국내외 동향과 정보 수집 및 연구·개발		
한국행정연구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설립일	1991.09.27.
	인력현황(정원)	118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요기능	• 조직·인사·재무·규제·평가 등에 관한 행정 제도·운영 및 정책 연구 • 정부혁신·사회통합·재난안전·글로벌행정 등에 관한 행정 제도·운영 및 정책 연구 • 행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의 생산·수집·관리·지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설립일	1989.03.16.
	인력현황(정원)	102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요기능	• 범죄 동향과 원인 분석 및 형사정책·법령에 대한 종합적 연구 수행 • 법무 관련 분야(민·상사, 인권법무, 출입국법무 등)의 정책 및 법령 조사·연구 • 조사, 교육·연수, 성과확산, 통계관리 등 연구 기반 지원 및 국내외 협력 추진		
한국환경연구원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부출연기관법」	설립일	1993.01.27.
	인력현황(정원)	237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 관리기법 개발 및 성과 평가 • 자연생태계 보전, 환경안정성 확보,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기법 연구 •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및 관련 연구 및 기법 개발·보급		

한국소비자원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소비자기본법」 제33조	설립일	1987.07.01.
	인력현황(정원)	543명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주요기능	•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정책의 연구 및 건의 • 물품 등의 가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공정거래법」 제72조	설립일	2007.12.03.
	인력현황(정원)	121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기업자 피해구제 • 맞춤형 공정거래 지원 및 피해 예방 • 공정거래 문화 정착 및 피해 예방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설립일	1981.11.02.
	인력현황(정원)	7,547명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주요기능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건강관리·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 연구 • 국가유공자 등의 양로·요양, 휴양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88관광개발(주)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보훈기금법」 제7조제6항	설립일	1987.07.30.
	인력현황(정원)	42명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주요기능	•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각종 체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 • 회원관리 및 기타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 • 위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독립기념관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독립기념관법」	설립일	1986.08.20.
	인력현황(정원)	142명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주요기능	•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조사, 연구 • 독립기념관 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독립기념관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신용보증기금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기관유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신용보증기금법」	설립일	1976.06.01.
	인력현황(정원)	2,928명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주요기능	•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산업기반신용보증(SOC 보증) • 창업기업지원 및 경영지도, 중소·중견기업팩토링 • 신용보험 제도		
예금보험공사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기관유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예금자보호법」 제3조	설립일	1996.06.01.
	인력현황(정원)	843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조성·관리 • 예금보험료의 수납, 예금보험금의 지급 및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 부보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 감시		
한국자산 관리공사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기관유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자산관리공사법」 제6조	설립일	1962.04.06.
	인력현황(정원)	1,861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주요기능	• 부실채권 인수·정리, 신용회복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운영 • 기업자산 Sale & Lease Back, 화생기업 정상화 지원,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운영 등 • 국·공유재산 관리·개발, 압류재산 공매대행, 국가채권 수탁징수, 온보드 운영		
한국주택 금융공사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기관유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설립일	2004.03.01.
	인력현황(정원)	1,004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주요기능	• 정책모기지(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공급 • 주택담보대출채권 기초로 유동화증권(MBS, MBB) 발행 • 주택금융 신용보증(전세자금대출·중도금대출, 건설자금대출 등) 공급		
서민금융진흥원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서민금융법」 제3조	설립일	2016.09.23.
	인력현황(정원)	349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 금융회사 등이 휴면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 등의 관리·운용		

중소기업은행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중소기업은행법」	설립일	1961.08.01.
	인력현황(정원)	13,599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 예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 등의 발행		

한국산업은행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산업은행법」	설립일	1954.04.01.
	인력현황(정원)	3,423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요기능	• 대출, 투자, 보증 등 산업자금의 공급 • 기업구조조정, 컨설팅 등 기업가치 제고 업무 • 예수금 및 산업금융채권 발행 등 산업자금의 조달		

기획재정위원회 (6)

한국원산지 정보원	주무부처	관세청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관세법」 제233조의2	설립일	2023.07.03.
	인력현황(정원)	48명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주요기능	-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제도·정책·활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관련 교육·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사업		
한국조폐공사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기관유형	준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한국조폐공사법」	설립일	1951.10.01.
	인력현황(정원)	1,410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기능	- 화폐류, 보안인쇄제품, 보안용지 및 특수압인 제품 제조 - ID제품 및 위변조방지 관련 제품 제조 - 은행권, 은행권용지, 주화, 잉크 및 ID 카드 등의 해외수출		
한국재정정보원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한국재정정보원법」	설립일	2016.07.01.
	인력현황(정원)	299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및 보고금의 예탁·지급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재정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정보의 생산·분석 및 제공		
한국수출입은행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수출입은행법」	설립일	1976.07.01.
	인력현황(정원)	1,323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요기능	-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 제공 - 대외경제협력기금 및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관리 및 자금지원		
한국투자공사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투자공사법」	설립일	2005.07.01.
	인력현황(정원)	328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정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에서 위탁받은 자산의 효율적 운용 - 국내 금융 산업 발전 지원		

(재)한국통계 정보원	주무부처	통계청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일	2011.03.24.
	인력현황(정원)	170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주요기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운영·유지관리 사업 • 데이터 수집·구축, 처리·분석, 보급 및 운영·유지관리 사업 • 통계정보의 활용·확산, 인식제고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교육위원회 (22)

한국장학재단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설립일	2009.05.07.
	인력현황(정원)	522명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주요기능	•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3조	설립일	1997.05.07.
	인력현황(정원)	202명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주요기능	•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 훈련 • 진료사업 • 임상연구 및 치의학계 관련 연구		
강원대학교병원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설립일	2000.05.18.
	인력현황(정원)	1,905명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주요기능	•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 훈련 •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 임상연구 및 의학계 관련 연구		
경북대학교병원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설립일	1907.02.10.
	인력현황(정원)	5,539명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주요기능	•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 훈련 •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 임상연구 및 의학계 관련 연구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3조	설립일	2016.06.01.
	인력현황(정원)	220명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주요기능	•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 훈련 •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구강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 임상연구 및 치의학계 관련 연구		

경상국립 대학교병원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설립일	1987.02.21.
	인력현황(정원)	4,116명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주요기능	•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 훈련 •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 임상연구 및 의학계 관련 연구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평생교육법」 제19조	설립일	2008.02.15.
	인력현황(정원)	174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 국내외 평생교육기관·단체 간 연계 및 협력체제의 구축		
동북아역사재단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동북아역사재단법」	설립일	2006.09.22.
	인력현황(정원)	116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요기능	• 동북아시아의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부산대학교병원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설립일	1956.11.01.
	인력현황(정원)	6,981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서구
	주요기능	•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 훈련 •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 임상연구 및 의학계 관련 연구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설립일	2011.09.01.
	인력현황(정원)	287명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주요기능	•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 훈련 •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 임상연구 및 치의학계 관련 연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설립일	1974.01.11.
	인력현황(정원)	254명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주요기능	- 부담금의 징수,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 교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기금증식을 위한 투자 및 소유부동산 활용 직접 운영 사업		
서울대학교병원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설립일	1978.07.15.
	인력현황(정원)	8,495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요기능	-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 훈련 -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 임상연구 및 의학계 관련 연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3조	설립일	2004.09.01.
	인력현황(정원)	670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요기능	-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 훈련 -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 해외진출 - 임상연구 및 치의학계 관련 연구		
전남대학교병원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5조	설립일	1993.03.27.
	인력현황(정원)	5,523명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주요기능	-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 훈련 -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의료연구개발업,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 임상연구 및 의학계 관련 연구		
전북대학교병원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5조	설립일	1994.07.04.
	인력현황(정원)	3,192명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주요기능	-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 훈련 -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 임상연구 및 의학계 관련 연구		

제주대학교병원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설립일	2001.11.01.
	인력현황(정원)	2,016명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요기능	•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 훈련 •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 임상연구 및 의학계 관련 연구		
충남대학교병원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설립일	1972.07.01.
	인력현황(정원)	5,070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주요기능	•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 훈련 •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 임상연구 및 의학계 관련 연구		
충북대학교병원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설립일	1991.07.20.
	인력현황(정원)	2,675명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주요기능	•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 훈련 •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 임상연구 및 의학계 관련 연구		
한국고전번역원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고전번역원법」	설립일	2007.11.23.
	인력현황(정원)	142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요기능	• 고전 문헌의 수집·정리 및 연구 • 고전 문헌의 편찬·번역 및 보급 • 고전 문헌의 정리·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설립일	1999.04.22.
	인력현황(정원)	337명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주요기능	• 교육·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자료 제작·조사·수집·관리와 이의 활용을 위한 연구 •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운영 • 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표준화 및 품질관리		

한국사학 진흥재단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설립일	1989.12.04.
	인력현황(정원)	131명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주요기능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사업 •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한국학 중앙연구원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일	1978.06.30.
	인력현황(정원)	272명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주요기능	• 한국문화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각종 연구기획 및 사업의 지원·관리 • 국내외 한국학 분야 연구자 및 교수 요원 양성 • 한국 고전 자료의 수집·연구·번역 및 편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6)

(재)우체국 금융개발원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일	1966.04.30.
	인력현황(정원)	851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요기능	- 우체국예금·보험 상품 개발 - 우체국보험 청약 지급심사 및 사고조사 - 우체국보험기금 재산의 수탁관리		
(재)우체국 물류지원단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일	1980.08.26.
	인력현황(정원)	1,481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요기능	- 우편물 운송, 발착, 방문접수사업 및 집배사업 - 국제물류주선사업 - 우정 종사원 교육사업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전파법」 제66조	설립일	1972.07.21.
	인력현황(정원)	544명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주요기능	- 무선국 검사, 전파파 강도측정, 국가기술자격검정 등 정부위탁 업무수행 - 주파수 발굴·확보, 전파정보 개방 등 전파자원 개발 및 이용촉진 지원 -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징수·운용 및 기금사업 관리		
한국연구재단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한국연구재단법」	설립일	2009.06.26.
	인력현황(정원)	626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기능	-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 학술 및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개발 지원		
한국인터넷 진흥원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정보통신망법」 제52조	설립일	2009.07.23.
	인력현황(정원)	767명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주요기능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처리, 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연구, 보호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	설립일	1987.01.30.
	인력현황(정원)	716명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주요기능	- 지능정보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 국가기관 등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 관련 전문기술 지원 - 초연결지능정보통신 기반 구축·운영 지원		
(재)우체국 시설관리단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일	2000.11.23.
	인력현황(정원)	2,279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요기능	- 우정사업 부동산 시설 유지관리·위생관리 사업 - 우정사업 부동산 경비사업(청사, 금융창구, 안내, 주차관리 등)		
(재)한국우편 사업진흥원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일	1930.12.03.
	인력현황(정원)	504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요기능	- 우체국쇼핑 운영 및 온라인우편시스템 개발·유지보수 - 우편고객센터 운영 및 우체국 고객관리 활동 지원		
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법」	설립일	2012.12.31.
	인력현황(정원)	52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요기능	- 공공연구성과 활용 확산과 연구 산업 진흥을 통한 과학기술의 사업화 촉진 - 공공연구성과 맞춤형 실용화·창업 지원		
국립광주과학관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과학관법」	설립일	2013.07.23.
	인력현황(정원)	143명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주요기능	- 과학기술 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 과학기술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국립대구과학관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과학관법」 제6조의2	설립일	2013.06.24.
	인력현황(정원)	153명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요기능	• 전시, 교육, 특별전 등을 통한 과학기술 문화 확산 • 과학기술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전시 •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연구		
국립부산과학관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과학관법」 제6조의2	설립일	2015.07.13.
	인력현황(정원)	145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요기능	•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과학기술 전시기법 및 전시품의 개발·운영·보급 • 부산·울산·경남의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대중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보급 • 그 밖의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초과학연구원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제과학벨트법」 제4조	설립일	2011.11.21.
	인력현황(정원)	443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기능	• 기초과학연구로 기존 대학이나 출연(연)과 차별화된 대형 장기 집단 연구 수행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글로벌 기초과학 네트워크화 •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안정적 연구지원을 통한 차세대 기초과학 연구리더 육성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연구개발특구법」 제46조	설립일	2005.09.01.
	인력현황(정원)	170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기능	•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 특구육성사업, 제도지원, 특구개발 관리, 특구 인프라 지원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	설립일	2009.08.24.
	인력현황(정원)	458명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주요기능	• 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 • 정보통신기업의 창업·성장 등의 지원 •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설립일	1999.02.01.
	인력현황(정원)	317명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주요기능	-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 수립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조사·분석·평가 및 성과확산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한국과학 창의재단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설립일	1967.12.21.
	인력현황(정원)	180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요기능	- 과학기술문화활동,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 - 대중매체를 통한 과학기술 홍보, 과학기술 문화 확산 사업 운영 - 과학문화·예술 등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한국나노기술원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설립일	2003.12.23.
	인력현황(정원)	90명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주요기능	- 산학연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 전문인력의 양성 -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한국데이터 산업진흥원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일	1993.02.04.
	인력현황(정원)	97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 기반 마련 -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원		
한국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재단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공익법인법」 제4조	설립일	2013.01.04.
	인력현황(정원)	45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요기능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활용 종합지원기관 -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훈련·연수 및 상담		

한국원자력 의학원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방사선이용법」 제13조의2	설립일	1963.12.17.
	인력현황(정원)	1,378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요기능	•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 방사선 의학에 관한 정책연구 •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분배 및 연구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유형	준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설립일	2012.05.23.
	인력현황(정원)	314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방송광고 판매대행 • 방송통신광고 진흥 관련 사업 •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시청자 미디어재단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방송법」 제90조의2	설립일	2015.05.15.
	인력현황(정원)	275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요기능	•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및 권익증진 • 장애인의 방송 시청 및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 지원 • 국민의 창의적 미디어활용 지원 및 미디어 창작 인력양성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설립일	1990.02.14.
	인력현황(정원)	631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기능	•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 및 교육·국제협력 지원 • 방사선방호에 관한 기술 지원 및 환경방사능에 관한 조사·평가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	설립일	2012.11.06.
	인력현황(정원)	83명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주요기능	•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수요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 원전 성능검증 안전·신뢰성 향상을 위한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관리 •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원자력안전법」 제6조	설립일	2006.06.30.
	인력현황(정원)	129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기능	• 핵물질 및 계량관리에 관한 심사 및 검사 •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 이행 • 원자력통제 관련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		

외교통일위원회 (5)

한국국제협력단	주무부처	외교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한국국제협력단법」	설립일	1991.04.01.
	인력현황(정원)	621명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주요기능	• 개발도상국을 위한 자금·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사업 • 국내외 민간단체, 외국의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 상위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 홍보와 그 밖의 부대사업		
한국국제교류재단	주무부처	외교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설립일	1991.12.30.
	인력현황(정원)	149명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주요기능	•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인사의 파견 및 초청 •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주무부처	통일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일	2007.05.18.
	인력현황(정원)	40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정부 위탁사업 수행 • 정부에 대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대책 건의 •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조사·연구·분석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주무부처	통일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30조	설립일	2010.09.27.
	인력현황(정원)	172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기능	• 지역사회 초기정착 및 의료·생활안정 지원 • 창업·취업지원, 직업역량강화 등 자립 자활 지원 • 탈북청소년 보호·교육시설 지원 및 통일미래 인재양성		
재외동포협력센터	주무부처	재외동포청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재외동포기본법」	설립일	2023.06.05.
	인력현황(정원)	38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요기능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 •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 •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국방위원회 (5)

국방전직교육원	주무부처	국방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방전직교육원법」	설립일	2015.01.01.
	인력현황(정원)	42명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주요기능	- 전직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취업역량 제고 사업 - 취업정보의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촉진관련 사업		
전쟁기념사업회	주무부처	국방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전쟁기념사업회법」 제3조	설립일	1989.01.31.
	인력현황(정원)	234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요기능	- 전쟁기념관 관리 운영 - 전쟁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한국국방연구원	주무부처	국방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국방연구원법」	설립일	1987.03.02.
	인력현황(정원)	510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요기능	-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 국방인력·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국방과학연구소	주무부처	방위사업청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조	설립일	1970.08.06.
	인력현황(정원)	3,435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기능	-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 및 관련기술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 - 군의 무기체계 및 관련기술에 대한 기술검토·분석·지원 - 민군기술협력사업 및 민간장비 시험·평가지원 등		
국방기술품질원	주무부처	방위사업청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방위사업법」 제32조	설립일	2006.02.06.
	인력현황(정원)	1,051명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주요기능	- 군수품 품질보증 및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 - 군수품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 - 군수품 시험의 수행 및 군수품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행정안전위원회 (6)

한국도로 교통공단	주무부처	경찰청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조	설립일	1954.02.12.
	인력현황(정원)	3,041명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주요기능	•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응역 •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관리 대행 •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검사·교정·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한국소방산업 기술원	주무부처	소방청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소방산업법」 제14조	설립일	1977.06.01.
	인력현황(정원)	322명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주요기능	•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 탱크안전성능시험		
공무원연금공단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기관유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공무원연금법」 제1조 및 제4조	설립일	1982.02.01.
	인력현황(정원)	693명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주요기능	• 비용 징수 및 급여 지급 등 연금업무 • 재해보상급여 지급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등 재해보상업무 • 금융상품 투자, 연금대출, 주택임대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 등 자금운용업무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승강기안전관리법」 제55조	설립일	2016.07.01.
	인력현황(정원)	1,668명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주요기능	•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재)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일	2014.06.03.
	인력현황(정원)	52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요기능	•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도순례 등 위령사업 • 해외 추도 공간 조성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 조사·연구·학술사업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복지지원, 역사관 운영·관리 등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설립일	2001.11.12.
	인력현황(정원)	70명	소재지	경기도 의왕시
	주요기능	•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 • 민주화운동관련 사료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및 조사·연구 •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4)

국가유산진흥원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 「매장유산법」 제11조제1항	설립일	1980.04.01.
	인력현황(정원)	395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요기능	- 공연·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 -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 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그랜드코리아 레저(주)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준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상법」 제4장	설립일	2005.09.06.
	인력현황(정원)	1,771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요기능	- 외국인 카지노 사업 수행 - 적극적인 외래 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을 통한 관광수지 개선 - 일자리 창출 및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제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설립일	1989.04.20.
	인력현황(정원)	1,490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요기능	-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와 부속 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운영 사업,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한국관광공사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한국관광공사법」	설립일	1962.06.26.
	인력현황(정원)	759명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주요기능	- 국제관광 진흥 - 국민관광 진흥 -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일	2006.01.12.
	인력현황(정원)	73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요기능	- 예술 유통구조의 체계화 및 활성화 지원 - 문화예술기관·단체 운영 및 경영 관련 컨설팅 - 문화예술 경영 인력 양성 및 지원		

게임물관리 위원회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설립일	2013.12.23.
	인력현황(정원)	101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요기능	•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아케이드게임물, 성인용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관리 •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제작·유통 또는 정상적인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점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설립일	2004.07.20.
	인력현황(정원)	80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요기능	• 국립박물관 공연장 운영 • 문화예술 창작품,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제작·보급 • 문화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출판사업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재단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아시아문화도시법」 제28조	설립일	2022.01.17.
	인력현황(정원)	156명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주요기능	•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유통 •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제작·보급		
국악방송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악진흥법」 제17조	설립일	2024.11.21.
	인력현황(정원)	76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기능	• 국악 프로그램의 제작 및 운영 • 국악의 창작·교육·연구 및 대중화 • 국내외 국악프로그램의 교류·지원, 그 외 국악방송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사업		
국제방송 교류재단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일	1996.04.10.
	인력현황(정원)	227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요기능	•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제사회 이해증진을 위한 해외 위성방송 사업 • 주한외국인 한국이해 증진 및 내국인 세계화의식 제고를 위한 방송사업 • 해외 방송사와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대한장애인 체육회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설립일	2005.11.25.
	인력현황(정원)	144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요기능	- 가맹단체 및 시도지회의 지원 육성 및 종목별·유형별 장애인체육 지원·육성 - 패럴림픽대회 등 국제종합경기대회에 선수단 파견 및 지원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등 각종 종합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대한체육회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설립일	1920.07.13.
	인력현황(정원)	282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요기능	- 체육회 회원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지원 - 각종 종합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개최, 국제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 -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세종학당재단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어기본법」 제19조의2	설립일	2012.10.24.
	인력현황(정원)	101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요기능	-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기관 대상 세종학당 지정·지원 -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한국문화교육을 위한 온라인 누리집 개발·운영 -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스포츠윤리센터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설립일	2020.08.05.
	인력현황(정원)	151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기능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연구 및 예방교육		
영상물등급 위원회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영화비디오법」 제71조	설립일	1999.06.07.
	인력현황(정원)	52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요기능	- 영화·비디오물에 대한 연령별 등급분류 - 영화·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 -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영화진흥위원회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영화비디오법」 제71조	설립일	1973.04.03.
	인력현황(정원)	137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요기능	-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예술의전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설립일	1987.01.07.
	인력현황(정원)	379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요기능	- 예술의전당 운영 -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 문화예술 교육사업		
태권도진흥재단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태권도법」 제20조	설립일	2005.07.01.
	인력현황(정원)	89명	소재지	전라북도 무주군
	주요기능	- 태권도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태권도 보존, 보급, 홍보에 관한 사업 -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일	2010.04.01.
	인력현황(정원)	68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요기능	공예·디자인·전통생활문화의 확산과 진흥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설립일	2013.08.28.
	인력현황(정원)	92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한국문학번역원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문학진흥법」 제13조	설립일	1996.05.06.
	인력현황(정원)	58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요기능	• 한국문학의 번역·출판사업 • 한국문학 번역가 양성사업 •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설립일	2002.12.04.
	인력현황(정원)	140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요기능	•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 문화 관광을 위한 조사·평가·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및 부칙 제2조	설립일	2005.02.03.
	인력현황(정원)	148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기능	•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및 연수 • 학교, 교육시설·단체 간 상호 연계 협력망 구축 및 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20조	설립일	2005.08.26.
	인력현황(정원)	262명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주요기능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연수 사업이나 활동 •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한국문화정보원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23조	설립일	2002.12.23.
	인력현황(정원)	65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기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 •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 법·제도, 기술의 기획·조사·연구·개발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상법」 제288조	설립일	1984.01.24.
	인력현황(정원)	135명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주요기능	• 골프장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한국언론 진흥재단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설립일	2010.02.01.
	인력현황(정원)	218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신문의 발행·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 • 독자 권익보호 및 언론공익사업, 읽기문화 진흥 등 미디어교육 사업		
한국영상자료원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영화비디오법」 제34조	설립일	1974.01.18.
	인력현황(정원)	98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기능	• 영화필름 등의 제출을 통한 수집 및 보상 • 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문헌·음향자료 등 수집 및 보존·복원 • 영상예술의 향상을 위한 학술연구, 간행물의 발간 및 교육사업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예술인복지법」 제8조	설립일	2012.11.19.
	인력현황(정원)	45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한국저작권 보호원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저작권법」 제122조의2	설립일	2016.09.30.
	인력현황(정원)	114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기능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명령 심의 및 시정권고·시정명령 요청		

한국저작권 위원회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저작권법」 제112조	설립일	2009.07.23.
	인력현황(정원)	157명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주요기능	•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및 분쟁의 알선·조정 •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국체육 산업개발(주)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상법」 제3편 제4장	설립일	1990.07.25.
	인력현황(정원)	1,171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요기능	• 올림픽시설물, 경륜·경정시설물 유지 및 관리 •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 • 올림픽시설 대관 및 부대사업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설립일	2012.07.27.
	인력현황(정원)	94명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주요기능	•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전자출판의 육성 지원 및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한국콘텐츠 진흥원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설립일	2009.05.07.
	인력현황(정원)	535명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주요기능	•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성과 확산 등 •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의 콘텐츠 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5)

한국마사회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준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한국마사회법」	설립일	1949.09.29.
	인력현황(정원)	2,866명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주요기능	- 경마사업 시행 - 말 산업 및 축산 발전 사업 - 국민의 여가 증진		
축산물품질평가원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축산법」 제36조	설립일	2001.07.27.
	인력현황(정원)	474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축산물 등급판정 -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수행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설립일	1967.12.01.
	인력현황(정원)	927명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주요기능	-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유도 및 자금기반 강화 -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등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 수출품목 조직화 및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 등 농수산물품 수출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농어촌공사법」 제3조	설립일	2000.01.01.
	인력현황(정원)	6,580명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주요기능	- 안정적 곡물 공급기반 구축 및 농지 이용가치 제고 - 지속가능한 농어촌 용수관리 및 재난·재해 예방 - 농어가 소득증대,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재)축산환경관리원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가축분뇨법」 제38조의2	설립일	2015.05.08.
	인력현황(정원)	48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가축분뇨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컨설팅, 퇴비·액비 품질관리 -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및 퇴비·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 축산환경 지도·점검, 축산환경 조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설립일	2003.06.27.
	인력현황(정원)	1,287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가축의 예방접종 전염병 예방 등 가축 방역사업 - 축산물의 위생검사 등 축산물 위생사업 - 검역시행장 관리수의사 업무 등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		
국제식품 검역인증원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식품방역법」 제29조의2	설립일	2012.02.22.
	인력현황(정원)	56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주요기능	- 선박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역 - 항만지역의 AGM 예찰, 방제 작업 - 수입재식용식품 검역장소 관리		
농림수산물 교육문화정보원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농업식품기본법」 제11조의2	설립일	2012.05.23.
	인력현황(정원)	169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육성 - 농업·농촌의 정보화 촉진 - 농업·농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홍보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설립일	2009.10.02.
	인력현황(정원)	98명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주요기능	-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 농림식품과학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 지원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농업식품기본법」 제63조의2	설립일	2004.05.19.
	인력현황(정원)	86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요기능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운용·관리,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 농어업재해보험기금 관리·운용,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관리·감독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	설립일	2011.02.25.
	인력현황(정원)	114명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주요기능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한식진흥원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식진흥법」 제16조	설립일	2010.03.10.
	인력현황(정원)	44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요기능	• 한식 진흥 기반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등의 사업 •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 •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		
한국농업기술 진흥원	주무부처	농촌진흥청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농촌진흥법」 제33조	설립일	2009.09.07.
	인력현황(정원)	332명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주요기능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 및 알선, 조사 및 연구 •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주무부처	산림청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	설립일	2016.04.18.
	인력현황(정원)	463명	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기능	• 산림복지시설 조성·운영 및 서비스제공 • 산림교육·산림치유 서비스 활성화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관리 및 교육,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 및 연수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주무부처	산림청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19	설립일	2017.05.17.
	인력현황(정원)	453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생물의 보전 및 활용 • 정원 관련 소재 및 기술개발 등 정원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		

한국등산·트레킹 지원센터	주무부처	산림청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설립일	2008.07.21.
	인력현황(정원)	43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요기능	• 등산트레킹교육 및 국제협력 사업 • 숲길 및 그 안내시설 등 등산·트레킹 관련 시설의 조성·정비·운영·관리 사업 • 등산·트레킹기술의 개발 및 등산·트레킹시설의 표준화 사업		
한국임업진흥원	주무부처	산림청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임업진흥법」 제29조의2	설립일	2012.01.26.
	인력현황(정원)	267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요기능	•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유통 정보 지원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품질관리 및 품질인증 • R&D사업 관리·평가 및 성과활용, 임업기술 사업화 지원		
한국차산 기술협회	주무부처	산림청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사방사업법」 제22조의2	설립일	2009.01.05.
	인력현황(정원)	94명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주요기능	•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과 관련한 조사 및 시설점검·안전진단 •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복구 등 지원		
해양환경공단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준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설립일	2008.01.21.
	인력현황(정원)	739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요기능	•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 등의 배치·설치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설립일	2019.07.01.
	인력현황(정원)	544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방송·기술개발 업무 •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 및 선박 검사 제도의 연구 •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업무 등		

국립해양과학관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해양과학관법」 제3조	설립일	2020.05.20.
	인력현황(정원)	43명	소재지	경상북도 울진군
	주요기능	•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교육 • 해양과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해양과학 관련 교원 연수 등 해양교육 전문 인력 양성		
국립해양박물관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설립일	2012.07.09.
	인력현황(정원)	63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요기능	• 박물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 박물관 자료의 조사·연구 • 박물관 자료에 대한 교육		
국립해양생물 자원관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해양생물자원관법」	설립일	2015.04.20.
	인력현황(정원)	223명	소재지	충청남도 서천군
	주요기능	•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조사·연구 • 해양생물자원의 전시 및 교육 •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정보의 수집·등록·보존·이용 및 평가		
부산항만공사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항만공사법」	설립일	2004.01.16.
	인력현황(정원)	274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주요기능	•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여수광양 항만공사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항만공사법」 제4조 제2항	설립일	2011.08.19.
	인력현황(정원)	182명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주요기능	•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 항만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울산항만공사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항만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	설립일	2007.07.05.
	인력현황(정원)	126명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주요기능	•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관리·운영 • 위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인천항만공사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항만공사법」	설립일	2005.07.11.
	인력현황(정원)	281명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요기능	•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 항만재개발사업 및 마리나 항만시설 조성사업		
한국수산 자원공단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설립일	2010.11.18.
	인력현황(정원)	347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요기능	• 바다숲·수산자원 증대 수산종과 자원관리 사업 등의 수산자원조성사업 •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등 연근해 어업 구조개선 지원 • 수산자원 정책지원 및 연구사업		
한국어촌 어항공단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어촌·어항법」 제57조	설립일	1994.03.30.
	인력현황(정원)	245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요기능	• 어촌관광·귀어귀촌 활성화 • 어촌어항재생·개발 • 국가어항관리 및 어장환경개선		
한국항로표지 기술원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항로표지법」 제41조	설립일	2018.07.18.
	인력현황(정원)	64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국가부표 수리 및 품질관리 • 등대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의 운영 •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설립일	2012.07.01.
	인력현황(정원)	750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요기능	•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 •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 해양과학기술기 등 해양인프라 구축 및 운영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설립일	1998.01.01.
	인력현황(정원)	305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요기능	• 해양수산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국가자격시험 관리 • 해양수산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증진을 위한 사업 • 선박운항, 어업기술의 연구개발		
한국해양조사협회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해양조사정보법」 제54조	설립일	2006.01.31.
	인력현황(정원)	54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요기능	•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관리 및 이전 • 해양조사기술, 항해안전, 해양관측, 해양재해 등에 관한 자료·정보의 수집·제공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해양공간계획 포함)에 관한 자문 및 평가		
한국해양진흥공사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조	설립일	2018.07.05.
	인력현황(정원)	178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요기능	•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취득하거나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설립일	2005.11.16.
	인력현황(정원)	98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요기능	• 해양수산과학기술 정책 수립 지원 및 수요조사, 동향분석, 예측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기술가치 평가 •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 기술이전, 사업화 및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8)

(주)강원랜드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폐광지역법」	설립일	1998.06.29.
	인력현황(정원)	3,689명	소재지	강원도 정선군
	주요기능	• 카지노 사업 •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복지 증진 • 폐광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 관광중심지로의 발전, 관광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		

한국가스공사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한국가스공사법」	설립일	1983.08.18.
	인력현황(정원)	4,251명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주요기능	• 도시가스의 제조·공급과 부산물의 정제·판매 •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		

한국남동발전(주)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설립일	2001.04.02.
	인력현황(정원)	2,882명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주요기능	• 전력자원의 개발 •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한국남부발전(주)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설립일	2001.04.02.
	인력현황(정원)	2,713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주요기능	• 전력자원의 개발 •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한국동서발전(주)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설립일	2001.04.02.
	인력현황(정원)	2,596명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주요기능	• 전력자원의 개발 • 발전 및 이와 관계되는 사업		

한국서부발전(주)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설립일	2001.04.02.
	인력현황(정원)	2,843명	소재지	충청남도 태안군
	주요기능	• 전력자원의 개발 •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한국석유공사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한국석유공사법」	설립일	1979.03.03.
	인력현황(정원)	1,449명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주요기능	•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 •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한국수력원자력(주)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설립일	2001.04.02.
	인력현황(정원)	12,794명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주요기능	• 전력자원의 개발 •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한국전력공사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한국전력공사법」	설립일	1961.07.01.
	인력현황(정원)	23,423명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주요기능	• 전력자원의 개발 •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한국중부발전(주)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0조	설립일	2001.04.02.
	인력현황(정원)	2,890명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주요기능	• 전력자원의 개발 •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한국지역 난방공사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설립일	1985.11.01.
	인력현황(정원)	2,133명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주요기능	•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사업		
(주)한국가스 기술공사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준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한국가스공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설립일	1993.05.27.
	인력현황(정원)	2,358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기능	• 가스설비 등 플랜트 유지보수, 개·보수 공사업 • 천연가스 주배관망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플랜트 사업 관련 등 용역사업		
한국광해 광업공단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준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설립일	2021.09.10.
	인력현황(정원)	790명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주요기능	• 광해광업 전주기 민간지원 • 광산 및 폐광지역 발전 • 자원안보 기여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준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상법」 제317조	설립일	1975.10.01.
	인력현황(정원)	2,355명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주요기능	• 원자력, 화력 등 신규발전소 설계(발전소 독자 설계모델 확보) • 발전소 성능개선, 해체(사후관리 기술서비스) • 발전소 EPC사업(엔지니어링 핵심역량 기반 설계-구매-시공, 시운전 일괄 수행)		
한전KDN(주)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준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상법」 제317조	설립일	1992.01.23.
	인력현황(정원)	3,021명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주요기능	• 전력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통합 및 시스템 운영 사업 • 지능형 전력망(Smart-Grid) 관련 사업		

한전KPS(주)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준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상법」 제317조	설립일	1984.04.01.
	인력현황(정원)	6,669명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주요기능	- 발전·송전설비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진단 및 정비 - 가스터빈 부품 수리, 원자력 핵심설비 안정성 검사 및 진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무역보험법」 제37조	설립일	1992.07.07.
	인력현황(정원)	833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요기능	- 용역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품 및 자본재 수출·수입, 환변동위험 관리 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무역보험 운영 -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바탕으로 무역보험 인수, 적립된 기금 운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설립일	1962.06.21.
	인력현황(정원)	1,293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요기능	- 무역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 조사·개척 및 정보 보급 - 국내의 산업·상품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지원 -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	설립일	1974.01.11.
	인력현황(정원)	1,747명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주요기능	- 자율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 검사·교육·시공감리·점검·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및 인증사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검증업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	설립일	2009.05.04.
	인력현황(정원)	404명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주요기능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과제 기획·평가·관리 - 기술개발과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 산업기술개발사업 결과 조사 및 관리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설립일	2009.05.04.
	인력현황(정원)	427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요기능	-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 산업기술혁신 기반조성 - 산업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한국산업단지공단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산업집적법」 제45조의17	설립일	1997.01.10.
	인력현황(정원)	628명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주요기능	- 산업단지 규제혁신 및 안전강화 -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 산업입지, 집적시설 공급 및 산업정책 연구		
한국석유관리원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석유사업법」 제25조의2	설립일	1983.11.07.
	인력현황(정원)	449명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주요기능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및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		
한국에너지공단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	설립일	1980.07.04.
	인력현황(정원)	755명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주요기능	-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확대 지원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향상 및 안전관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8조	설립일	2009.01.01.
	인력현황(정원)	412명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주요기능	- 방사성폐기물 운반·저장·처리·처분, 관련 시설의 전반 과정 관리 -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자료조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기술지원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한국전기 안전공사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설립일	1974.06.07.
	인력현황(정원)	3,220명	소재지	전라북도 완주군
	주요기능	•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 및 기술지원 •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 및 안전진단 등의 업무 • 전기·전자제품 등 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 업무		
한국전력거래소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전기사업법」 제35조	설립일	2001.04.02.
	인력현황(정원)	524명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주요기능	• 전력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대한석탄공사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대한석탄공사법」	설립일	1950.11.01.
	인력현황(정원)	187명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주요기능	• 석탄광산 개발, 생산 및 수급조절 •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개발 및 보급 • 석탄 및 석탄 가공제품의 매입·판매 및 수출입, 석탄 비축자산 관리 등		
무역안보관리원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대외무역법」 제25조	설립일	2007.06.05.
	인력현황(정원)	72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요기능	• 전략물자 판정 •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관련 조사, 연구 및 국제협력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구축 및 운영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일	2006.12.26.
	인력현황(정원)	52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요기능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시행 • 에너지복지 분야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통계작성·분석·관리)		

한국디자인진흥원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	설립일	1970.05.19.
	인력현황(정원)	186명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주요기능	• 디자인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전시사업 • 출판 및 홍보사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지능형로봇법」 제41조	설립일	2010.06.24.
	인력현황(정원)	122명	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주요기능	•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개발 • 로봇산업 동향조사 및 출판·전시·홍보사업, 로봇산업 통계작성·실태조사 • KS인증(로봇)사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	설립일	1966.04.13.
	인력현황(정원)	906명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주요기능	• 시험평가 및 인증사업 • 국가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 중소기업 기술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의2	설립일	2009.05.04.
	인력현황(정원)	236명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주요기능	•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 시험·분석, 평가·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 사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에너지법」 제13조	설립일	2009.05.04.
	인력현황(정원)	197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요기능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운용·관리 •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한국에너지정보 문화재단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일	1992.03.25.
	인력현황(정원)	35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요기능	- 에너지에 관한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그 보급을 위한 출판사업과 전시관의 설치 운영 - 에너지 개발의 사회적, 심리적 영향 등에 관한 학문적 조사연구		
한국전력 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30조	설립일	2011.09.19.
	인력현황(정원)	67명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요기능	- 전력 및 원자력산업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실무 전문 인력 양성 -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를 통한 세계적 에너지 변화 흐름 주도 -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육성을 통한 한국 원전 해외수출 이바지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	설립일	2018.09.21.
	인력현황(정원)	101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요기능	-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 수입·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 제품의 수거 등의 이행점검		
한국탄소산업 진흥원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탄소소재법」 제9조의2	설립일	2003.03.14.
	인력현황(정원)	105명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주요기능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시장 창출·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등의 추진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제품표준의 개발·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상법」 제317조	설립일	1982.11.11.
	인력현황(정원)	1,172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기능	- 원자력연료의 설계·제조·가공 - 비연료 노심구성품의 설계·제조		

한전MCS(주)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상법」 제317조	설립일	2019.03.25.
	인력현황(정원)	4,361명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주요기능	• 전기검침,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및 수금 관련 활동 • 전기 관련 설비 유지보수 및 점검 • 전력계량설비 시험 및 공사		
기술보증기금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설립일	1989.04.01.
	인력현황(정원)	1,586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주요기능	• 기술보증 및 구상권 관리 • 기술평가 • 보증연계투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소상공인법」 제17조 제1항	설립일	2014.01.01.
	인력현황(정원)	864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기능	• 소상공인 및 중소소매업 등 업종별 특화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및 융자 지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설립일	1979.01.30.
	인력현황(정원)	1,434명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주요기능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 글로벌화 및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CEO 육성		
(주)공영홈쇼핑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상법」 제4장	설립일	2015.03.05.
	인력현황(정원)	382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기능	• 유통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판매채널 지속 확대 • 판로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강화(상생소비 촉진, ESG경영기반 마련)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설립일	2000.08.07.
	인력현황(정원)	115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주요기능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전산망 구축 및 서비스 - 지역신용보증재단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재단법인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설립일	2008.02.19.
	인력현황(정원)	49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요기능	- 장애인의 창업지원 -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연수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	설립일	2002.01.22.
	인력현황(정원)	291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 조성 -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	설립일	2021.06.09.
	인력현황(정원)	116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요기능	- 중소·벤처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분석·평가 및 교육 - 중소·벤처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자문 및 정보 제공		

창업진흥원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	설립일	2019.10.24.
	인력현황(정원)	235명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기능	-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정책자금 융자 제외), 인력, 판로·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지원 -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보급, 창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한국벤처투자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설립일	2005.06.29.
	인력현황(정원)	163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요기능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설립일	1995.12.21.
	인력현황(정원)	297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요기능	• 중소소매유통지원(공동구매, 상품개발, 종합물류센터 및 가맹점사업 운영 등) • 중소기업 공공구매지원(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성능인증,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등)		

한국발명진흥회	주무부처	특허청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발명진흥법」 제52조	설립일	1994.12.26.
	인력현황(정원)	197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요기능	• 지식재산 핵심인재 양성 • 지식재산기반 기업 육성 • 지식재산 활용촉진 및 문화 확산		

한국지식재산 보호원	주무부처	특허청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발명진흥법」 제55조의2	설립일	2020.08.05.
	인력현황(정원)	119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요기능	•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반조성 •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 특허청장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주무부처	특허청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발명진흥법」 제51조	설립일	2005.12.09.
	인력현황(정원)	70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요기능	• 국내외 지재권 동향의 수집 및 분석 • 국내외 지재권 관련 정책, 법·제도의 연구 • 지식재산 정책 자문 및 건의		

한국특허기술 진흥원	주무부처	특허청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일	2022.08.04.
	인력현황(정원)	666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주요기능	- 지식재산 심사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 지식재산 정보의 활용·확산 등 진흥사업 - 기술평가, 기술거래 등 기술 컨설팅 사업		
한국특허전략 개발원	주무부처	특허청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산업재산정보법」 제25조	설립일	2020.08.05.
	인력현황(정원)	245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주요기능	-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지원 -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산업재산 창출 전략 지원 - 국가연구개발 산업재산 성과의 조사·분석 및 관리		
한국특허정보원	주무부처	특허청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산업재산정보법」 제24조	설립일	1995.07.07.
	인력현황(정원)	423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주요기능	- 특허넷 응용·기반시스템, 심사관용 검색시스템 및 IP정보통합센터 운영 -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및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 Plus) 운영 - SI기반 특허행정 혁신 및 데이터 정비·고도화		

보건복지위원회 (34)

국민연금공단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국민연금법」 제24조	설립일	1987.09.18.
	인력현황(정원)	7,430명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주요기능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연금 보험료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자금 대여, 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복지사업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설립일	2000.07.01.
	인력현황(정원)	3,957명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주요기능	•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평가기준 개발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 심사 •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해 위탁받은 업무		
국민건강 보험공단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설립일	2000.07.01.
	인력현황(정원)	16,156명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주요기능	•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 사회보험료 통합고지 및 징수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29조	설립일	2009.12.07.
	인력현황(정원)	751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요기능	• 보건복지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지원 • 보건복지 정책 개발 지원		
(재)한국보건 의료 정보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일	2019.09.24.
	인력현황(정원)	119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개발 및 활용 촉진 • 의료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자료 개발·지원 사업		

국가생명윤리 정책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일	2011.12.27.
	인력현황(정원)	77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요기능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책 개발·지원·교육, 공용 IRB 운영 • 생식세포, 유전자 등의 이용·연구 관련 정책 지원 및 불법거래 모니터링		
국립암센터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암관리법」	설립일	2000.03.22.
	인력현황(정원)	2,209명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주요기능	•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 암환자의 진료 • 암의 예방 및 암의 관리에 관한 홍보, 정보 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국립중앙의료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중앙의료원법」	설립일	2010.04.02.
	인력현황(정원)	1,814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 관리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첨단의료단지법」 제11조	설립일	2010.12.14.
	인력현황(정원)	406명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주요기능	• 첨단제품 개발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의료산업 경쟁력 확보 • 의료산업 연구 성과제고 및 성과확산 지원 •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의료산업 커뮤니티 주도		
대한적십자사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설립일	1905.10.27.
	인력현황(정원)	4,393명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주요기능	•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 희생자 구호사업 • 전시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 수재, 화재, 기근,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아동권리보장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설립일	2019.07.16.
	인력현황(정원)	172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획, 통계구축, 사례조사 및 정책분석 • 입양 관련 전반,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사후관리 관련 업무 •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업무 등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첨단의료단지법」 제11조	설립일	2010.12.15.
	인력현황(정원)	390명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주요기능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 • 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의료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유치·양성·활용에 대한 지원		
의료기관평가 인증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의료법」 제58조의11	설립일	2020.09.05.
	인력현황(정원)	75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요기능	• 의료기관 인증절차 운영(인증 신청·접수, 평가, 인증등급 결정 등) • 의료기관 대상 컨설팅 제공 등 인증제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인증제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		
재단법인 한국공공 조직은행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인체조직법」 제16조의3	설립일	2017.06.27.
	인력현황(정원)	66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고품질의 안전한 인체조직 공급을 위한 효율적인 인체조직 생산관리체계 구축 • 국내 인체조직 수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협력 및 분배 네트워크 구축 • 공공조직은행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규 이식재·가공기술 개발 강화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설립일	2019.07.16.
	인력현황(정원)	104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요기능	•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 취업·창업에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 기증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장기이식법」 제20조, 「인체조직법」 제16조의2	설립일	2017.04.01.
	인력현황(정원)	115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요기능	- 장기구득기관 및 조직지원기관 운영 - 뇌사자·사망자 등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기·조직기증 관리 공적 전담기구 운영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설립일	2014.07.29.
	인력현황(정원)	165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요기능	-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관리·운용의 지원 업무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설립일	2006.08.18.
	인력현황(정원)	100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요기능	- 개발도상국 및 외국,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등의 보건의료수준 향상 - 보건의료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노인복지법」	설립일	2005.12.27.
	인력현황(정원)	181명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주요기능	-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종합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설립일	2007.04.04.
	인력현황(정원)	274명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주요기능	-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종합계획 수립 -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공무원, 사회복지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보건복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콘텐츠의 개발·보급·관리, 전문가 및 강사 양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조	설립일	1999.02.06.
	인력현황(정원)	424명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주요기능	• 보건산업 기술의 개발과 그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 보건산업 정보 및 통계의 조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업 • 보건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벤처기업의 창업·육성 지원사업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보건 의료기술진흥법」 제19조	설립일	2008.12.23.
	인력현황(정원)	165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요기능	• 보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수집·분석·평가 및 경제성 분석 • 보건 의료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및 결과 보급·확산 •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법」	설립일	1992.04.20.
	인력현황(정원)	149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요기능	•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 국내외 보건 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한국보육진흥원	주무부처	교육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영유아보육법」 제8조	설립일	2009.12.23.
	인력현황(정원)	367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요기능	• 어린이집 평가, 품질관리 사업 지원 •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역량 강화 사업 지원 • 보육·양육 관련 콘텐츠 개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설립일	1952.02.15.
	인력현황(정원)	91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기능	• 정부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사회복지 증진 업무 수행 • 정부정책과 민간사업의 연계협력 조성 •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등 민·민 네트워크 허브 기능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자살예방법」 제12조의4	설립일	2021.01.06.
	인력현황(정원)	175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지원 • 자살실태조사 지원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의료분쟁조정법」 제6조	설립일	2012.04.09.
	인력현황(정원)	157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 의료사고 감정 •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등 자산관리·운영		
한국장애인 개발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설립일	1989.04.28.
	인력현황(정원)	385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요기능	•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정책개발, 국제협력 사업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한국한의학 진흥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의학육성법」 제13조	설립일	2019.06.12.
	인력현황(정원)	148명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주요기능	• 한의학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 한의학 관련 데이터 및 통계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의 지원		
식품안전정보원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식품위생법」 제67조	설립일	2009.06.25.
	인력현황(정원)	115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제공 •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 식품안전정보 수집·분석,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6	설립일	1992.04.22.
	인력현황(정원)	173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요기능	•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설립일	2017.02.13.
	인력현황(정원)	264명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주요기능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업 운영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 운영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 운영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의료기기법」 제42조	설립일	2012.05.18.
	인력현황(정원)	70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요기능	• 의료기기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국제규격 연구,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기술 지원 • 신개발의료기기를 제품화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지원 • 위험관리 등 품질관리체계와 허가·인증·신고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홍보·지원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약사법」 제68조의3	설립일	2012.01.06.
	인력현황(정원)	123명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주요기능	• 의약품 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 및 제공 • 의약품 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 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 규명		

환경노동위원회 (26)

한국수자원공사	주무부처	환경부	기관유형	준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한국수자원공사법」	설립일	1967.11.16.
	인력현황(정원)	6,377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요기능	• 수자원의 종합적 이용, 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 •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 산업단지·특수지역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관리		
국립공원공단	주무부처	환경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국립공원공단법」 제1조	설립일	1987.07.01.
	인력현황(정원)	2,651명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주요기능	• 국립공원의 보전, 국립공원의 야생동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복원 •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등		
국립생태원	주무부처	환경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국립생태원법」	설립일	2013.10.28.
	인력현황(정원)	623명	소재지	충청남도 서천군
	주요기능	• 생태조사연구·평가 등 법정위탁사업 수행, 생태계 서비스·외래생물 안전관리 • 동식물 생태전시 및 생태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콘텐츠 개발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증식 및 복원,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설치·운영		
한국환경공단	주무부처	환경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한국환경공단법」	설립일	2010.01.01.
	인력현황(정원)	3,233명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주요기능	•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배출 저감 등 환경 관련 국제협약 대응 •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등 환경시설 설치·운영 •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관련 정책 수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무부처	환경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설립일	2009.04.08.
	인력현황(정원)	662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요기능	• 환경기술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 환경표지 제도 운영 및 녹색제품 보급 촉진 • 기업 친환경경영, 저탄소경영 활성화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주무부처	환경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법」, 「생물자원관법」	설립일	2015.06.03.
	인력현황(정원)	214명	소재지	경상북도 상주시
	주요기능	- 담수생물 신종·미기록종 발굴, 생물표본 확보, 수장고 운영 등 - 담수생물다양성 조사, 담수멸종위기종 보전, 기후변화지표종·탄소종립 연구 등 - 담수생물자원 산업화 지원 및 전시·교육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주무부처	환경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수도권매립지공사법」	설립일	2000.07.22.
	인력현황(정원)	346명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주요기능	- 매립지의 기반시설 설치·관리 -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 폐기물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한국상하수도 협회	주무부처	환경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수도법」 제56조	설립일	2002.01.21.
	인력현황(정원)	76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요기능	- 상하수도 종사자의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 상하수도 기자재의 규격 및 표준 제정과 품질인증 업무 - 국내외 물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정책 개발		
한국수자원 조사기술원	주무부처	환경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일	2017.12.20.
	인력현황(정원)	170명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주요기능	- 하천의 관리 및 국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유역조사 - 홍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홍수피해 상황조사 - 수문조사종사자 교육 등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교육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주무부처	환경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생물자원관법」	설립일	2020.08.21.
	인력현황(정원)	185명	소재지	전라남도 목포시
	주요기능	- 도서·연안 및 그 인근 지역에 대한 생물자원의 조사·발굴 및 수장관리 - 도서·연안 생물자원(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등) 소재의 확보·배양·추출·분양·제공 - 도서·연안 생물자원의 보전·이용 기술개발, 실용화·사업화 지원, 그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보전원	주무부처	환경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설립일	2023.12.01.
	인력현황(정원)	238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요기능	• 대국민 환경교육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 강화·지원 사업 • 훼손된 자연환경,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 • 하천구역 손실보상업무, 측정대행계약관리, 조사·모니터링 사업		
근로복지공단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설립일	1995.05.01.
	인력현황(정원)	10,159명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주요기능	•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및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 산재보험 시설 설치·운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재활		
한국고용정보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설립일	2006.03.31.
	인력현황(정원)	525명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주요기능	•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설립일	1987.12.09.
	인력현황(정원)	2,230명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주요기능	•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설립일	1982.03.18.
	인력현황(정원)	1,882명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주요기능	• 기업 현장 수요 반영 맞춤형 인력양성 및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 국가자격 시행·관리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활용·확산 • 외국인 고용지원 및 해외 구인업체 개척·취업알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장애인고용법」 제43조	설립일	1990.09.01.
	인력현황(정원)	1,474명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주요기능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민간 기관 간 업무 연계 및 지원		
건설근로자 공제회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건설근로자법」 제9조	설립일	1997.12.09.
	인력현황(정원)	223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 지급, 가입사업주 및 피공제자 기록관리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 취업지원 등 - 건설근로자 생활자금 대부, 단체보험 가입, 각종 보조금 지급 등		
노사발전재단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노사관계발전법」 제6조	설립일	2007.04.05.
	인력현황(정원)	300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기능	-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 노사관계 진단·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평생직업능력법」, 동법 시행령	설립일	1998.02.05.
	인력현황(정원)	2,740명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요기능	- 국가기간산업과 신성장산업분야의 다기능기술자, 기능장 등 기술 인력 양성 - 일학습병행제 및 NCS확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역 교육훈련기관 혁신 지원		
한국고용노동 교육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설립일	2020.10.05.
	인력현황(정원)	118명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주요기능	-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설립일	1991.11.02.
	인력현황(정원)	639명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주요기능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실천공학기술자·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 훈련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교육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운영 및 보급사업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설립일	2010.12.31.
	인력현황(정원)	125명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주요기능	-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평가, 실태조사 -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한국잡월드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	설립일	2011.11.03.
	인력현황(정원)	65명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주요기능	- 직업 관련 자료·정보 전시 및 제공 - 청소년·청년 대상 직업교육프로그램, 교사 대상 직업지도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기후센터 (APEC 기후센터)	주무부처	기상청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20조	설립일	2005.06.09.
	인력현황(정원)	64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요기능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정보서비스와 기후변화 관련 기술 개발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차세대수치예보 모델개발사업단	주무부처	기상청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일	2020.09.01.
	인력현황(정원)	108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요기능	- 통합형수치예보모델 개발, 평가, 보급 - 통합형수치예보모델 국제공동연구 등 관련 제반 연구개발 - 통합형수치예보모델 개발과 응용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주무부처	기상청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설립일	2009.12.30.
	인력현황(정원)	162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주요기능	• 기상산업, 기상기술 육성과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조사·연구 • 기상산업, 기상기술, 기상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 기상산업, 기상기술,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 및 확산을 위한 홍보·전시·교육		

국토교통위원회 (29)

인천국제 공항공사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설립일	1999.02.01.
	인력현황(정원)	1,951명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주요기능	• 인천국제공항 개발 및 관리·운영과 주변지역 개발, 부대사업 및 기타 국가 위탁사업 • 공항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조사, 기타 부대사업 등 • 공항 건설·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 해외공항 건설·관리·운영, 주변지역 개발사업		
한국공항공사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한국공항공사법」 제1조	설립일	2002.03.02.
	인력현황(정원)	2,749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요기능	• 공항의 관리·운영사업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 •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관리·운영사업 •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한국도로공사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한국도로공사법」	설립일	1969.02.15.
	인력현황(정원)	9,075명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주요기능	•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및 유지관리 •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관리 • 관련 업무 연구 및 기술개발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준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제주특별법」 제166조	설립일	2002.05.15.
	인력현황(정원)	365명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요기능	•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사업 •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투자유치업무 •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지정면세점 등)		
주식회사 에스알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준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	설립일	2013.12.27.
	인력현황(정원)	700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요기능	• 철도여객운송사업 • 철도여객운송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준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주택도시보증법」 제16조	설립일	2015.07.01.
	인력현황(정원)	1,149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주요기능	-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보증업무 - 보증 이행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 공유형모기지 수탁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업무 및 자금운용·관리 업무		
한국부동산원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준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한국부동산원법」	설립일	1969.04.25.
	인력현황(정원)	1,183명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주요기능	- 부동산 가격공시 및 조사·통계 - 부동산 시장관리 및 소비자보호 - 부동산 산업 활성화 및 부동산 연구		
한국철도공사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준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한국철도공사법」 제1조	설립일	2005.01.01.
	인력현황(정원)	32,380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주요기능	- 철도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 철도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 판매, 정비 및 임대사업 - 철도 역사 및 역세권 개발 사업		
한국토지 주택공사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준시장형 공기업
	설립근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	설립일	2009.10.01.
	인력현황(정원)	8,872명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주요기능	-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사업 - 주택건설용지 개발, 도시재생 등 토지 및 도시개발사업 - 주택의 건설·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사업		
국가철도공단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국가철도공단법」	설립일	2004.01.01.
	인력현황(정원)	2,228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주요기능	-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 철도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국유재산의 개발·운영 - 철도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 집행		

국토안전관리원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조	설립일	2020.12.10.
	인력현황(정원)	1,095명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주요기능	•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한국교통안전공단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조	설립일	1981.07.01.
	인력현황(정원)	1,895명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주요기능	•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관리 및 연구 • 철도 항공 안전관리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조	설립일	1977.07.01.
	인력현황(정원)	4,566명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주요기능	• 공간정보, 지적제도발전에 관한 교육 및 연구·기술개발·표준화사업 •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지원에 관한 사업 •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적측량사업 및 지적재조사사업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일	2019.11.27.
	인력현황(정원)	83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요기능	• 공공측량 성과심사·검증 • 공간정보 품질 관련 정책 및 기술 연구·개발 •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지원		
국립항공박물관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립항공박물관법」	설립일	2019.12.23.
	인력현황(정원)	83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요기능	•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 박물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 • 박물관의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국도교통과학 기술진흥원	주무부처	국도교통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국도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	설립일	2002.12.30.
	인력현황(정원)	153명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주요기능	• 국도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건설교통 분야 신기술 인증·심사·관리 • 그 외 정부 관련 부처에서 위임·위탁받은 사업 관리 등		
새만금개발공사	주무부처	국도교통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새만금사업법」 제36조의2	설립일	2018.09.21.
	인력현황(정원)	107명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주요기능	• 새만금 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업 • 새만금 사업 자금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궤도사업 • 새만금 사업지역 내 국내외 투자 유치 업무 및 마케팅 홍보 사업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	주무부처	국도교통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3	설립일	2018.08.02.
	인력현황(정원)	126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요기능	• 관련법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추진 지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주무부처	국도교통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일	1978.04.18.
	인력현황(정원)	85명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요기능	• 건설기술인 교육사업 • 기능인력 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 • 국가기간산업 종사인력 교육사업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주무부처	국도교통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일	1997.12.23.
	인력현황(정원)	221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요기능	• 건설기계 검사(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 건설기계 형식신고 등(제작, 조립, 수입 건설기계에 대한 서면상 안전도 검토) •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총괄기관 업무 및 사고조사		

주택관리공단(주)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2항	설립일	1998.09.28.
	인력현황(정원)	2,769명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주요기능	- 공동주택의 관리, 유지 보수 및 운영 - 공공임대주택 임대업무 수탁 - 공공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		
코레일관광개발(주)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철도공사법」	설립일	2004.08.11.
	인력현황(정원)	1,304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요기능	- 철도 인프라 활용한 관광여행상품 제작 - 정부, 지자체와의 연계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코레일네트웍스(주)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철도공사법」	설립일	2004.09.21.
	인력현황(정원)	1,680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요기능	- 철도주차장 운영 및 개발 - 광역철도·여객철도 역무 및 광역철도기동팀 운영, 철도고객센터(한국철도공사) 운영 - 교통카드, VAN, 포인트 사업		
코레일로지스(주)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철도공사법」	설립일	2003.12.31.
	인력현황(정원)	543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철도일관수송체계 구축으로 철도물류운송 서비스 역할 증대 - 남북철도 국제화를 대비한 국제철도화물운송 체계 구축 운영		
코레일유통(주)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철도공사법」	설립일	2004.12.02.
	인력현황(정원)	477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요기능	- 유통, 용역 사업 및 소 운송업, 항만운송 사업 - 식품제조, 가공업 및 프랜차이즈 사업 - 철도용지 또는 철도시설물 이용 광고대행업		

코레일테크(주)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철도공사법」	설립일	2004.12.09.
	인력현황(정원)	5,267명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주요기능	• (차량사업) 철도차량정비 • (전기사업)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등의 유지보수 및 설비 시공 • (시설 및 경비사업) 전국 철도 주요 역, 기타 시설물, 철도기관 등 유지·안전관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및 「상법」 제169조, 제170조, 제172조, 제288조, 제317조	설립일	2019.05.09.
	인력현황(정원)	5,279명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주요기능	• 유료도로 및 관련시설 이용료의 수납 • 교통방송 제작 및 운영 • 유료도로 및 관련시설 이용 고객응대 및 서비스 제공		
한국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자원공사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해외건설촉진법」 제28조의2	설립일	2018.06.08.
	인력현황(정원)	99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요기능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 상기와 관련된 외국정부·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항공안전기술원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항공안전기술원법」	설립일	2013.04.19.
	인력현황(정원)	112명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주요기능	• 감항성 개선지시 등의 명령을 위한 항공기 구조상 결함분석, 개선방안 연구·지원 • 증명, 승인, 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 항공기 등에 대한 국가공인 비행시험과 국가공인 비행시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여성가족위원회 (5)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설립일	2015.01.01.
	인력현황(정원)	83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가족서비스 기획 및 개발, 품질관리 및 고도화 • 가족서비스 지원인력 전문역량 강화 • 가족친화문화 조성 활성화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설립일	2003.03.05.
	인력현황(정원)	122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요기능	•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 공무원 및 일반인 등에 대한 성인지교육 • 양성평등 및 성희롱예방교육강사, 성인지정책 전문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설립일	2019.12.19.
	인력현황(정원)	131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기능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	설립일	1993.02.15.
	인력현황(정원)	259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요기능	•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연구, 사업개발 및 운영·지원 •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 자료의 제작·보급 •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설립일	2010.08.18
	인력현황(정원)	415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요기능	• 청소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활성화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평가 및 시범운영 • 문화, 역사, 야외, 모험, 과학, 환경, 해양, 생태, 진로 등 청소년 활동·교육 운영		

부록3 공공기관 연도별 정기·수시 지정 현황 (2025년 1월 기준)

1. 연도별 정기 지정 현황

(단위: 개)

구분	지정	신규	해제	변경	신규	해제
2007	298	298	0	0		
2008	305	7	0	0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재)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재)우정복지협력회, 울산항만공사, (주)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만보안(주)	
2009	297	9	17	0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거래소, 향로표지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정부법무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기보캐피탈(지분매각) 공공기술연구회, 코레일에트컴(주), 한국노동교육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폐지, 통·폐합), 극지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고등과학원, 농림기술관리센터,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부설기관),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순수예술창작법인), 금융감독원(금융감독기관)
2010	284	19	10	39	한국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노사공동고용지원사업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재)체육인재육성재단, 게임물등급위원회,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소상공인진흥원, 한국희귀약품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폐지), (주)한국토지신탁(지분매각), (주)농지개량(민영화), 자산신탁(민영화), 대한에이즈예방협회(소규모),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민영화), (주)정리금융공사(폐지),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산은캐피탈주식회사(지정실익미비)
2011	286	8	6	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수산자원사업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IBK캐피탈, IBK신용정보, IBK시스템(지정실익 미흡), 대한결핵협회(요건미해당), 한국전자파연구원(폐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폐지),
2012	286	7	3	2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한국보육진흥원,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IPO 및 지

구분	지정	신규	해제	변경	신규	해제
					한국건강증진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임업진흥원	분매각 축진을 위해 지정해제), 중소기업은행(지분매각 축진을 위해 지정해제)
2013	295	10	3	0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세종학당재단, (재)한국문화정보센터,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	호국장학재단, 한국생산성본부(정부지원 비율감소), 한국기업데이터(주)(지분 매각)
2014	304	10	0	2	재지정)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신규) 국립생태원, 항공안전기술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공정거래진흥원, 아시아문화개발원, (주)위터웨이플러스	
2015	316	20	6	0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주)해울,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한식재단,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표준협회(정부지원액 50%미만), 인천종합에너지(주)(지역난방공사지분 배각), 산업금융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산은과 기관통합), 한국거래소(법상 독점적 사업구조 해소), 코스콤(거래소 자회사)
2016	323	12	5	0	아시아문화원,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 지식재산전략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 나노기술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식품안전정보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재)체육인재육성재단(정원미달), 아시아문화개발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기관 통·폐합), (주)해울(지정실익 결여)
2017	332	13	2	0	한국재정정보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국립부산과학관,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저작권보호원, 한전의료재단 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 대학원 대학교, 한양진흥재단, 환경보전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사업단, 기초전력연구원 (통·폐합)
2018	338	9	1	0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주식회사 에스알, 재단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지정실익 낮음)

구분	지정	신규	해제	변경	신규	해제
					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식회사 공영흡소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2019	339	7	6	0	한국해양진흥공사,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재)정동극장, IOM 이민정책연구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폐지, 실익 없거나 소규모)
2020	340	4	3	0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해산, 정부지원 축소)
2021	350	12	2	0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주)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2022	350	3	2	0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아시아문화원, 한국에탁결제원
2023	347	1	4	43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2024	327	3	23	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차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025	331	4	0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주: 매년 초 공공기관 정기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연도별 수시 지정 현황

(단위: 개)

연도	신규	해제	변경	신규 (기관명)	해제 (기관명)	변경 (기관명)
2007	0	0	0			대한체육회('07.4월)
2010	1	△1	△2	국립중앙의료원 ('10.7월)	한국자산신탁(주) ('10.3월)	근로복지공단('10.7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10.10월)
2011	0	0	△1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11.5월)
2012	3	△1	0	기초과학연구원('12.5월), 한국임업진흥원('12.5월), 한국잡월드('12.10월)	경북관광개발공사 ('12.10월)	
2014	0	0	△2			문화예술위원회('14.5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14.9월)
2016	0	0	△2			대한체육회('16.7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16.7월)
2017	0	0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7.9월),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 기증원('17.9월)
2021	0	0	△1			한국광해광업공단('21.12월)
2023	1	△1	0	재외동포협력센터('23.6월)	재외동포재단 ('23.6월)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발간일 2025년 5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디자인·인쇄 더서울미디어(주) TEL. 02·2274·3588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SN 3022-862X

© 국회예산정책처, 2025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88-0021626-10

ISSN 3022-862X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